

발 간 등 록 번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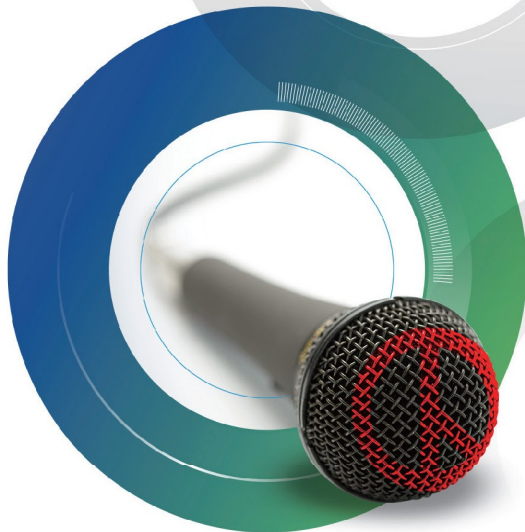
34-9761099-200014-14



2020. 4. 15. 실시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 모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에 참여한 각 정당의 중앙당이 제출한 10대 정책을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정당들의 지속적인 정책개발 활동을 촉진하여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당 정책 모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목 차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 | |
|------------------|-----|
| ☑ 더불어민주당 | 1 |
| ☑ 미래통합당 | 28 |
| ☑ 민생당 | 50 |
| ☑ 미래한국당 | 70 |
| ☑ 더불어민주당 | 93 |
| ☑ 정의당 | 111 |
| ☑ 우리공화당 | 133 |
| ☑ 민중당 | 157 |
| ☑ 한국경제당 | 174 |
| ☑ 국민의당 | 194 |
| ☑ 친박신당 | 216 |
| ☑ 열린민주당 | 238 |
| ☑ 가자코리아 | 251 |
| ☑ 가자!평화인권당 | 273 |
| ☑ 가자환경당 | 285 |
| ☑ 공화당 | 307 |
| ☑ 국가혁명배당금당 | 319 |
| ☑ 국민새정당 | 333 |
| ☑ 국민참여신당 | 346 |

목 차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 | | |
|----|----------------|-----|
| ☑️ | 기독교자유통일당 | 358 |
| ☑️ | 기본소득당 | 374 |
| ☑️ | 남북통일당 | 390 |
| ☑️ | 노동당 | 404 |
| ☑️ | 녹색당 | 417 |
| ☑️ | 대한당 | 441 |
| ☑️ | 대한민국당 | 458 |
| ☑️ | 미래당 | 488 |
| ☑️ | 미래민주당 | 507 |
| ☑️ | 여성의당 | 538 |
| ☑️ | 우리당 | 567 |
| ☑️ | 자유당 | 579 |
| ☑️ | 자유새벽당 | 591 |
| ☑️ | 중소자영업당 | 603 |
| ☑️ | 충청미래당 | 606 |
| ☑️ | 통일민주당 | 618 |
| ☑️ | 한국복지당 | 631 |
| ☑️ | 한나라당 | 657 |
| ☑️ | 흥익당 | 687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벤처 4대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 2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과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 3 |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 4 | 주거와 안전에 취약한 청년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 5 |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에서 국민에게 건강 먹거리를 공급하겠습니다. |
| 6 | 국립대학의 교육의 질은 높이고 등록금 부담은 낮추겠습니다. |
| 7 | 인간의 존엄과 노동존중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
| 8 | 스마트 정예 강군, 국익 외교 등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을 만들겠습니다. |
| 9 | 수요 맞춤형 사회안전망 및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 10 | “문화·예술 1등 국가” 문화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정책순위

1

벤처 4대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정책분야

산업자원, 중소벤처, 재정경제

» 목 표

- 벤처투자 활성화와 유망벤처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벤처 4대 강국 도약
- 우수인재 유치 및 모험자본 공급으로 혁신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 다수 배출
- 대출행태 개선을 통한 기술혁신기업 자본조달 지원
- 성장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산업 육성과 4차 산업발전 지원

» 이행방법

- 유망창업기업(K-유니콘 후보기업)의 스케일업(도약) 지원
 - 2022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K-유니콘기업을 30개를 육성
 -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 집중 육성
 - 혁신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스케일업 펀드를 4년 간 12조원 조성
 -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 확대 등
- 자본시장의 벤처투자 활성화
 -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벤처투자 연 5조원 달성
 - 핀테크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
 - 클라우드 펀딩 이용이 가능한 기업 범위 확대 추진 등
- 벤처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규제 완화
 - 주주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 주식 발행 허용
 -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기준(20%)을 완화

-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및 규제 샌드박스 등을 이용해 규제완화 추진
-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대

□ 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연 1억원으로 확대
-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양도소득세 비과세등 세제혜택 일몰 연장
-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10%→20%)
-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 대출기관 능력 배양 및 행태 개선

- 현재 이원화되어 운용되고 있는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
-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법 개정
- 대출기관 면책제도를 개편하여 임직원의 입증책임 완화

□ 4차 산업분야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

- 바이오, 핀테크, AI 기반의 기술혁신형 기업 양성 지원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벤처기업 지원체계 구축

» 이행기간

□ 유망창업기업 지원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

□ 자본시장 벤처투자 활성화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

□ 벤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2020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21년부터 적용

» 재원조달방안 등

□ 자본시장 벤처 활성화(모태펀드 1조원, 예비 유니콘 보증 400억원), 3대 신산업분야 중소벤처 육성 400억원 등 연간 약 1조800억원 소요되고 벤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은 연1,500억원 수준으로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정책순위

2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과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분야 산업자원, 중소벤처

» 목 표

- 소비·유통환경변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력 강화
- 소상공인의 안정적 매출기반 마련
- 폐업자의 퇴로확보 등 원활한 재기재원
-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 구현

» 이행방법

□ 소상공인의 매출확대 및 경영부담 완화

- 온누리 및 지역상품권 발행규모 2배 확대(2020년, 5.5조원 → 2023년, 10.5조원)
- 소상공인 우수제품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온라인 진출지원
- 교통결제, 온라인 쇼핑물 결제 등 제로페이의 소비자 편의성 제고로 가맹점 대폭 확대(~2024년, 200만개 목표)
-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4,800만원 → 6,000만원)
- 무주택 자영업자의 월세 세액공제 범위를 성실사업자에서 모든 자영업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로 확대
- 범정부차원 단속 및 홍보, 신고포상금 확대로 라벨같이 근절 추진

□ 소상공인 재기지원 등 생업안전망 확충

- 2021년부터 매년 1.5조원(7.5만개)의 소상공인 보증공급 추가 확대
-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의 재도전 특별자금 확대
-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소각(~2024년, 5.6조원) 및 재기지원센터 확대(62개)
-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정리와 점포철거 등 신속한 폐업지원과 임금 근로자로의 취업전환을 지원
-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시에도 보상이나 우선계약권 부여

□ 지역별 특화거리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

-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는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2024년, 50곳)
- 상가 밀집구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1기초지자체-1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신규로 추진(~2024년, 240곳)
- 지역상권의 체계적 분석 및 상권특성을 반영한 활성화 전략수립 지원 등을 담당할 상권육성전담 기구를 설립

□ 소상공인 자생력 기반 강화

-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제고를 위해 1:1 현장 컨설팅 대폭 확대
- 실습 등 복합형 교육이 가능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2024년, 9곳)
- 입주부터 개발, 전시판매까지 돕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확대(~2024년, 40곳)
- 스마트상점, 백년가게·백년소공인 등 소상공인 성공모델 발굴
- 소진공내 소상공인연구센터를 정책연구기관으로 분리하고 기능 확충
- 중소기업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사항은 2020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기존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고

- 신규 예산반영 사업은 2021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5년 간 4.8조원(연평균 1조원 내외) 소요

□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정책순위

3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책분야 산업자원, 환경

» 목 표

-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및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 기후위기 대응 투자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산업혁신 추진
-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 육성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
- 탄소세 도입 검토 및 그린뉴딜 투자 세제 등 지원 강화
-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과 에너지 분권체계 구축
-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10\mu\text{g}/\text{m}^3$)으로 40% 이상 감축

» 이행방법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 탄소제로사회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을 위해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추진
- 석탄발전을 보다 과감하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 확대
-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분야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 산업단지를 저탄소 스마트산단으로 만들어 순환경제 토대를 구축
-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PNG 인프라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 미래차(전기·수소차)와 전후방 연계산업(2차전지, 수소연료전지 등) 육성

- 분산전원 기반의 Smart-Green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에너지 제로 빌딩 건축에 대한 지원 강화
- 건물·공장(FEMS)·주택에너지관리(HEMS) 분야 에너지효율화 전문기업 육성
- 그린뉴딜 재원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 검토
- RE100 등 시장제도 활성화로 민간주도 투자 확대
- 녹색경제 분야에 투자할 경우 세제감면 확대
- 석탄금융을 중단하고, 녹색금융·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 유도
- 환경개선특별회계를 더욱 확충하여 에너지, 산업, 수송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부문에 투자 확대
- 지자체별로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하여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 지원
- 노동자들의 녹색일자리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 제공
- 지역주민 중심의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
- 소규모 전력거래 등 에너지프로슈머 제도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인 연평균 $10\mu\text{g}/\text{m}^3$ 로 감축
- 오염물질 점(사업장)-선(수송)-면(도시) 관리전략과 권역별 총량제 추진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 협력체 구성 운영
- 산단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측정차량을 활용한 실시간 단속 강화·무인비행선 운영 확대
- 1-3종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배출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확대 및 4-5종사업장 배출가스감시센서 부착 확대
- 4-5종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0,000개소로 확대

-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도시 시범사업 추진(도심지 미세먼지 실시간 관측망 구축, 대피용 클린 공간 조성, 미세먼지 저감용 쿨링·클린 로드 조성, 신속 및 중장기 저감 조치 시행)
- 국민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

» 이행기간

- 2020년 ~ 2024년까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탄소제로화 사회 실현과 같은 장기적인 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 추진

» 자원조달방안 등

- 자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 국비와 지방비 및 기금 활용

정책순위

4

주거와 안전에 취약한 청년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책분야 청년, 여성

» 목 표

-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 이행방법

-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청년·신혼 맞춤형도시 조성, 5만호 공급
 -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를 연계한 청년·신혼 맞춤형도시를 조성하고 청년·신혼주택 5만호 공급
- 지역거점도시 구도심 재생사업 등을 통해, 4만호 공급
 - 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첨단복합 창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연계하여, 주거·창업·일자리·R&D·문화시설이 복합된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여 주택 4만호를 공급
- 서울 용산 등 코레일부지, 국공유지에 1만호 공급
 -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 연계한 청년·신혼주택 1만호를 신규 공급
- 청년·신혼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공
 - 일반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확대, 상환기간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
 -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양도차액을 대해서는 공공과 공유
- 청년, 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에 공공주택 및 맞춤형 금융지원
 - 2022년까지 공공주택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 100만가구로 확대

- 청년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청년디딤돌전세금 이자금리 인하, 주담대 등 시중은행 청년전월세 대출금 규모 확대 2021년부터 별도거주 취준생·대학생 가구에 주거급여 추진

□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

-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여성안심앱, 전국CCTV, 국가재난안전체계(112, 119 등),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 등과 연계 여성안전 서비스 강화
- 범죄예상 환경설계활성화 추진, 여성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 취약개소 범죄예방시설(LED조명, 양방향통신 비상벨, 신고위치안내판, 반사경 등) 설치 확대

□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가해자 격리를 위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장 체포주의 도입
- 피해자 보호명령에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및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다각적 추진

- 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 등록제 도입, 이력정보시스템 구축
- 피해상담·삭제지원·사후 모니터링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강화
- 인공지능(AI) 기술,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통한 불법촬영물 신속 삭제 지원
-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소지자, 유포 협박과 사진·영상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 스토킹처벌특례법 제정

- 스토킹 범죄의 정의,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 처벌 규정 구체화
-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와 재발 방지대책 수립

□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

-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구성 요소로 판단

» 이행기간

□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난 완화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

□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 및 법률 개정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 10만호 주택건설사업비는 주택도시기금 활용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 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출개혁 등을 통해 반영

정책순위

5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에서 국민에게 건강 먹거리를 공급하겠습니다.

정책분야 농림해양수산

» 목 표

- 농산어촌 삶의 질 개선 및 공익형직불제시행 등 농림어민 소득증대
- 체계적인 안심 먹거리 제공, 안심축산·방역강화로 국민건강 뒷받침
- 스마트농업·식품산업 지원, 청년·여성농어업인 육성으로 미래혁신 견인

» 이행방법

-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어 국가 균형발전 선도
 -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 도입, 농어촌 공공병원·분만취약지역 의료인프라 확충, 농촌지역 사회적 농장 활용 복지자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등 농어촌 의료·복지서비스 확충
 - 지방대 의·약학 계열학과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농어촌 공공도서관 조성 확대
 - 어디서나 기초·복합서비스 접근성 보장 3·6·5 생활권 구축,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 100원택시·1000원여객선·효도택시·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등 다양한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및 농어촌 빈집·유희시설 활용 귀농인 임시주거·청년 창업공간 지원
- 농어업 공익형직불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등 소득 향상 지원
 - 직불제 참여 농업인 준수 의무 이행점검체계 및 부정수급 방지방안 등 마련
 - 어가의 소득안정망 확충 및 수산분야 공익기능 확대를 위한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 재해보험확대, 농어업부문 조세감면, 연금보험료 지원 등 농어민소득 지원
 -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강화, 의무자조금제 확대 및 일선조합판매능력을 강화하고, 농어업회의소 설치로 농어촌 현장의견 수렴
 - 임업인의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및 임업인 자연 재해안전망 구축, 임도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임업직불금제 도입을 검토

□ 체계적인 안심 먹거리 제공, 안심축산·방역강화로 국민건강 뒷받침

- 학교, 공공기관, 공기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
- 취약계층 영양지원 농식품바우처제도, 초등생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산모 친환경농산물 공급지원 단계적 확대로 국민 건강먹거리제공 및 중소농 생산 농축산물 안정적 판로 확대
- 축사시설·소독시설 현대화 등 가축질병 발생 예방체제를 강화하고, 스마트축산 ICT단지를 조성하여 축산업 위생·생산성 향상 및 악취민원 해결

□ 농업스마트화, 농식품산업육성, 청년·여성농업인 육성으로 미래혁신 선도

-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 스마트 온실·축산농장업 보급 및 관련 R&D 확대
- 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기능성식품 등 유망식품분야 R&D 집중 지원 및 연구개발 세제지원 확대로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사업 지원금 상향,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금리인하 등으로 청년농업인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스마트팜 청년 전문인력을 육성
- 여성 공동경영주 등록활성화, 농어촌 성평등교육 확대, 여성농어업인 지원센터 확대, 농식품부·해수부 내 여성정책전담조직 확대, 여성농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제도 마련 등 추진

» **이행기간**

□ 농어업인 삶의질 개선 대책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

□ 공익형직불제, 가격안정정책, 먹거리정책·스마트팜 등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농어촌 삶의질 개선, 공익형직불제, 스마트팜·청년농업인육성, 농산물유통혁신 등 각종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 등에 연평균 약 4조원 소요로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정책순위

6

국립대학의 교육의 질은 높이고 등록금 부담은 낮추겠습니다.

정책분야 교육

» 목 표

- 교육연구 여건이 주요사립대에 비해 열악한 국립대를 집중 지원하고, 반값등록금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립대를 지역균형발전 요충지로 육성
- 저소득층 및 7~8구간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단가 확대를 통해 등록금 부담경감 실효성 강화
- 학자금 대출 이용대상 확대, 금리 인하, 전환대출 적용 등 통해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하기 위한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 운영의 본래 취지 제고

» 이행방법

- 연간 1천 5백억원의 국립대 육성사업을 확대·재편하여 9개 거점 국립대에 5백억 원, 19개 국립대에 1백억원씩 지원(6천 4백억원으로 확충)
 -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 OECD 평균 수준 달성, 주요 사립대 수준 목표로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 확대
 - 우수 교원 확보, 자료구입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및 노후 시설 개·보수 등 교육여건 개선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연구소, 지자체 등과의 전략적 상생·발전 유도
 - 국립대 종합 취업지원센터 설치해 양질의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연간 평균 419만원인 39개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
 - 국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후에도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지원 유지하여 학생들의 학비·생활비 부담 크게 경감 → 지역 우수인재 유치

□ 국가장학금 지급 단가 확대 통해 사각지대 해소

- 저소득층(기초수급차상위·1구간)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단가 연간 520만원에서 사립대 평균등록금 100%수준(736만원)으로 인상
- 연간 지급액이 지나치게 적었던 7구간(120만원, 학기당 60만원) 및 8구간(68만원, 학기당 34만원) 학생들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 → 7구간 220.8만원(사립대 등록금 30%), 8구간 147.2만원(사립대 등록금 20%)

□ 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통한 등록금 부담 경감

- 재학 중 이자 부담 없이 취업후 소득과 연계하여 일정 비율 상환하는 ICL(취업후 상환 학자금) 이용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 연구비장학금 수혜가 적은 대학원생 및 로스쿨 학생 등 등록금 부담 경감
-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금리를 조달금리 수준(1.6~1.7%)으로 인하
- 2009년 이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자율 6~7%) 및 2010~2012년 일반학자금 대출(이자율 4.8%) 등 고금리·장기간 상환 대출을 단계적으로 저금리 전환
- 장학재단 학자금대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 포함 → 채무조정 지원 제도 취지 강화,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단계적·제한적 추진

» 이행기간

□ 국립대 육성 지원 및 반값등록금 : 2021년부터 추진

□ 국가장학금 사각지대 해소 : 2021년부터 추진

□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 2021년(ICL 대학원생 포함, 정부보증 학자금 전환대출) 및 2022년 (금리 인하 및 일반학자금 전환대출, 채무조정 지원 대상 포함)부터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립대 육성 지원 및 반값등록금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협의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신규 편성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 교육부 일반회계 사업(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 및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 증액 추진

정책순위

7

인간의 존엄과 노동존중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정책분야 노동

» 목 표

- 노동존중 51플랜추진
-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화 추진
- 일자리 체인지업(Change up)으로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
- 고용안정 및 보장을 위한 '고용연대' 실현

» 이행방법

-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588만명)의 노동관계법상 권리보장 추진
 -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적용범위 전체 노동자로 확대
- '1년' 미만 근속 노동자(497만명) 퇴직급여 보장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으로 최소근속기간 하향
 - 저소득 노동자의 퇴직연금에 대해 공적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 재정지원
- '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 보장과 노조 할 권리 보장
 - 「고용보험법」등 개정으로 고용·산재보험 의무화 및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
- 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 ILO기본협약 제87호·제98호·제29호·제105호 비준
-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및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제도를 개선, 공익사업의 범위와 필수유지 업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등

□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의 ‘스스로 권리 찾기’ 지원

- 「근로기준법」개정 등으로 ‘근로자 대표’의 역할과 기능을 제도화

□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원칙 제도화

- 「근로기준법」등 개정으로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제도화

□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규모기업 노동자에 대한 ‘차별 Zero’ 추진

- 「기간제법」등 개정으로 차별시정제도 실질화

□ 노동자의 임금권리 보장을 위한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 「고용정책기본법」개정으로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정보의 주요 항목 임금분포를 분석·가공하여 공시

□ 사망사고 다발사업장 원청(도급인) 책임 강화

- 하청·파견노동자 산재도 원청(도급인) 사용사업주의 개별실적요율에 포함
- 사망사고 다발기업은 일정기간 동안 할인을 조정. 산재 감소 시 할인

□ 정리해고 요건강화, 강요된 희망퇴직 ‘근로자대표 동의’ 법제화

-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제도화

□ ‘인생 이(삼)모작’을 위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 활성화

- 계속고용활성화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지원
- 중고령 노동자가 재직단계부터 인생 이(삼)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 등 재취업지원 서비스’ 종합시스템을 강화

□ 장기실업자·폐업 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 「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안)」 제정으로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청년 등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 구직자전담상담사(‘취업코디’)를 운영으로 구직자와 1:1로 맞춤형 심층상담

□ 영업 양도 등 사업이전 시, 고용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

-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사업이전시 고용승계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

□ 재직자 체당금제도 신설 등 ‘체불임금 국가 우선 해결’

- 「임금채권보장법」개정으로 재직자 체당금 및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등 도입

» 이행기간

□ 제21대 국회 임기 내 입법 추진 및 예산 확보

» 재원조달방안 등

□ 저소득 노동자 퇴직연금 공적 자산운용서비스 :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조달

□ 체불임금 국가 우선해결 :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조달

□ 국민취업지원제도 :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 중장년층 고용지원서비스 : 고용보험기금에서 조달

정책순위

8

스마트 정예 강군, 국익 외교 등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을 만들겠습니다.

정책분야 통일, 외교, 국방

» 목표

-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국방 구현으로 세계 5위 국방력 건설
- 평화경제로 한반도 평화 번영 실현
- 주변 4국과의 외교 강화,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해 평화정착 및 번영발전 추진

» 이행방법

〈통일〉

- 남북정상 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 환동해·환서해·DMZ평화벨트 조성,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 재추진, 통일경제 특구 설치, 한반도 교통물류망 연결
-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
 - 문화·역사·언론·체육·학술·언론·종교 등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 남북 국회회담 추진, 지자체의 남북협력 지원,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과 통일공감대 확산
 - 상시상봉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이산 아픔을 치유할 ‘이산가족 기억 클러스터’ 조성, 국군포로·남북자 문제 해결 노력
 - 북한주민 인권 개선 노력과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추진
 -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각지대 해소, 촘촘한 취업지원 등을 통합 종합지원대책 추진
 -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 체결과 지역 통일사업 종합 거점 마련, 통일교육 강화, 민주평통 기능 강화

〈외교〉

□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강화와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

- 한미동맹을 호혜적·포괄적 동맹으로 발전, 한미 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도출
-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 발전, 한일간 역사문제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원칙에 입각한 문제 해결 추진하되 미래지향적 발전 위한 정부당국간 소통 및 민간차원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
- 한러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 고위급 교류 지속 확대, '9대다리 행동계획' 추진
- 아세안 국가들과 실질적 협력 강화와 한-인도 외교협력 강화로 신남방정책 추진

□ 국민외교·공공외교 확대를 통한 국익 증진과 재외국민 보호와 재외동포 지원 확대

- 국민과 정부간 쌍방향 소통 체계 구축하여 외교정책 결정과정 국민들 의견 수렴
- 공공외교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추진
- 해외체류 국민 보호를 위한 재외공관 역할 강화, 국민 공감 영사서비스 추진

〈국방〉

□ 4차 산업혁명 기반 국방혁신으로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 구현

- '신속획득제도' 활성화, 핵심기술·핵심부품의 국산화 연구개발 적극 지원
- 중견, 방산기업 육성과 함께 원스트라이커 아웃제, 방산분야 취업제한 기관 대상 확대 등 더욱 엄격한 규제를 통한 방위사업 비리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및 전략적 억제 능력 강화

□ '정예 강군제' 도입 및 장병복지 구현,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지속 추진

- 간부중심 병력구조 개편, 군 간부(소령)의 정년 변경 추진
- 기혼 간부 전세 대부 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미혼 간부 전·월세 지원 확대
- 현역병 단체보험 제도 도입, 국방 맞춤형 복지금(출산축하금) 확대
- 예비군 훈련 기간 단축과 동원훈련 보상비 및 중식비 현실화

» 이행기간

□ 2020년부터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남북 협력사업은 남북협력기금으로 해결

□ 무기 전력 체계는 국방중기계획 편성에 따라 집행. 군인 복지 예산은 복지기금(연간 1조2천억 규모)으로 해결

정책순위

9

수요 맞춤형 사회안전망 및 공공보건의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책분야 복지, 보건

» 목표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복지수요가 집중되는 계층의 안전망 확충
-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공지역의료체계 기반 강화

» 이행방법

□ 어르신의 당당한 노후생활 지원

- 고령자복지주택 등 어르신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공급 대폭 확대
- 노인 일자리 매년 10만개씩 지속적 확대
- 기초연금 대상 전체 어르신의 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

□ 장애인 자립생활 환경 조성

-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전체로 단계적 확대
- 수요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 노동권 및 주거권 보장 강화(장애인 의무고용 내실화,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확대,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강화 등)
- 장애인 교육권 및 이동권 보장 강화(장애인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확대, 콜택시 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

□ 아이돌봄 안전망 강화

- 유보격차 해소를 통한 모든 아동들의 균등한 발달기회 보장
-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확대
- 학교와 마을이 아이를 돌보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 제고

-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위상 및 역할 대폭 강화
- 일본 '지역본부' 신설·검역소 추가 설치·검역인력 대폭 확충
-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제 신설
-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병상 확충
-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공공-민간병원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

□ 의료인력 확충 및 의사과학자 육성

- 의대정원 확대 통한 필수·공공·지역 의료인력 확보
- 의과대학 정원 합리적 조정 통한 의학교육의 질 향상
- 의사과학자 육성으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미래 성장 동력 창출

» **이행기간**

□ 2020년부터 단계적 추진

- 중장기 추진 계획 제시 및 21대 국회 임기 내 추진 목표치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조달은 정부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개혁과 비과세 조정 등 세입확대 통해 마련

정책순위

10

“문화·예술 1등 국가” 문화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정책분야 문화

» 목 표

- 문화예술인 창의적 생산활동 지원
- 국민이 즐기는 문화여가
- 콘텐츠·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

» 이행방법

- 문화예술인 창조역량 강화
 - 문화예술기관의 실업보험제도 구축 및 예술인 프리랜서 국민연금 지원
 - 문화예술복합지원센터 건립 및 경력단절 예술인센터 전국망 구축
 - 신진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 예술인 프리랜서 협동조합 모델 발굴·지원
- 국민 문화향유권 강화
 -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카드 발급 및 학교 첫 걸음 문화체험 관람 지원
 - 근로자휴가지원제 및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 매월 마지막 금요일 조기퇴근의 2.5휴가제 캠페인
 - 어린이·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콘텐츠 확대 및 60대 이상의 생애전환
 - 문화예술교육 확대
 - 주민자율의 생활문화동아리 활성화

□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 콘텐츠 정책금융 및 콘텐츠 R&D예산 확대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 콘텐츠 육성 환경 조성을 위한 '코리아 콘텐츠밸리' 조성
- 국내 K-POP국제 콘텐츠 개최 및 아레나형 K-POP 공연장 확보
- 영화발전기금 국비 출연 및 조성재원 일몰 연장
- '국립영화박물관' 건립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성수기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성실 모범업소 인증 및 홍보·설비 지원
- 개별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빅데이터플랫폼 구축
- 외국인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 특례 확대 및 연장
- 면세점 리베이트 관광 철폐 및 무자격가이드 근절 강화
- 항공사(지역항공)·지자체·지역관광업체 관광상품 프로모션 지원
- 해외노선 신규취항 관광기금 용자 지원

□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

- AR·VR 스포츠체험관 조성
-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 인프라 지속 확충
-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확대
- 은퇴선수 협동조합 창업지원 등 전문 체육인 복지 강화

» 이행기간

□ 2024년까지 사업완료

- 문화예술인 창조역량 강화
- 국민 문화향유권 강화
-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
- 콘텐츠·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일부 제외)

-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중 콘텐츠코리아밸리는 2024년 내에 사업부지 선정 및 기초 인프라 건설, 이후 교육기관 등 입주시설 설치·운영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문화예산 증가분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 관광·체육기금 여유분 활용

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미래통합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우한 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 |
| 2 |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 대전환 '희망경제'로 |
| 3 |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
| 4 |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
| 5 | 자유시장, 내집 마련 |
| 6 | 씩 다 갈아엎는, 文정권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재개발 |
| 7 | 국민 행복의 근간 안전한 대한민국 |
| 8 | 공정 희망! 청년 氣살리기 |
| 9 |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비 촘촘한 사회 복지 안전망 구축 |
| 10 | 함께 하는 세상!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 반려동물, 왼손잡이 권익향상 |

정책순위

1

우한 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

정책분야 보건복지/안전

» 목 표

- 신속한 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으로 질병 관리체계 강화
-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센터 획기적 개선으로 제2의 이국종 사태 방지
- 국가 재난 대비 안심보육 대책 마련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① 지속되는 감염병 불안으로부터 안심 사회 조성
 -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
 -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을 종합관리
 - 철저한 검역과 방역을 위해 매뉴얼 정비와 검역 인력 확충
 - 감염병 막는 전초기지 역할 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역할과 기능 강화
 - 의료기관 격리 및 여행정보력안내(ITS)설치 의무화
 -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설립
 -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러스 연구개발 예산 확대
 -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비용 연50만원까지 세액공제 실시
 - 유아기부터 개인위생 교육 강화
- ②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센터 획기적 개선으로 제2의 이국종사태 방지
 - 권역외상센터의 의사간호사 인건비 단가 인상
 - 인건비 지원 전무한 권역응급의료센터(38개소)에 의사와 간호사 각각 20명의 인건비 지원
 - 수익이 낮아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응급의료기관들 손실보전 대책 마련

③ 우한코로나19(국가재난) 대응 위한 안심보육체계 구축

- 맞벌이 가정의 원활한 육아를 위해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도입
-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뿐 아니라 민간 베이비시터들의 중국 방문 가능성 조사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과 위생관리에 철저
- 민간 베이비시터도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가칭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

» 재원조달방안 등

- 우한코로나19 극복 위한 2020 추가경정예산 활용
-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간수입과 여유자금 활용

정책순위

2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 대전환 ‘희망경제’로

정책분야 재정경제/산업자원/노동

» 목 표

- 건전재정 운용으로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질 빚더미 폭탄 제거
-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 폐기
- 노동시장 개혁으로 꽉 막힌 경제혈관 순환
- 기업과 국민체감도가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①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질 빚더미 폭탄 제거
 - 3가지 재정준칙(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도입
 - 채무한도 초과 시 잉여금 전부를 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의무화
 - 사회보험 재정전망 체계를 장기재정 전망의 틀 내에서 일원화
 - 국회 발의 입법안에도 Pay-Go제도 적용
- ② 탈원전 정책 폐기로 안전하고 값싼 전기 국민께 제공
 - 탈원전 에너지 정책 폐기,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산업 육성 및 원자력 안전 강화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월성 1호기 재가동
 - 원전 관련 기업과 협력업체에 경영자금 우선 조달, 원자력학과 학생들 학업 관련 특별 조치 강구
 -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사업 탈법과 비리 척결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 추진
 -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 통해 미세먼지 획기적 저감 추진
 - 국제공동연구 참여 통해 원전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③ 노동시장 개혁으로 딱 막힌 경제혈관 순환

- 노동조합 편향 노동정책에서 근로자 중심 균형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
- 현행 법제에서 소외되는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계약법」 제정
-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도입
-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 강화 및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호

④ 기업과 국민체감도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기구(가칭 ‘규제개혁처’)로 설치
- ‘One in, two out’, 「행정규제기본법」 개정하여 규제비용관리제 법제화
- 중요규제 관련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 관리 강화

» 재원조달방안 등

- 탈원전정책을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유지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발전 기금 등 활용

정책순위

3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정책분야 재정경제

» 목 표

- 투자 활성화 · 서비스산업 육성 통해 기업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시장을 옥죄는 족쇄를 풀어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
- 국민들의 과도한 세금 경감으로 국민 부담 줄이기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①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현행 4단계 법인세 누진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고, 과표구간별 세율을 2~5%p 인하(2억원 이하 8%, 2억원 초과 20%)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최저한 세율 조정 (과표 100억 이하 2%p 인하, 과표 100억 초과 현행 유지)
- ② 기업 설비투자과 R&D 투자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 R&D 투자 세제혜택 확대
- ③ 기업승계 가로막는 수탈적 상속증여세제 과감히 개선
 -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제도 폐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율 인하 등 상속·증여세제를 국제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 ④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 7+1 유망서비스업 집중 육성
 - 규제 혁파 및 융합 촉진
 - 차별 해소 및 창업·세제 지원

⑤ 부동산 보유세 부담 대폭 경감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 → 12억원)으로 상향
- 공정시장가액비율 법률에 명시해 정부의 종부세 편법 인상 원천 차단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⑥ 부녀자, 7세 이상 자녀, 어르신에 대한 세금혜택 확대

- 부녀자 공제 대상 확대(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및 공제금액 인상(연 50만원 → 100만원)
- 경로우대공제 상향 조정(연100만원 → 150만원)
- 자녀세액공제 2배 인상(인당 15만원 → 30만원)

⑦ 혼인·이사·장례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가계 부담 완화

- 혼인·이사·장례비용의 경우, 각각 100만원 한도로 실제 지출비용의 15%를 세액 공제

⑧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합리한 세금 폭탄 제거

-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추진
- 합리적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 도입으로 이중과세 문제 해소
-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해 가계자금의 자본시장 투자 유인

⑨ 통신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 도입

- 유무선 전화·인터넷 통신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 도입

⑩ 20년 넘은 간이과세 기준 2020년 상황에 맞게 현실화(소상공인 공약)

-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영세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감소하고,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재정운용계획(19~23년) 계획상의 수입증가분(평균 3.9%)를 활용하여 조세지출주의 사업으로 추진

정책순위

4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정책분야 교육

» 목 표

- 정치 편향된 교육현장을 바로잡고, 공정 가치 구현
-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우리 아이 보호

- 학교에서 편향된 정치이념을 교육하는 때는 학생·학부모가 교육감에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 도입
- 정치적 중립성 훼손하여 교실을 정치에 오염시키는 교원의 징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교단에서 배제
- 학교 내에서 예비후보자 등의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 연설·대담, 토론회 등 금지
- 수업연한 조정을 통해 만 18세 이전에 고교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학제개편’ 적극 추진

②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정책 원상회복하고 일반고의 경쟁력 상향

- 자사고·국제고·외고 폐지하려는 교육부의 시도 중단(고등학교의 유형,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취소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
- 지역별 명문고·기숙형 공립학교 집중육성 및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 강화로 일반고 경쟁력을 자사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 제21대 국회에 ‘(가칭)교육의 힘 위원회’ 구성해 학부모, 교사 등 국민적 합의 거쳐 4차산업혁명시대 공교육 살리는 개혁 방안 모색

③ 부모찬스로 대학가는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

-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 으로 대폭 상향(단, 학생 층원의 어려움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별도로 규정하여 특별전형의 기회는 유지)

④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확대 지급

-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을 확충하여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 전면 확대

⑤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 시·도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 선거제도 도입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재정운용계획(19~23년) 계획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를 활용

-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이 33조원 규모

정책순위

5

자유시장, 내집 마련

정책분야 재정경제

» 목 표

- 문정권 사회주의식 부동산 정책으로부터 국민 재산 보호
- 국민 수요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의 대폭 공급
- 1인 가구 · 청년 · 신혼부부 주거희망 사다리 구축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내 집 증세’로부터 국민 재산 보호

-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해 중산층 세 부담 완화
(현행 시세 9억 초과 → 공시지가 12억 이상으로 조정)
- 입법 통하지 않고 품수증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 저지
- 소득 없이 1주택 보유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재산세 상한특례 확대

② 내 집 마련 꿈 가로막는 대출 기준 완화

- 상환능력 검증된다면 LTV(주택담보인증비율) 60%로 원상회복(서울기준)
-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및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 대출규제는 다주택 투기적 대출수요에 집중하여 한정되도록 적용

③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

- 서울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 직주근접과 각종 교육·의료·교통·여가·편의시설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 및 기존 도시(서울 및 신도시 등)들의 스마트 고밀화 전략 추진
-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페널티 중심의 네거티브 정책에서 인허가 간소화 등 인센티브 제공하는 포지티브 정책 도입

- 노후 신도시에 대한 종합적 재생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고 신규주택 공급만 줄어들어 로또 분양을부추길 우려가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④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 대한민국 인구구조 변화 등 주택수요를 정확히 추산하는 정책용역 시행 후, 결과에 따라 개발 시기 및 규모 조정 추진
-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지역의 무분별한 외곽 신도시 난개발 정책에 따른 ‘콘크리트 유명도시’ 제거 방지
- 조합구성 통한 철거권, 공사장식당 운영권,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안전대책 마련
-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 재검토

» 재원조달방안 등

□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12.5조원(2020년예산상) 활용

정책순위

6

씩 다 갈아엎는, 文정권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재개발

정책분야 통일외교/국방

» 목 표

- 문재인 정권의 안보포기 정책 폐기
- 문재인 정권의 북한눈치보기 정책 폐기
- 자유민주적 통일 견인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대북 정책 추진
-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① 문재인 정권의 ‘4대 안보포기정책’ 폐기
 - 4대 안보포기정책 규정(△ 9.19 남북군사합의서 채택, △ 대중(對中)3不정책,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 △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파기·번복 사태)
 -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및 전방지역 감시 및 정찰능력 강화
 -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적인 원상복구 추진
 - 3不정책 폐기 위한 국회 결의안 추진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공식 연장 추진
- ② ‘3대 북한눈치보기정책’ 폐기
 - 3대 북한눈치보기정책 규정(△ 북한이탈주민 강제복송, △ 북한인권재단 출범 저지, △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 「북한이탈주민강제송환 금지법」 제정 추진
 -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 위해 통일부 장관에게 당연직으로 구성된 재단 이사의 임명권을 부여하도록 북한인권법 개정
 - 북한 인권 범죄 기록 및 처벌 위한 국제적 노력 강화

③ 자유민주적 통일을 견인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대북정책 추진

- ‘북한퍼주기방지3법’ 「남북협력기금법(개)」, 「남북교류협력법(개)」, 「남북관계발전법(개)」 국회 통과로 굴욕적·일방적 퍼주기 차단
- 남북협력기금 국민 몰래 퍼줄 수 없도록 국회에 견제 장치 마련
-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항목 폐지하여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의 예산·결산 심사를 받도록 제도 개선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

④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

-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 제정 및 범부처 컨트롤타워 구축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재정운용계획(19~23년) 계획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를 활용

-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이 33조원 규모

□ 남북협력기금은 북핵 완전폐기 때까지 규모 축소

정책순위

7

국민 행복의 근간 안전한 대한민국

정책분야 국민안전/여성

» 목 표

-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범죄 없는 거리 조성
- 위험 근로 공무원 처우개선 통한 사기진작
- 아동·여성 범죄 근절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거리 조성

-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초등학교 주출입구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에 교통관리 경찰관 추가 배치
- 노인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CCTV 설치 의무화
-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사용

②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범죄 없는 거리 조성

-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해 국비로 범죄예방디자인(CPTED) 5,000개소 신규 설치
-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③ 경찰·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소방장비 교체 예산 2배 확대

- 경찰·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월 20만원으로 대폭 인상 (현행 월 6만원→ 20만원)
- 소방복합치유센터(일명, 소방병원) 건립 적극 지원
-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교체 지원예산을 2배로 대폭 확대하고, 기존 분리형 소화전을 일체형 소화전으로 전면 교체하고 신규 설치 추진

④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을 위해 「조두순 방지법」 마련

-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생활권역에 성범죄자 체류 금지 강화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등에 대한 감경 규정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주취감경 폐지’ 공론화
- 해바라기센터와 아동보호기관을 통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 지원 확대

⑤ 신종 여성범죄 대응 및 1인 여성가구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 데이트폭력범죄 강력 대응을 위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데이트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지원 특별법」 제정
- 경범죄(벌금 10만원)로 조치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마련
- 영상협박 피해자 역시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 몰래 카메라로 악용되기 쉬운 변형카메라(초소형카메라) 관리제 도입
- 여성1인가구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비디오창’, ‘문열림센서’, ‘휴대용비상벨’ 등 방범장치 위한 ‘스마트 안심세트’ 지원
- 성범죄자 문자 알림서비스 제도 도입
- 경찰청 범죄통계 시스템에 ‘여성 1인가구 대상의 범죄통계’ 신설

⑥ 미세먼지 감축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 국회 전반기에 ‘(가칭) 미세먼지 근절특위’를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강화
-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무 대상 범위 확대 및 의무구매비율 100%로 강화
-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강화와 진공·살수청소차 보급 확대
- 공단지역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학교에는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
- 어린이와 학생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면 교체하기 위한 실태점검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 지원
- 망국적 탈원전 정책 폐기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재정운용계획(19~23년) 계획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를 활용

-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이 33조원 규모

정책순위

8

공정 희망! 청년 氣살리기

정책분야 청년복지

» 목 표

- ‘조국방지법’을 만들어 불공정 입시 근절과 취업 청탁 및 고용세습 방지
- 기업 활력 높이고 벤처기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
- 청년 1인가구 주거 희망 사다리 구축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조국방지법’을 만들어 불공정 입시 근절과 채용 청탁 및 고용세습 방지

-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단, 학생 층원의 어려움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별도로 규정하여 특별전형의 기회는 유지)
- 대학이나 대학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은 5년간, 이후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하여 입시 불공정 사례 발생 방지
- 청년이 참여하여 공정채용 감시·감독하는 기구를 당과 제21대 국회에 설치
- 고위공무원 채용 강요행위 등 채용 부정에 대해 엄벌 조치
- 공기업·공공기관의 채용비위 등에 대한 현행 징계시효(3년)규정 연장
-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 채용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사용자와의 담합 근절

② 기업 활력 높이고 벤처기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

-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편하고, 유연근로제 확대
- 국회에 9년 발목잡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로 7+1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공유경제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
- 청년 벤처생태계 기반 조성 위한 ‘청년스타트업공제회’ 신설 지원
- 성실 실패자에 대한 정부의 금융과 보증 지원 확대와 적극적 멘토링과 기술인력을 매칭하는 ‘창업재도전지원 위원회’ 구성

- 필요한 만큼 일할 수 있게 주 52시간 예외 적용 추진과 탄력근로제단위기간을 최대 1년,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등 벤처기업의 특수성 고려한 근로환경 보장

③ 청년·신인 예술인들의 ‘문화마켓’과 ‘예술인 문화거리’ 조성

- ‘문화마켓’은 온·오프라인 예술품 전문 유통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청년과 신인 예술가 작품이 활발히 유통될 수 있게 지원
- 전국 주요 기차역, 공항,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등에 청년예술인 작품 전시 공간과 메이커 스페이스 등 거점매장 운영과 ‘예술작품은행 설립’하여 청년과 신인작가의 작품 임대 사업 활성화
- 전국 거점별 ‘예술인 문화거리’ 조성

④ 청년 창업 후계농 지원하여 농업인력 양성

- 영농정착 지원금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월 100만원씩 지급
- 청년창업농 지원 대상을 현행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확대 추진
-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금리 현행 2%에서 1%로 인하
- 상속세 감면조치로 청년의 농업 가업승계 장려

⑤ 청년·신혼부부들의 행복 주거사다리 구축

-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는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하기 위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구의 국민주택 규모 (85㎡이하) 신규아파트 분양 시, 추첨제 50% 실시
- 청년주택 관련 무료컨설팅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 제공(컨설팅 → 절차대행 → 입주 등 전 과정 서비스)
- 기숙사형(임대), 원룸형·아파트형(임대 및 분양), 단독주택형(세어형) 등과 학세권, 역세권, 숲세권 등 취향에 따른 다양한 주택 공급
- 공급물량 확대 및 민간건설사 분양주택 수준으로 품질 향상과 가전·가구 빌트인 시공으로 부담완화
-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80%이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억 → 3억원까지 그 외 지역 1억 6천만원 → 2억원까지 상향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재정운용계획(19~23년) 계획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를 활용

-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이 33조원 규모

정책순위

9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비 촘촘한 사회 복지 안전망 구축

정책분야 보건복지/노동

» 목표

- 저출산 시대 대비 임신출산보육 국가 책임 강화
- 고령화 시대 대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개편해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보호
- 독감 예방접종을 고교생까지 확대 및 청소년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① 저출산 시대 대비 임신(난임)·출산·보육 국가가 함께 책임
 - 20만 난임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
 - 임신부 택시비(교통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 상향
 - 우리 아이들이 사용 편리한 아이 눈높이 화장실 만들기
 - 양육비 불이행 국가 책임 강화
 -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 장학금 확대 지급
 - 독감 예방접종 고등학생까지 무료 실시
- ② 고령화 시대 대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대상과 종류를 대폭 확대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효과좋은 폐렴구균 13가까지 포함)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2개에서 4개까지로 확대
 - 홀로어르신,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 전달하는 스마트밴드 보급
 - 어르신 뼈 건강 위해 골다공증 검진 및 치료 위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어르신 건강스포츠 이용권 신설
- 보육전문사 국가자격증 신설로 시니어 여성일자리 창출

③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개편해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보호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통해 건강보험료를 ‘재산이 아닌 소득에만 부과’ 되도록 부과체계 개편
-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하여 국민의 보험료와 세금을 국회가 꼼꼼하게 따져 문재인 케어의 속도조절과 국민의 보험료 인상 방지

④ 독감 예방접종을 고교생까지 확대 및 청소년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 독감 국가 예방접종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
- 학교 건강검진 항목을 거북목, 척추측만증, 비만, 우울증, 시력 등 청소년기에 취약한 질병들에 초점을 둔 건강검진 등 시대에 맞게 개선, 실시횟수도 현재 12년 동안 단 4회 실시에서 8회로 대폭 상향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재정운용계획(19~23년) 계획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를 활용
 -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이 33조원 규모
-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여유자금 3,100억원 우선 활용

정책순위

10

함께 하는 세상!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 반려동물, 원손잡이 권익향상

정책분야 보건복지

» 목표

- 기존 유기견 중심 정책에서 반려견 및 반려인 중심 정책으로 전환
-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반려인 진료비 등 부담 완화
- 원손잡이 권익 보호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①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과 세제혜택 마련
 -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진료비 표준화 규정
 -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성형목적의 수술 제외) 부가가치세 면제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제공
- ② '명절 휴가철 반려동물돌봄쉼터' 지원 강화
 - 동물보호센터와 펫시터의 기능을 확대한 지원 강화
- ③ 반려동물 기초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가칭)반려동물 관리기구' 마련과 동물경찰제 확대
 - 중앙정부·지자체 산하 전문기관으로 '반려동물 관리기구'를 마련
 -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동물보호감시원 및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을 증원하고 권한 강화
- ④ 유기견을 입양할 경우, 진료비 20만원을 지원하고, 유기견 보호기간도 최소 30일로 연장
 - 유기견을 입양할 때, 10만원의 예방접종 진료비를 20만원(5대접종비 15만원, 반려동물 등록비용 5만원)으로 올려 정부재정으로 지원하고, 유기견 보호기간도 최소 30일로 연장
 - 반려견의 명칭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축산법」 관련 규정 재검토 및 개사육농가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폐업지원

⑤ 반려동물보험료 부담 감소 위한 '반려동물 정책보험제도' 도입

⑥ 왼손잡이도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 만들기

- (가칭) 「왼손잡이 기본법」 제정, 왼손잡이의 날을 지정(8월 13일)하고, 기초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왼손잡이 인식교육 실시
- 소수자 권익보호 증진 위한 법개정으로 적용 대상에 왼손잡이 포함, 왼손잡이 실태조사 및 왼손잡이용 생활용품 생산에 대한 지원 명문화와 왼손잡이용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조치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재정운용계획(19~23년) 계획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를 활용

-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이 33조원 규모

민생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민생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자영업자 民生지원 및 극복 수당 지급 |
| 2 | 공공개혁으로 국민 세금 낭비 방지, 행정 신뢰·효율성 증대 |
| 3 | 5.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5.18 정신의 헌법전문 반영 |
| 4 | 투기꾼에게는 세금을, 집 없는 사람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을 |
| 5 | 미래지향적 교육개혁 및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 |
| 6 | 고용세습과 채용갑질 근절 및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형성 |
| 7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익형 직불예산' 3조원 확보 |
| 8 | 군 복무 청년에게 더욱 확대된 국가 보상 및 지원 강화 |
| 9 | 방송 공공성, 공정성 강화 |
| 10 | 미세먼지 50% 감축 및 호남권 등 환경일자리 100만개 창출 |

정책순위

1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자영업자 民生지원 및 극복 수단 지급

정책분야 재정경제

» 목 표

- 코로나 19 방역 상황으로 인한 중소기업·자영업자 내수 침체 民生회복 지원
 - 매출 하락, 임대료 체납, 조세 체납 등 중소기업·자영업자 民生 애로사항 적극 해결
-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계위협을 받는 취약계층 생계 보호
 - 코로나 19로 인한 폐업 및 매출 급감, 실직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지만, 기존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 축소

» 이행방법

- 중소기업·자영업자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일시 유예 또는 감세 및 간이과세 한도 상향
 - 코로나 19 상황 종료시까지 매출하락으로 손해 입은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법인세 소득세 일시 유예, 또는 감세 조치
 -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 1억원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매출액 연 2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게 하여 과세 투명성 유지
-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임대료 직접 지원
 -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임대료에 대해 일정부분 보조금으로 직접 지원 (임대차계약서 금액 기준 코로나 19 상황 종료시 까지)
- 중소기업·자영업자가 2019년에 납부한 소득세·법인세 조기환급
 - 코로나 19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하락 등으로 2020년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자영업자에게 2019년 납부한 법인세·소득세 환급 (중소기업·자영업자 결손금 소급공제*)
 - * 중소기업·자영업자 결손금 소급공제 : 당해연도(2020년) 사업상 손실로 손해가발생했을 경우 직전연도(2019년)에 납부한 법인세·소득세를 환급해주는 제도
 -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직전 3개년도(2017년) 납부세액까지 소급 세액대상 확대

□ 1인당 코로나 극복수당 50만원 1회 지급

- 기존 복지제도나 추경예산 지원에 따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청년구직자, 실업자, 일용직 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등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국민들에게 긴급생활비 지급
- 수당수급을 원치 않거나 기부를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 지정 기부계좌를 신설하고 기부지역 및 기관을 지정해 기부를 활성화하며, 기부자 명단을 작성하여 실시간 공개와 연말정산 적용

» **이행기간**

□ 코로나 19 상황 종료 시까지

- 긴급성을 고려 총선 후 즉시 시행하되, 코로나 19 상황 이후에도 경제 여건 등을 고려 일정기간 유지 검토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 예비비 또는 추경으로 조달(중소기업벤처부, 기재부 추경에 반영), 부족분은 국채 발행

정책순위

2

공공개혁으로 국민 세금 낭비 방지, 행정 신뢰·효율성 증대

정책분야 정치

» 목 표

- 공공부문 축소를 통한 국고 낭비 방지
- 지속적인 기술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행정 인력 소요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 마련 필요
- 정부 효율성 증대 방안 마련으로 최소 비용, 국민 행복 증진 최대화 추진
- 재정사업 효율성 증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재정사업 지출구조조정 실시
 - 경기침체 및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막대한 재정지출과 그로 인한 정부부채가 급증함에도 재정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노력 미흡
- 방만한 공공기관 개혁, 낙하산인사 방지 및 성과 검증없는 높은 처우 개선

» 이행방법

- 4차 산업혁명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감축 분야 발굴 및 인원 재배치
- 행정 효율화를 위해 비대한 정부인력 30% 이상 감축
- 재정사업지출 구조조정
 -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재정사업 과정에서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국민혈세를 집행했는지 실시간 공개하여 국민·국회·언론 등의 상시 감시체계 구축
 - 국정과제, 특정재정사업, 국가보조금사업 등에 시범실시
- 과도한 정치사업 금지,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규율 강화(국가재정법 개정 등)

□ 방만한 공공기관의 개혁과 부채관리 강화

- 민간에서 추진가능한 부문은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여 불필요한 낭비 감축
- 공공부문 임금체계 전반 개혁 ⇒ 직무급제 도입과 성과급 연동을 통한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선

□ 전문성 함양, 방만 경영 방지를 위해 보은성 낙하산 인사 방지 제도 마련

- 취업제한이 아닌 행위제한으로의 전환을 통한 낙하산 방지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상반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해당 없음

정책순위

3

5.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5.18 정신의 헌법전문 반영

정책분야 정치

» 목표

- 부당한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가치 인정
- 5.18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한 책임 소재 명확화
- 5.18 관련 사실을 왜곡·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희생자와 가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

» 이행방법

- 개헌 통한 5.18 정신 헌법 반영
- 5.18의 완전한 진상 규명 위한 노력 지속적 전개
 - 미국이 보관 중인 5.18 기밀문서 공개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
- 5.18에 대한 폄훼·왜곡·날조 행위 처벌 등 대책 입법화
- 5.18 피해자 및 가족 치유를 위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 5.18 유공자회 법정단체화 및 예산 지원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임기 내 개헌 및 입법화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대부분 헌법 또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재정 소요 발생 없거나 미미함
-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경우는 정부 재원 활용

정책순위

4

투기꾼에게는 세금을, 집 없는 사람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을

정책분야 재정경제

» 목 표

-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급등한 부동산(수도권 공동주택) 가격 정상화
 -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원, 강남지역은 6억원이 상승했으며, 30~40% (3년 연평균 15% 내외) 상승한 것으로 조사(2020년 1월 현재)
- 청년층·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 ‘금수저’에게 유리한 주택청약제도 개편
- 일반 국민들이 선호하는 정돈된 대규모 공동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심화 해소
- 과도한 대출 규제로 피해 받는 실수요자 자금난 해소 및 중산층 맞벌이가정에 대한 정책금융 촉진

» 이행방법

- 투기수요 억제 방안
 - 종합부동산세 :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및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증가하는 누진적 종부세 세율 구조*로 개편
 - * ex) 종부세율 : 2주택가구 ; 3%, 3주택가구 ; 6%, 4주택가구 ; 9% ...
 - 매물 잠김현상 해소를 위한 양도소득세 증가 일시 유예
 -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 지방세·양도소득세·종부세 등 주택 관련 과세의 특례 일정 유예기간 이후 폐지
- 청년가구 주거복지 확대
 - 저렴한 쉐어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및 임대보증금과 전세자금 대출지원 강화

-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특화주택의 건설을 확대·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적으로 공급 (수도권 기준 평당 월 3~4만원)
- 청년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공공기숙사의 지원을 확대 및 대학생 월세자금 대출제도 도입

□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추진

-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공동주택 건물만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에게 분양
- 20평형 기준 아파트의 경우 1억 2천만에 공공분양 및 월 토지임대료 31만원 납부
- 일정 비율은 토지지분을 인정·분양하여 수분양자의 선택권 보장

■ 분양가 평당 1000만원 대의 무주택자 생애주기 맞춤형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를 수도권 및 지방 중소도시에 조성

- 청년·은퇴자 10평대, 신혼부부 20평대, 3~4인 가족 30평대 양질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아파트 (최저주거기준 상향 1인당 $16m^2 \rightarrow 30m^2$)
- 광역교통망이 구비된 지역 또는 지하철 노선 연장으로 대규모 택지가 조성 가능한 지역에 1~2만 세대의 중소 신도시 규모의 공공단지 조성
- 추후 매각시 시세차익에 따른 이익은 일정 부분 공공과 공유

■ 공공단지에는 주거복지센터를 설치, 의료·취업·창업·법률서비스 One-Stop 제공

□ 노후주택 재건축·재개발 추진은 시장 원리 충실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하여 적극 허가

□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청약제도 개편

- 중산층 맞벌이 가구도 공공분양주택 청약가능하도록 재산·소득 점수제(청약자 중 중위 재산/소득을 기준 점수로 재산·소득에 따라 가감) 및 공공분양청약 가점제
- 주택종합청약통장,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 일원화

□ 시장이 주도하는 대출 규제 기준 선정

- 금융당국이 정하는 LTV·DTI 기준은 모두 없애고, 시장과 금융사 자율적으로 대출 수준을 정하도록 하여, 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 구매를 위한 충분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중산층 맞벌이가정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 기준으로 중산층 맞벌이 가정이 혜택을 보도록 보장

* 맞벌이 가정의 경우, 소득이 많은 쪽의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개선

» 이행기간

□ 2020년 6월 이후부터 추진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되고 주거난이 해소될 때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재건축/재개발·청약제도 개편

- 특히 재정소요 없음

□ 공공단지 조성

- 공공단지 조성의 경우 적정 분양가 및 임대료로 회수가 가능하며, 공공 부동산 리츠(예상 수익률 3~5%) 및 공적 연기금으로 재원 조달 가능

정책순위

5

미래지향적 교육개혁 및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

정책분야 교육

» 목 표

- 교육행정 혁신
- 차별 없는 교육 구현
- 대학의 자율성 강화
- 미래를 대비한 교육

» 이행방법

【교육행정 혁신】

-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교육부 - 교육청 - 교육지원청의 방만하고 비대한 교육행정기관 개혁
 - 교육행정조직의 기능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
 -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

【차별 없는 교육 및 국·공립대학 무상등록금 추진】

-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
 - 사교육 중심의 교육비용 악순환 개선
- 국·공립대학교 무상 등록금 시행
 - 54개 국·공립대(일반대학·전문대학·교육대학), 49만명 대학생에 대해 무상교육

□ 사립대학교 학생에게 학자금 무이자 대출 시행

- 현 학자금 대출이자 금리 2.0%를 전면 무이자로 지원 추진
- 사립대학 적립금의 과도한 축적을 제한하여 등록금 인하 추진

□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되도록 대학입시제도 개혁

- 대입 수시전형의 공정성 회복 전까지 정시전형 중심으로 입시 운영
-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 밖 활동은 일체 기재 금지
- 부모 찬스 난무하는 특기자 전형 폐지
-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지역균형 선발 확대

【대학의 자율성 강화】

□ 대학경쟁력 강화

- 부실대학의 정리를 어렵게 하는 교육부 주도의 구조조정 지양, 교육시장에 의해 구조조정 되도록 유도
- 교육부의 간섭과 규제를 철폐, 대학에 대한 정보제공과 퇴출대학의 학생과 교직원 재배치 지원

【미래를 대비한 교육】

□ 국민 참여형 교육과정 개정으로 틀에 박힌 교육내용에서 탈피

- 국가수준교육과정 개정에 교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관련 산업 분야의 전문가,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변화에 걸맞은 교육내용 구성

□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여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실현

- 학생들이 자신의 성취수준, 관심과 필요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 선택권 확대
- 공통과목과 기초교과의 필수이수단위를 축소하고 선택과목을 대폭 확대

□ 교사 재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 경력 10년 차 이상 교사를 대상으로 교과 연수 및 시험을 의무화하고, 이를 호봉인상의 기준으로 적용
-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 교육대학원을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 활용

» **이행기간**

- 2020년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 2021년까지 입법 완료 목표
- 2021년 이후 전면 실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상향조정 추진
-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조정 및 지출 절감으로 소요 재원 확보
- 국공립대학교 무상교육을 위해 연간 1.4조 원 소요
 - 국공립대 전체의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은 5,070억 원을 제외한 1.4조 원의 추가 예산 필요
-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위해 연간 367억 원 소요
 - 2019년 학자금 대출액은 1조 8,000억 원으로 연 2% 이자 적용 시 367억 원 규모

정책순위

6

고용세습과 채용갑질 근절 및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형성

정책분야 노동

» 목 표

□ 불법적인 고용세습 근절

-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자녀·친인척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시 채용을 취소함

□ 채용절차에서 구직자의 인권침해 금지

- 면접 시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언 등 업무수행과 무관한 언동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구직자 인권침해 예방조치 의무화로 인권침해의 사전예방

- 구인자와 면접심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조치 의무부과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구직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침을 고시하도록 의무부과

□ 구직자의 알권리 보장

- 채용일정과 채용심사의 단축 또는 지연 및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 전 과정과 채용여부에 대하여 구인자에게 고지의무를 부과

□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안정성 함양

- 직업훈련-고용서비스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동성을 담보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함

» 이행방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상반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해당 없음

정책순위

7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익형 직불예산' 3조원 확보

정책분야 농림해양수산

» 목 표

□ 공익형 직불금 예산 3조원 확대 편성을 통한 농가소득 지원 (현행 2.4조원 증액)

» 이행방법

□ 농촌에 정주하는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1단계 목표로써 공익증진 직불금을 연간 2천억씩 인상함으로써 정부 신뢰도 구축 및 농가소득 향상

□ 2단계 사업으로 예산의 증액만큼 공익적인 기능을 추가 신설하여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 발굴

» 이행기간

□ 2021년 정부 예산안부터 연간 2천억 증액 편성(총 3조원)

» 자원조달방안 등

□ 정부 지출구조조정 및 시범사업 결과를 통한 비용추계

정책순위

8

군 복무 청년에게 더욱 확대된 국가 보상 및 지원 강화

정책분야 국방

» 목 표

□ 국가는 군 입대자에게 입영 ~ 전역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고 군생활 전반에 대해 지원하며, 국가보훈자가 될 경우 현재보다 확대된 예우 및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

» 이행방법

□ 군 입영시 대학이나 직장 등 사회환경으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일과 후 독서, 컴퓨터 활용 e러닝/자격증, 인터넷 수강 등 자기개발 여건의 대폭 개선

□ 군장병의 월급을 현행 최저임금의 1/2 수준으로 인상하고, 매월 사용후 남은 잔여금액을 은행에 저금한 후 전역 시 환급 조치

- 현재 장병봉급 540,000원 ⇨ 897,000원으로 인상('20년 최저임금의 1/2 수준)

↳ 매달 50만원 저축(개인생활비 제외 후) ⇨ 전역시 1천만원 목돈 마련 가능

□ 모범적인 군생활 전역자에게는 최대 3천만원까지 장기 저금리로 융자

* 전역 후 학자금, 숙소지원 등 생활정착금으로 활용토록 국가차원에서 지원

□ 군생활간 중경상 등 불의의 사고인원에 대해 군·민간 치료를 포함 완치될 때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지원하는 국가책임형 보훈제도 정착

* 군생활간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연금 지급, 군생활의 연금기간 산정, 보훈 대상에게 현실성 있는 수당제공 등 국가차원의 보훈 및 복지제도 개선

» **이행기간**

□ 병영생활 혁신 TF 조직 및 종합 보상대책 마련 : ~'20. 8월

* 예비역 간부·병, 군 전문가(외부 전문가 포함) 심층진단/결과 국회보고

□ 장병봉급 예산반영, 병영혁신/지원 관련 법령 제·개정 등 : ~'20. 12월 한

» **재원조달방안 등**

□ 장병 봉급, 전역병 지원금 : 국방부·기재부 등과 연계해 예산 재조정/반영

□ 병영여건 개선 및 시설 소요물품(PC 교체, 도서 비치 등) : 전력운영비 반영

정책순위

9

방송 공공성, 공정성 강화

정책분야 과학기술 정보통신

» 목 표

- 방송이 정치 및 자본권력에 장악되면서 상실된 공공성·공정성 회복
 -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보장, 방송 공공성·공정성을 위한 규제 및 법체계 정비

» 이행방법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으로 자율은 확대하고 책임은 강화
 - 균형 잡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개선, 방송 제작 편성 독립성 보장 등 방송독립성 강화
- 공영 및 민영방송 정의 도입, 공영방송 핵심가치 부여
- 편파방송 배제를 위한 ‘국민참여심의제’ 도입
- 공영방송 수신료 투명화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한 ‘수신료검증위원회’ 구성
- 방송관련 차별없는 규제체제로 전환 및 재허기간 연장 검토
- 재난방송 기능 정상화

» 이행기간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 핵심가치 부여 등 : 21대 국회 중
- 국민참여심의제 및 수신료검증위원회 구성 등 : 21대 국회 상반기
- 기타 규제개혁 등 : 21대 국회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해당 없음

정책순위

10

미세먼지 50% 감축 및 호남권 등 환경일자리 100만개 창출

정책분야 환경, 문체

» 목표

□ 한국판 그린뉴딜 '녹색경제 10년 민생뉴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미세먼지·온실가스는 50% 줄이고, 새로운 환경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이행방법

□ 미세먼지 대응! 전국 초등학교에 가상현실(VR) 체육관 보급

- 전국 100명 이상 재학 중인 초등학교(4천개소)에 시설보급
- 양궁, 축구, 농구, 볼링, 산악자전거 등 20여 가지의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 구성
- * 1개소당 6천만원×4,000개소 = 2,400억원 확보

□ 시민참여 녹색빌딩 및 도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 통유리 건물 금지법 등 도시 에너지 50% 효율화로 50만개 일자리 창출

□ 호남권 등 기후·대기산업 복합 실증화 클러스터 권역별 조성

-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관련 녹색기술 육성으로 환경일자리 20만개 창출

□ 2030년,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에너지 50% 감축과 일자리 30만개 창출

□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21년)

- 2030년 감축 목표를 법정 계획으로 추진
- 국내·외 기후피해 및 손실, 미세먼지 피해 대응기금 조성

» 이행기간**□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21년)**

- 2021~2030년 녹색경제 10년 민생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21년)

» 자원조달방안 등**□ 녹색경제 전환자금 2030년까지 100조원 투자**

- 시장 경제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소요 비용의 배분
- *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 등 시장경제 시스템 활용

미래한국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미래한국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대한민국 미래희망경제 살리기 |
| 2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
| 3 | 강한 국가안보 튼튼한 대한민국 |
| 4 | 안전한 사회, 국민 불안 제로 |
| 5 | 국민공감 부동산 정책 |
| 6 |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 7 | 민생경제는 살리고 국민 부담은 낮추고 |
| 8 |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벤처 육성 |
| 9 | 따뜻한 동행, 'Go Together' |
| 10 |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 |

정책순위

1

대한민국 미래희망경제 살리기

정책분야 재정경제/노동/산업자원

» 목 표

-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폐기
- 최저임금 재조정 등 노동개혁 추진
-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재정 건전화
-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경제살리기

» 이행방법 및 기간

- 文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폐기
- 최저임금 재조정 등 노동개혁 추진
 -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도입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 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 포함
 - ②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 ③ 숙식제공 비용 등 부대비용 산입 확대
 - 대기업 강성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 강화
 -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의 일할 권리 보호
 - 대등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전환

□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재정 건전화

- 재정준칙 도입을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 추진
 - ① 채무준칙 : 국가채무(D1)의 GDP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
 - ② 수지준칙 :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2% 이하로 유지
 - ③ 수입준칙 : 국세감면율 직전 3년 평균 + 0.5% 이하
- 채무한도 초과 시 잉여금 전부를 채무상환에 사용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의무화
- 사회보험 재정전망 체계를 장기개정 전망의 틀 내에서 일원화

□ 과감한 규제개혁 실시로 경제살리기

- 규제개혁위원회의 장관급 기구(가칭 '규제개혁처')설치와 국회 내 규제혁신 상설기구 설치
- 「행정규제기본법」개정을 통한 규제비용관리제 법제화
- 의원입법의 규제영향 분석서 제출

정책순위

2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정책분야 사법윤리/교육

» 목 표

- 文정권 무소불위 공수처 폐지
- 사법개혁을 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우리아이 보호
- 채용청탁 및 고용세습 근절
- 문화·예술·체육계의 불공정 실태 근절

» 이행방법 및 기간

- 공수처 폐지 법률안 발의
- 검사 인사 및 예산 편성의 독립성 강화
 - 검사 인사 실무부서 이관(법무부→대검)
 - 검찰총장에게 검사 인사 추천권 부여
 - 검찰의 예산 편성을 법무부에서 독립(「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개정)
 -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및 증원
-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통령의 임기 5년보다 길게 6년으로 연장(「검찰청법」 개정)
-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 합격한 사람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여 변호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은 응시자격을제한하며,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

□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우리아이 보호

- '전학청원권' 도입 및 정치적 중립 훼손 교원 징계 강화 및 교단 배제
- 학제개편 및 학교 내 선거운동 금지

□ 채용청탁과 고용세습 근절

- 청년이 참여하여 공정한 채용을 감시감독하는 기구를 당과 국회에 구성
- 고위직 공무원의 부정 채용청탁 시 처벌 강화
- 노조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 채용하는 행위 근절

□ 문화예술계와 체육계의 불공정 실태 근절

- 국가권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스포츠 단일팀 구성 방지 체계 마련(「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스포츠기본법」 제정)
- 문화예술계와 체육계의 공정윤리 기반확립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 마련
- 문화예술계·체육계의 신고자 및 제보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당내 '공정윤리 대응반(TF)' 상시 운영지원
-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스포츠계 전반의 비리와 불공정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 점검)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재정운영계획(19~23년) 계획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과 문화체육관광부소관 예산 일몰제 도입 등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마련

정책순위

3

강한 국가안보 튼튼한 대한민국

정책분야 국방/통일외교통상

» 목 표

- 文정부 안보포기 정책 폐기
- 한미동맹강화 및 원칙있는 대북정책 추진
- 국민안심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
-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

» 이행방법 및 기간

- 9.19 남북군사합의서 등 文정부의 안보포기 정책 폐기
 - △9.19 남북군사합의서 채택, △대중 3불정책, △한미연합군사훈련축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와 번복 등 文정부의 안보포기 정책 폐기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완벽한 군사대응태세 강화 및 한미간 ‘핵동맹’ 추진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 및 「남북협력기금법」 등 개정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국민통제 강화와 북핵 위협과 무관하게 추진되는 남북협력사업 차단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제정 및 범부처 컨트롤타워 구축
- 군인 정년 연장으로 직업 안정성 확보, 육·해·공군 현역 장병 복무 기간을 공정하게 조정하고 실전 전투력을 체계적으로 강화시키는 ‘현역 복무 프로그램’ 개발로 복무 여건 개선
- 예비군 훈련수당 인상 및 전역 예정 군인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 강화

□ 재외국민 권익 신장 적극 추진

- 재외국민 대상 대형사건사고·해외재난사고 전담 (가칭)‘해외재난안전대책본부’ 설립
- 재외국민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국가 간 협정 확대 추진
- 재외동포 민족교육 강화를 위한 한글학교 지원 확대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재정운영계획(19~23년) 계획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 활용

-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은 33조원 규모

□ 남북협력기금은 북핵 완전 폐기 때까지 규모 축소하여 재원 전환활용

정책순위

4

안전한 사회, 국민 불안 제로

정책분야 안전/보건복지

» 목 표

- 감염병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 여성·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거리 조성

» 이행방법 및 기간

- 우한코로나19 등 원인불명, 치료제 없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이 불안하지않도록 종합대책 마련
 -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
 -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하는 입국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또는 입국시 검역 및 방역을 철저히 관리
 - 감염병 진단 최전선인 선별진료소에 대한 역할과 기능 강화
 -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 백신과 치료제가 신속하게 개발 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마스크,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 지원 강화
- 여성·아동범죄 근절 위한 촘촘한 안전망 확충
 -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특별법」제정
 - 범행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의 일환으로 「스토킹 방지 특별법」제정
 - 영상을 이용한 협박 성범죄 대처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 몰카범죄 예방 및 무분별한 변형카메라 약용을 막기 위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개정

-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을 위해 「조두순 방지법」(가칭) 마련 (현행법상 접근금지 범위를 100미터에서 2킬로미터로 확대, 주거지나 학교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거주를 제한, 주취감경 폐지 공론화 등)

□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거리 조성

- 초등학교 주출입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에 교통관리 경찰관 추가 배치, 하교 시간대도 교통관리 경찰관 배치 확대
- 노인보호구역에 과속단속 CCTV 설치 의무화
-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사용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재정운영계획(19~23년) 계획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과 우한코로나19 극복 위한 2020 추가경정예산 활용

-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이 33조원 규모

정책순위

5

국민공감 부동산 정책

정책분야 건설교통

» 목 표

- 실패한 文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공감 부동산 정책으로 정상화
- 국민수요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 多 공급
-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 文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세금정책을 文정부 출범이전으로 정상화
 -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공제금액도 상향(6억→9억, 1가구 주택자는 9억→12억)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 인하(300→150%)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과 폐지
 - 중산층·서민의 내집 마련을 가로막는 대출규제 등 전면 재검토
-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을 多 공급
 - 서울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 기존 도시들의 스마트 고밀화 전략 추진
 - 노후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종합적 재생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
-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 국민 누구나 상환능력 검증이 된다면, 주택담보대출 기준 대폭 완화
 -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실거주 목적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 무료컨설팅 서비스 제공하여 청년주택이 확대되도록 예산확보 및 정책 지원
- 학세권, 역세권, 숲세권 등 취향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청년 주거 공간 제공이 가능토록 지원 강화

» 재원조달방안 등

- 건설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12.5조원(2020년 예산상) 활용하되 세수감소에 대해서는 민간 R&D확대와 일자리를 통해 세수 자체의 증가율을 잠재성장률이상으로 확대하여 손실보전

정책순위

6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농림해양수산

» 목 표

- 투자활성화·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 이행방법 및 기간

- 시장을 옥죄는 족쇄를 풀어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상속·증여세 등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세 부담 대폭 경감
 - 각종 부담금 존치 필요성과 부과수준의 적절성 등을 재검토해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 폐지
 -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안전시설 등 투자와 R&D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4차산업 일자리 특별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 창출
 - △4차산업일자리특별법 발의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 설치 △당 4차산업일자리혁명 기구 설치 △당 상임위원 4차산업일자리 담당 국회의원 배치
 -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글로벌 ‘히든 챔피언 기업 100개’ 발굴
- 문화콘텐츠 맞춤형 지원 확대
 - 현행 제조업에 맞춰져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문화콘텐츠산업에 적합 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 영상콘텐츠 산업에 제조업의 R&D 세액공제와 유사한 형태의 공제제도 마련
- 청년 창업·후계농 육성지원
 - 청년 후계농 10만명 육성을 목표로 청년 창업농 지원대상을 45세 미만으로 확대, 영농정착 지원금을 5년으로 늘려 월 100만원씩 지급
 - 후계농어인 육성자금 금리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

-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가업승계청년농업인의 상속세 공제확대
- 농촌여성 농정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체 한밤상' 지원 확대 및 여성특화건강검진, 아이돌봄사업 등도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재정운영계획(19~23년) 계획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 활용하고 민간일자리 확대를 통한 소득세 등 세수확대로 재원마련

정책순위

7

민생경제는 살리고 국민 부담은 낮추고

정책분야 보건복지/재정경제

» 목 표

- 자영업자·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
-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
-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생활 안정화
- 가계 세 부담 완화

» 이행방법 및 기간

- 文정부의 경제파탄으로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 「부가가치세법」개정을 통해 20년 넘은 간이과세 기준을 2020년 상황에 맞게 간이과세 기준 상향조정(現 4,800만원→1억원)
 -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 농어민, 근로자 등에 대한 복지정책 수준으로 소상공인 생존권 강화 및 고용·폐업 등 사회보험성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의 건강보험료 인하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제로 즉시 일원화하여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의 건강보험료를 개편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재정법」개정을 통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하여 국회에서 심의(국민의 보험료와 세금 지출에 대해 꼼꼼한 심사), 국민의 보험료 인상 저지
-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생활 안정화
 - 농정예산(국가예산 대비 현재 3% 미만)을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확대

-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통합 ‘(가칭)농어업인 연금제’를 추진
- 농업통계를 전담하는 전문기관 신설(가칭 ‘농업축산통계국’)
-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수산직불제법」개정)
- 어촌계장 수당 월 30만원 지급(「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

□ 가계 세 부담 완화

- 부녀자·자녀·어르신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확대 및 혼인·이사·장례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합리한 세금 폭탄 제거(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추진)
- 통신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 도입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재정운영계획(19~23년) 계획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과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 증진기금 증가분 활용

정책순위

8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벤처 육성

정책분야 재정경제/문화관광

» 목 표

- 청년 일자리 창출
- 청년·신인 예술인의 창작활성화
- 벤처기업 지원과 육성으로 대한민국 경쟁력 확보 발판 마련

» 이행방법 및 기간

- 기업의 활력을 살려, 청년 일자리 창출
 -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편, 유연근로제 확대로 기업의 활력을 살려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국회에서 9년째 발목잡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일자리 관련법 처리와 발굴에 역점
- 문화·체육·관광을 결합한 ‘청년 문화패스’ 신설
 - 만 18세~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특화된 문화·체육·관광 패스 제도 전면 시행
 - 국공립 대상 기관 전시와 공연에 한해서 할인 혜택 기능만 있었던 기존 ‘문화패스’와 교통수단 할인혜택 위주의 ‘철도패스’, ‘지역별 관광패스’의 기능을 결합해 사용 분야와 할인 혜택을 전국 단위로 통합확대
 - 「문화예술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청년들의 문화와 여가생활 지원 강화,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도모
- ‘4전5기’ 벤처생태계 환경조성
 - 혼재된 벤처 관련 규제 정책의 총괄 조정을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일원화
 - 「재도전 지원확대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으로 ‘4전5기’ 성실실패구제제도 및 재창업 기반 마련을 위한 창업자 공제제도 정비

□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및 인재 육성

-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에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를 허용
- '민간 중심의 벤처·스타트업 육성 타운' 및 '글로벌 파트너스 센터' 조성, 4차 산업분야의 특성에 맞는 벤처 캠퍼스 조성
- 블록체인(5천억원), 소프트웨어 인재펀드(3천억원) 조성 및 지원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재정운영계획(19~23년) 계획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 활용

-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은 33조원 규모

정책순위

9

따뜻한 동행, 'Go Together'

정책분야 보건복지

» 목 표

- 실종아동 제로 사회 구현
- 이산가족·납북가족·국군포로가족 명예회복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합리적인 보훈 급여금(보상금, 수당) 지급 시스템 마련
- 참전명예수당 인상
- 위탁병원 의료서비스를 보훈병원 수준으로 확대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

» 이행방법 및 기간

- 실종아동 제로(ZERO)사회 구현(「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 실종아동이 가족과 만날때까지 유전정보 보존
 - 전국 아동보호시설 입소카드 및 지자체 등에 보관 중인 폐쇄된 시설의 아동 신상카드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전산화 시행
- 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 조정(30%→40%)
- 이산가족, 납북가족, 국군포로가족의 명예를 회복
 - UN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납북자·국군포로 생사확인요청과 송환 공식 요구
 -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정례화 및 수시상봉, 서신왕래, 고향방문 등을 적극 추진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실질적 위로금 지급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 정부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강제복송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제3국 출생자녀의 제도적 차별 개선(양육가산금, 교육지원금 등)
- 북한이탈주민 新이산가족화 방지를 위한 취업 및 창업기회와 정착지원금도 확대
- 親정부 성향 단체 편향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차단, 모든 단체에 골고루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에 북한이탈주민 임용 확대

□ 합리적인 보훈 급여금(보상금, 수당) 지급 시스템 마련

- 전체 예산 대비 1.1%대인 보훈예산 비중 단계적 확대, 대상자별 적정 보훈 보상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 반영 및 집행
- 보훈급여금 병급(이중지급) 금지제도 합리적 개선과 전상 수당 등 각종 수당의 현실화 추진
- 국가유공자의 보훈보상금, 수당 등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개선을 통해 기초연금 등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참전명예수당 50만원 이상으로 인상(1인가구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

□ 위탁병원 의료 서비스를 보훈병원 수준으로 확대

-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진료 감면 대상자 확대(감면대상 기준인 75세 연령 제한 폐지)
-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진료 감면 대상자들에 대한 약제비용 지원
- 지역별 위탁 병원 확충 및 관련 예산 대폭 반영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 현재 만64세까지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연령 제한 단계적 폐지
- 300㎡~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및 전국 표준화, 장애인 대중교통 수단 강화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신체부착형 재난알림시스템 연구 개발, 보급 (시청각장애인 73% '재난보도 사각지대')
-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점자 스마트워치' 보급 확대
- 뇌전증 환자에게 직업훈련, 의료비, 심리상담 등 체계적 지원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재정운영계획(19~23년) 계획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과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남북협력기금 재원축소분을 활용
 -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은 33조원 규모
 -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여유자금 3,100억원
 -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 일반회계전출금 1,000~2,000억원

정책순위

10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

정책분야 재정경제/문화관광

» 목 표

-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
- 어린이집 급식비 공공기관 수준으로 향상
-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아이 눈높이 화장실 조성
-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
 - 난임시술에 있어 지원 횟수제한, 소득기준, 연령차별 폐지
 - 시술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며 난임시술에 대한 본인부담 완화
 -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 남성 난임 시술에 대한 비용 지원 확대
- 어린이집 급식비를 공공기관 어린이집 수준으로 향상
 - 현재 어린이집 최저 급식비와 간식비를 공공기관 어린이집 수준으로 인상, 140만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
 -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표준보육비용 공표 의무화 및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정할 수 없도록 「영유아보육법」개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아이 눈높이 화장실 조성
 - (공중화장실 신규 건립시) 아동 전용 낮은 세면대 설치, 수전위치 변경, 아동용 좌변기·소변기 설치, 아이 키에 맞춘 핸드드라이어 설치

- (기존 공중화장실의 경우) 아이용 세면대 발판 비치, 보조좌변기 및 변기디딤대 비치, 핸드드라이어 위치 변경
- 남녀화장실 모두 유아 돌봄이 가능하도록 '우리아이 눈높이 화장실' 동일하게 추진
- 유모차 출입이 가능한 '가족화장실' 등 확대

□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해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모든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확대 지원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재정운영계획(19~23년) 계획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과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 증진기금 증가분 활용

더불어시민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시민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 2 |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 3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활력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
| 4 | 그린뉴딜 정책 강화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 5 | 남북평화 정착과 교류 확대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
| 6 | 대한민국 미래, 청년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
| 7 | 언론의 공익성과 공공성 회복으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 |
| 8 |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 실현하겠습니다. |
| 9 | 일하는 국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 개혁 이루겠습니다. |
| 10 | 4차산업혁명시대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정책순위

1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책분야 보건

» 목 표

- 감염병 국가 대응체계 구축
- 주기적인 세계적 감염병 확산에 따른 국가 전문연구기관 건립
-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권역별 전문병원 추진 및 공공의료인력 양성 확대

» 이행방법

- 국립 감염병 연구소 건립
 - 국립보건원 산하 감염병 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대개편
 -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연구센터로서 연구인력 및 연구재원 집중
- 감염병 전문병원 이외 지방의료원 증설 및 감염병 치료시설 추진
 -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지방의료원(공공병원) 증축 및 확충
-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
 -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지원
 - 위급 상황 시 치료제 및 백신개발 신속 승인절차 신설
 - 전염병 도래와 같은 위기 시, 정부주도 치료제 및 항체개발 TF 구성
 - 치료제 및 백신개발을 위한 R&D 투자 확대

» **이행기간**

- 국립 감염병 연구소 건립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
- 공공의료인력 확대 : 2020년부터 관련법 개정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감염병 예방 및 공공의료 기능 확대 예산 매년 10% 이상 증액

정책순위

2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책분야 여성, 청소년

» 목표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디지털 성범죄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온라인 성 착취물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 시스템 구축
- 피해자 보호 정책 및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 강화

» 이행방법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형법 개정을 통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적용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상습법 및 가담자 처벌 규정 신설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즉각 조치 이행 의무 신설 및 미 이행시 처벌 규정 신설
- 온라인 성 착취물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 시스템 구축
 - 고도화, 전문화 되고 있는 온라인 성 착취물에 대한 국내 및 국제적 수사 공조 시스템 마련
-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정착
 - 불법촬영물 신속 삭제 지원, 피해자 신원보호 방안 개선 및 변호사 선임 등 지원 체계 구축
-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 강화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 과정 신설, 전문 교육자 양성 시스템 마련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사항은 2020년부터 준비하여 즉시 추진
- 기존 사업은 2020년부터 관련 사업 내용 확대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관련 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 편성

정책순위

3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활력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정책분야 소상공인, 자영업

» 목 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 확대 및 안정적 운영 지원
- 영세, 신규 자영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영세 소상공인 포함
-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업종 제한 폐지를 통한 안전망 구축

» 이행방법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적용해 자영업주 보호
 - 복합쇼핑몰 입지규제 정비로 소상공인, 자영업주 피해 최소화
-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사업자 매출세액 우대공제를 상시적으로 적용
- 영세 및 신규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대상 업종 제한을 폐지
 - 현재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나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업종이 일부 제조업, 운수업, 도소매, 음식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제한적인 것을 개선 시키도록 함
- 무주택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자영업자 주거안정 지원
 - 소득의 원천에 관계없이 무주택 자영업자에게 무주택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월세, 전세, 매매와 관련한 주거안정 정책 혜택 적용
- 자영업자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실효성 제고
 - 노란우산공제 최소 납부금 완화 및 해지 시 공제금 원금 보장과 함께 희망장려금 지급 확대

» **이행기간**

□ 2020년부터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보완 대책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정책순위

4

그린뉴딜 정책 강화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정책분야 환경, 산업

» 목 표

-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산업 혁신을 통한 친환경 청정인프라 구축
- 저탄소 사회 전환 및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 이행방법

- 미세먼지 관리 강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질적 저감 대책 마련
 -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 취약집단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기능 국가지원
- 생활밀착형 차량의 수소차 등 친환경 에너지 차량으로 교체 촉진
 - 학교 및 학원 차량, 마을버스 등에 대한 우선적인 수소차량 지원 추진
 - 전국적인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 및 안전점검 제도 개선
- 에너지산업 혁신정책의 체계적 수립
 - 재생에너지 확대, 미래차배터리 신산업 육성, 가스경제 육성, 그린건축 확대 등 에너지 관련 신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 강화 방안 마련

» 이행기간

- 2020년 국회 차원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구성 후 진행계획 수립
- 단기 정책과제 및 중장기 방안 마련 후 구체적 시행계획에 따라 진행

» 자원조달방안 등

- 국가 그린뉴딜 관련 정책 계획에 따른 자원 규모 확정 후 연도별 사업예산 편성
- 기존 친환경 관련 정책 예산 추가 확대 계획 수립 후 진행

정책순위

5

남북평화 정착과 교류 확대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책분야 통일, 외교

» 목 표

- 개성공단 재가동 및 확대 추진
- 남북철도 연결 사업 통한 '21세기 신 실크로드' 구축
- 남북 자원 공동개발 및 국제평화경제시대 구축
- 인도적 교류 정상화 및 역사 문화 남북 공동 연구 추진

» 이행방법

- 개성공단 재가동 및 확대 추진
 - 개성공단 가동을 위한 21대 국회 결의,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 접촉 및 관련국 실무회담 진행
- 남북철도 연결 사업 통한 '21세기 신 실크로드' 구축
 - 남북한 철도 및 유라시아 철도 연계를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마련
 - 남북러, 남북중 철도 운영기관 협의체 구성
 - 경의선 고속철 사업 추진
 - 유라시아 물류네트워크 초기 사업으로 '나진-하산 프로젝트' 국가사업으로 추진
- 남북 자원 공동개발 및 국제평화경제시대 구축
 - 희토류 등 북한 자원 광물에 대한 남북 공동개발을 위한 남북 협의체 추진
 - 남북한 접경지역 및 남북한 교통, 물류 거점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평화경제구역 지정 운영
- 인도적 교류 정상화 및 역사 문화 남북 공동 연구 추진
 - 남북한 인적교류 정상화 및 자유 왕래, 역사-문화 연구과제에 대한 민관 합동 연구 진행

» **이행기간**

-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남북 교류 확대를 위한 여건 마련
- 남북간 교류 및 국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후 진행

» **재원조달방안 등**

- 남북협력기금 활용 및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특별기금 구성, 국제교류에 따른 자본확충

정책순위

6

대한민국 미래, 청년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정책분야 교육, 주거, 노동

» 목 표

-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지원
-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 추진

» 이행방법

-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 부모 소득, 학교별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해 국가장학금 제도의 형평성 제고
 - 학자금 대출 규모 확대 및 상환 조건 완화,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한 상환 부담 완화
 - 국립, 시립, 도립 대학 등에 대한 등록금 인하 추진
-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지원
 - 도시재생, 신규택지 공급시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복지 대책 우선 마련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실행계획 점검
-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 추진
 - 취업연계형 교육시스템 정비 및 강화
 - 대학, 기업, 공공부문의 일자리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전담 기구 구성

» **이행기간**

- 청년정책 전담 정부 기구 구성으로 종합 정책 로드맵 구성
- 2020년부터 연도별 계획 수립 후 공약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교육, 국토, 노동 등 기존 정책 예산 확대 편성
-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활용

정책순위

7

언론의 공익성과 공공성 회복으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

정책분야 언론

» 목 표

- 언론의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산업논리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적 제도 마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송 통신 융합 언론 정책 구현

» 이행방법

- 언론의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산업논리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 공영방송 사장 선정에서의 중립성 원칙의 변함없는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 방송광고 판매제도에 대한 합리적 재정비
 - 일정 매출 규모를 넘는 언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적 제도 마련
 - 가짜뉴스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 가짜뉴스 확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의무규정 강화
 - 가짜뉴스에 따른 뉴스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한 국가 지원 체계 구축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송 통신 융합 언론 정책 구현
 - 방송통신융합 정책 마련을 위한 범 정부 통합 기구 구성
 - 미디어 산업 성장에 따른 시청자 선택권 강화 추진
 - 매체간 균형 발전 및 융합 언론매체에 친화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

» **이행기간**

□ 제21대 국회 임기 내 입법 추진 및 예산 확보

» **재원조달방안 등**

□ 관련 정책별 기존 정부 예산의 재정비 후 필요부분에 대한 조정

정책순위

8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 실현하겠습니다.

정책분야 사법개혁

» 목표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조속히 추진
- 견제와 균형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강화

» 이행방법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조기설치
 - 청렴한 고위공직자가 성실히 공직에 임하도록 공수처 조기설치 추진
 - 공수처장의 조속한 임명을 위한 국회 내 협력
-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 사법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달성
 - 상호협력적인 검-경 관계 설정을 위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내실화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강화
 - 법관, 검사 등 퇴직한 공직자의 관련 사건수임 제한 강화
 - 퇴직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방지 위반 시 처벌 강화

» 이행기간

- 2020년부터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사법부 예산 내 재정지출계획 조정을 통해 조달

정책순위

9

일하는 국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 개혁 이루겠습니다.

정책분야 국회, 정당

» **목 표**

- 상시국회 방식의 매달 본회의 의무화
- 상임위원회와 법안소위의 정례개최로 법안심사 내실화
- 소수정당의 국회활동 지원확충

» **이행방법**

- 일하는 국회
 - 매월 임시회 소집, 본회의 개최 의무화로 일하는 국회 활성화
 -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세비 삭감
 - 국회의원 소환제도 도입 및 국회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 상임위원회와 법안소위 정례개최
 - 의안의 자동상정 및 상시 국정감사제도 운영
 - 법안소위 매달 2회 정례개최
- 소수정당의 국회활동 지원 확충
 - 교섭단체 이외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확대

» **이행기간**

- 국회 및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 2020년부터 단계적 추진
 - 상시국회 및 의안자동상정제도 우선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 불필요

정책순위

10

4차산업혁명시대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정책분야 노동

» 목 표

- 플랫폼노동자의 법적지위 마련
- 플랫폼노동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
-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

» 이행방법

- 플랫폼노동자 법적지위 마련
 - 택배, 배송대행 등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근로자개념 확대
 - 플랫폼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계약지원
- 플랫폼노동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
 - 공유경제 플랫폼 서비스 제공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범위 단계적 확대
 - 플랫폼노동자의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등 개정
-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
 - 근로시간, 휴식보장 등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 플랫폼협동조합 구성 지원
 - 종사자 안전, 시설장비 확충지원

» 이행기간

- 2020 ~ 2024년까지 단계적 추진
 - 노동관계법 등 관련 법 개정 추진
 -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개념확대 및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개혁과 비과세 조정 등 세입확대 통해 마련

정의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의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그린뉴딜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 |
| 2 | 청년에게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를 |
| 3 | 부동산 투기 근절, 서민 주거 안정 |
| 4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 책임 평등교육 |
| 5 | 차별 없고 안전한 일터, 땀에 정직한 나라 |
| 6 | 골목경제 활성화, 농어민 삶의 질 제고 |
| 7 | 정의롭고 안전한 복지국가 실현 |
| 8 |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대한민국 |
| 9 | 국민주권을 위한 정치국화정부사법 개혁 |
| 10 |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한반도 |

정책순위

1

그린뉴딜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

정책분야 재정경제 환경·산업자원

» 목 표

□ 10년 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

» 이행방법

□ 2030년까지 전기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

- 10년 안에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석탄화력발전 조기 가동중지를 반영한 2030년 국가 에너지 믹스 계획 수립
- 혁신적이고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분산형 발전 설비 운영 투자(10년간 약 200조 원)로 약 20만 개 일자리 창출
-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전략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여 2030년 전기자동차 1,000만대 시대

- 2030년까지 경유차 완전 퇴출 및 전기차 대체로 2030년 1,000만 전기자동차 시대 개막, 내연기관차 신규판매 제한 및 도심진입 금지 확대
- 자동차 주행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한 걷기 편한 거리 설계, 자전거 도로 10배 확충, 공유 자동차 확대 정책 시행

□ 정부 주도로 표준화, 범용화 전기자동차 고속 충전인프라 '코리아 차저(Korea Charger) 프로젝트' 추진

- 전국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시별 주요 거점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여 전기차 보급에 따른 충전문제 해결
- 고속도로 휴게소의 태양광 그늘막, 소음차단벽, 태양광 터널 등 태양광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에코 고속도로(eco-highway)를 추진

□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마을녹색전환운동) 사업 추진

- 20년 이상, 20평 이하 저소득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 ‘그린 리모델링 존(Green Remodeling Zone)’ 지정, 연간 20만호 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달성
- 1가구당 2천만 원 보조금 또는 무이자 용자 지원으로 ‘따뜻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6만 여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
- 새로 짓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은 탄소 넷-제로 건물로 공급하여 환경과 효율, 편의를 제공하는 주거복지 실현

□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그린뉴딜에 따른 피해 노동자,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대책 수립

- ‘그린뉴딜 전환 안전망 기금’을 조성하여 전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와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재교육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이들에게 일정기간 구직지원, 창업자금 지원, 4대 보험 지원
- 안전망 기금을 통해 중소 소재 부품업체들과 지역 산업 전환과 새로운 녹색 산업 진출 지원
- 그린뉴딜 전환과정에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하위계층 복지를 강화할 복지 정책들을 추가로 제도화

» **이행기간**

□ 2020년~203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탄소세 도입, 10년 한시 녹색채권 발행 등으로 매년 GDP의 1~3% 녹색투자재원 마련

정책순위

2

청년에게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를

정책분야 기재, 국토

» 목 표

□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

» 이행방법

□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의 기초자산 지급
- 양육시설퇴소아동, 소년소녀가장 등에게는 5천만 원의 기초자산 지급
- 일정금액 이상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는 청년 제외
- 5년간 연평균 14.5조 소요(연평균 인원 48만 명). 재원은 유사중복 청년예산 통합 및 조정, 상속증여세 8.5조원(20년 추정) 및 확대,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과세 강화

□ 청년 부채 부담 경감

- 신규 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 및 장기 연체 학자금 대출 탕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 파산절차 시 채권 면책 대상에 취업 후 학자금 포함
 - 대학원생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 대상 포함
- 청년 금융 소외자를 위한 청년신협 설치 등 사회적 금융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청년신용회생제도 도입' 등 청년 대상 신용회복 사업 추진
- 청년 눈높이에 맞춘 재무 상담 받을 수 있는 <청년생활금융상담센터> 설립 추진
- 위장취업 등 대출서류를 조작해서 대출을 알선해주는 청년 '작업대출' 규제

□ 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 월세거주 1인 청년가구 월 20만 원 주거수당 지급(19~29세 중위소득 120% 이하, 3년)
- 1인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저렴한 사회주택 공급 확대, 비영리법인·협동조합 청년용 쉐어하우스 비용 지원

- 저소득 청년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지원, 월세 거주자 부모의 월세 지출 세액공제 확대
-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로 기숙사 확충

□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 국회의장 소속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자녀 중 4년제 대학에 2009학년도에서 2019학년도까지 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녀의 대학입학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 군대 가는 청년에게 병사월급 100만 원 보장

- 병사 월급 최저임금 50% 연동제 실시
- 1단계로 병사 월급 100만 원 지급, 지속적인 인상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과 연동

□ 고위공직자 자녀취업 신고 의무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 고위공직자 자녀취업 현황 신고 의무화
- 채용광고에 근로조건 명시, 구직자의 SNS 계정 정보 요구 금지
- 채용성적 조작 및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면접위원 복수 및 외부 50% 이상 참여
- 청년고용할당제 3→5% 확대, 공기업→30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실시

□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 취업·승진·처우 등에서 학력학벌 차별 시 처벌 및 행재정 조치
- 블라인드 입시 및 채용 확대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기본적으로 상속·증여세 세수를 재원으로 하며, 종부세 인상분 등을 포함

정책순위

3

부동산 투기 근절, 서민 주거 안정

정책분야 건설교통

» 목 표

□ 선제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로 집값 안정,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 실현

» 이행방법

□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선제적 투기 근절 대책 실시

- 종부세 세율 인상 및 다주택 중과세
 - 현행 대비 1주택은 0.3%~1.0%p 세율을 인상하여 1.0%~3.0%, 다주택에 대해서는 1.1%~3.5%p 세율을 인상하여 2.0%~6.0%까지 과세
-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단계적 상향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 기업 별도합산토지 과세를 강화하고 재벌 비업무용 토지 상세 정보(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공개
- 사모펀드 보유 토지 종부세 종합과세 및 비과세감면 등 특혜 폐지
-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국회의원, 장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대상)

□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

-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전월세 상한제 도입
- 교육 학기제를 고려해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2회 보장으로 최소 9년 세입자 거주 보장
-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특혜 폐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반의 반값 아파트로 매년 10만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 장기공공임대주택 200만호 확보를 위해 반의 반값 아파트를 매년 10만호 공급

-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공영 개발하여 토지비 거품을 제거하고, 분양원가 공개로 건축비 거품을 제거
-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 건물 방식 도입(투기 방지를 위해 환매조건부 제도 병행 도입)

□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 선분양제 민간아파트 대상 분양원가 62개 항목 공개
- 실제 설계내역, 하도급내역 등을 토대로 한 표준건축비 도입
- 공공아파트 80% 완공 후분양제 의무화

□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실현

- 2018년 기준 107만 가구의 2배 수준인 215만 가구에 월 평균 20만원 주거급여 지급(선정 기준 중위소득 60% 확대)
- 최저주거기준 면적과 필수설비기준을 개선·확대하고 현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및 모든 거처에 적용(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
- 각종 개발사업·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강제퇴거 금지 (「강제퇴거 제한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확대 (15% → 30%)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증과세로 매년 9~15조 원 추가 세수 확보

정책순위

4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 책임 평등교육

정책분야 교육

» 목 표

- 대학서열 완화로 과도한 대입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구현

» 이행방법

- 만 3~5세 유아 3년 책임교육 실시
 - 10년 장기 프로젝트 추진
 - (1단계) 유보통합 추진. 교사 자격 및 보수체계, 부처 일원화
 - (2단계) 유아학교 제도 마련.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장점 흡수
 - (3단계) 시범운영하면서 단계적 확대
 - 국공립유치원 50% 확충, 누리과정 지원단가 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하여 임금격차 해소
- 동그라미 작은학교로 미래형 교육, 가까운 곳에 학습지원센터 설치
 - 사각형 학교건물을 다양한 형태의 선진 친환경 건물로 전환. 동그라미 작은학교 실현
 - 고학년부터 한반 20명, 점차 확대해 한반 20명 책임학년 실현
 - 석면 등 건강 위협하는 학교시설, 안전하게 정비
 - 집 가까운 곳에 1대1 멘토링 학습지원센터 설치, 국가 기초학력지원센터 설치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확대, 대안교육지원법 제정
- 과학고보다 좋은 일반고
 -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과학고 이상으로 개선
 - 외교·국제고·자사고→일반고 일괄 전환 차질없이 진행
 - 고교평준화 법제화, 국제중의 일반중학교 전환

□ 직업교육 혁신

- 직업계고 첫 월급 250만 원(최저임금 인상,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증액 등)
- 미래산업 고려한 학과 및 교육과정 개편
- 마이스터고 수준의 행재정 지원으로 직업계고 간의 격차 해소
-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 (1단계) 국공립 및 공영형 사립전문대 무상 → (2단계) 국공립대 및 공영형 사립대 무상 → (3단계) 공영형 외 사립은 가처분소득 감안한 표준등록금으로 등록금 절반
- 대학 등 고등교육 예산 확대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국공립대-공영형사립대 대학 네트워크

- 국립대 재정지원 확대 및 공적 역할 강화, 공영형 사립대 시범운영 후 본격 추진
- 국공립대와 공영형 사립대 중심으로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 구성 후 점차 확대
 - (1단계) 공동 교육과정, 학점교류, K-MOOC, 전학 등
 - (2단계) 대학 간 협의 거쳐 공동학위 수여
 - (3단계) 대학 구성원 공감대 있고 여건 구비되면 통합전형 실시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임기 내

» 자원조달방안 등

□ 일반회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달

정책순위

5

차별 없고 안전한 일터, 땀에 정직한 나라

정책분야 노동

» 목표

□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

» 이행방법

□ ‘전태일 3법’ 추진

- 5인 미만 사업장 600만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230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 매일 마주해야 하는 6명의 ‘김용균’, 기업살인법 제정

□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초단시간(4주간 1주 평균 15시간미만) 노동자 차별금지 및 노동권 확대
-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보호 입법 추진

□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채용과 전환을 법제화

-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제정
-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 불법파견 근절 강화

□ ‘노조 할 권리’ 실현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개혁입법
- ‘산별교섭 의무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법제화로 노동3권 확대
- 노조 쟁의권 제한(쟁의행위 요건, 사업장 점거 제한) 폐지
-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손해배상가압류 폐지

□ 채용공정성을 강화하고 해고 위협 없는 평안한 직장 실현

- 채용 공정성 강화
 - 고위공직자(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기업) 자녀취업 현황 신고 의무화
 - 채용성적 조작 및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면접위원 복수제(2명 이상) 및 외부전문가 50% 이상제 도입
- 정리해고 요건 강화
 - 해고 목적의 부당 인사발령 무효화 법제, 희망퇴직 등 강제(비자발적) 해고 금지
 - 산전·산후 여성에 대한 해고 제한 기간 180일로 연장
- 실업급여 확대
 - 1년 미만 3개월 이상,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 자발적 이직자 대상

□ 2022년까지 연 1,800시간대 이하 노동시간 단축

- 연차 휴가 25일로 확대
-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 35시간제 도입, 1일 7시간제(유급휴무시간 신설)
- 5인 미만 사업장에 현행 주 52시간 노동시간제 전면 적용
- 초단시간(4주간 1주 평균 15시간미만) 유급주휴일 및 연차휴가 부여
- 과로사법(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등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법안) 저지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법·제도 개선 사항

정책순위

6

골목경제 활성화, 농어민 삶의 질 제고

정책분야 기타(자영업자) 농림해양수산

» 목 표

□ 자영업자 소득 향상을 통해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어업 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축

» 이행방법

□ 골목활성화 3법(상점가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공공 배달앱) 제정

- 기존 전통시장 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는 상점가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상점가 지원법 제정
- 정의당이 최초 발의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정 및 발행규모 9조원으로 확대(복지 수당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 지역사랑 상품권과 연계하여 수수료와 광고료를 없앤 지역별 공공 배달앱 등 구축 및 지원을 위한 「공공온라인 플랫폼 지원법」 제정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
- 노브랜드와 같은 대기업 폼수 출점을 막기 위해 대기업 분담비율 50% 기준 삭제

□ 가맹점·대리점 본사 갑질 행위 근절

- 가맹점 분야 이익 배분 개선을 위한 최저이익보장제 도입
-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신설
- 중소기업 이하의 사업자에게 카드사와 교섭할 수 있는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 및 퇴거보상금 지급 보장
-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 실시

□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
-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자영업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지원

□ 농어민 기본소득 전면 도입

- 우선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법」을 제정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어민수당에 대해 국가에서 일부 (40~90%) 지원. 이후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전국화
- 공익형 직불금제도의 확대 개편(「공익증진직불법」 개정)

□ 충분한 농업 재해 보상을 실시하고 농업인 삶의 질 보장

- 「농업노동재해보상법」 입법 추진
- 여성농민 소득 및 사회적 지위 강화, 노인공동주거시설 확충 및 사회적 농업 활성화

□ 체계적인 소득보전 제도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

- 시증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품목별 가격변동직불제 확대 시행
- 안정적인 식량 수급체계 마련. 농업과 축산의 협력(지속가능한 경축순환 축산 실현)

□ 지속가능한 어업어촌 생태계를 마련하고 어민의 삶 보장

- 공익형 수산직불제. 어업생산보험제 도입
- 어선원 재해보험료의 85%를 국비로 지원해 가입 활성화 유도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증과세로 매년 9~15조 원 추가 세수 확보

정책순위

7

정의롭고 안전한 복지국가 실현

정책분야 보건복지·안전

» 목 표

□ 전국민 건강불평등 해소,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 안전이 일상이 되는 사회 실현

» 이행방법

□ 전국민 건강불평등 해소

- 공공보건의료 확대, 공공의과대학 설립, 선진국 수준으로 공공병원 기준 마련
-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
-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상화, 인구 5만 명 당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읍면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기능 강화)
- 보건의료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대, 병동에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제공
- 국민건강불평등해소 위원회, 국민건강부, 질병관리청·안전보건청 신설, 건강영향평가 실시
- 민간의료보험법 제정, 연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실시로 입원진료비 90% 보장
- 상병수당 도입으로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소득손실 보장

□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로 사회서비스 체계 전면 리모델링

- 주거지 중심으로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시설과 병원은 특정 기능 목적으로 최소화
-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숙인 등 지역사회 주거유형 마련 및 연계
- 주민지원센터를 '통합돌봄센터'로 개편, 전담공무원 확대, 시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 복지재량기금을 설치해 제대로 된 복지분권 실현
-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종사자 '2인 1조제' 도입으로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

□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 공공성 강화

- 국공립보육 50% 확대, 보육균형발전지표(차등보조율) 도입으로 지역별 국공립 격차 해소
- 거점 보육지원센터 설치, 교사처우 국공립 수준 인상, 아동심리상담가가 어린이집을 정기방문하는 찾아가는 인권보육 실시 등 민간보육 공공성 강화

□ 장기요양서비스 질 강화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으로 좋은돌봄 실현

- 국공립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종합재가, 주간보호 등) 확대
- 방문재활급여(물리치료) 신설, 지역 공공종합재가센터 확대 및 월급제 요양보호사 확대, 이용자에게 통합적 사례관리 제공, 요양보호사 처우 종합대책 마련

□ 전국민 기본 소득 보장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초연금 인상 등 적극적 빈곤 예방
- 생애주기 기본생활 보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유지 등 공적연금 강화

□ 일상이 안전이 되는 사회

- 범죄예방환경 조성, 지역사회 안전거버넌스 구축
-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스쿨존·홈존 확대 등 어린이 교통안전 보장
- 노인친화 보행환경 구축, 화재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화재안전 기준 강화
- 경찰·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 GMO완전표시제 시행 등 먹거리 안전 강화

※ 코로나19 민생피해 직접지원 3대 대책: ① 전국민 마스크 100% 공적공급 및 감염병 지원대책 최우선, ② 1,200만 노동자·자영업자·돌봄취약계층 피해 직접지원, ③ 510만 대구-경북 주민에게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직접지원

□ 동물복지 강화

-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개정, 동물기본법 제정, 시민참여형 동물의료보험 도입
- 반려동물 등록지원 및 놀이터 확대, 화장장에 동물화장장 설치 등 전용 화장장 확대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회계, 사회보장기금 등으로 조달

정책순위

8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대한민국

정책분야 여성, 기타(인권 이주민·지역균형)

» 목 표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 대한민국 어디서나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 실현

» 이행방법

- 젠더폭력 3법,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등 성평등 사회 실현
 - 젠더폭력 3법 실현
 - 여야 5당이 모두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 조속히 개정
 -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폭력 강력 대응
 - 스토킹처벌법부터 젠더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
 - 82년생 김지영법,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 채용 성차별 금지. 성평등담당관 선출과 성차별 가이드라인 제시,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 「성별임금격차 해소법」(일명 페이미투법) 제정
-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 탈시설 지원법 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UN 선택의정서 채택
 -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폐지, 65세 이상에게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공기업 설립,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콜택시 전국 단일 기준 마련 등 무장애 도시 실현
 - 연금 확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확대, 정신장애인 차별금지 및 지역서비스 강화
- 1,000만 이주민·재외동포를 위해 이민법 제정 및 재외동포청 신설
 -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 및 이민법 제정,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인권협력기구 설치

- 국제결혼 이주민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자립 지원
- 국제결혼 이주여성 기본권 보장 및 성불평등 해소,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확대
- 노동비자영주제도 도입, 인권이 존중되는 난민제도 신설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및 재외동포청 설치

□ 투명인간 청소년의 권리 보장

-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낮춰 청소년 정치 참여 활성화
- 학생 인권 및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친환경 학교급식 및 야간 프로그램 제한
- 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급, 청소년 젠더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 학교 시설 개선과 학생 중심으로 교육과정 혁신, 대학입시경쟁 완화 제도 마련

□ 「차별금지법」 및 「동반자등록법」 제정

-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에 차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받는 다양한 사유와 영역 추가, 차별행위 처벌 및 예방과 구제 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
- 가사대리권, 사회복지수급권, 임대주택 신청 및 승계권, 일상생활 등에서 가족구성원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동반자등록법」 제정

□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 실현

- 국민적 합의와 개헌을 통해 세종시 수도 명시, 청와대·국회 등 헌법기관의 세종시 이전
- 1단계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 추진
- 울산, 세종 등 국립종합대가 없는 광역시도에 국립대 신설, 「대학균형발전법」 제정
-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시 지원 확대(세제 감면 및 금융지원), 수도권 공장 총량제 강화, 혁신도시 연계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으로 일자리가 있는 지역 실현
- 복지·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격차 완화
-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로 국가균형발전협력체계 구축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법·제도 개선 사항, 일반회계 등으로 조달

정책순위

9

국민주권을 위한 정치·국회·정부·사법 개혁

정책분야

정치·행정자치, 사법윤리

» 목 표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개혁으로 국민 주권 회복

» 이행방법

□ 정치기득권 타파로 국민주권 실현

- 민심그대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낮춰 청소년·청년 정치참여 활성화
- 현역 2배 모금 특례 및 선거보조금 이중지원 등 기득권 폐지
- 교섭단체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지급방식 개선
- 선거공영제 확대, 지방의원후보자후원회 설치 등 선거문턱 낮추기
- 구·시·군당 설치 및 후원금 모금 허용
-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재·보궐선거 사유 책임 정당 공천 불허하는 공천무한책임제 실시
-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선거일 유급휴무일화와 투표시간 연장
- 장애특성에 맞는 선거정보 전달과 장애인 참정권 보장

□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특권 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 국민눈높이 국회 실현

-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도입
- 셀프금지 3법으로 국민 눈높이 국회 실현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백지신탁 제도 강화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매월 1일 자동개회, 상시국정감사·조사로 ‘일하는 국회’ 실현
-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쪽지예산 근절과 밀실거래 관행 폐지
- 교섭단체 요건 완화로 국회운영 민주화

□ 반부패 공직사회 개혁

- 고위공직자 검증기준 강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반부패 독립기구 설치
- 공공정보 사전 공개와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특수활동비 최소화 및 투명성 제고
- 정보경찰 폐지 및 경찰에 대한 시민 감시 강화
- 경찰대 폐지 및 순경으로 입직경로 일원화
-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없애고 시민·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경영 혁신

□ 국민주권 존중, 유전무죄 무전유죄 척결 사법개혁

-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체와 법원 민주화
-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다양성 보장
-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
- 전관예우 근절과 범조비리 척결
- 피의사실 공표 제한적 허용 등 인권존중 수사과정 정착
- 재벌 총수 사면, 황제노역, 유전무죄 특혜 근절
- 국민 사법서비스 향상
- 민주적 군사법제도 실현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법·제도 개선 사항

정책순위

10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한반도

정책분야 국방, 통일외교통상

» 목표

□ 군 체질 개선, 민주적 수평적 한미 관계 확립으로 동북아 평화·공동번영 실현

» 이행방법

□ 한국형 징모혼합제로 군 체질 개선

- 2025년까지 군 병력을 40만(간부 20만, 병사 20만) 수준으로 감축
- 징병제 기본틀을 유지하되, 모병(10만)과 징집(10만)으로 구분해 모집
- 전문병사(기술전문)
 - 10만 명, 의무 4년 / 일반병사 10만 명, 의무 6개월

□ 방위산업을 개혁해 무분별하게 증액되는 국방예산 효율화

- 청와대 방위산업비서관 신설로 방위산업 전반의 개혁 담당
- 방위산업을 개혁에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조정, 연구개발체계 개혁, 무기획득체계 개혁 등 포괄
- 국방과학연구소는 고위험 핵심 연구개발에 집중, 방산업체는 일반 연구개발, 성능개량 및 후속지원을 담당하는 민군 역할 재조정
- 무기체계 개발 시작부터 도입까지 13~27년 소요되는 초장기 획득기간을 감소하기 위해 도입 간에 물량·성능 수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유연화

□ 4자회담 제안하고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

-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전환 대화 진행될 동안 한미연합훈련 중단
- 동시적·병행적·단계적이되 종합적 로드맵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조화·북미수교 달성이라는 큰 틀의 원칙에 대해 남·북·미 공동합의 추진

□ 6자회담을 재개하고, 동아시아 지역 안보협력 강화

- 동아시아 안보협력 실질화, 제도화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토대 형성

- 동북아 외교·국방·경제 협의체 상설화
 - 외교·국방·경제 장관회의 성사와 정례화
 - 현재 서울에 있는 한·중·일 사무국 강화, 북한, 몽골, 러시아 등 확대 참여 추진

□ 인권과 평화 등 보편적 원칙에 기초해 일본, 중국 등 주변국 관계 정립

- 일본의 과거사 퇴행을 바로잡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자 등 과거사 문제 근원적 해결
- 평화와 공생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
- 중국의 주권은 존중하되, 중국 당국이 홍콩 및 대만 정책 등에 있어 무력사용 반대. 대화와 타협에 의한 문제해결 원칙 견지 및 민주화, 인권 신장 등 일국양제 원칙 및 그 발전에 입각한 정책을 취하도록 외교적 노력 전개
-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 조기 해제, 남중국해 등 주변국과 분쟁 문제 해결에 있어 주권 존중, 평화적 해결의 원칙 견지 촉구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방위산업 개혁을 통한 국방 예산 효율적 운용으로 추가 재원 마련

우리공화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우리공화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사회주의개헌 목적 ‘헌법개정국민발안권개헌’ 저지 이승만 자유민주 건국정신, 박정희 산업화 부국정신, 박근혜 자유통일정신 계승 |
| 2 | 김정은 정권 교체. 북한민주화 개혁개방 추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종북 주사파 세력 척결 |
| 3 | 첨단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
| 4 | 문재인 정권 불법비리 및 사법방해 특검 추진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탄핵의 위법성 조사 |
| 5 | 유류세 폐지로 유류비 반값 |
| 6 | 최저임금 탄력근로 노사합의시 처벌 폐지. 법인세 감세 등으로 기업주도 성장 추진. 탈원전 정책 철폐로 전기요금 인하. |
| 7 |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 대처 국정조사 실시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노인일자리 확충 |
| 8 | 전교조의 좌익사상 주입교육 금지 학부모와 교육목표 계약하는 ‘계약학교제’ 실시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으로 대학등록금, 직업훈련비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 35세까지 유예 |
| 9 | GTX 건설과 환승센터 및 콤팩트 시티 건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 획기적 증대 |
| 10 | 한민족의 높은 역사 정신문화 계승발전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강국 육성 |

정책순위

1

사회주의개헌 목적 ‘헌법개정국민발안권개헌’ 저지
이승만 자유민주 건국정신, 박정희 산업화 부국정신, 박근혜 자유통일정신
계승

정책분야 정치

[사회주의개헌 목적 ‘헌법개정국민발안권개헌’ 저지]

» 현황 및 문제점

- 2018년 3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법제처 심사요청안) 공개: 자유를 뺀 통일, 토지공개념 등 포함
- 2018년 3월 30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회주의 개헌저지 투쟁위원회 구성(위원장 김문수, 이재오, 김무성): 사회주의개헌 저지
- 2020년 2월 5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총선 후 토지공개념 동일임금 개헌 논의 필요성 언급. 과거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중국식 토지국유화 지지 발언
- 2020년 2월 11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등 개헌추진위 발족. ‘헌법개정 국민발안권’ 개헌 추진.
- ‘헌법개정 국민발안권’ 개헌은 촛불선동정치의 일상화를 통한 2단계 사회주의 개헌 추진이 목적

» 목표

- 사회주의개헌 목적 달성을 위해 일상적으로 촛불선동정치를 통해 개헌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단계 ‘헌법개정 국민발안권’ 개헌부터 저지
- ‘자유’를 뺀 통일, 토지공개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하고, 개헌 후의 연방제 통일 추진도 저지

» **이행방법**

- 4.15총선 ‘사회주의개헌 목적 헌법개정국민발안권 개헌 저지선 구축을 위한 후보 단일화’ 추진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전 기간(100~200명으로 사회주의 개헌반대 의원 모임 구성)

» **재원조달방안 등**

- 비예산 사업

[이승만 자유민주 건국정신, 박정희 산업화 부국정신, 박근혜 자유통일정신 계승]

» **현황 및 문제점**

-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입국 산업화 부국정신에 입각해 세계 10위권 나라로 우뚝 섬
 - 이 두 분의 건국과 부국의 공에도 불구하고 좌익 종북주사파 세력은 장기집권의 과(過)를 침소봉대하여 ‘이 나라가 기회주의가 득세해오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가 태어났다’는 식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 하고 있음
 - 오히려 정말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는 세습독재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압살하고 있는 북한임
- 건국대통령 이승만과 부국대통령 박정희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 전체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가 꽃피는 나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의무가 있음
 - 민주화세력으로 위장한 종북주사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대한민국의 과실을 향유하면서도 북한의 3대세습 독재를 옹호하고 이승만 박정희의 업적을 폄하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흔들고 있음

» 목 표

- 제국주의와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건국, 부국강병 정신을 선양하고, 자유통일을 이루려던 박근혜 대통령의 노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대한민국의 건국, 부국강병, 자유통일 노력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가르쳐야 함

» 이행방법

- 건국대통령 이승만, 부국강병대통령 박정희의 정신, 자유통일 대통령 박근혜의 정신을 선양
-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건국 및 부국, 자유통일의 역사를 필수 교육과정으로 확립

» 이행기간

- 즉시, 계속

» 자원조달방안 등

- 별첨자료인 10대 공약 자원조달방안 참조

정책순위

2

김정은 정권 교체. 북한민주화 개혁개방 추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종북 주사파 세력 척결.

정책분야 통일외교

» 현황 및 문제점

- 3대세습독재 김정은정권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를 불안에 빠트리고 있고, 북한 주민의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고 있으며, 자신의 고모부를 총살시키고 친형을 독살하는 등 극악무도한 공포정치를 실시
- 종북주사파 세력은 시장봉사자인 기업가를 착취자로 보고 있으며, 기업단위 노조를 처우 개선을 위한 노사협상의 수단이 아닌 전국단위 연합의 정치투쟁 수단으로 삼고 있고, 북한을 추종하며 북한정권의 세습독재 반인권 반자유에는 침묵하면서 허위사실에 입각해 탄핵을 이끌어냈으며, 그람시의 진지전 이론에 근거하여 언론 문화예술계 등을 장악해 진실을 조작

» 목 표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김정은과 종북세력이 주적임을 선포하고, 북한민주화와 종북세력 척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 종북주사파를 척결하여 토지공개념 등 자유시장 봉사경제를 사회주의 약탈경제로 대체하려는 시도와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에서 '자유'를 빼려는 음모를 저지

» 이행방법

- 국방백서에 주적 명시, 4.27판문점 선언 및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국방파괴행위 원상복구
- '자유민주주의 수호법'을 제정하여, 각급 기관 조직 기업들도 자신과 관련된 경우 법률에 근거해서 사회주의 약탈선동자들의 조직파괴, 기업파괴, 국가파괴 행위에 대해 징계, 고용계약 해지, 형사고발 등 다양한 자위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행기간**

□ 즉시

» **재원조달방안 등**

□ 비예산 사업

정책순위

3

첨단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정책분야 국방

[첨단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8개 군단·39개 사단' 체제를 2025년 '6개 군단·33개 사단 체제'로 바꾸는 식으로, 전방 2개 군단, 6개 사단 해체
- 주적 표현 금지
- 문재인 정권은 전쟁억지력 차원에서 만들어진 DMZ GP철거, 철원 지뢰제거, 탱크 방어벽 철거, 한강 수로 공동조사, 한강 하류 철조망 철거, 20km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으로 안보 환경을 날로 악화시키고 있다.
- 드론을 활용한 군사작전 등 군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드론의 위력은 미국이 본토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인 쿠드스군 사령관이 탄 차를 이라크에서 펀셋처럼 집어내어 공격한 것에서도 위력을 잘 알 수 있다.

» 목표

- 무너진 대북억지력의 복원
- 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

» 이행방법

- F35, 싸드 도입 등 신무기 획득 사업 계속 진행
- 기계화 사단 육성
- 드론 등 신무기 활용

» 이행기간

- 즉시, 계속

» 재원조달방안 등

- 별첨자료인 10대 공약 재원조달방안 참조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국제경제체제 편입으로 부강해진 중국은 국진민퇴(國進民退), 일대일로(一帶一路), 제1 제2 도련선(島鍊線) 설정 등 사회주의적 제국주의 행태를 드러내고 있음
- 미국이 인도양 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으로 이에 맞섬에 따라 국제질서가 미-중간 신냉전 체제로 재편되고 있음
 -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참가를 거부하고 있음
 - 바다는 교역과 개방과 번영을 가져온 장소로서 바다의 평화를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므로 대한민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동참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
 - 걸프지역 페르시아만에서 석유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대양해군을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번영에 필수적
- 문재인 정권은 지소미아 파기를 획책하는 등 동북아 안보를 저해하려고 한 바 있음.

» 목 표

- 한미동맹 강화 및 전시작전권 반환 취소
-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나라들과의 연합안보에 적극 참여

» **이행방법**

- 문재인 정권의 친중반미노선 반대: 일대일로 참여·북한을 경유한 러시아 송유관 부설 및 철도연결 계획 등 반대
- 인도양 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참여 결의안 및 한미일 삼각 안보 경제협력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 **이행기간**

- 즉시, 계속

» **재원조달방안 등**

- 비예산사업

정책순위

4

문재인 정권 불법비리 및 사법방해 특검 추진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탄핵의 위법성 조사

정책분야 사법윤리

» 현황 및 문제점

-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집권했지만, 그간의 행적을 보면 항상 ‘내’ 사람이 먼저였고, ‘북한 김정은’이 먼저였고, ‘중국’ 사람이 먼저였음
- 문재인 정권은 울산시장 하명수사 선거부정, 우리들병원 대출, 유재수 감찰 등 ‘3대 게이트’ 사건의 관련자들을 불법적으로 비호하고, 조국 사건의 경우에서도 사법방해행위를 남발함
 - 또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고 관련자 수사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피의자들에게 공천을 주어 선거에 출마시키려 하고 있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사검사들을 인사 학살하는 등 구조적 사법방해행위
 - 민변 등 친위세력을 투입해 계슈타포를 만들 것으로 의심되는 ‘공수처법’을 강행 통과
- 박근혜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많은 절차적, 실질적 위법행위가 의심됨

» 목표

- 특검을 도입해 문재인 정권의 비리 종합세트를 철저히 수사
- 문재인 정권의 사법방해행위 조사 처벌. 또한 죄형프레임주의로 약탈주의 좌익무죄, 봉사주의 우익유죄를 만든 문재인 정권 죄형법정주의 훼손을 처벌.

» 이행방법

- 기존의 상설특검법에 의거하여 문재인 정권 불법비리 및 사법방해 특검
- 공수처법 폐지, 추미애 탄핵, 특검 결과에 따라 문재인 탄핵
-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의 위헌 위법성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

» **이행기간**

□ 즉시

» **재원조달방안 등**

□ 비예산 사업

정책순위

5

유류세 폐지로 유류비 반값

정책분야 재정경제

» 현황 및 문제점

□ 경제활동에서 자동차는 필수품이므로 중소기업의 경우 차량 운행과 관련한 유류비 부담이 큼(2020년 3월 12일 현재 휘발유 리터당 전국 1,494원 서울 1,578원, 경유 리터당 전국 1,307원 서울 1,404원- 오피넷)

- 세금이 종량제로 리터당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주된 경제활동 내지 생계수단으로 삼는 사람의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됨

< 각 유종별 세금의 종류 >

| 구 분 | 고급휘발유 | 보통휘발유 | 경유 | LPG | 비 고 | |
|----------|--------------------------------------|-----------|-----------|----------|-------------------------------------|---------------------------------|
| 관 세 | 3% | 3% | 3% | - | 원유가격의 3% | |
| 수입부과금 | 16원/L | 16원/L | 16원/L | - | 리터당 16원 | |
| 세전 정유사가격 | | | | | | |
| 유류세 | 교통에너지 환경세 | 529원/L | 529원/L | 375원/L | - | 휘발유 : 리터당 529원 경유 : 리터당 375원 |
| | 개별소비세 | - | - | - | 160.6원/L | LPG : 리터당 160.6원 |
| | 교육세 | 79.35원/L | 79.35원/L | 56.25원/L | 24.09원/L | 교통세, 개별소비세의 15% |
| | 주행세 | 137.54원/L | 137.54원/L | 97.50원/L | - | 교통세의 26% |
| 판매부과금 | 36원/L | - | - | 36.37원/L | 고급휘발유 : 리터당 36원 LPG : 리터당 36.37원 | |
| 품질검사수수료 | 0.469원/L | 0.469원/L | 0.469원/L | 0.469원/L | 석유제품 : 리터당 0.469원 | |
| 부가가치세 | (세전 정유가격 + 유류세 + 판매부과금 + 유통마진) × 10% | | | | | |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홈페이지, 2017년 10월 21일 기준

출처: <https://md2biz.tistory.com/254>

» 목 표

□ 활발한 경제활동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 유류세를 폐지

» **이행방법**

□ 교통에너지 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모두 폐지

» **이행기간**

□ 즉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약 연 26조원의 세수 감소는 재량지출 억제, 불요불급 사업 폐지로 해결

별첨 자료: 10대 공약 재원조달방안 참조

정책순위

6

최저임금 탄력근로 노사합의시 처벌 폐지.
법인세 감세 등으로 기업주도 성장 추진.
탈원전 정책 철폐로 전기요금 인하.

정책분야 노동, 산업자원

» 현황 및 문제점

- 최저임금을 2018년 16.4% 7,530원/시, 2019년 10.9% 8,350원/시로 급속하게 인상함으로써, 1%의 대기업 12% 종사자를 제외한 99%의 중소기업 88% 종사자들 대부분이 폐업과 실직의 위험에 봉착했고, 하위 1분위 근로소득은 추락
- 수출 관련 업종의 경우 주문에 따라, 또 연구 개발업종의 경우 과제에 따라 탄력근로제를 하지 않으면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음
-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을 (각종 감면 폐지 등으로) 올리면, 산업경쟁력이 현저히 추락할 수밖에 없음

» 목표

- 경제 활력을 떨어트리는 각종 규제 철폐, 사업가 처벌 만능주의 법안 폐기
- 경제 및 생활 비용을 증가시키는 탈원전 정책 폐기

» 이행방법

- 노사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자율조정 및 탄력근로제 적용 허용 및 처벌 법규 폐지
- 탈원전 정책 폐기 국회결의안 통과, 고리 월성 등 원전 사용정지 관련 특검 실시

» 이행기간

- 즉시

» 재원조달방안 등

- 비예산 사업

정책순위

7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 대처 국정조사 실시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노인일자리 확충

정책분야 보건복지

» 현황 및 문제점

□ 2019년 말에 우한(武漢)에서 발생해 2020년 초부터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음

- 이에 대해 우리공화당은 의사협회의 권고에 따라 2020년 초부터 당분간 중국인 입국금지, 중국 여행자 철저히 격리를 촉구한 바 있으나, 문재인 정권은 처음부터 이에 반대하였고 확진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 5,000명을 넘자 이제는 너무 많이 퍼져 입국금지가 효과가 없다는 핑계로 또 반대함
- 우한폐렴이라는 말은 특정 지역 비하라며 쓰지 못하게 하면서, 국내에서는 ‘대구 코로나바이러스’라고 하는가 하면, ‘신천지교단’이 원흉인 것처럼 자국민을 희생양으로 몰아가고 있음
- 마스크 부족사태를 방치하다 최근 배급제를 실시하는 등 국민건강은 뒷전

□ 연금제도 미비로 고령자의 생계곤란 등 빈곤 문제 심각

» 목표

□ 우한폐렴 사태는 ‘외교문제가 아닌 방역의 문제’임에도 중국에 굴종적 자세로 중국인 입국 금지를 미 실시해, 전 세계 123개국으로부터 한국인 입국금지를 당하게 방치한 문재인정권의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 문책

□ 평온한 노년 생활이 되도록 고령자 생활비 지원, 일자리 찾아주기 확대

» 이행방법

□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 우한폐렴 코로나19 대처 관련 국정조사’ 추진

□ 고령자 기초노령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 및 노인일자리 확충(최저임금 예외 적용)

» **이행기간**

□ 21대 국회에서 입법.

» **재원조달방안 등**

□ 별첨 자료: 10대 공약 재원조달방안 참조

정책순위

8

전교조의 좌익사상 주입교육 금지
 학부모와 교육목표 계약하는 '계약학교제' 실시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으로 대학등록금, 직업훈련비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 35세까지 유예

정책분야 교육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교육은 전교조의 좌익사상 주입교육,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나라들과의 협력에 반대하는 철지난 반일사상 교육으로 병들고 있음(예, 빨치산 유적지 탐방, 인헌고 사태 등)
- 조희연 교육감 등에 의한 혁신학교 권장, 자사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 폐지는 학부모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학생들의 학력 저하 유발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는 공로자인 군 의무복무자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주고 있는 현실
 - 복무형태의 특수성과 국가재정 형편을 고려해 당장 보수를 늘려주지 못해도 다른 방식으로 보전해줄 필요
 - 컴퓨터 활용 전쟁 양상을 고려할 때, 여성 군복무도 지원시 적극 수용필요
- 경제난으로 실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자금대출 상환 곤란

» 목 표

- 교육 목표를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맞게 타인에 봉사할 수 있는 재능습득과정으로 명시하고, 상업 재무교육, 인문교육, 실업교육, 과학교육 균형 실시.
- 신성한 군복무를 장학금 등으로 보상하여 애국과 동시에 실력양성 기회 부여

» 이행방법

- 학부모와 학교 당국 간에 교육목표를 계약하는 '계약학교제' 실시
-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으로 대학등록금, 직업훈련비 지원
- 학자금 대출상환 35세까지 유예
- 전교조의 좌익 사상교육 금지, 혁신학교 폐지, 특목고 존치

» 이행기간

- 즉시

» 재원조달방안 등

- 별첨 자료인 10대 공약 재원조달방안 참조

정책순위

9

GTX 건설과 환승센터 및 콤팩트 시티 건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 획기적 증대

정책분야 건설교통

» 현황 및 문제점

- 2010년 민선5기 김문수 경기도지사 핵심공약(A, B, C노선 총사업비 12조원). 경기도내 역간 거리 10Km, 역세권내에 콤팩트 시티를 구상하고 개발이익환수하여 건설재원을 확보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계획했던 바 있음
- (총사업비 12조원 중 민자 6조, 개발이익환수 3조, 중앙정부 2조, 지방 1조.)
- 이 계획이 신속하게 실행되었다면 2기 신도시가 활성화되었을 것이나, 이 계획의 지연 및 신규 3기 신도시 추진으로 불필요한 민원 유발과 막대한 사업비 추가 소요로 예산 낭비초래
-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은 질투 세력에 의한 각종 금융규제 및 세제 규제, 인허가규제 등 봉쇄로 낡은 아파트 방치 문제
- 인플레이와 주택공급 제한으로 수요가 있는 지역 중심 주택가격 급속 상승
 - 시장원리에 따른 수요를 무시한 주택정책은 일부 지역 빈집, 일부 지역 높은 가격이라는 정반대 현상을 일으키고 있음

» 목 표

- 교통 기반 국토 건설 추진
- 시장원리에 따른 주택정책 추진

» 이행방법

- GTX 신속 건설 및 적정 위치에 환승센터 설치, 연계된 콤팩트 시티 건설
- 재개발 재건축 신청에 법적 하자가 없으면 즉시 허용, 각종 금융규제 및 세제 규제·인허가규제 폐지
- 신혼부부용 임대 주택 공급 획기적 증대. 원하는 경우 5년 임대후 분양

» 이행기간

- 즉시
- GTX는 A, B, C 노선 동시 건설 추진

» 자원조달방안 등

- 별첨자료인 10대 공약 자원조달방안 참조

정책순위

10

한민족의 높은 역사 정신문화 계승발전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강국 육성

정책분야 문화관광

» 현황 및 문제점

-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역사와 관련하여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나라인 민주국가 일본과의 협력보다는 침략국가 일본제국주의 시절의 기억만 소환하여 반일 분위기 일변도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조선의 망국화 과정도 단지 외부의 요인에 의한 것인 양 단순화시키고 있다. 나라는 스스로 망하게 된 상태에서 외부에서 망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선말 및 대한제국 시기를 지나치게 미화해서는 안된다. 세계10위권 나라에 이르게 된 현재의 상태에서는, 반일 기억의 끝없는 재생반복보다는, 개화 이후에 일본은 성장에 성공했는데도, 조선-대한제국은 정체했던 요인들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 한민족의 역사 정신문화는 조선시대와 현대 대한민국만 비교해보아도, 지배층에서 착취를 하지 않고, 자유를 보장하는 한 활짝 꽃필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산업화 수출입국으로 생활수준이 올라가면서 K-pop, 그 중에서도 BTS 등이 세계에서 인기를 얻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현대사에서 이런 과정을 지우고, 오직 민주화와 노동운동만이 발전요인의 전부인 양 왜곡하고 있다. 문화 발전과정에서 소유권과 자유가 소중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문재인 정권은 상업 경제 발전의 토대 위에서 (전시회, 공연, 콘서트, 프로야구, 프로축구, 관광지 음식문화촌 등) 사람들의 티켓팅 파워에 의해서 문화예술체육관광이 발전한다는 인식을 가지기보다는, 관 주도의 지원에 의해서 좌익 위주의 문화를 발전시킨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무런 형체가 없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과민반응을 일으킨 것은 이 때문이다.

» 목 표

- 한민족의 높은 역사 정신 문화를 상업적 토대 위에서 다양하게 변형하여 전파.
- 소유권보장과 자유 위에서 시장 중심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발전

» 이행방법

-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등을 통한 한국어 전파, 한류문화 전파 지원 확대
- 관주도에서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걸쳐테크의 기업화 지원. 기업이 문화예술체육관광을 돕는 메세나(Mecenat) 운동에 세금 감면 확대

» 이행기간

- 즉시, 계속

» 재원조달방안 등

- 별첨자료인 10대 공약 재원조달방안 참조

별첨자료 10대 공약 재원조달방안

□ 소요 예산 및 기본방향

- 우리공화당의 주요 공약 소요예산은 4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감안할 때, 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여나감으로써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정상적인 세입구조 내에서 총선공약 소요재원 조달 가능

□ 재원충당 방안

- 연도별 예산증가분 활용: 재정수입과 재정지출계획을 감안할 때, 매년 15조~25조의 재정 여력이 예상되고 있으며, 지출성격별로 볼 때 의무지출이 아닌 재량지출에서 매년 마찬가지로 액수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기에, 이를 활용할 때 공약집행을 위한 예산은 별도의 조치 없이도 예상 순증액만으로도 충분하게 조달가능.

※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를 과감히 줄이고도 총선공약 재원조달 가능

<참고자료>

< 중기 재정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 | '19 | | '20 | '21 | '22 | '23 | 연평균 증가율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재정수입 | 476.1 | 476.4 | 482.0 | 505.6 | 529.2 | 554.5 | 3.9 |
| (증가율) | (6.5) | (6.5) | (1.2) | (4.9) | (4.7) | (4.8) | |
| ○ 국세수입 | 294.8 | 294.8 | 292.0 | 304.9 | 320.5 | 336.5 | 3.4 |
| ○ 세외수입 | 26.6 | 27.0 | 27.8 | 28.9 | 30.1 | 30.5 | 3.4 |
| ○ 기금수입 | 154.7 | 154.7 | 162.1 | 171.7 | 178.5 | 187.6 | 4.9 |

* '19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1) 재정수입은 예산수입과 기금수입을 합친 규모이며, 예산수입은 크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나뉜다.

< 중기 재정지출 계획 >

(단위 : 조원, %)

| | '19 | | '20 | '21 | '22 | '23 | 연평균 증가율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재정지출 | 469.6 | 475.4 | 513.5 | 546.8 | 575.3 | 604.0 | 6.5 |
| ① 예산 - 기금별 구분 | | | | | | | |
| ○ 예산지출 | 328.9 | 332.6 | 352.4 | 373.6 | 391.2 | 410.4 | 5.7 |
| (비중) | 70.0 | 70.0 | 68.6 | 68.3 | 68.0 | 67.9 | |
| ○ 기금지출 | 140.7 | 142.8 | 161.0 | 173.3 | 184.1 | 193.6 | 8.3 |
| (비중) | 30.0 | 30.0 | 31.4 | 31.7 | 32.0 | 32.1 | |
| ② 지출성격별 구분 | | | | | | | |
| ○ 의무지출 | 239.3 | 239.8 | 255.6 | 270.7 | 289.5 | 302.8 | 6.1 |
| (비중) | (51.0) | (50.4) | (49.8) | (49.5) | (50.3) | (50.1) | |
| ○ 재량지출 | 230.3 | 235.6 | 257.8 | 276.1 | 285.8 | 301.3 | 6.9 |
| (비중) | (49.0) | (49.6) | (50.2) | (50.5) | (49.7) | (49.9) | |

* '19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출처: 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 (2019).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2019.09.03. p.21, 25

민중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민중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노동법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
| 2 | 농산물공정가격실현, 농민수당전면시행 |
| 3 | 투기꾼잡고, 집걱정 잡자! |
| 4 | 한반도 평화실현과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 |
| 5 | 국민을 위한 국회개혁, 국민의 직접정치 확대 |
| 6 |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추진! |
| 7 | 미세먼지 대책 |
| 8 |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
| 9 |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권리보장 |
| 10 | 취준생을 위한 청년이직준비급여 |

정책순위

1

노동법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정책분야 노동

» 목 표

-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랜차이즈 노동자 등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교섭력 확보
-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 고용안전망 확충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더 나은 노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실업으로부터 보호
 - ▷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초단시간노동자 주휴수당 보장('쪼개기 계약' 규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의 규정 폐지,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 이행방법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 노동법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2.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최저수익 보장, 가맹점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 ▷ 가맹점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포함한 최저수익 보장 의무 및 단체교섭 의무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부과
3.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으로 전면 개편
 - ▷ 특수고용노동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사업주의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여, 자영업자 당연 가입 및 보험료 지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고용보험으로 편입
 - ▷ 자발적 이직에도 실업급여 지급, 7년마다 90일씩 '재충전급여' 지급(안식월), 청년이직준비급여(600일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4. 실업부조
 -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실업자가 수급 기간이 끝난 장기 실업자, 청년구직자에게 실업부조 지급
5.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
 - ▷ 재해발생사업장 직접고용 의무, 중대재해 처벌 강화, 산업안전분야부터 원청의 교섭의무 부과('공동사용자책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경영자 취업 제한, 폭염한파 등 재난 경보시 작업중지권 부여

6. '공동사용자책임' 도입으로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 교섭권 보장

- ▷ 노동법의 '근로자', '사용자' 정의 규정을 바꿔 원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전속거래업체, 모회사 등에 단체교섭의무 등을 부과

7. 노동조합할 권리 보장

- ▷ 단체협약 효력 확장 및 실질적 교섭권 확보
- ▷ 노조법상의 '지역적구속력'을 2/3에서 1/2로 하향하고, 노조법상의 '사용자단체'를 확대(각 지역 산업협회, 상공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 ▷ 교섭창구단일화 강제 제도 폐지, 산별교섭 제도화, 타임오프테 폐지, 손배가압류 제한

8. '비정규직 임금 1.5배'

- ▷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불안정고용수당'(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해 지급
-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파견제법·기간제법 폐지 및 사용사유 제한

9. 심야노동 금지

- ▷ 일부 사업장의 단협으로 적용되는 심야노동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심야노동 필수적 사업과 업무만 예외적으로 허용)

10. 아프면 쉬어야 한다 - 상병휴가 및 휴직 제도 도입

- ▷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유급휴가(현재는 일부 사업장만 단협으로) 보장(근로기준법 개정)

11. 노동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및 노동법원 설립

- ▷ 노동 사건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 일부 노동자가 승소하면 같은 처지의 노동자에게 소송결과를 모두 적용(도로공사, 현대차 하청 판결을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 ▷ 노동 사건 특별법원인 노동법원 설립

» 이행기간

□ 21대 국회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해당 사항 없음(노동관계법 입법 사항)

- 단 3항(노동보험)은 피보험자수 확대에 따른 보험료 수입

정책순위

2

농산물공정가격실현, 농민수당전면시행

정책분야 농림해양수산

» 목 표

- 계약재배 확대로 농산물 수급 및 농가소득 안정
-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으로 농가소득 및 농민기본권 보장
- 중앙정부차원의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입법(농민수당법제정)
- 농민수당 예산확보

1.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

- 2018년 겨울부터 주요 채소류를 중심으로 가격폭락 사태가 연이어 발생
 - 농가 경영이 위협받을 뿐 아니라 농업은 더 이상 지속가능할 수 없음
 - 농산물 가격불안정 사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격정책 필요
- 농산물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바탕으로 농산물 가격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제도마련해야 함.
 - 농산물 가격안정은 농민의 생존권을 넘어 전 국민의 안정된 먹거리를 보장하는 것임.
 - 현재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계약재배율 확대함. 식량자급률(사료용 포함)23%대의 OECD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극복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여야함.

2. 농민수당 전면시행을 위한 농민수당 입법화

-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농민의길 그리고 민중당이 추진한 농민수당 운동이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지자체의 농민 수당 도입은 농업의 공익기능을 인정한 첫 번째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농업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차원에서 농민수당은 각계각층의 응원을 받으며 전국으로 확산됨.

- 하지만 현재 도입되거나 추진중인 농민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울타리에 머물고 있어 재정적 어려움 뿐 아니라 제도적 한계도 가짐. 이미 농민수당의 우수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증된 상황에서 현재의 농민수당 한계 극복과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함

» 이행방법

1.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

- 채소가격안정제 예산 4,000억 원으로 확대
- 농협을 통한 주요농산물 계약재배율 50%로 확대
- 기초식량보장법 제정으로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부터 공공수급제 도입, 보리·밀 수매 확대 및 실시
- AMS(감축대상보조)를 전액 농산물 가격안정 예산으로 투입

2. 농민수당 전면시행을 위한 농민수당 입법화

- 농민수당법 제정
 - 농업경영체 등록제 대체하는 농민 등록제 도입
 - 중앙 정부 및 지자체 총 7조원 예산 확보
 - 농민 수당 제도 운영에 농민 참여권 보장
 - 어민 수당 법률 별도 추진

» 이행기간

- 임기내

» 자원조달방안 등

- AMS(감축대상보조)를 전액 농산물 가격안정 예산으로 투입
- 농민수당법제정, 세구조정을 통한 소요재원 마련

정책순위

3

투기꾼잡고, 집걱정 잡자!

정책분야 국토교통

» 목 표

- 전월세임대료 상한제, 평생계약갱신청구권제, 공정임대료제도 도입
- 세입자 주거권 보장(주거비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 주택 부동산 투기 근절하고, 불로소득환수

» 이행방법

1. 세입자 주거권 보장

- ‘공정임대료제도’, ‘임대료인상률상한제’, ‘평생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 “공정임대료제도” 도입, 주택공시가격처럼 전월세도 소득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기준 가격을 결정
 -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세입자에게 ‘평생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 민간임대주택 등록의무제 실시.
- 주거비 지원 현실화 및 대상 확대
 - 중위소득 45%이하 ‘월세 전액지원’
 - 60%이하 저소득층과 청년까지 ‘월세부담 30%상한제로 주거비 지원’ 확대
- 공공임대주택 확대
 - 재건축 공공임대주택 의무건설 등 거주민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제도를 정비
 -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의무할당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 LH 등 공공기관은 분양주택, 단기임대주택공급을 지양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에 주력
- 강제철거금지법 제정, 재건축사업에서 세입자 보상 및 임대주택 제공 의무화

2. 투기근절 불로소득 환수

□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도입,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및 투기금지

□ ‘주택거래허가제’, ‘다주택자주택담보대출 금지법’, ‘갭투기 금지’법

- 다주택자주택담보대출 금지법 제정
- 갭투기금지법으로 주택구입자금 중 임대보증금 비율이 투기제한지역에서는 0%, 비규제지역에서도 보증금비율이 주택구입자금의 50%이하로 규제
-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 투기지역에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사재기를 제한, 실거주자라 하더라도 6개월 이내 기존주택 매각(미이행시-이행강제금 부과) /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 임대용주택을 구입할 경우 갭투기금지 비율 등 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며, 10년 이상 세입자 거주권을 보장

□ ‘토지초과이득세’, ‘다주택자 조세감면 전면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를 지방세로 신설하여 불로소득을 환수
-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세금특혜제도 전면 폐지(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과 함께).
-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 공제, 보유세 감면 제도를 모두 폐지

» 이행기간

□ 임기내 입법 제도적 기반 마련

- 단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임기내 법 제도 및 중장기 이행계획수립 등 이행기반 마련을 통해 단계적 이행
- 주택도시기금 민간사업자에 지원 제한(중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비용으로 사용)

» 재원조달방안 등

□ 주거비지원, 공공임대주택 건설외에는 법률 개정 사안으로 재원 불필요

□ 주거비지원 및 공공임대주택은 토지초과이득세 신설, 세수조정을 통한 소요재원 마련

정책순위

4

한반도 평화실현과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

정책분야 통일외교통상

» 목 표

- 비정상적인 정전상태를 완전히 종식하고 한반도에 드리워져 있던 냉전과 분단구조를 깨끗이 걷어냄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함.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한미 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 2020년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완료,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유엔사 해체

» 이행방법

1.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한반도에는 평화를 향한 커다란 움직임이 준비되고 있음. 이제는 불신과 갈등으로 깊게 패인 상처를 치유하고 비정상적인 정전상태를 완전히 종식하는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할 시점임.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민중당 한반도 평화협정안 제출
 - 역대 남북 합의서 및 공동선언 국회 비준

2. 한미상호방위조약폐기

-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며, 한미동맹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그리고 그 법적 근거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즉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폐기되어야 함.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3.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해체

- 전쟁이 중단 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지하고, 군사의 철군 및 기지의 철거가 동반됨을 의미함.
-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이후 지금까지도 한반도에서는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와 기지 철거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한반도 평화협정체결과 평화체제는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정전상태에서 주둔했던 외국군대의 철수가 함께 이뤄져야 함.
 - 한미 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
 - 2020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 이행기간

-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은최대한 빠른 시일내 진행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후 3년 이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 불필요

정책순위

5

국민을 위한 국회개혁, 국민의 직접정치 확대

정책분야 정치

» 목 표

- 국회의원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도입
- 비리, 막말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
-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 자유로운 참정권 보장
 - 청소년과 노동자 참정권 보장
 - 교사공무원 정치, 정당활동 자유 보장

» 이행방법

1. 국회의원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제 도입

- 국회의원소환제법 제정
- 국민입법청구법제정, 국회법 개정
 - 1단계 법률 제개정을 통해 국민입법제안
 - 완전한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개헌추진
- 국민투표실시에 관한 법률
 -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한, 조약 등에 대해 국민투표 실시
 - 국회 과반 찬성, 국민요구하는 경우 대통령이 국민투표실시를 결정하도록 함.
 - 국민투표법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
 - 장기적으로 개헌을 통해 국민투표대상, 발의주체와 요건을 개선함

2. 국회의원 특권폐지,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 국회의원 백지신탁제 강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입법
-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고, 국회의원 세비를 자기가 결정하는
△국회수당 구조개혁

3. 자유로운 참정권 보장

- 근로기준법 개정, 선거일 유급휴무 전면 시행
- 16세 선거권 보장,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 개정
- 교사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 보장, 교원의 공직선거 출마허용(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관련 법률 개정)

» 이행기간

-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 불필요

정책순위

6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추진!

정책분야 교육

» 목 표

□ 대학서열 해체

- 입시에서의 격차가 불평등의 대표적 사례로 여겨지면서, 이를 위한 해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정시 확대를 내건 배경이기도 함. 학벌이 사회적·문화적 자본의 격차를 확대하는 기제가 되고 기득권의 지표 중 하나가 된 사회에서 '정시냐 수시냐'하는 입시제도 개편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음.

□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대학 교육기회 부여

» 이행방법

□ 국공립대학교 통합네트워크 구축

- 서울대학교 폐지
- 국공립 통합네트워크 교육과정을 이수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정부 재정에서 나가는 대학지원금을 국공립통합네트워크 편입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함.

□ 양질의 직업훈련 교육기관 육성 병행

» 이행기간

□ 임기 내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정책순위

7

미세먼지 대책

정책분야 환경

» 목 표

-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자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강화
- 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관리강화

» 이행방법

□ 석탄발전소 완전 퇴출

- 겨울, 봄철 석탄발전 가동 중단
-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및 조기폐쇄
- 석탄화력의 환경, 건강비용 반영한 에너지세제 및 전력시장 개편
-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기오염 총량관리지역 확대, 대기배출부과금 오염자부담원칙 실현,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량(TMS) 실시간 공개
- 예외허용 금지, 기존사업장에 대한 소급적용

□ 통학로 미세먼지 관리 강화

-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의무화 및 지원 확대

» 이행기간

□ 임기 내

정책순위

8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정책분야 여성

» 목 표

□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 2019년 상반기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85.9%(885명), 남성이 14.1%(145명), 연령별로는 20대가 22.2%(229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피해 유형은 전체 피해건수 1910건 가운데 유포 피해가 30.3%(578건), 불법촬영이 26.6%(509건)으로 사이버 성범죄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사이버 성범죄는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하는 성별기반 젠더폭력임.

» 이행방법

□ 사이버 성범죄 처벌법 개정

- 제14조 1항 개정 : 본인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불법유포시 처벌
- 제14조 3항 개정 :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처벌
-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자 처벌법 마련 : 불법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행위라도 유포 협박의 정황이 있는 경우 처벌 가능
-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 이행기간

□ 임기 내

정책순위

9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권리보장

정책분야 보건복지

» 목표

-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 청각장애인의 언어 수어 초등학교 의무교육
-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이행방법

-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장애’의 포괄적 정의 및 범주 확대
-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신규도입 시내, 광역, 마을버스 100% 저상버스 도입
-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와 최저임금 도입
 -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민간 3.1%, 공공 3.4%에서 2019년과 동일하나 이를 5%로 상향조정
 -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7조)을 삭제

» 이행기간

- 임기내 입법, 제도 시행
 - 저상버스 도입(기존 차량 폐기 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

정책순위

10

취준생을 위한 청년이직준비급여

정책분야

기타(청년)

» 목 표

□ 청년들에게 이직 보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보험 개편으로 ‘청년이직급여’ 신설

- 저임금에 미래를 찾기 어려운 직장일수록 청년들은 이직 외에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저소득 청년일수록 이직이 잦을 수밖에 없음. 그러나 많은 청년들에게 별도의 준비기간을 가질 여유 없는 이직이 악순환 되고 있는 상황임.
- 실제로 첫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 이후 재취업 일자리 임금수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대졸자의 경우 첫 직장이 대기업, 상용직인 경우와 중소기업, 임시직인 경우의 차이가 10년 후까지도 유지되는 등 경력 초기 기업 규모와 노동 형태가 향후 일자리의 질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황임.
- 이직을 해도 처음 들어간 낮은 일자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운 악순환을 끊을 기회만이라도 가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이행방법

□ 이직준비급여 중 청년층(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은 그 특성을 반영하여 횟수의 제한이 없는 ‘청년 이직준비급여’를 지급함 (600일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 청년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일정 기간(개정안에서는 120일) 동안 고용보험료를 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총 60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필요에 따라 쓸 수 있음. 자신의 인생 계획에 따라,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이행기간

□ 임기 내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고용보험료 자체 수입

한국경제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한국경제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정의로운 시장경제 확립과 경제성장 실현 |
| 2 | 살맛나는 일자리 창출 국가 실현 |
| 3 |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보완적 생산복지국가 건설 |
| 4 | 기회균등의 창의적 미래교육 실현 |
| 5 | 정의로운 사람이 대접받는 선진문화국가 건설 |
| 6 | 국민 생활 밀착 보건, 안전강화 |
| 7 | 국민안전행정편익을 위한 모바일 행정국가 구축 |
| 8 | 지적재산 중점지원을 통한 라이선싱국가 실천 |
| 9 | 선진 국방과학의 실현 |
| 10 | 점진적 남북평화통일 추진 |

정책순위

1

정의로운 시장경제 확립과 경제성장 실현

정책분야 재정, 경제

» 목표

1. 정의로운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경제정의 실현

» 이행방법

- “한국경제당”은 정의로운 시장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한다.
- 정부는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경제정의를 구현한다.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경제주체의 불공정거래를 엄단하여 공정한 경쟁관계를 지향한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
-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근로의욕과 기업가정신을 고취한다.
- 국제표준에 입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국내·외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한다.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목표

2. 중소기업 투자확대 및 농어촌 향토문화 복원으로 신명나는 농어촌 관광힐링국가 추진

» 이행방법

- 한국경제당”은 한국 농어촌경제 발전의 관건은 지역 특성에 따른 향토문화의 복원과 지역 특산품을 특화하는 6차산업형 농어촌 관광힐링산업을 활성화 하는데 있다. 따라서 한국의 관광힐링국가는 경쟁력 있는 벤처·중소기업형 관광힐링산업의 육성에 달려있음을 인식하고 금융, 인력, 기술, 조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한다.
-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어민의 경쟁력 강화를 최대한 지원하고, 농어업과 식품산업은 국민 건강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미래 주요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 유통구조개선 등을 통한 농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풍요로운 농어촌 관광힐링국가를 건설한다.

정책순위

2

살맛나는 일자리 창출 국가 실현

정책분야 고용,노동

» 목 표

1. 일자리 창출 국정운영

» 이행방법

- “한국경제당”은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모든 경제정책을 고용창출의 관점에서 재정립한다. 노사가 법과 원리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노사 분쟁 해결시스템을 정착시킨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전문직업인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실현하여 이들을 중산층으로 복원하여 관련 일자리를 재창출한다.

» 목 표

2. 청년일자리 마련 중점 추진

» 이행방법

- “한국경제당”은 청년고용은 일자리 정책의 핵심과제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학·연 연계를 강화한다.
- 스타트업기업, 벤처기업, 창출기업 등의 성공모형의 창업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

- 청년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고용 증대를 위하여 성과에 따른 임금직무체계의 구축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목 표

3.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마련 대책 추진

» 이행방법

- “한국경제당”은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 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융합적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며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동시에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여성·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책순위

3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보완적 생산복지국가 건설

정책분야 복지

» 목 표

1.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여는 보완적 생산복지

» 이행방법

- “한국경제당”은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모든 국민에게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보완적 생산복지국가 건설을 추구한다.
-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제로 정부부처 간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개선하여 국민의 후생복지 기능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 목 표

2.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자아실현 보장

» 이행방법

- “한국경제당”은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문화적 향유와 소통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및 고용서비스체제를 구축한다.
- 사회보장제가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완비한다. 복지와 일자리, 교육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충한다.

정책순위

4

기회균등의 창의적 미래교육 실현

정책분야 교육

» 목 표

1.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공교육 되살리기 실천

» 이행방법

- “한국경제당”은 국민은 누구나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여 공정한 출발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한다.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를 확립한다.

» 목 표

2. 품격과 인성을 갖춘 창의인재 양성

» 이행방법

- “한국경제당”은 인성 중심의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잠재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따른 교육제도를 정착시킨다.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진로교육을 내실화하여 학생 스스로 생애진로를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건전한 시민으로 양성한다.

» **목 표**

3. 평생교육사회 구축

» **이행방법**

- “한국경제당”은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한다.
- 대한민국은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고 개인의 창의력을 존중한다.
- 이를 위해 성인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과 교육이 병행하는 평생교육 여건을 조성하며 교육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정책순위

5

정의로운 사람이 대접받는 선진문화국가 건설

정책분야 문화

» 목 표

1. 정의로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신뢰받는 정부

» 이행방법

- “한국경제당”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든다. 정부의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의사와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강화하고, 정부가 소유한 각종 정보를 개방하고 민간과의 공유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를 도모한다.
- 모든 행정체계를 국민중심의 원스톱 모바일 행정서비스체계로 전환한다.
-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에는 엄정하게 대처한다.
-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가권력기관의 신뢰를 회복하여 법을 지키는 사람이 존중받는 신뢰사회를 만든다. 정의로운 사람이 대접받는 정의사회를 구현한다.

» 목 표

2. 글로벌 모바일경제 창출을 통한 선진경제국가 실현

» **이행방법**

- “한국경제당”은 균형재정을 지향하면서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한다.
-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한다. 특히, 고소득층의 편법적인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하는 모바일조세시스템장치를 구축하여 이를 강화함으로써 조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한다.
- 재정지출의 효율화와 조세정의를 기초한 세원확충을 통해 국민행복을 위한 복지의 재원을 확보한다.
- 또한 글로벌 모바일경제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소득을 증대하여 선진경제국가를 실현한다.

정책순위

6

국민 생활 밀착 보건, 안전강화

정책분야 보건안전

» 목 표

1. 국민생활 보건시스템 구축

» 이행방법

- “한국경제당은 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전적, 현재적, 미래적 보건의료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한다.
- 사전적으로는 방역 및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개발특별 지원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 현재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의료시설을 확충하여 국집의료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운용한다.

» 목 표

2. 유비무한적 사전 안전시스템 강화

» 이행방법

- 국가적 질병의 재난을 대비한 예산을 특별예산으로 확충하고 매년 잉여예산은 비축예산으로 별도 기금화하여 운영한다.
- 기금화한 비축예산의 일정율은 의료시설의 확충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한다.

» **목 표**

3. 징벌적 철저한 통제시스템 구현

» **이행방법**

- 국가적 질병관리에 따른 법체계를 강화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개인이나 기업 또는 해당 관련자에게 철저한 법적용을 통하여 국민의식을 고취시킨다.
- 안전관리에 따른 철저한 관리 및 법집행을 통하여 국민안전 의식을 고취시킨다

정책순위

7

국민안전·행정편익을 위한 모바일 행정국가 구축

정책분야 행정

» 목 표

1.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안전과 행정편익 구현

» 이행방법

- “한국경제당”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읽는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정편익에 대한 모바일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개혁한다.
- 모든 국민이 각자의 능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회네트워크형 모바일정당을 건설한다. 국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을 책임진다.
-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정치네트워크를 강화한다.
- 사회적 갈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또한 모든 시민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보장하는 정치를 구현한다.

» 목 표

2. 국민의 행정편익을 위한 모바일 지방분권화

» 이행방법

- “한국경제당”은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권을 강화한다.

- 중앙정부의 기능,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지역주민의 자율과 창의력을 극대화한다. 지역경제 및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 세계적 경쟁력과 매력을 갖춘 거점도시들을 각 지역별로 구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전국을 광역권 네트워크 체제로 재편한다.
- 이러한 것들을 모아 국민 행정편익을 위한 지방분권적 모바일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바일 행정국가체제를 확립한다.

정책순위

8

지적재산 중점지원을 통한 라이선싱국가 실천

정책분야 경제

» 목 표

1. 과학기술과 문화콘텐츠 기반국가 구현

» 이행방법

- “한국경제당”은 세계 최고수준의 기초·원천 과학기술과 문화콘텐츠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기술혁신기업과 문화콘텐츠기업을 양성하여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한다.
- 국민의 과학기술과 문화콘텐츠의 마인드를 고취하고 과학기술인과 문화콘텐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한다. 과학기술을 국정 의 중심에 두고 국정운영 각 부문 및 국가정책결정과정에 과학기술인의 참여를 보장 한다.
- 과학기술과 문화콘텐츠의 연구 및 개발을 통한 지적재산권을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여, 글로벌 경제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적재산권을 라이선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한다.

» 목 표

2. 글로벌 모바일산업 인재 육성과 지식융합사회 발전

» 이행방법

- “한국경제당”은 창의력과 IT·BT·CT·NT·BTT·AT·CCT(문화콘텐츠기술) 등 산업기술 융합적 사고능력을 함양하는 수학·과학기술융합 교육을 활성화하고 대학교육을 강화한다.

- 우수한 젊은 과학자의 지원을 강화하여 세계적 과학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한다.
- 기초과학의 발전을 바탕으로 지식융합창조시대를 여는 동시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글로벌 경제의 창업전성시대를 열어간다.

정책순위

9

선진 국방과학의 실현

정책분야 국방

» 목표

1. 국방과학 기술의 국산화

» 이행방법

- ICT를 기반으로 AI(인공지능)기술을 응용한 첨단 무기의 개발 연구확대
- 국방부 산하에 산,학,연의 기술협력을 통한 국방과학 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국방과학기술 협력단을 설립 운영한다.

» 목표

2. 자주국방의 체계화

» 이행방법

- 자주국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 자주국방 5개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100조원의 특별예산을 조성한다.

정책순위

10

점진적 남북평화통일 추진

정책분야 통일

» 목 표

1. 튼튼한 안보체제 확립과 모병제실시를 통한 병역의무 및 청년실업 동시 해결

» 이행방법

- “한국경제당”은 군의 정예화와 국방력 강화를 통해 자주국방을 지향한다. 미래지향적 국방 체제와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유지한다. 주변국과의 안보 협력과 평화정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 병역 의무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국방무기 자동화, 전자화에 따른 국방무기 전문운용 정예 부사관 제를 도입한다.
- 모병제도 도입은 군의 전문적 정예화로 자주국방 강화를 확립하고, 또 병역의무의 병폐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한국경제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과 그 보훈가족에게는 이에 상응 하는 보상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 목 표

2. 안보와 국제협력개발 리더십을 통한 균형외교

» 이행방법

- “한국경제당”은 한반도의 안정과 국익실현을 위한 국제협력개발의 리더십과 평화통일 기조의 균형외교를 추구한다.
- 동맹 및 우방을 비롯한 이웃나라와의 협력적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환경외교, 공적개발원조 등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 세계경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되, 국익우선을 통상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다.

» 목 표

3. 민주평화통일국가 달성

» 이행방법

- “한국경제당”은 중도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초로 한 평화통일을 위해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원리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 남북 간의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 시켜나간다.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 위협에 대해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4대 강국과의 동북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리더십으로 단호히 대처한다.
- 우리는 북한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한다.

국민의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국회법과 정당법 개혁하여, 일하는 정치 실현하겠습니다 |
| 2 | 권력의 사유화 막고, 민주적 통제 강화하겠습니다 |
| 3 | 정부조직을 전면개편하여 미래정부로 재정립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 4 | 로스쿨과 의전원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시켜 공정사회 실현하겠습니다 |
| 5 | 질병예방통제청(가칭), 美CDC수준으로 개편하는 등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
| 6 | 저출산의 국가적 위기에서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하겠습니다 |
| 7 | 혁신주도성장정책으로 신성장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
| 8 | 강성노조와 악덕사업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
| 9 | 대학입시 정시를 70%로 확대하고, 특목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 백지화하겠습니다 |
| 10 | 한미 핵공유시스템 구축하고, 첨단과학강군 육성하겠습니다 |

정책순위

1

국회법과 정당법 개혁하여, 일하는 정치 실현하겠습니다

정책분야 정치

» 목 표

- 1.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일하는 정치' 실현
- 2. 정당법 개정하여 정당운영 및 활동의 투명성 확보
- 3. 국회법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일하는 국회' 전인

» 이행방법

- 1. 상임위, 소위원회 자동개회를 법제화 하겠습니다
 -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정기회의를 매월 정해진 일시에 자동 개회
 - 행정부에 대한 상시견제와 국회의 예측가능성 높여 효율적인 국정수행 추진
- 2. 국회 홈페이지에 국회의원 출결상황 공개하고 무단결석하면 세비삭감 등 강력한 패널티 부과하겠습니다
- 3. 상임위원회 중심인 국회운영체제를 소위원회 중심체제로 바꾸겠습니다
 - 법안소위나 예산결산소위 등에서 차관, 실국장 및 과장 등과 구체적인 문제점과 대안 도출 추진하여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정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하겠습니다
 - 예산심의회는 국회의 핵심기능이자 입법과 함께 가장 중요한 책무이므로 상설화 추진
- 5. 패스트트랙의 남용을 막겠습니다
 - 선진화법 중 신속처리안건 대상을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 등으로만 한정
- 6. 정당의 운영과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매년 년1회 또는 2회로 나누어서 △국고지원금 사용 세부내역, △입법추진 및 통과실적, △ 예산결산 심사실적, 그리고 △국민 편익 정책개발 및 정치사업 실적 등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추진

» **이행기간**

□ 법 개정 사항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추진 및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법률개정 및 정책입안 사항으로 재원조달 사항 아님.

정책순위

2

권력의 사유화 막고, 민주적 통제 강화하겠습니다

정책분야 정치

» 목 표

1. 권력의 사유화에 따른 국정농단을 차단하고 권력의 민주적 통제 추진
2.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 확보 및 경찰 개혁 추진
3. 정치검찰·정치법관 퇴출, 공무원 선거개입 원천차단하여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보장

» 이행방법

1. 공수처법 개정하여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하겠습니다
 - 공수처 기소권 폐지하여 공수처의 권한남용 방지
 -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독소조항 삭제
 -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개선하여 대통령 영향력 차단
2. 검경수사권 조정하여 견제와 균형을 추진하겠습니다
 - 경찰의 수사 종결권 검찰 이관
 -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
 - 정보경찰 폐지 ·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분리
 - 마약수사청 등 전문 수사청 신설
3. 의회 및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특검을 상설화하겠습니다
 - 정치사건 등 특별수사가 필요한 경우 상시적 특검수사 추진

4. 정치검찰 · 법관 퇴출시키겠습니다

- 수사기관 장 임명 시 국회 추천 후 인사청문회, 국회 동의 절차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 견제
-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

5. 공무원 선거개입 처벌 3배 상향하여 엄벌하고 뿌리를 뽑겠습니다

- 공무원 선거 개입 시 현행 처벌규정보다 3배 이상 형량을 늘려 공무원의 선거개입 원천차단

6.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 추진하겠습니다

- 민주주의를 유린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 추진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수사 방해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권력남용 책임 추궁

7. 드루킹 방지법과 여론조작 방지법 추진하겠습니다

- 매크로 등 불법기제로 여론조작행위를 지시·유도·실행 등에 가담한 경우 강력처벌
- 온라인 여론조작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 국고환수 조치 및 이익의 10배 벌금형
- 여론조사법에 불법 여론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전화번호와 중복샘플 사용금지
- 외국인이 댓글 알바에 관여할 경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여적죄에 준해서 처벌

8. 국민주권을 보호할 투개표과정을 관리할 투명선거법 추진하겠습니다

- 관외사전투표(부재자투표, 선상투표, 재외자투표)보관함 관리, 감독 강화.
- 투표함(보관함) 밀봉, 모든 이동시 경찰 호위, CCTV 촬영 의무화
-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와 투표소와 개표소에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촬영 의무화

9. 외국인 국내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조항 삭제하여 국민의 민의왜곡을 막겠습니다

- 외국인 소수 이익집단에 의한 민의 왜곡을 방지

» **이행기간**

□ 법 제·개정 사항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추진 및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법률개정 및 정책입안 사항으로 재원조달 사항 아님.

정책순위

3

정부조직을 전면개편하여 미래정부로 재정립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분야 정부

» **목 표**

1.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정부기능과 업무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2.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진단과 전면적인 혁신 및 구조조정으로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개편
3. 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미래정부로의 대전환

» **이행방법**

1. 사회부총리 폐지하고 산업부총리 신설하겠습니다
 - 4차산업과 융합된 경제산업에 관한 정부의 효과적인 조정 및 지원체계 마련
 -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
2. 정부의 비효율적인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구조조정 하겠습니다
 - 정부 업무와 기능의 재조정을 통한 부처 개편, 각종 위원회 정비, 교육훈련기관 통폐합
3. 미래전자정부를 구축하여 공무원을 감축하겠습니다
 - 블록체인형 전자정부 구축하여 2030년까지 공무원 20% 감축
 - 국가직 공무원 및 지방직 공무원 총정원령 개정, 총액인건비제 개정, 개방형 임용제 확대
4. 공공부문 전반의 구조경영 진단 통한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통폐합과 민영화, 공기업의 자회사 정리
 - 공공기관 인력 감축, 성과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
5. 국가부채를 감축하고 정부 효율화 추진하겠습니다
 - 국가부채 감축 선언 및 이행계획 확보

- 공무원 예산절약 성과금제도 도입, 기금 통폐합 및 정비 통한 기금운영제도 개선
- 서비스공급 및 시설관리·전산업무 등 민간 수행이 효율적인 분야의 외부위탁 등

6. 공무원·군인·교원 등의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 일원화하여 국민통합 구현하겠습니다

- 공무원연금 1인당 월평균 수령액 240만원, 국민연금은 37만7895원인데, 올해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금 2조2천억원, 군인연금 1조7천억원 국민혈세 낭비 차단
- 일본은 2015년부터 공무원과 국민연금 급여 동일액수로 통합, 미국의 1980년대부터 신규 연방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제도 벤치마킹
- 1단계 일본식 공동연금→ 2단계 미국연방공무원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통합
- 공적연금통합일원화법 제정하고, 국민연금하나로 추진위원회 설치
(* 신규 임용공무원부터 적용)

» 이행기간

□ 법 제·개정 사항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추진 및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법률개정 및 정책입안 사항으로 재원조달 사항 아님.

□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 2조2천억원, 군인연금 1조7천억원 혈세낭비 차단효과

정책순위

4

로스쿨과 의전원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시켜 공정사회 실현하겠습니다

정책분야 사회

» 목 표

1. 공정한 사회(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기득권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 구현
2. 로스쿨/의전원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
3. 채용청탁 및 고용세습 근절, 열정페이 근절

» 이행방법

1.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의전원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시키겠습니다
2. 기득권에 의한 뒷문 취업이나 고용세습을 완전 차단하겠습니다
 - 채용청탁이나 고용세습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형
 - 채용서류 보관기한을 최소 3년으로 늘려 불공정 부정비리는 반드시 처벌
3. 청년들의 열정페이 근절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하여, 기능이나 경험습득 청년들 보호조치와 열정페이 강력처벌 조항 신설
4.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을 금지하겠습니다
 - 능력 있는 다른 정치지망생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불공정행위 척결
5. 국회에 '불공정 신고센터' 설치 및 '공정사회 실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 가진 자, 힘 있는 자에 의한 불공정, 제도적 허점에 의한 불공정 사례 척결
 - 정의와 공정 실현을 위한 범사회적,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

» **이행기간**

□ 법 제·개정 사항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추진 및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법률개정 및 정책입안 사항으로 재원조달 사항 아님.

정책순위

5

질병예방통제청(가칭), 美CDC수준으로 개편하는 등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정책분야 사회/안전

» 목 표

1. 질병관리본부를 신종 전염병에 선제적 대응하는 질병예방통제청(가칭)으로 확대 개편하여 비상 대응
2. 과기부 등 관련부처-대학-연구기관-제약회사가 공동으로 국가적 사업으로 치료제 개발
3. IoT 기반 스마트한 미세먼지 대응과 대중교통 미세먼지 프리존, 복합공간 미세먼지 공시제
4. 아동청소년 및 여성이 안전한 사회 실현

» 이행방법

1.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통제청(가칭)으로 확대 개편하여 신종전염병 상시적 비상대응에 나서겠습니다
 - 질병통제예방청장은 방역분야 전문가로 임명하고, 감염병 발생시 방역 지휘 및 조치에 대한 전권 부여
 - 감염병 위기단계 격상과 감염자 격리 및 관리, 감염지역 통제 질병예방통제청장이 결정
 - 질병예방통제청에서 감염병 전문인력 보유, 역학부서 확충 등 비상대응 체계 확립
 - 전염병방지법 만들어 유증상자 공항, 항만에서의 격리조치, 자가격리와 돌봄체계 구축
2. 관련부처-대학-연구기관-제약회사 공동으로 국가적 치료제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 과학기술부·산업부 등 관련부처와 대학 및 제약연구소 등 국가역량 총집중 치료제 개발
 - 바이오시밀러 강국 넘어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기반 구축
3.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재난/재해 기초소득을 추진하겠습니다
 - 자연재해와 감염병 재난 때 저소득 취약계층, 일용직, 비정규직 등 기초소득 직접 지급
 - 간이과세 기준선 연 1억원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매출액 연 2억원 이하는 부가세 면세

4. IoT 기반 스마트한 미세먼지 대응과 지하철 포함 대중교통 미세먼지 프리존, 복합공간 미세먼지 공시제 추진하겠습니다

- IoT형 측정시스템 구축으로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성과 실시간 대응
- 지하철 역사와 지하철 객실 내 미세먼지 정화시설 설치
- 대형쇼핑몰, 대형마트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미세먼지 실시간 공개제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 미세먼지 감축 유도

5.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기징역형으로 엄벌하겠습니다

- 성범죄 처벌 미국 및 영국 수준으로 최대 무기징역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 금지
- 그루밍 성범죄 방지조항 신설
-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법 추진하여 성범죄 합정·유도수사 허용
- 흉악범죄자의 인적사항 미국 수준으로 공개 및 접근금지 강화

6.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의 소비자도 처벌하겠습니다

- 성범죄 불법 영상물 제작·유포·소지 강력 처벌
- 불법 촬영물 신속 삭제·차단
-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 및 국제공조 확대
- 명시적 동의 없으면 성범죄로 엄벌

7.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제외하겠습니다

-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제외 및 데이트 폭력,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통제·조정도 폭력에 포함
-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 및 이메일, 전화, SNS 등 임시 접근금지명령 신속처리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
- 피해자 주거지원, 생계비, 의료비, 동반아동 지원 현실화
-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하여 정기검진·관찰·심리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8. 스토키방지법 추진하겠습니다

- 스토키에 대한 임시접근금지명령 신속 처리
- 미성년자 스토키, 무기소지, 반복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 상습스토키 징역형

» **이행기간**

□ 법 제·개정 사항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추진 및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활용과 추경예산의 효율적 사용

정책순위

6

저출산의 국가적 위기에서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하겠습니다

정책분야 경제/복지

» 목 표

1. 저출산의 국가적 위기에서 개인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
2.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무료 제공, 아이를 돌보는 유급돌봄휴가제 도입
3. 국공립어린이집 50%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공영제 시행

» 이행방법

1.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메트로하우징(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 수도권과 광역시부터 도심 전철역 상부공간 주상복합형 “메트로 하우스” 추진
 - 상업공간 수익으로 임대료 낮춰, 주변시세 50% 수준의 저비용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 저층에 청년 위한 창업혁신공간, 문화예술공간 등 청년 전용 다목적 복합공간 배치
 - 광역시 이상 주택건설 용적률 상향, 자녀 있는 청년부부는 분양 또는 임대주택 제공
2. 출산부부에게 획기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 신혼부부와 가족 구성원에 따라 임대주택 평수를 달리하여 제공
ex) 혼인 후에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부터 평수가 넓은 임대주택 선착순, 우선적 지원
 - 임신부 진단검사비, 택시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60만원→ 100만원) 상향
 - 2자녀 다둥이 부부부터 교통·문화·체육·관광·편의시설 등 할인혜택을 담은 ‘다둥이 문화패스’ 신설, 산후조리원 이용 및 출산용품 구매 시 할인 다양한 혜택 추가
3. 유급돌봄휴가제 도입하겠습니다
 - 육아휴직제도 12개월 의무화(남녀), 추가 2년 범위 내 무급 휴직 장려
 - 유아 부모는 4시간, 6시간 등 근무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확대, 급여는 근무시간 비례 지급

- 한 달 이내 유급돌봄휴가제 보장 통해 맞벌이 가정 육아 지원
-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장기 무급휴직 허용으로 경력 단절 해소

4.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공영제 시행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 국공립유치원 확대, 민간어린이집 공영제 실시,
- 보육교사들의 수준에 맞는 급여 현실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아이는 좋은 환경에서 생활 가능토록 아이돌 보미 및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 통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 가정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할 경우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 별도지원 확대

» 이행기간

□ 법 제·개정 사항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추진 및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메트로하우징 재원은 3.7조 + 공공리츠공공리츠(REITs) 통해 조달, 임대보증금 통해 추가로 확보

□ 재정지출 합리화 및 세출조정 등으로 조달

정책순위

7

혁신주도성장정책으로 신성장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정책분야 경제

» 목표

1.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하고, 4차산업혁명 첨단·융복합 기술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2.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전면 재검토하고, 현재 최저임금은 문재인정부 끝날 때까지 동결
3. 주52시간제 획일적 적용의 부작용 극복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재조정
4. 타다금지법 폐기 등 규제혁신과 기업 주도의 도약형 혁신성장 환경 조성
5. 한국형 벤처 밸리를 구성해 AI, 블록체인 등 4차산업 인재 양성을 통해 미래세대 인프라 구축

» 이행방법

1.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하겠습니다
 - 현재 최저임금은 문재인정부 끝날 때까지 동결
 - 최저임금은 소상공업-중소기업 업종 특성, 숙련도 특성,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원화
 - 주52시간제를 연간 근로시간 총량제, 주/월 단위 근로시간 조정, 유연근로제 정착 (R&D업종 유연한 근로시간제 신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약 완화,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2.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상권보호구역 및 구역별 육성업종 지정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최저임금 교섭 활성화
3. 미국, 일본, 프랑스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제외 특례 업종도 현행 5종에서 26종 까지 재확대

- R&D업종은 그 특성을 고려해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신설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약 완화, 재량근로제 자율성 강화,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4.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회로 이관해 규제혁파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 타다금지법 폐기 등 규제혁신과 기업 주도의 도약형 혁신성장 환경 조성
 - 규제비용 총량제, 네거티브규제 시스템 도입
 - 모험투자를 담당하는 혁신자본 확대, 벤처캐피털 규모 획기적으로 보강
 -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성장사다리 강화(신상품 개발,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강화)
 - 법인세 인하를 통해 제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여 내수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확충 모색
5. 4차산업혁명시대 첨단·융복합 기술 확보로 신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확보하겠습니다
- AI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등 첨단·융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육성
 - 바이오 혁신 활성화, 바이오산업과 식품 및 농수산업을 연계 육성
 - 지식정보화시대 신성장동력의 원천인 데이터경제(data economy) 구현
 - 한국형 벤처 밸리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산업 육성
6. 탈원전정책과 태양광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4세대원전(SFR, 소듐고속증식로)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이행기간**

□ 법 제·개정 사항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추진 및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법률개정 및 정책입안 사항으로 재원조달 사항 아님.

□ 재정 및 조세개혁 등을 통한 정부재원 활용으로 조달

정책순위

8

강성노조와 악덕사업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정책분야 노동

» 목 표

1. 고용 및 해고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여 노사가 상생하는 생태계 조성
2. 강성노조의 불법파업과 악덕사업주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근절
3. 노조법 일부 조항은 사용자의 대항권을 제약하고 있어, 노사간 힘의 균형유지를 위한 사용자 대항권을 보완해 노사관계 선진화

» 이행방법

1.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을 원천 봉쇄하고, 노조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 노조의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를 명시하고, 일하지 않는 강성노조에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3.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선택적근로시간제도, 재량근로시간제도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4. 해고 근로자의 재취업 대책 및 실업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급여액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 및 부양가족급여 신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후 재고용 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와 사업주 및 경영진 의무 강화

» 이행기간

□ 법 제·개정 사항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추진 및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법률개정 및 정책입안 사항으로 재원조달 사항 아님.

정책순위

9

대학입시 정시를 70%로 확대하고, 특목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 백지화하겠습니다

정책분야 사회

» 목표

1. 조국사태의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대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로 개혁
2. 자사고, 외고, 국제고, 특목고 폐지정책을 원상회복하고 공교육 강화
3.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직업인 양성 위한 최첨단 직업학교 설치 확대

» 이행방법

1. 부모찬스의 불공정한 입시제도를 정시모집 70%로 바로 잡겠습니다
 - 대학입시 전체 모집의 70%대 수시비중을 30%수준으로 하향 추진
 - 수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 2회(7월과 10월) 시행하여 응시기회 확대
2.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특목고, 자사고, 외국어고 폐지 백지화하겠습니다
 -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AI인재 양성 특수목적고 신설 추진
 - 초/중/고 공교육을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개혁
 - 통신 기술의 발전과 인프라 확장으로 온라인(Online) 강의를 보편화할 수 있는 여건 구축
3. AI 인재 100만 명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 창의교육으로 역량을 키우고 4차산업 혁신을 위한 발판 마련
 - 인공지능에 지배받는 국민이 아닌 인공지능을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인재들로 양성
 - 1년에 10만 명씩, 10년간 100만 명 인재 양성

» **이행기간**

□ 법 제·개정 사항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추진 및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법률개정 및 정책입안 사항으로 재원조달 사항 아님

□ 재정 및 조세개혁 등을 통한 정부재원 활용으로 조달

정책순위

10

한미 핵공유시스템 구축하고, 첨단과학강군 육성하겠습니다

정책분야 외교안보

» 목 표

1. 북한의 핵무기와 ICBM 및 SLBM 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나토형 한미 핵공유시스템 구축
2. 저출산 병역자원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첨단과학강군 육성 위해 전문부사관제 확대
3. 전역장병들의 창업·취업·학업을 위한 사회진출 장려금 2천만원 지급

» 이 행 방 법

1. 나토형 한미 핵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강안보를 구현하겠습니다
 - 북한의 핵무기와 ICBM 및 SLBM 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나토형 핵공유시스템 추진
 - 맞춤형 억제전략(킬체인, KAMD, KMPR)으로 상시 대응태세 확립
 - 4차산업혁명 기술 국방분야 적용하여 방위산업 활성화와 최정예 스마트과학군 육성
2. 직업전문부사관제 군병력의 50%까지 확대하여 첨단과학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 병역자원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부사관제를 군병력의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간부 비율을 조정하며, 정예간부의 정년(부사관58세/ 소령 55세/ 중령 58세/ 대령 60세)은 연장하여 직업전문군대로 혁신
 - 사관학교 교육을 통합(1,2학년 공통/ 3,4학년 육.해.공 전문과정)하고, 미래전에 대비한 인공지능 및 사이버전 교육을 양성과정에 도입
3. 전역장병들의 창업·취업·학업을 위한 사회진출장려금 2천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 이스라엘 탈피오프를 벤치마킹하여 장병들의 취업과 창업 프로그램 운영
 - 청년들의 전역 후 창업, 취업, 학업을 위한 사회진출장려금 지급.
 - * 사회진출장려금: 산출근거 : 2천만원 * 20만명(18개월 기준)= 연간 4조원
 -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유공자수당 현실화 등 국가책임형 보훈 강화

» 이행기간

□ 법 제·개정 사항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추진 및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간부비율 조정 및 병력 감소분 등 자체 사업 재조정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여 추진

□ 재정 및 조세개혁 등을 통한 정부재원 활용으로 조달

친박신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친박신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개헌 반대 |
| 2 | 한미일 동맹 강화와 북핵 폐기 |
| 3 |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등 |
| 4 | 사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 “공장을 다시 한국으로” |
| 5 | 전교조 폐지 등 교육제도 혁신 |
| 6 | 양극화 해소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
| 7 |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 |
| 8 |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
| 9 | 제4차 산업혁명 육성 ~ 제2의 한강의 기적 만들기 |
| 10 | 균형예산 편성 및 작고 강한 정부 |

정책순위

1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개헌 반대

정책분야 정치

» 목 표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탄핵으로 인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친북한 정책으로 인하여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친중국 정책으로 인하여 한미일 동맹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근거가 되었던 손석희의 JTBC 태블릿 PC는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현재 이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의결, 현재의 탄핵 판결에 사용된 증거들이 문제가 있음을 규명하여, 탄핵이 잘못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서 보듯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관련자가 도지사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훼손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아야 사법질서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다.
- 조국 전 장관의 가족 비리 문제와 울산시장 선거에 정권이 개입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코로나19(우한폐렴) 문제로 인하여 거론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특검과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 시장경제질서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굳건히 하는 것만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개헌 논의는 내각제 개헌을 통해 통치체제를 변환하고, 나아가 연방제 도입을 하기 위한 시도이다. 따라서 친박신당은 이러한 도전에 단호히 대처한다. 이를 위해 “개헌저지투쟁 국가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개헌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 이행방법

- ①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탄핵 바로잡기 운동
- ② 박근혜 대통령 석방 운동
- ③ 국민발안제 개헌(안) 반대 ~ 개헌저지투쟁 국가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강화
- ④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 ⑤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 정당의 위헌소송 제기/무효화 운동
- ⑥ 공수처법 폐지
- ⑦ 태블릿 PC 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
- ⑧ 드루킹 사건의 관계자에 대한 엄벌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⑨ 조국 사태에 대한 조속한 재판 진행을 통한 법치질서 정립
- ⑩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감사 및 특검 도입

» 이행기간

즉시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별도 재원 불필요

정책순위

2

한미일 동맹 강화와 북핵 폐기

정책분야 국방 · 안보

» 목 표

-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친중정책, 퍼주기식 대북정책의 문제점은 잘 알려져 있다.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사드 배치는 지연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중국에 대한 조치는 소극적이다. 또한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도 속수무책이다.
-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을 지원하려고 시도하지만, UN의 대북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시도는 좌절되고 있다.
-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지속되고 있으나, 우리의 방어태세는 바뀌지 않고 있다, 한미 군사훈련은 축소되고 있고, 일본과 갈등구조는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안보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 북한의 위협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중국은 북한의 편을 들 것이므로, 중국에 의존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이러한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은 국방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경제적 협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
- 우리의 안보는 기존의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여,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이행방법

- ① 주적 개념을 명확히 정립 ~ 북한과 북한의 직접적 지원세력
- ②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대화는 북핵 폐기 후에
- ③ 한미일 군사동맹 체결
- ④ 한미 군사훈련 재개
- ⑤ 미사일 방어 체제 참여
- ⑥ 사드 추가 배치
- ⑦ 대북 지원은 인도적 차원으로 한정
- ⑧ 무기 현대화를 통한 전력 강화
- ⑨ 무기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
- ⑩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대응 역량 강화

» 이행기간

□ 북한의 핵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는 때까지 지속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국방예산의 집행 분야를 변경
- 무기 개발과 사이버 전력 개발을 위한 기능 강화

정책순위

3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등

정책분야 정치·재정경제

» 목 표

- 문재인 정권이 시작된지 3년도 되지 않았지만 각종 경제정책은 바람직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퍼주기식 복지정책은 나라 재정을 고갈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성장은 고사하고,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국민의 삶의 질은 나빠지게 만들었다.
- 심지어 2019년의 국민소득은 전년 대비 4.1%가 감소하였다. (2018년 \$33,434에서 2019년 \$32,047) 이렇게 국민소득이 감소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5.9% 상승한데 기인한다고 하겠지만,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 중국에 대해 저자세로 일관하는 친중국 정책으로 인하여 국가안보를 위한 사드 배치는 지연되었고, 이와 관련된 중국의 사실상의 보복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았지만, 정부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서도 반복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과격한 정책으로 인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입은 피해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도입한 태양광 발전은 환경훼손이라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물론, 총선 이후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친박신당은 국가경제를 피폐하게 만드는 문재인 정권의 각종 경제정책을 파기하여 새로운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사회주의 경제가 아닌 시장경제 질서를 확실히 할 것이다.

» 이행방법

- 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관련 책임 소재를 규명
- ② 최저임금 인상율은 물가상승율에 연동시켜 급속한 인상의 피해 최소화
- ③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의 법적 강제성 폐지
- ④ 무분별한 퍼주기식 각종 복지제도의 재정비
- ⑤ 탈원전 정책의 포기 및 관련 정책 수립의 책임소재 규명
- ⑥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재개
- ⑦ 설립 추진 중인 한전대학을 원자력 기술 위주로 육성
- ⑧ 산림 등 환경을 훼손한 태양광 발전소 해체
- ⑨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비리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 추진
- ⑩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근로소득세 전액 면제

» 이행기간

□ 각종 제도개선은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원자력발전 건설 등에 소요되는 재원은 한전이 자체 해결 가능

□ 소요재원은 퍼주기식 복지에 지출되는 예산을 재활용

정책순위

4

사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 “공장을 다시 한국으로”

정책분야 산업자원

» 목 표

- 많은 기업이 생산거점을 인건비 등 비용이 저렴한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인건비가 비싸진 중국에서도 이미 철수하기 시작하였고, 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 동남아, 인도로 이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적인 것이라고 속수무책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 기업이 생산기반을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 국내의 좋은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실업률은 상승하게 되고, 근로자의 소득은 줄어들고 살기 힘든 나라가 된다. 규제를 줄이겠다는 말만으로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없다. 실제로 규제를 줄여서, 기업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
- 트럼프 대통령처럼 해외로 빠져나간 생산기반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오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한국을 사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서 해외로 간 공장을 다시 한국으로 불러와야 한다. 『사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친기업 정책을 도입하고 잘못된 경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문제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동산 규제 정책을 도입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경제개발 초기에 만들어진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휘발유 소비를 줄이기 위한 유류세 제도 등도 시장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조세제도부터 고쳐야 시장경제질서를 회복시켜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이행방법

- ① 『사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운동 전개
- ② 공장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 ③ 미군공여지를 활용, 수도권에 차세대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단지 조성
- ④ 물류비용 경감을 위해 산업용 교통망 신설
- ⑤ 부동산 정책은 집값 인상 억제에서 공급 확대 위주로 개편
- ⑥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한 각종 규제 정책 폐지
- ⑦ 왜곡된 전기요금 구조 바로잡기 ~ 가정용 누진제 폐지
- ⑧ 왜곡된 유류세 구조 바로잡기 ~ 휘발유 중과세 폐지

» 이행기간

- 각종 제도는 즉시 개편
- 수도권(강북지역)에 대한 규제해제는 즉각 시행, 연구단지 건설
- 『사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운동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은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 활용
- 필요한 경우 민자유치

정책순위

5

전교조 폐지 등 교육제도 혁신

정책분야 교육

» 목 표

- 어린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창출해 나갈 수 없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전교조가 생기면서 좌경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두고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따라서 전교조부터 폐지하여야 한다.
- 우리의 생활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교육시스템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AI(인공지능) 시대가 되었지만, 학교에서는 AI와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는 별로 없다.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부터 양성해야 한다.
- 빠른 환경변화에 적응하려면 기존 세대에 대안 지속적인 재교육은 필수 요소이다. 1980년대에 컴퓨터가 우리 사회에 도입되고, 21세기에 인터넷,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 시대가 전개 되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바뀌는 현대 사회에 적응하려면 평생교육제도는 일자리 유지와도 관련된다.
- 저출산의 영향은 교육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생수가 줄어들어 교육 수요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는 그대로 존재하여 공급은 변화가 없다. 결과적으로 공급초과가 되어서 각급학교에 대한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차세대를 위한 미래지향적 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
- 미래지향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려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려면 대학입시제도도 매년 바뀌어서는 안 된다. 대학입시제도도 시장 기능에 맡겨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정착되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행방법

- ① 미래지향적 교육을 위하여 전교조 폐지
- ② 국정교과서 제도 변경. 객관적 역사교육 추진
- ③ 시장기능에 의한 대학입시제도의 정착
- ④ 사립대학의 통·폐합, 퇴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
- ⑤ 교육감 직선제 폐지
- 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AI 등 기본 기술 교육 강화
- ⑦ 평생교육시스템을 강화하여 성인들에게 실질적인 재교육 제공
- ⑧ 현재 6년제인 초등학교 과정에 유치원 과정을 추가 설치
- ⑨ 고등학교 교육에 직업 교육제 강화

» 이행기간

□ 사안별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도개선 후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교육관련 예산 집행을 재조정

정책순위

6

양극화 해소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정책분야 재정경제 · 기타

» 목 표

-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과정에서 빈부격차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빈부격차 문제는 교육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거대기업의부의 세습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문재인 좌파 정권은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빈부격차는 더 커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으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의 몰락을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이 나라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였다.
-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대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설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도 어려운 현실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여야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 빈부격차는 연금제도에서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의 수급액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비교할 때 확연히 작다는 것은 누구나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좌파 정권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심지어 모른척하고 있는 상황이다. 빈부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것이다.

» 이행방법

- ① 거대 재벌기업의 부의 불법 세습을 차단하는 제도 마련
- ②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화
- ③ 최저임금위원회에 자영업·소상공인 대표 참여를 보장
- ④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 마련
- ⑥ 중소기업에 유아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 확대
- ⑦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확대
- ⑧ 최빈층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상향 조정
- ⑨ 국민연금 수령액을 증액 (더 내고, 더 받기)
- ⑩ 빈부격차 문제 해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공공 연구기관 신설

» 이행기간

즉시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기존 편성된 예산을 활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등에 필요한 예산은 추가 편성

정책순위

7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분야 여성 · 기타

» 목 표

- 한국사회는 인구사회적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고령화, 다른 하나는 저출산이다.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건강 상태가 개선되면서 노인들의 사망률이 저하되면서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젊은 층은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출산을 회피하여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 고령화 현상은 사회가 발전해 나가면서 생기는 자연적 현상이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을 양육 하는데 전력을 기울였고, 노후에 대한 대비책은 세우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다. 노후대책은 빈약한 국민연금과 국가의 지원이 유일한 경우가 많이 있다.
- 저출산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인구감소로 연결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나타나게 된다.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꺼리게 되고, 여성들이 육아 문제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은 이미 현실화된 사실이다. 이러한 일들에 정부는 관심을 기울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문화 가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문재인 좌파정부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퍼주기식 복지제도만으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혼한 청년들에게 주택을 마련해 준다는 미봉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 정책의 근간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한다.

» **이행방법**

- ① 평생교육제도를 정비하여 노인들에게 필요한 기술 습득기회 제공
- ②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격차를 해소
- ③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되는 주택연금제도 시행
- ④ 고령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단지 개발
- ⑤ 은퇴한 고령층에 대한 주택 보유세 및 양도세 경감조치 시행
- ⑥ 대기업의 아이 돌봄 시설 의무화
- ⑦ 공공 유아 교육기관 설치 확대
- ⑧ 결혼한 청년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제공 확대
- ⑨ 중고등학교의 공교육 체제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 ⑩ 다문화 가족의 자녀를 위한 다문화 교육 기회 확대

» **이행기간**

- 제도 개선 후, 즉시 시행
-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경우 마스터 플랜 수립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분야별 예산 활용
- 인프라 구축은 민자유치

정책순위

8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정책분야 보건복지 · 환경

» 목 표

- 코로나19(우한폐렴)의 대처방안에서도 초반부터 잘못 되었다. 코로나19의 발생지인 중국에 대한 여행객 통제를 소홀히 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대구 신천지를 시작으로 구로 콜센터, 해양수산부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전세계적으로 130개국 이상이 한국 여행객의 입국금지, 격리 등 통제를 하고 있다.
-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도 연중행사가 되고 있다. 금년은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세먼지의 유입이 적었지만, 매년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의 비중을 줄이고,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의 발생량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 4대강 주변의 보를 철거하거나 개방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물부족 사태를 겪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한강 개발 이후에 한강이 깨끗해지고 수량도 충분해 졌다. 한강에 보가 수없이 많지만 이를 철거하거나 개방하며 물을 바다로 흘려 보내자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문재인 좌파정권은 지난 정부에서 한 4대강 개발을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 탈원전 정책은 또 다른 환경파괴를 낳고 있다.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을 위해 산을 깎는 경우가 많이 있다. 태풍 등 강풍이 불면 취약한 구조인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환경이 파괴되면 다시 회복하는데는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것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환경이 파괴되면, 후손들에게 살기 힘든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므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 이행방법

- ① 코로나19(우한 폐렴)과 같은 전염성 질환의 발생시 대처 방안 마련
- ② 전염성 질환의 발생지에 대한 여행 금지 등의 원천차단 법제화
- ③ 마스크 부족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서 공급책 마련
- ④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또는 감축하고 원자력발전의 즉각 재개
- 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 차량의 감소를 위한 정책 수립
- ⑥ 미세먼지의 주발생지인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시행
- ⑦ 4대강 상류에 댐 구축을 통해 수자원의 안정적 관리기반 조성
- ⑧ 4대강 주변에 정수시설 신설 등 4대강 개발의 마무리 정책 수립
- ⑨ 산을 깎는 등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즉각 철거
- ⑩ 훼손된 환경의 원상회복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

» 이행기간

□ 각종 제도개선은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원자력발전 건설 등에 소요되는 재원은 한전이 자체 해결 가능

□ 소요재원은 퍼주기식 복지에 지출되는 예산을 재활용

정책순위

9

제4차 산업혁명 육성 ~ 제2의 한강의 기적 만들기

정책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

» 목 표

- 전세계적으로 기술발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구조로 인하여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좌절되고 있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도입된 차량공유, 주택공유 사업 등이 한국에서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 과거 산업혁명 대열에 동참하지 못한 결과는 일본에게 나라를 36년 동안 빼앗긴 역사로 나타난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후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통하여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고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다. 만일에 지금 이해관계에 얽매어 제4차 산업혁명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 번 경제적인 속국이 되어 쓰라진 과거의 경험을 다시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 AI(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은 산업구조를 급격하게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과거 산업혁명 초기에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기계를 부수면서 저항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라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신경써야 한다.
- 제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산업의 흐름이며, 이를 선도해 나가야 우리의 미래가 밝게 열린다는 것을 알리고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러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새로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교육을 강화하여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통하여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경제적 강국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 이행방법

- ① 실질적인 스마트 공장 도입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 · 시행
- ② 무인자동차/드론 시대를 대비한 각종 법 · 제도 정비
- ③ 무인자동차/드론 관련기술 개발을 위한 국책 연구기관 신설
- ④ AI(인공지능), 로봇 기술 등을 가르치는 전문 교육기관 육성
- ⑤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종합 Test-Bed 구축
- ⑥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분야의 종사자들에 대한 종합 대책 수립
- ⑦ 공유차량, 공유주택 등 신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철폐
- ⑧ 공공분야 연구기관, 학교 등을 제4차 산업혁명에 특화
- ⑨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 등 각종 지원책 마련
- ⑩ 제4차 산업혁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이행기간

- 필요한 제도개선은 즉시 시행
- 육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 사업은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종합적으로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교육, 산업지원 분야의 예산의 집행 계획을 변경하여 재원 조달
-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하여 해외투자 유치

정책순위

10

균형예산 편성 및 작고 강한 정부

정책분야

재정경제/기타

» 목 표

- 무분별한 퍼주기식 복지제도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있다. 2020년도 적자 예산으로 인한 국채발행 규모는 60.2조원이고, 여기에다 연초에 편성되는 추경 11.7조원을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수자가 된다. 이러한 것은 문재인 좌파정권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 제대로 된 정부는 균형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정부의 지출규모를 줄여야 한다. 즉 작은 정부가 되어야 한다.
- 공공부문의 각종 연금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문제점이 있다. 공무원연금은 물론이고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각종 연금에 대한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현재 적자로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다.
- 신문·방송도 특정 좌파이념에 편중되어 있고, 보도의 보편성도 상실하고 있다. 코로나19(우한 폐렴)이 발생하였을 때 방송은 다른 보도는 소홀히 하고 단지 코로나19 만을 중점 보도하였다. 또 교통방송은 특정 이념에 편중된 방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국가·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방송사(공영방송)는 민영화하여 방송시장에도 경쟁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 이행방법

- ① 2021년 예산부터 균형예산 편성
- ② 작은 정부의 구현을 위해 부서 통폐합
- ③ 복지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한 국채발행 없는 복지예산 집행
- ④ KBS2(채널 7)는 KBS에서 분리하여 민영화 (매각)

- ⑤ MBC에 대한 방송문화진흥원의 소유지분은 민영화
- ⑥ 교통방송의 서울특별시의 소유지분은 민영화

» 이행기간

- 지속 추진
- 공영방송 민영화는 즉시 시작하여 완료될 때까지

» 자원조달방안 등

- 작은 정부 구현에는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열린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열린민주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 2 | 국회의원 3선 제한제로 국회를 젊고 활기차게 만들겠습니다. |
| 3 |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민참여경선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 4 |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분리하겠습니다. |
| 5 | 불법 해외은닉재산환수특별법 제정 |
| 6 |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 7 | 언론오보방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 8 | 어린이잡유치원 지원예산을 가정에 직접 지급하겠습니다. |
| 9 |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 10 |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등록금 면제 및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정책순위

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정책분야 정치

» **목 표**

- 일하는 국회 지향
- 무능한 국회의원 자격 박탈권 국민에게 부여

» **이행방법**

-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 발의 요건 : 직전 총선 전국 평균 투표율 20% 이상의 참여
 - 소환 요건 : 1/3 이상의 유효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결정
- 비례 국회의원의 경우
 - 발의 요건 : 전체 투표자 수를 지역구 수로 나눈 수의 5% 이상 참여
 - 소환 요건 : 1/3 이상의 유효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결정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임기 중 법 제정 후 상시적으로 이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지자체, 비례대표의 경우 선관위가 예산 확보
 -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의 경우 모바일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용 최소화

정책순위

2

국회의원 3선 제한제로 국회를 젊고 활기차게 만들겠습니다.

정책분야 정치

» 목 표

- 국회의원 선출될 기회를 3번으로 한정하여 매너리즘 방지
- 세대교체를 통해 국회 활력 제고

» 이행방법

-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을 위한 법 개정
 - 국회의원 연임 3선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 법 통과가 안 될 경우, 열린민주당만이라도 3선 제한 규정 적용
 - 입법화 이전에 열린민주당 당헌·당규로 채택 및 시행

» 이행기간

- 제21대 국회 임기 내 입법 조기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별도 추가 재원 불필요

정책순위

3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민참여경선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정책분야 정치

» **목 표**

-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참여민주주의 정착
- 정치 불신 해소와 정치적 관심 제고
- 비례대표에 대한 검증 강화
 - 공천 및 비례 순위 선정 과정의 투명성
- 투표율 제고

» **이행방법**

- 선거제도 정당 간 합의 선행
- 비례대표 선거법 제도 개선
-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임기 내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별도 추가 재원 불필요

정책순위

4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분리하겠습니다.

정책분야 정치

» 목 표

- 기형적으로 집중된 검찰 권력의 합리적 분산
- 법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검찰 지위 정상화

» 이행방법

- 검찰청법 개정
- 형사소송법 개정
- 경찰법 개정
- 검경 수사권 관련 각종 행정 법령의 정비

» 이행기간

- 법 개정 :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별도 추가 재원 불필요

정책순위

5

불법 해외은닉재산환수특별법 제정

정책분야 재정경제

» 목표

- 권력자의 국정 농단을 통한 부정축재 해외재산 환수
- 재벌 대기업 불법 해외은닉재산 환수
-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거래를 통한 부의 대물림 방지

» 이행방법

- 특별법 제정으로 시효 연장
- 유관기관 합동조사기구 구성
 -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검찰, 해외공관 TF

» 이행기간

- 법 제정 :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
- 조사기구 구성 :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정부 예산 활용

정책순위

6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정책분야 언론

» 목 표

□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함으로써 악의적 허위 보도를 미연에 방지

» 이행방법

□ 고의로 진실을 왜곡 날조할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몇 배의 배상액을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

» 이행기간

□ 2020년~2022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별도 추가 재원 불필요

정책순위

7

언론오보방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정책분야 언론

» 목표

- 특수 가문의 독과점적 언론 권력 사유화 방지
- 언론 피해에 합당한 보상 및 책임 부과

» 이행방법

- 잘못된 오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분량 및 지면의 정정보도 의무화
- 언론 피해를 신속하고 전폭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가칭 언론소비자 보호원 신설
 - 언론사 편향의 언론중재위원(법관, 전직 언론인, 언론학 교수) 중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폐지
- 가칭 언론오보방지법 신설

» 이행기간

- 2020년~2022년까지

» 자원조달방안 등

- 별도 추가 자원 불필요

정책순위

8

어린이집·유치원 지원예산을 가정에 직접 지급하겠습니다.

정책분야 교육·복지

» 목 표

-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
- 어린이집·유치원의 회계 비리 근절과 투명성 확보

» 이행방법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하던 예산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교육 선택권을 보장
- 교육청이 어린이집·유치원에 지급하는 바우처 방식에서 정부가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 이행기간

- 2020년~2022년까지 지원 예산을 가정으로 완전 전환
 - 입법 추진 : 2020년
 - 완전 전환 : 2022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별도 추가 재원 불필요

정책순위

9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분야 교육

» 목표

- 사학의 공공성 강화로 국민 신뢰 회복
- 사학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 사학 교직원의 고용 안정성 확보로 교육의 질 제고
- 사학의 회계 비리 차단
- 재단 이사회의 전횡 및 인사권 남용 등 사유화 방지

» 이행방법

-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학비리 처벌 강화
 - 비리 임원 복귀 금지
 - 임원 승인 취소에 대한 기준 및 강제력 강화
 - 교직원 채용의 공공성 강화
 - 사학 비리 내부제보자 보호 강화(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 사학 법인 법정부담금 강제 이행
 -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연장
-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규칙 개정

» **이행기간**

□ 2020년~2022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별도 추가 재원 불필요

정책순위

10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등록금 면제 및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정책분야 교육

» 목표

- 우수 인재의 탈 지방화 방지 및 우수 인재 유치
- 지방 국립대학 교육 연구의 질 향상
- 우수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
- 지역 균형 발전

» 이행방법

- 지방 거점 9개 국립대에 등록금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
-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커리큘럼 조정에 따른 우수 교원 확보
 -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으로 변화
- 지역 혁신 사업 등 산학협력기반 확충
- 국립대학 내 취업지원기구 상설화

» 이행기간

- 거점 국립대 등록금 면제 : 2021년부터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신규 편성

가자코리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가자코리아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국방 안보 통상 |
| 2 | 노사 세금 금융 |
| 3 | 행정 사법 검경 감사 |
| 4 | 컴퓨터(전산)선거·개표금지 |
| 5 | 보건복지재편 |
| 6 | 국민연금, 공공연금, 의약연금 |
| 7 | 국가도 회사다. 잉여예산제 실시 |
| 8 | 교육제도개편 |
| 9 | 지방행정개혁 |
| 10 | 대한민국만년역사연구원 |

정책순위

1

국방 안보 통상

정책분야 통일

1. 통일 : 북진통일, 흡수통일 정책

- ① 국가비용 절감으로 지속가능한 통일경제발전5개년계획 수립
- ② 통일 헌법·정부 조직 구성 통일위원회 발족
- ③ 통일수도 강역- 남북한 휴전선 전부/개성·장단·문산·철원 금강산·고성일대
- ④ 통일수도 명칭- 아사달
- ⑤ 통일정부 권력구조- 통일대통령 1인 임기10년-국민직접선거
- ⑥ 지방자치- 대통령남북총리임명제 각1인 임기5년
- ⑦ 국방원, 사법원, 정보원, 경제원, 감사회계원, 헌법원, 대법원, 선관위
- ⑧ 통일헌법 육법전서제정
- ⑨ 통일국가 명칭- 한국조선
- ⑩ 통일기·애국가- 삼태극기

2. 북한왕조 종북좌파 타도 정책

- ⑪ 친북한기업·정당정치세력·경제세력·위장국내재외노동자세력·종교사회단체·공공조직 축출로 국가적, 사회적비용 절감으로 북진통일비용 재원 마련

3. 국방

- ⑫ 핵무기, 수소폭탄 무력화 전략·전술·기술·개발
- ⑬ 첨단 ICT 통합국방군 설립
- ⑭ 주적 확대에 따른 전략 전술 부대 설치
- ⑮ 국가테러방비안전 전략 전술 부대 설치
- ⑯ 전통 육군 공군 해군의 전략 통합군부대 설치
- ⑰ 국방비 재정비, 국방전략자산 전문부대 설치

4. 안보

- ⑭ 국가안보도청법제정-국내외를 총망라 한 도청기술개발
- ⑮ 국가테러방비안전법 제정
- ⑯ 대미안보 우호 강화
- ⑰ 주변국 주적을 행한 안보전략 개발

5. 외교 및 대외 통상

- ⑱ 북진통일 국제외교 강화
- ⑲ FTA등 통상외교 강화
- ⑳ 내국인 우선보호 정책, 재외 국민보호를 위한 교민청 신설

» 목 표

□ 북진통일, 흡수통일

» 이행방법

□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져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망상적 통일정책과 중복좌파적 성향의 투쟁을 종식시켜 사회불안 비용과 정치 일반 사회의 낭비적 좌파 성향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통일 안보 국방 예비 비용으로 적립하여 사용함.

» 이행기간

□ 2016년6월부터- 2020년6월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대북 퍼주기 예산 절감, 기업의 정치조직의 상납 비용 금지, 시민사회에 뿌리는 정부 지자체 사업 대행처리 중지, 낭비 전시행정 중지, 도둑질 당하는 경제활성화 예산 절감사업 시행으로 재원 마련

정책순위

2

노사 세금 금융

정책분야 경제부

1. 경제 : ICT 융합 경제학 확립, 원아시아 원히스토리 아시아 공동체 주창

- ① 국가비용 절감으로 지속 가능한 통일경제발전5개년계획 수립
- ② 고대역사경제학
- ③ 문화경제학
- ④ 문명경제학
- ⑤ 민권경제학
- ⑥ 매국경제정책 폐기
- ⑦ 과거죄자수기업인사면정책수립
- ⑧ 기업인전용연금정책실시
- ⑨ 부동산등재산평가제폐지 및 담보대출활성화
- ⑩ 국민지식재산권등재사업
- ⑪ 친원전정책으로 원자력산업기반 재건

2. 일자리, 노사, 기업

- ① 일자리나눔, 2/1 3/1 근무, 투잡 쓰리잡 허용
- ①-1 복수노조제 및 귀족노조폐지, 대기업대주주 가족 기업세습경영배제
- ①-2 건설(공장)현장업무방해죄 조직폭력 증강력 범죄로 징역10년형으로 단죄

3. 세금, 교통과태료 인하

- ⑫ 양도세, 재산세, 부가가치세등 절반 인하, 상속세 및 증여세 폐지
- ⑬ 교통과태료 절반 인하
- ⑭ 고속도로 속도제한 시속 130킬로 허용

4. 금융

- ⑭ 서민금융 자본금 1000억원이하 소규모 금리 저리 은행 설립자유화
- ⑮ 기준금리 0%달성, 금융이자 인하

- ⑯ 서민전용(제2금융권) 기업전용(제1금융권) 분리운영
- ⑰ 서민금융 신용·소득 증빙제도 철폐

5. 생활경제

- ⑱ 금융소비자원설립
- ⑲ 긴급민생지원은행설립, 식량연료의료지원긴급센터설립
- ⑳ 신용불량자사면복권, 은행부실채권 휴지화정책 수립

» 현황과 문제점

- 시대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위에 굴림하여
- 미래문명을 전혀 준비함이 없이 과거 체제와 조직 이론에 기대어 망국적 경제 체제를 완전히 개조해야 함

» 목 표

- 빈익빈 부익부 정책 폐지로 차별 없는 금융이용

» 이행방법

-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져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국민재산을 축내는 정책 폐지와 정부와지자체 행정조직의 리모델링 및 구조조정으로 이행.

» 이행기간

- 2016년6월부터- 2020년6월까지

» 자원조달방안 등

- 낭비되는 국가예산 절감과 정부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으로 달성

정책순위

3

행정 사법 검경 감사

정책분야 행정부

1. 행정 : 국토부해체 분화, 허가권 10/1 축소 폐지

- ① 국토부-건설, 부동산, 교통기술, 국가검정기술, 환경기술 전문분야로 해체 분화
- ② 기초자치제 폐지. 광역화만 지방자치허용,
- ③ 지방의회폐지, 광역화자치의회만 허용, 지역구선출폐지, 탈정당비례대표제선출
- ④ 주식회사개념도입 수시 공무원퇴출 임용제 허용, 공무원신분보장제폐지
- ⑤ 공무원 연금 폐지, 노동의 강도에 따른 보수 차별제 도입
- ⑥ 지방자치 허가권, 입안권, 조례 제정권 10/1로 축소
- ⑦ 지방의회 의원 각종 행정위원회 참여 불허
- ⑧ 지방자치조직 3/1축소, 구조조정으로 복지전문공무원 증원
- ⑨ 소방공무조직 소방재난안전경찰로 국가공무원으로 신분변경
- ⑩ 시민사회종교 조직 정부,지방 사업 및 복지시설 대행 수행 금지

2. 사법

- ⑪ 대법원개혁, 대법관확충, 법관보수 2배인상, 상고심사제폐지
- ⑪-1 변호사시험제 수시제 변환, 대학미수학자대상 사법시험부활, 법대교수변호사자격증부여
- ⑪-2 대법관 정수 33인이내 증원

3. 검경

- ⑫ 검찰외 기소권 법원내 법원검찰, 선관위검찰 설치
- ⑬ 경찰조직 개편, 수사전문청, 보안전문청, 정보전문청, 가정실종자수사전문청, 공수처전문청,전문경찰로 조직개편

4. 국방

- ⑭ 주적 확대에 따른 전략 전술 부대 설치
- ⑮ 국가테러방비안전 전략 전술 부대 설치
- ⑯ 전통 육군 공군 해군의 전략 통합군부대 설치
- ⑰ 국방비 재정비, 국방전략자산 전문부대 설치

5. 감사 회계

- ⑮ 감사원의 혁신
- ⑯ 회계감사원 설치
- ⑳ 정부·지자체 감사직 독립청화

» 현황과 문제점

□ 시대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위에 굴림하여 미래문명을 전혀 준비함이 없이 과거 체제와 조직 이론에 기대어 망국적 경제 체제를 완전히 개조해야 함

» 목 표

□ 정부 지방 조직의 리모델링화

» 이행방법

□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어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망상적 통일정책과 중복 좌파적 성향의 투쟁을 종식시켜 사회불안 비용과 정치 일반 사회의 낭비적 좌파 성향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비용충당

» 이행기간

□ 2016년6월부터- 2020년6월까지

» 자원조달방안 등

□ 대북 퍼주기 예산 절감, 기업의 정치조직의 상납 비용 금지, 시민사회에 뿌리는 정부 지자체 사업 대행처리 중지, 낭비 전시행정 중지, 도둑질 당하는 경제활성화 예산 절감사업 시행으로 자원 마련

정책순위

4

컴퓨터(전산)선거·개표금지

정책분야 입법부

1. 입법 : 북진통일 비상시국 상태로 변환

- ① 여의도 국회를 미8군 주둔지역인 국립박물관과 교체
- ② 국회의원선출 지역구제 폐지, 정당권역별비례대표제로만 선출
- ③ 각종법률폐기위원회설치
- ④ 통일수도 명칭- 아사달
- ⑤ 통일정부 권력구조- 통일대통령 1인 임기10년-국민직접선거
- ⑥ 지방자치- 대통령남북총리임명제 각1인 임기5년
- ⑦ 국회 상·하 양원제

2. 선거관리위원회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 선거관련법 입법 거부권 행사권 부여
- ①-1 선거관리위원 중 현직 판사 검사 전현 정당원은 제외한다.
- ①-2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시도 급 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선거로 선출한다.
- ①-3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도우미 직은 무작위 국민동원제로 실시한다.
- ①-4 컴퓨터(전산)선거·개표금지, 선관위 독립적인 선거수사 및 기소권 부여
- ①-5 선관위직원 경찰 검찰 법원 선거범죄 묵인죄 5년 징역형 입법
- ①-6 각종노조, 위장당원, 각종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인 선거업무참여 처벌죄 신설

3. 대통령

- ⑫ 대통령이하 지방단체장 및 선출직 예비 후보자 상시 선거운동 허용
- ⑬ 대통령 탄핵사유 명문화, 5년 중임 허용, 뇌물성정책 형사고발죄 신설.
- ⑭ 대통령 지방단체장 국회 지방의회 정부예산 차별집행·뇌물성 처벌죄 신설

4. 통일헌법

- ⑭ 남한대통령 5년임기 중임제, 통일대통령 10임기 단임제 개헌
- ⑮ 통일정부 이원집정부제 및 내각제 가미 권력구조개편

- ⑯ 통일헌법제정
- ⑰ 대통령, 지방단체장, 국회의원 임기1년 후 해산권 허용

5. 대법원/헌법재판소

- ⑱ 대법원판결 현재심사권 부여
- ⑲ 현재재판소 구성은 대법관 및 30년이상 재직 법대교수로 임용제한
- ⑳ 헌법개정심사권부여

» **목 표**

- 북진통일, 흡수통일

» **이행방법**

-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져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망상적 통일정책과 중복좌파적 성향의 투쟁을 종식시켜 사회불안 비용과 정치 일반 사회의 낭비적 좌파 성향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통일 안보 국방 예비 비용으로 적립하여 사용함.

» **이행기간**

- 2016년6월부터- 2020년6월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대북 퍼주기 예산 절감, 기업의 정치조직의 상납 비용 금지, 시민사회에 뿌리는 정부 지자체 사업 대행처리 중지, 낭비 전시행정 중지, 도둑질 당하는 경제활성화 예산 절감사업 시행으로 재원

정책순위

5

보건복지재편

정책분야 보건복지1

1. 복지 : 보건보복부의 해체 및 전문화 조직 구성

- ① 보건복지부를 해체한다.
- ② 의료보험관리청을 설치하며 낭비적인 무상건강진단을 폐지한다.
- ③ 건강식품·식량자급종자 안전청을 설치한다.
- ④ 복지공무경제청을 신설한다.
- ⑤ 신약개발 및 대체의학청을 신설한다.
- ⑥ 국가병원·의료자원청 신설한다.

2. 여성

- ⑪ 가정보호, 여성성침해, 여성인권, 여성 노동력 착취하는 양성평등 제도하의 여성정책 개선
- ⑪-1 여성,가정, 폭력실종수사처 설립

3. 아동

- ⑫ 아동의 육아는 원천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어야 한다. 기업탁아소의무설치운영제
- ⑬ 무상복지를 지양하고 잉여인력 여성 노인 인력을 투입하고 보수는 국가가 지급하는 각종 복지 자금으로 충당한다.

4. 가정

- ⑭ 가정의 구성원은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권한이 있다.
- ⑮ 국가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에서 우선하여야 한다.
- ⑯ 국가는 하위계층에게 보살핌을 주어야하나 유노동 유임금제로 변환한다.
- ⑰ 국가는 가정의 육아 교육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노인

- ⑱ 대한민국을 건설한 노인을 위한 정책을 활성화 해야한다.
- ⑲ 복지센터에서 아동 여성 가정 교육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고 노임을 지급한다.
- ⑳ 노인 지식재산권을 국가가 매입하며, 노인의 재교육 재취업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한다.

» **목 표**

□ 북진통일, 흡수통일

» **이행방법**

□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져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망상적 통일정책과 중복좌파적 성향의 투쟁을 종식시켜 사회불안 비용과 정치 일반 사회의 낭비적 좌파 성향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통일 안보 국방 예비 비용으로 적립하여 사용함.

» **이행기간**

□ 2016년6월부터- 2020년6월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대북 퍼주기 예산 절감, 기업의 정치조직의 상납 비용 금지, 시민사회에 뿌리는 정부 지자체 사업 대행처리 중지, 낭비 전시행정 중지, 도둑질 당하는 경제활성화 예산 절감사업 시행으로 재원 조달

정책순위

6

국민연금, 공공연금, 의약연금

정책분야

보건복지 2

1. 의료, 의약, 한의, 대체의술

- ⑪ 대체의술을 허용한다

2. 국민연금 공공연금

- ⑫ 국민연금 공공연금 통합
- ⑬ 공공연금폐지

3. 첨단의료기술 합법화를 위한 의학제도 개혁

- ⑭ 의학신기술처를 설립한다.
- ⑮ 의과대학을 개편하고 의료인을 전부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한다.
- ⑯ 의료, 의약, 한의, 한약, 대체의료, 통폐합 한다.
- ⑰ 병의원을 모두 공공자원화 한다.

4. 의료인 육성

- ⑱ 첨단화하는 의료발전에 맞게 교육제도를 개편한다.
- ⑲ 연중시험제로 의료인을 다수 양성한다.
- ⑳ 공공의료와 사적의료 시설을 분리 운영한다.

» 목 표

□ 국민건강

» 이행방법

□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져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 사회 조직 일반의 일반 사회의 낭비적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의료제도를 개편한다.

» **이행기간**

□ 2016년6월부터- 2040년6월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의료보험 연기금등을 구조조정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정책순위

7

국가도 회사다. 잉여예산제 실시

정책분야 정치경제

1. 대한민국경제주식회사 국민주주배당금제 실시, 국가세계경제위기대응센터 설치
 - 가. 민족자본 민족은행 17개시도에 설립- 경제활성화대책,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시도농민 경제지원 대책
 - 나. 신용불량자 사면-신용불량자도 담보와 지식으로만 재활 대출을 받는다.
 - 마. 백화점세일기간 주차장 폐쇄 -교통정체 해결
 - 바. 정부규제 정책시행 대행업무 축소사. 공공 청사 축소
 - 아. 정당, 정치 중립의무 위반 시민단체 지원 배제
2. 국가세계경제위기대응센터 설치
 - 가. 남북한, 중국, 일본과의 경색국면, 유럽 및 서양사회의 경제위기에 따른 국민보호정책 수립
3. 정당조직폭력배 척결, 청탁인사, 개방허가제, 위원회공화국폐지, 행정조례축소
 - 가. 민족자본 민족은행 설립- 담보대출허용, 신용대출과 분리
 - 나.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책
 - 다. 신용불량자 사면-신용불량자도 담보 대출제도
 - 라. 정당제 조직폭력행정 뿌리 뽑는다
 - 청탁인사, 개방허가제, 위원회공화국폐지, 행정조례축소
 - 마. 부당감정 감정사 감정기관개혁과 검찰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 바. 집주인 공짜 아파트 공급 -재개발 재건축 적극지원
 - 사. 분양가 상한가 통제
 - 아. 불법주차공과금연체차, 세금기여자, 영세사업자, 생계곤란자, 각종 부담금 면제 사면조치

» **현황과 문제점**

- 낭비적 예산집행 / 신용제도, 소득증빙제도로
- 재산권행사제한, 연체자만 양산, 경제활동위축해소, 재산세 2%인하로
- 재산평가 현실화로 실질소득 증가, 부익부 빈익빈 정책 폐지

» **이행방법**

- 정책변경

» **이행기간**

- 2016년6월부터- 2020년6월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 구조조정

정책순위

8

교육제도개편

정책분야 교육

1. 교육제도

- 가. 단계적 교육제 폐지
- 나. 유아, 초등, 중등 교육 의무화, 고등학교폐지
- 다. 6년제 고등대학 직업교육제도 실시
- 라. ICT 직업교육, ICT인문역사교육, ICT인성법률교육
- 마. 교육자치제 폐지, 서울대학 및 문과대 폐지 기술과학개방대학원으로 개편
- 사. 법과대학 부활, 아. 대학 미수학자 대상 사시부활

2. 족보종친회청 설치, 고대역사연구원설치, 원구단, 장충단 복원

- 가. 종친회 공영화 재산제 실시, 1인1족보 지원
- 나. 족보 온라인 발급제도 도입
- 다. 종친회 협동조합 지원- 전통 세습 문화 사업화 지원
- 라. 전국성씨종친회 무상이용 빌딩 제공
- 마. 역사도서관 설치 사. 역사 시험 복원
- 아. 미래교육- 공공자산 사교육 서당화- 실제미래직업교육
- 자. 고학력실업자 퇴직자 미래직업 교육직 채용
 - 유아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교사, 대학 직업교육 교사제 도입 및 채용제도

3. 원아시아 원히스토리 고대역사연구원설치, 항구적인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고대역사연구원 설치

» 현황과 문제점

- 패권적인 국가 우월주의 민족우월주의 종교우월주의 타파하여 아시아의 시원의 역사를 연구하여 항구적인 아시아 와 세계 비폭력 평화 정착을 위한 연구소 발족이 시급함

» **목 표**

□ 전쟁을 향한 현실과 미래시대 대비

» **이행방법**

□ 동북아역사재단을 해체 개편한다.

» **이행기간**

□ 2016년6월부터- 2020년6월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문화재청예산전용, 동북아역사재단 재원을 사용함

정책순위

9

지방행정개혁

정책분야

정당지방행정

1. 시민 종교 사회

- 시민종교 봉사적 조직이 국가시설과 예산을 이용하여 이념전파 정당정치 종교 등의 선교를 목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아웃제 신설

2. 자유 민주주의 시민교육의 제도화, 성매매 자유촌 설치

- 가. 인신매매 납치 고용 강력 처벌
- 나. 성매매 개인사업자 부여
- 다. 위생증미소지자 -강력처벌
- 라. 성매매 금지법 개정 추진
- 마. 성매매 노임착취 강력처벌

3. 정당 및 지역패권주의

- 가. 정당원 또는 지지자가 지지대가로 행정허가 또는 사업에 불개입 조치
- 나. 국회, 국회의원 행정권행사에 불개입 원칙 확립

4. 중앙정부지방행정청

- 가. 국가사무지방자치행정에 위임업무폐지
국가사무는 중앙정부가 지방행정청을 설립하여 직접 수행한다.

5. 지방행정개혁

- 가. 지방시군구단체장 및 의원은 선출직폐지 전까지 정당가입 금지
- 나. 지방행정청은 복지 교통 등허가관리직 폐지하고 봉사조직으로 변환한다.

» 목 표

□ 점증하는 성폭력범 대비 정책, 무너지는 가정보호, 국회입법

» **이행방법**

□ 국회입법 및 공청회

» **이행기간**

□ 2016년6월부터- 2020년6월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행정조직 개편과 구조조정으로 모교달성/ 민간자본 참여

정책순위

10

대한민국만년역사연구원

정책분야 역사

1. 고대역사, 북진통일, 흡수통일 정책에 기여되는 부분

- ① 진보이념으로 무장된 대남통일 전선 정책을 무력할 수가 있음
- ② 아시아의 원류 역사를 통한 국가간 민족간 동질성 회복
- ③ 북한왕조 세습정권과 인간성 말살 정책, 독재정권 악습을 제거
- ④ 세뇌된 북한 지도층의 재교육으로 민족문화 동질성 고취
- ⑤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종말을 앞둔 시점에 새로운 문명 탄생을 모색
- ⑥ 살인적인 종교간 갈등을 해결
- ⑦ 인공지능 로봇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경제체제의 연구
- ⑧ 통일헌법 육법전서제정에 다문화 이념 수용
- ⑨ 해방전쟁에 동원되는 최소한의 살상을 수반 전쟁수행 방법연구
- ⑩ 이념간 국가간 문화간 이해 충돌을 해결할 다자간 동질성회복 방안 연구

2. 미래시대준비

- ⑪ 언제까지 화폐교환의 경제체제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
- ⑫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 남미 체제를 어떻게 비폭력평화 세계를 구축할 것인가
- ⑬ 인공지능에 인간성 및 인권을 집어넣을 수 있는가
- ⑭ 인공지능 시대에 맞서 인간의 먹거리와 놀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 ⑮ 세계인구는 폭발일로인데 어떻게 3000년 정도의 문명차이를 조정할 것인가
- ⑯ 인간 생명의 경시로 인한 종교전쟁 패권전쟁 부의 집중화 정책을 어떻게 완하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 ⑰ 독재경제체재와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독점적 노동착취와 부의 집중 현상을 해소할 연구
- ⑱ 인공지능시대에 인간 사회의 낙원은 가능한가

3. 이해충돌의 시대와 문명의 충돌시대 해결방안

- ①9 북한왕조 종북좌파와 애국자유주의 입각한 보수주의와 싸움 해결 방안
- ②0 남한 사회의 자유주의 자본주의와 북한의 독재 작당적인 민주주의 계획경제와 대한민국의 신진 세력인 작당적인 부패한 진보 보수 주의자에 의한 왜곡된 국가이념의 재확립의 필요성 및 해결방안으로서의 북진통일과 흡수통일의 당위성연구

» 목 표

□ 북진통일, 흡수통일, 역사연구, 미래연구

» 이행방법

□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어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망상적 통일정책과 종북좌파적 성향의 투쟁을 종식시켜 사회불안 비용과 정치 일반 사회의 낭비적 좌파 성향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통일 안보 국방 예비 비용으로 적립하여 사용함.

» 이행기간

□ 2016년6월부터- 2020년6월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동북아역사재단의 재편

가자! 평화인권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가자! 평화인권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과거청산은 건강한 한일 미래설계! 일본이 공탁한 강제징용 미불노임 4조원대를 일본으로부터 받아오겠습니다. |
| 2 | 자유왕래 통일대박!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은 연대! |
| 3 | 최저임금제는 탄력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
| 4 | 문화강국 대한민국! 춘천 중도 문화재를 보존하겠습니다. |
| 5 | 대학학자금 무상으로! 대학 학자금 이자는 국가가 부담해서 탕감하고, 학자금 관련 신용불량자는 당장 없애야 합니다. |
| 6 | 강제징용 유해를 디엠젯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강제징용 유해를 디엠젯(DMZ) 추모 평화공원에 안장하겠습니다. |
| 7 | 부자가 존경받는 나라! 비실명 스위스형 <국민생활 후원은행>을 만들어 서로 돕던 우리민족의 미풍양속을 되살리겠습니다. |
| 8 | 사법개혁으로 국민인권 보장!, 벌금 전과기록은 5년이 지나면 폐기!, 선거권18세! 피선거권 20세,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
| 9 | 소시민, 소소한 민생! <노인 무료 버스환승>을 시행하겠습니다. 광화문광장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
| 10 | 과도한 세금, 확 내리겠습니다!, 과도한 담배세! 3백프로인 담배세는 폐지하겠습니다. |

정책순위

1

과거청산은 건강한 한일 미래설계! 일본이 공탁한 강제징용 미불노임 4조원대를 일본으로부터 받아오겠습니다.

정책분야 통일외교통상

» 목 표

□ 강제징용 피눈물값으로 세워진 나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의 요청을 들어 억울함 없도록 보상하겠습니다.

일본이 공탁한 강제징용 미불노임 4조원대를 일본으로부터 받아오겠습니다.

평화인권당은 억울한 사람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억울함 없는 건강한 한일관계를 만들고, 민족 정체성을 세우겠습니다.

» 이행방법

□ 남북이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여 일본이 공탁한 미불노임을 받도록 추진.

» 이행기간

1. 받아오는 것 1-3년.
2. 남북이 반으로 나눈 후,
3. 10프로는 사회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전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나눠주고,
돌아가셨을 경우 동일하게 유족에게 보상하겠습니다.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본으로부터 받아서 배분.

정책순위

2

자유왕래 통일대박!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은 연다!

정책분야 통일외교통상

» 목 표

- 개성공단 재개하여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고,
금강산을 다시 열어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랠니다.
평화인권당은 이 땅의 어떤 전쟁도 반대합니다.

» 이행방법

- 북과 협의하여 5.24조치의 원인이 되었던 원인의 재발방지 등에 대해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이행기간

- 즉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 필요 없음.

정책순위

3

최저임금제는 탄력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책분야 노동

» 목 표

□ 최저임금제로 일자리가 늘고 임금이 늘 줄 알았지만, 어려운 고용주가 두 명 중 한명을 잘라 일자리는 더 줄어드는 현실. 대기업, 공기업.. 등은 최저임금제로 하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등은 자율계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법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으로 나간 기업은 돌아오도록 하여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평화인권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고, 시위도 할 수 없는 보통국민의 삶을 제도 개선으로 살피겠습니다.

» 이행방법

□ 관련 법 개정.

» 이행기간

□ 즉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 필요 없음.

정책순위

4

문화강국 대한민국! 춘천 중도 문화재를 보존하겠습니다.

정책분야 문화관광

» 목 표

□ 문화는 영토고, 역사며, 경제입니다.

찬란한 고대문화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막고 문화경쟁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춘천 중도에 우리 문화재를 파헤치며 짓고 있는 외국계 놀이동산은 대토(춘천역 앞 이전한 미군기지)에 지어, 지역경제도 살리고 우리 문화재도 살겠습니다.

평화인권당은 문화재를 지켜, 문화가 경제가 되는 미래세대를 챙기겠습니다.

» 이행방법

□ 문화재 점수 70점이 넘으면 개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90점이 넘어도 개발허가를 낸 문화재청의 과거 정권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외국계 놀이동산은 비어있는 대토에 짓도록 하여 지역경제도 살리겠습니다. 시행허가를 낼 수 있도록 바뀐 문화재관련법이 있다면 찾아서 바로잡겠습니다.

» 이행기간

□ 즉시

» 자원조달방안 등

□ 즉시 공사 중단하고 복구하면 되므로, 별도의 자원 필요 없음.

정책순위

5

대학학자금 무상으로! 대학 학자금 이자는 국가가 부담해서 탕감하고, 학자금 관련 신용불량자는 당장 없애야 합니다.

정책분야 교육

» 목 표

□ 국민 누구도 교육의 기회에 차별 받으면 안 됩니다. 대학학자금은 국가가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가 재정상의 이유로 당장 대학을 무상으로 보내줄 수 없다면, 우리 학생, 청년들이 학자금대출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몰리는 건막아야 합니다.

이자는 없애주고, 기 대출자는 탕감해주며, 학자금 관련 신용불량은 당장 없애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학자금 대출로 빚쟁이가 되고 있습니다. 빚을 갚다가 3개월을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현실.

평화인권당은 보통국민이 빚 없는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관련 법 개정

» 이행기간

□ 즉시

» 재원조달방안 등

□ 10만명 * 1,000만원 * 0.03 = 300억원 (1인당 30만원)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대학보조금에서 항목을 변경하여, 각 대학별로 학생 수만큼, 학생 재학 시에, 학교가 학자금이자는 해결하도록 함.

정책순위

6

강제징용 유해를 디엠젯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강제징용 유해를 디엠젯(DMZ) 추모 평화공원에 안장하겠습니다.

정책분야 통일외교통상

» **목 표**

□ 우리는 반만년 한 민족이고, 하나였던 조국에서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갔습니다. 가족 없는 무연고를 비롯한 강제징용 유해를 남북이 한자리에 모셔서 남북이 함께 성묘하고, 남북의 국민이 하나되게 합니다.

평화인권당은 당의 이익을 위해 싸우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누가 집권당이 되든, 민의를 반영했기에, 야당이 아닌 우당을 합니다.

평화인권당은 좌우를 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북측과 협의하여 이행함.

» **이행기간**

□ 1-3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사업자체로 재원을 조달하고, 필요시 국민모금으로 모금되는 만큼 실행하면 되므로 별도의 재원 필요 없음.

정책순위

7

부자가 존경받는 나라! 비실명 스위스형 <국민생활 후원은행>을 만들어 서로 돕던 우리민족의 미풍양속을 되살리겠습니다.

정책분야 재정경제

» 목 표

□ 금융실명제는 잘 한 일이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만,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입금할 때 1프로, 출금할 때 10프로를 보통국민에게 기부하는 비실명 가능 은행을 1개 만들어 국민이 서로 돕도록 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국부를 늘리겠습니다.

평화인권당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존경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 관련법 마련.

» 이행기간

□ 즉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사업 내 조달, 국가의 별도 재원 필요 없음.

정책순위

8

사법개혁으로 국민인권 보장!, 벌금 전과기록은 5년이 지나면 폐기!, 선거권18세! 피선거권 20세!,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정책분야 사법윤리

» 목 표

- 불필요한 전과기록 미삭제는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입니다. 벌금 전과기록은 5년이 지나면 폐기하겠습니다.
- 20세면 결혼도 합니다. 18세 선거권으로 학생 행복권을 반영했듯이, 20세 피선거권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직접 국정에 반영되게 합니다. 선거권 18세, 피선거권 20세! 로 보통국민의 소리를 국정에 반영합니다.
- 두 달 '구속'수사에 2번 검사를 만나고 나오면, 기업이 망하고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을 기본으로 하여 보통국민의 생활을 검찰, 경찰, 사법의 이름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보통국민의 권익을 지키겠습니다. 평화인권당은 무성의한 법을 바꿔 국민 편익을 도모합니다.

» 이행방법

- 관련법 개정 및 준수

» 이행기간

- 즉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 필요 없음.

정책순위

9

소시민, 소소한 민생! <노인 무료 버스환승>을 시행하겠습니다.
광화문광장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정책분야 행정

» 목 표

- 노인은 이 나라를 세웠고,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충분히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며 공경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광화문광장은 지금도 걷기에 충분합니다.
광화문광장 보도화는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입안되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나라 예산을 없애는 행정.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민생을 챙기고 국가 예산을 아끼겠습니다.
- 평화인권당은 보통국민의 민생이 목표입니다.

» 이행방법

- 관련법 개정

» 이행기간

- 즉시

» 재원조달방안 등

- 버스환승으로 인한 자금은 지방자치별로 소화.
강화화문광장 보도화 예산 절감.

정책순위

10

과도한 세금, 확 내리겠습니다!, 과도한 담배세! 3백프로인 담배세는 폐지하겠습니다.

정책분야 재정

» 목 표

□ 무려 세금이 300프로인 담배값.(재료비가 1000원이면 담배값이 4000원) 담배세 300프로는 부당하니 담배세는 폐지하고, 부가세10프로는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과다한 세금은 찾아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인권당은 보통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마련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관련법 개정

» 이행기간

□ 즉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 필요 없음.

가자환경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가자환경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탈이념·친환경·친경제 온-오프라인 캠페인 정책연대정당으로 한국정당사의 새지평 |
| 2 | 비닐플라스틱 쓰레기 100% '재활용' |
| 3 | 무본드 무라벨 페트병 100% 재활용 |
| 4 | 전국의 235개 120만톤 쓰레기산 100% 제거 |
| 5 | 수돗물 음용율 현 5%에서 50%로 제고 (OECD 수준) |
| 6 | 과대포장 OUT- 무포장 OK |
| 7 | 미세먼지 OUT - 기후변화 대응 |
| 8 | 바다살리기-아시아 및 태평양 연대를 통한 해양쓰레기 대청소 |
| 9 | 감염병 질환 예방 및 치료의 고도화 |
| 10 | 가자환경당 각지역 환경공약 |

정책순위

1

탈이념·친환경·친경제 온-오프라인 캠페인 정책연대정당으로
한국정당사의 새지평

정책분야 환경

» 목 표

- 창당과정에서부터 오로지 환경보호와 환경을 사랑하는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어 탈이념 친환경·저비용 고효율·범시민 親시장·쏘당원의 친구화·친환경 고소득의 정당을 지향한다.
-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당과 생명·생활 의제에 뿌리를 둔 의제별 당원모임, 그리고 청년당원들의 연합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모든 조직과 활동은 지구환경 살리기운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며, ‘가자 환경당’ 창준위발기 취지문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

» 이행방법

- 정당의 일상활동을 통하여 진행
- 생활 속에 녹아있는 실천방안 의제들을 발굴하여 전 시민 생활참여 활동

» 이행기간

- 정당의 일상 홍보활동으로 상시적으로 진행

» 재원조달방안 등

- 별도재원 필요 없음

정책순위

2

비닐플라스틱 쓰레기 100% '재활용'

정책분야 환경

» 문제점

- 대한민국의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장 치유하기 힘든 고질적 악성 쓰레기는 비닐 플라스틱 쓰레기 임
- 2018년 4월 1일 중국발 쓰레기대란 이후 환경부는 단 한가지도 효율적인 대책도 결과도 내어 놓지 못하고 있어 전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 실정임.

» 목표

- 쓰레기를 돈으로 만들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다.
 - 1) 핵심전략 : 쓰레기 발생량 보다 처리량이 많아야 한다는 것
 - 2) 쓰레기를 경제적 재화로 만들어 내는 발상을 전환이 필요.
예) 헌옷, 스티로폼, 고철 등은 재화로 바뀌어서 이제는 쓰레기가 아님
- 특히 가장 고질적인 비닐플라스틱쓰레기를 100% '재활용' 정책으로 대한민국 쓰레기 정책을 획기적으로 혁신한다.

» 이행방법

- 비닐플라스틱 쓰레기를 100% 재활용 할 수 있는 '환경기술'은 이미 잘 개발되어 있음. 이를 입법재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함.

» 이행기간

- 관련 법률 제정과 개정 : 제21대 국회 회기 기간 내에 추진 (2020년에서 2024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관련 법률 제정에 따라 재원 마련하여 시행.

정책순위

3

무본드 무라벨 페트병 100% 재활용

정책분야 환경

» 문제점

- 페페트병은 우수한 품질과 효능으로 인간이 만든 탁월한 발명품으로 인류의 생활향상에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인간이 이를 너무나 남용하고 있어 전세계의 생태계를 파멸시키고 있음.
- 더구나 대한민국(환경부)는 페트병에 라벨을 접착할 때, 유해본드로 접착하도록 ‘환경부고시’에서 강요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
 - 1) 고온의 양젯물로 장시간 세척하고 있어 2차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
 - 2) 잔류본드로 인해 고급의 섬유나 식품용기로의 사용 불가

» 목 표

- 환경부 고시에서 엉터리 규제 단서를 달아, 페트병 라벨을 유해본드로 접착하도록 정부가 강요하고 있는 악성 규제 철폐
- 무본드 절취선 라벨의 페페트병은 고가의 재화로서 중요한 자원이므로 페페트병을 고가의 재화로 재활용할 수 있게 입법화하여 쓰레기 대란도 해결하고 재활용시장과 영세민들의 기초소득 증대에 기여할 예정.

» 이행방법

- 페트병 라벨 관련 상위법안 개정- 페페트병 100% 재활용, 고급자원화

» **이행기간**

□ 관련 법률 제정과 개정 : 제21대 국회 회기 기간 내에 추진 (2020년에서 2024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관련 법률 제정에 따라 재원 마련하여 시행.

정책순위

4

전국의 235개 120만톤 쓰레기산 100% 제거

정책분야 환경

» 문제점

- 전국에 방치된 쓰레기산 235개의 120만톤 쓰레기터미는 국가의 수치이며 행정실패의 산물임.
- 특히 CNN발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 등은 충격적 현실임.
- 재활용이 어렵게 만들어진 제품은 분리수거장을 거치더라도 중국에는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해외에 불법 수출되고 있음.
- 이런 현실 속에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고있음.

» 목표

- 전국의 쓰레기산 등을 제거하고 관리하여 깨끗한 한국 이미지 형성

» 이행방법

- 1년내 전국의 쓰레기산 모조리 제거
- 재발 시 땅주인과 처리업자, 실사업자, 위탁자 등을 찾아내어 쌍벌처벌 강화.
- 향후 신설 쓰레기선별장은 신설 공공기관 옆에 설치하여 관리
 - 독일,일본 등의 사례 참조
- 의료폐기물, 산업폐기물은 발생부터 처리까지 처리이력제 실시
- 비닐플라스틱 등 악성쓰레기 재활용율 제고

» **이행기간**

□ 2020년에서 2024년 사이에 단계별로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시행하며, 중앙정부 2,000억원 초기 투입

정책순위

5

수돗물 음용율 현 5%에서 50%로 제고 (OECD 수준)

정책분야 환경

» 문제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직접 음용률 평균은 51% 수준임. 네덜란드가 87%, 스웨덴 86%, 스위스 62%, 칠레 60%, 호주 54%, 캐나다 46%, 일본 46% 수준으로 우리나라 음용률 5.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 현행 수돗물 음용율 5%는 수돗물 행정 불신분만 아니라 정부전체의 불신임.

» 목표

- 현행 수돗물 음용율 5%를 OECD수준(50%)으로 제고

» 이행방법

- 남한강 낙동강 등 취수원 전역의 주변 오염업체 철폐 및 폐수처리 고도화
- 수질검사 결과의 현실화, 고도화 가정의 수도꼭지까지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실제 송수관 신뢰도 제고
- 4대강 녹조라떼 개선과 방지책 수립
- 상수원 오염업체 처벌기준 상향
- 크레졸 정수방법 대신 탄소법 등 신기술 활용

» **이행기간**

□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지자체 별로 단계적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지자체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시행하면 별도 예산 필요 없음.

□ 중앙 예산의 경우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시행함.

정책순위

6

과대포장 OUT - 무포장 OK

정책분야 환경

» 문제점

- 현행 법령에서는 이미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품 판촉을 위해 과도한 추가 포장 등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
- 더구나 포장박스의 코팅처리로 재활용이 불가하여 포장박스 쓰레기를 양산하는 실정

» 목 표

- 과대포장을 금지하고 무포장 확대.

» 이행방법

- 패키징환경진흥법 제정 - 포장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법안 제정
- 3중포장 절대 금지, 과대포장 택배 시정
- 포장율 120% 초과 금지 및 위반시 현행 300만원 벌금의 상향
- 마트에서 (유럽형) 무포장시스템 도입
- 시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부직포 대체 : 태국 등의 사례)
- 재활용이 어려운 코팅종이 포장재 금지
- 다양하고 우수한 장바구니 개발 보급과 캠페인을 통한 범국민 의식개선활동

» **이행기간**

□ 2020년 ~ 2024년 1단계 준비 및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별도재원 필요 없음.

정책순위

7

미세먼지 OUT - 기후변화 대응

정책분야 환경

» 문제점

- 한국 인구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수준의 2배가 넘는 초미세먼지(PM-2.5)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남. 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음.
- 한국에서 WHO 권고치의 2배인 $20\mu\text{g}/\text{m}^3$ 이상 초미세먼지 농도에 노출된 인구 비중이 55.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2위인 칠레(42.5%)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음. 3~5위인 멕시코(20.7%), 폴란드(19.8%), 이스라엘(10.6%)은 한국보다 이 비율이 30%포인트 이상 낮았고 나머지 OECD 회원국은 한 자릿수에 그침.

» 목표

- 긴밀한 한중협력 추진, 친환경 에너지정책 추진
-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미세먼지 대책에 적극 노력

» 이행방법

- 대도시 건물옥상 공기 집진정화기 설치
- 초등학교 교실에 식물화단 등 설치
- 수소 및 전기자동차 대폭 지원
- 전기자전거관련 규제 철폐
-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1%에서 20%로 제고

- 원전의 안전성 강화- 수명초과 원전 폐쇄
- 화석화력발전소 폐쇄- 독일사례 참조
- 코로나19 등 공기감염 방지, 청소 청결
- 기후변화 대응, 지구온난화 대응

» **이행기간**

- 2020년 ~ 2024년 1단계 준비 및 시행
- 2025년 ~ 2029년 2단계 시행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별도재원 필요 없음.

정책순위

8

바다살리기 - 아시아 및 태평양 연대를 통한 해양쓰레기 대청소

정책분야 환경

» 문제점

- 해양환경정보포털에 따르면 2018년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95,632톤에 달함. 이중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쓰레기는 전체의 4%임.
- 또한 이웃나라인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등 해양오염은 현재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목 표

- 바다는 국경이 없고 경계가 없음. 아시아 및 태평양 연대를 통하여 해양쓰레기 대청소하고 깨끗한 바다살리기에 앞장서겠음.

» 이행방법

-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사반대
- 방사능 오염 없는 우리 바다 지키기
- 바닷가 고질적인 폐기물, 구조물쓰레기 제거 : 민관군 협력
- 전국민 바다살리기 축제화 → 일본보다도 훨씬 깨끗한 나라 만들기
-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메콩강)등 아시아 민관군 환경연대로 해양쓰레기 척결
- 태평양 연안국 및 UN연대로 태평양 쓰레기섬 제거- 고래살리기

» **이행기간**

□ 2020년 ~ 2024년 사이에 시행 완료.

□ 2020년에서 2021년 준비계획과 2022년에서 2024년 시행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별도재원 필요 없음

정책순위

9

감염병 질환 예방 및 치료의 고도화

정책분야 환경

» 문제점

- 사스,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 등 주기적인 감염병 질환이 발생과 확산이 팬더믹 현상으로 까지 이어져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음.
- 이러한 감염병 질환은 미래사회의 새로운 위협요인이며 글로벌 차원의 대응태세 마련이 요구되는 사안임.
- 사회적 종교적 신념과 집회가 오히려 공동체사회의 바이러스 감염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함을 경험

» 목 표

- 감염병 질환 전문연구기관 설치 및 진단센터 구축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개편하여, 더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태세 구축

» 이행방법

- 질병관리본부의 전문화 및 감염병 질환 전문연구기관 설치
- 공공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진단센터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의 조성 :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 정비

» **이행기간**

□ 2020년 ~ 2030년까지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관련법에 의거하여 재원마련.

정책순위

10

가자환경당 각지역 환경공약

정책분야 환경

» 목 표

(서울)

1. 미세먼지- 대형공기집진정화기 설치
2. 주택가 쓰레기 수거처리시설 고도화
3. 도심의 재개발지역 거주환경 개선

(부산, 경남)

1. 낙동강 수질살리기
2. 동천 등 도심하천살리기
3. 생곡, 창원 등 쓰레기처리장 정비

(울산)

1. 태화강 살리기
2. 노후 원전 폐기
3. 방사능폐기물 처리산업 지원

(제주)

1. 삼다수 유해본드 라벨접착 금지

2. 바다살리기
3. 쓰레기처리장, 소각장 정비, 난개발 방지

(인천, 경기)

1.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정비
2. 페트병 양젯물세척 처리시스템 정비
3. 수도배관 정비, 고도화

(대구, 경북)

1. CNN 발 경북의성 쓰레기산 완벽 제거
2. 염색공단 폐수정비
3. 감염병 연구소, 진단센터 설치

(충청지역)

1. 화력발전소 줄이기, 신재생에너지 확산
2. 쓰레기 소각장 정비
3. 쓰레기산 집중 제거

(강원)

1. 골프장 난개발 금지
2. 케이블카정책 민관협력 수립
3. 청정자연 관광특구 확대

» **이행방법**

□ 지역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

» **이행기간**

□ 2020년에서 2024년 사이에 지자체별로 단계적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지자체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시행.

□ 중앙 예산의 경우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시행함.

공화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화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사형제도 이행 |
| 2 | 핵무기 개발 및 핵무장 |
| 3 | 6.25전쟁, 월남전쟁참전수당 100%인상 |
| 4 | 택시기사 기본급 100% 인상 |
| 5 | 5,18 민주화 재평가 |
| 6 | 종북인사 북한이주법 |
| 7 | 성매매 합법화 |
| 8 | 복수당원제 |
| 9 | 지방자치 단체장 임명제 |
| 10 | 사교육 전면금지 |

정책순위

1

사형제도 이행

정책분야 사법윤리

» 목 표

□ 김대중 정권부터는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한때 사형수였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계속 사형집행을 거절하는 상태로 퇴임하여 그 이후 정권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사형집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잔인하고 엽기적인 강력살인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비인간적이고 비인륜적인 살인사건으로 국민들은 극심한 사회불안에 공포에 떨고 있다.

이에 국가대개조의 차원과 강력한 통치의 상징으로 하루속히 사형제도를 이행시킴으로써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부를 신뢰할 수 있으며 살인마에게는 경종을 울려주고자 한다.

역울하게 복역 중인 사형수는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되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된 묻지마 살인 등의 범인은 이기적인 이유로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간 흉악범이기 때문에 인정이나 인권에 연연하지 말고 사형을 집행해야한다.

» 이행방법

□ 사형제도 이행에 관한 법률제정

» 이행기간

□ 2020. 4월 - 2020. 10월

정책순위

2

핵무기 개발 및 핵무장

정책분야 국방

» 목 표

□ 현재 북한에서 저지르는 핵개발을 지켜 볼 수만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핵개발을 위하여 깔아놓은 거대한 원자력 기술을 추수할 때이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측면을 보면 원자핵공학 권위자들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보았을 때 최장 18개월 정도면 핵폭탄, 더 나아가 수소폭탄까지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원자료를 통해 핵연료와 핵융합에 필요한 핵심 물질인 삼중수소를 확보할 수 있고 한미원자력협정 재개정에 따라 완화된 재처리 능력 등을 고려 할 때 핵무기 개발 기술 확보는 어려운 게 아니다.

이에 자위적 핵무장, 거국적 핵안보 체재 구축, NPT탈퇴 등을 걸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한다.

» 이행방법

□ 핵무기 개발 및 핵무장에 관한 법률제정

» 이행기간

□ 2020. 1월 - 2020. 12월

정책순위

3

6.25전쟁, 월남전쟁참전수당 100%인상

정책분야 보건복지

» 목표

□ 6·25참전군인과 월남 참전군인의 참전수당을 100% 인상하겠다는 법률을 제정하겠다.

피와 생명을 담보로 조국을 지키고 국가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 낸 6·25참전군인과 월남 참전군인의 명예와 노후를 보장하는 현실적인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다.

지자체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통해 6·25전쟁과 월남전쟁에서 숨진 군인의 유족에게는 한 달 5만원의 명예 수당을 주는 것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유족에게는 매달 50만원의 수당과 생존 참전군인에게는 매달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6·25참전군인과 월남참전군인에게 고속도로통행료면제카드를 발급하겠다.

» 이행방법

□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수당 1,000% 인상에 관한 법률제정

» 이행기간

□ 2020. 4월 - 2020. 7월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사회복지 예산 중 우선 배정

정책순위

4

택시기사 기본급 100% 인상

정책분야 보건복지

» 목 표

□ 노동법이 적용안되는 유일한 현장이 택시업계이다

노동법이 유명무실하게 된 이유는 하위법인 택시법을 따로 두어 노예제도와 같은 사납금 착취행위를 정당화 하였다는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택시노동자는 회사원이 아니다. 사무직원들과 경영진을 먹여 살리는 일꾼이지만 그들은 택시노동자들을 한낱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현재 택시기사들의 기본급은 대체로 100여만 원정도 인데 이것은 각종수당을 붙인 것이고 거기서 4대보험과 어용노조 조합비로 20만 원 정도 빼면 실제 기본은 70여만 원 정도가 현실이다.

따라서 현실적 노동법에 의해 기본급 100%를 인상하도록 택시법을 개정하여 명문화 하여야 한다.

» 이행방법

□ 택시법에 관한 법률제정

» 이행기간

□ 2020. 1월 - 2020. 12

정책순위

5

5,18 민주화 재평가

정책분야

행정자치

» 목 표

□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평가가 상반되어 있어 이념간의 극한 대립으로 경제 발전에 발목을잡는 것을 단절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평가 절실히 필요하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측의 추천인 5인과 5.18폭동이라 측의 추천인 5인과 정부의 추천인 5인의 합의로 과학적인 검증을 한다면 사회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대통합의 대승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5.18에 대한평가가 나오도록 한다.

» 이행방법

□ 5.18 재평가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이행기간

□ 2020. 4월 - 2020. 12월

정책순위

6

종북인사 북한이주법

정책분야

통일외교통상

» 목 표

□ 해방이후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이념간의 극한 대립이 사회 갈등과 사회 분열 조장으로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는 것을 단절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 대화합의 대승적 이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념이 북한을 찬양하고 추종하는 사람을 신청자에 한하여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북한으로 이주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간의 기본 가치인 생활권과 삶에 관한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해 주고자한다.

» 이행방법

□ 종북인사 북한이주에 관한 법률제정

» 이행기간

□ 2020. 4월 - 2021. 4월

정책순위

7

성매매 합법화

정책분야 사법윤리

» 목 표

□ 자발적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며 생계형 성매매 종사자들을 위해 특정 구역 내에서는 성구매와 성판매를 모두 합법화해야 한다.

집창촌 여성들은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처우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개인의 인격권과 관련된 성관계의 내밀한 영역까지 국가가 형벌권을 가동 할 수는 없다.

특정 구역 내 성매매 합법화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성적 소외자들의 인간성 존엄과 성범죄 방지를 위해서라도 합법화 되어야한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성매매가 합법이며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 프랑스·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몇몇 나라에서는 성매매를 범죄로 간주하지 않고 알선·호객 행위 등만 금지하고 있다.

» 이행방법

□ 성매매 합법화에 관한 법률제정

» 이행기간

□ 2020. 1월 - 2021. 4월

정책순위

8

복수당원제

정책분야 정치

» 목 표

□ 복수당원제는 100%상향식 공천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대안 정책으로 유권자가 원하는 정당의 당원으로 입당할 때 둘 이상 정당당원으로 가입함으로써 국민의 심각한 나뉠 현상을 복하고 지역감정해소와 국민통합의 100%상향식공천의 목적이다.

정당의 경선문제를 국민여론조사로 하는 것은 불법선거가 된다고 본다. 소속된 정당의 경선을 해당지역구 국민에게 여론조사 하는 것은 여론조사에 참여했던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은 지지했던 후보가 공천이 되어 선거를 치를 경우에 선거제도에 따른 선거행사 때 당선 가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당경선을 위한 국민여론조사는 선거사무원이 아닌자가(여론조사기관 또는 소속정당) 선거운동을 하는 결과가 발생된다.

» 이행방법

□ 복수당원제에 관한 법률제정

» 이행기간

□ 2020. 4월 - 2020. 6월

정책순위

9

지방자치 단체장 임명제

정책분야 정치

» 목 표

□ 지방자치제도는 1948년 제헌헌법에 명시되고 우여곡절 끝에 1991년부터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이때는 단체장이 임명제였기 때문에 19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적 문제점과 운영상 문제점이 더 많다. 지방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이는 세금의 대부분이 국세이고 지방세 항목은 많지 않으므로 결국 중앙정부에 예산을 의존하고 나아가 행정사무까지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단체장을 인선함에 따라 다음 선거를 의식하여 실적 쌓기를 위한 전시성 행정을 하고 얼마 안되는 예산으로 보여 주기식 선심성 집행을 함에 따라 그 부담을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으므로 대통령 임명제를 시행해야한다.

» 이행방법

□ 지방자치 단체장 임명제 특별법 제정

» 이행기간

□ 2020. 1월 - 2020. 10월

정책순위

10

사교육 전면금지

정책분야 교육

» 목 표

□ 2014년 3월22일 “선행학습 금지법”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뿌리 깊은 학벌위주의 고질에 따라 대입경쟁에 의한 계층간 교육 양극화 현상은 여전하다.

학원이 선행 교육을 하는 것은 규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빠진 것에 이어 영어, 수학에 한해 방과 후 허용된 것에 이어 방과 후 전체과목에서 선행학습이 허용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관계자들 조차 졸속적인 법률 추진으로 인해 교육기관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바 다각적인 검토와 실효성을 판단해 법을 개정하여 사교육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각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오려 경제와 교육을 살리는 것은 물론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 이행방법

□ 사교육 전면금지법 제정

» 이행기간

□ 2020. 4월 - 2020. 12월

국가혁명배당금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국가혁명배당금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20세부터 1인당 매월150만원씩 국민배당금 지급한다. |
| 2 | 20세부터 1인당 긴급 코로나 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한다. |
| 3 |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
| 4 |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
| 5 |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지자체 폐지 |
| 6 | 수능시험 폐지, 중등과정 시험은 본인이 원하는 한 과목의 모의고사 점수로 |
| 7 |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매년 100조원 정도의 세수 증가 |
| 8 | 상속세 폐지, 36종류의 세금 1개로 통합 |
| 9 | 중소기업의 청년취업자에게 매월 10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 |
| 10 | 6.25, 월남 참전용사와 파독광부·간호사에게 각 5억원과 매월 300만원 지급 |

정책순위

1

20세부터 1인당 매월150만원씩 국민배당금 지급한다.

정책분야 민생

» 목 표

□ 배당혁명

- 1년의 국가예산에서 60%를 절약해 20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하여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전 국민이 중산층 이상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다.

» 이행방법

- 대한민국의 국민의 6단계 中 상류층, 차상류층, 중산층, 서민층, 빈민층에 한하여 20세이상 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 배당금 통장에 입금함.

» 이행기간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151석 이상 확보이후, 관련법 제정 또는 개정하여 2020년 5월부터 실시

» 재원조달방안 등

- 현재 국가예산 512조 中 60% 절약으로 300조 절감한다.
 - 지방세 폐지하고, 36가지 세금을 하나로 통합- 100조 세수 증가
 - 재산비례형벌금 실시- 100조 세수 증가
 - 상류층 탈세 방지- 200조 세수 증가
 - 특수사업자 500만명 신설- 100조 세수 증가
- > 예산절감과 세수증가로 매년 800조 확보

정책순위

2

20세부터 1인당 긴급 코로나 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한다.

정책분야 민생

» **목 표**

□ **생계혁명**

- 국가에서 6년마다 찾아오는 바이러스를 대비하지 못했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20세이상 1인당 긴급 코로나 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 되게 한다.

» **이행방법**

□ 대한민국의 국민 6단계 中 중산층, 서민층, 빈민층에 한하여 20세이상부터 1인당 1억원씩 지급함.

» **이행기간**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151석이상 확보이후, 관련법 제정하여 2020년 6월 실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양적완화 2000조

정책순위

3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정책분야 복지

» 목 표

□ 결혼혁명

- 결혼부를 신설하여 결혼 시 결혼수당 1억원을 지원하며, 주택자금 2억원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결혼공영제를 실시한다.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는 대신 미혼자들에게 매월 20만원의 연애수당을 주는 연애공영제를 실시하며, 남녀 결혼을 국가가 지원하여 망국적 인구감소를 막는다.

» 이행방법

- 결혼부 신설- 결혼수당 1억원 지원
- 결혼공영제 실시- 주택자금 2억원 무이자 지원
- 연애공영제 실시- 미혼자들에게 매월 20만원 연애수당 지원

» 이행기간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151석이상 확보이후, 관련법 제정하여 2020년 5월부터 실시

» 재원조달방안 등

- 현재 국가예산 512조 중 60% 절약으로 300조 절감한다.
- 지방세 폐지하고, 36가지 세금을 하나로 통합- 100조 세수 증가
- 재산비례형벌금 실시- 100조 세수 증가
- 상류층 탈세 방지- 200조 세수 증가
- 특수사업자 500만명 신설- 100조 세수 증가
- > 예산절감과 세수증가로 매년 800조 확보

정책순위

4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정책분야 복지

» 목 표

□ 출산혁명

- 출산시 1명당 5000만원의 출산수당 지급과 전업주부수당(아이가 10살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하여 세계 최저의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공영제를 실시한다.

» 이행방법

□ 출산공영제 실시- 출산시 1명당 5000만원 출산수당 지급

- 아이가 10살까지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 이행기간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151석이상 확보이후, 관련법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인구 1억명이 될 때까지 실시

» 자원조달방안 등

- 현재 국가예산 512조 중 60% 절약으로 300조 절감한다.
- 지방세 폐지하고, 36가지 세금을 하나로 통합- 100조 세수 증가
- 재산비례형벌금 실시- 100조 세수 증가
- 상류층 탈세 방지- 200조 세수 증가
- 특수사업자 500만명 신설- 100조 세수 증가
- > 예산절감과 세수증가로 매년 800조 확보

정책순위

5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지자체 폐지

정책분야 정치

» 목 표

□ 정치혁명

-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여 명에게 지급하는 세비 8544억원 등 비용 1조8000억원을 절약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다.
- 지자체 선거를 폐지하고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변경해 선심성 지자체 예산을 없애므로써 남은 금액과 선거예산 9000억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자체 의원들의 급여 7904억원도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 정당지원금제도를 폐지하여 매년 500억원의 정당지원금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 이행방법

- 국회의원의 수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으로 변경
- 지자체선거 폐지, 지자체 단체장 대통령 임명제·무보수 명예직으로 변경
- 정당지원금제도 폐지

» 이행기간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151석이상 확보이후, 관련법 제정 또는 개정하여 2020년 6월부터 실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추가예산 필요없음.
- 국회의원 수 100명 축소. 무보수 명예직 변경- 매년 1조8000억원 절약
- 지자체단체장 대통령임명제·무보수명예직으로 변경- 매년 약1조억원 절약
- 정당지원금제도 폐지- 매년 500억원 절약

정책순위

6

수능시험 폐지, 중등과정 시험은 본인이 원하는 한 과목의 모의고사 점수로

정책분야 교육

» 목 표

□ 교육혁명

-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중등과정의 시험은 본인이 원하는 한 과목의 6년간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이 결정되게 하며, 기타 과목은 수업만 받게 하여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지키고 사교육비를 줄인다.

» 이행방법

□ 수능시험 폐지

- 본인이 원하는 한 과목- 중등과정 6년간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결정
- 기타과목 : 수업만 받음

» 이행기간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151석이상 확보이후, 관련법 제정 또는 개정하여 실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추가예산 필요없음

-> 사교육비 절감

정책순위

7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매년 100조원 정도의 세수 증가

정책분야 경제

» 목 표

□ 사법혁명

-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함으로써 매년 100조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며, 전국의 교도소 한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여 낭비되는 죄수 관리비와 인건비를 절감함으로써 이를 20세 이상의 국민 전체에게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한다.

» 이행방법

- 재산비례 벌금형 실시(강력범죄 제외)
- 전국의 교도소 한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

» 이행기간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151석이상 확보이후, 관련법 제정 또는 개정하여 실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추가예산 필요없음
- > 매년 100조원 정도의 세수 증가

정책순위

8

상속세 폐지, 36종류의 세금 1개로 통합

정책분야 경제

» 목 표

□ 세금혁명

- 상속세를 폐지하여 해외자본의 토종기업의 흡수를 방지한다.
- 지방세를 폐지하고 국세로 통일하여 중앙통합관리로 예산낭비를 막는다. 36종류의 세금을 1개로 통합하여 매년 100조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상류층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매년 200조원의 세수가 늘어나며 이것을 국민배당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 1억원 미만의 소액증권 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여 증권거래를 활성화한다.
- 자동차 보유세, 등록세, 취득세, 주행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 자동차세 전부는 기름을 넣을 때 징수하고 15종의 자동차 관련 세금고지서는 모두 폐지한다.
- 세금포인트제도 실시- 세금 납부실적을 개인과 기업별 포인트로 적립, 자산화 한 뒤 높은 포인트를 가진 자나 기업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기업으로 추대한다. 세금포인트는 상속과 증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실패자나 개인파산, 부도기업이라도 세금포인트가 높은 자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특수사업자 신설로 매년 500만 명으로부터 100조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국민에게 지급한다.

» 이행방법

□ 상속세 폐지

□ 지방세 폐지, 36개의 세금을 1개로 통합

- 증권거래세 면제- 소액증권 투자자

□ 자동차세 전부(보유세, 등록세, 취득세, 주행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

- 기름 넣을 때 징수

□ 세금포인트제도 실시

□ 특수사업자 신설

» **이행기간**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151석이상 확보이후, 관련법 제정 또는 개정하여 실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추가예산 필요없음

-> 36가지 세금을 하나로 통합- 100조 세수 증가

-> 상류층 탈세 방지- 200조 세수 증가

-> 특수사업자 500만명 신설- 100조 세수 증가

정책순위

9

중소기업의 청년취업자에게 매월 10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

정책분야 복지

» 목 표

□ 취업혁명

- 중소기업의 청년취업자에게 매월 10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 또한 5년 이상 근무자의 창업 시에는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로 3억원을 지원하며, 청년취업은 국가책임제로써 취업할 때까지 생계비 지원한다.

» 이행방법

- 중소기업 취업자- 매월 100만원씩 3년간 지원
- 중소기업 5년이상 근무자- 창업시에는 무담보·무보증·무이자로 3억원 지원
- 청년취업- 국가책임제로 취업할 때까지 생계비 지원

» 이행기간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151석이상 확보이후, 관련법 제정 또는 개정하여 실시

» 재원조달방안 등

- 현재 국가예산 512조 중 60% 절약으로 300조 절감한다.
- 지방세 폐지하고, 36가지 세금을 하나로 통합- 100조 세수 증가
- 재산비례형벌금 실시- 100조 세수 증가
- 상류층 탈세 방지- 200조 세수 증가
- 특수사업자 500만명 신설- 100조 세수 증가
- > 예산절감과 세수증가로 매년 800조 확보

정책순위

10

6.25, 월남 참전용사와 파독광부·간호사에게 각 5억원과 매월 300만원 지급

정책분야 복지

» **목 표**

□ **보훈혁명**

- 6.25, 월남 참전용사와 파독광부, 간호사에게 각 5억원과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며 그들의 직계 가족에게는 월 300만원의 참전·애국수당을 지급한다. (본인 사망시에는 직계가족에게 5억원을 준다.)

» **이행방법**

□ **참전·애국수당 지급**

6.25, 월남 참전용사와 파독광부·간호사- 5억원과 매월 300만원 지급
(단, 본인 사망시- 직계가족에게 5억원 지급)

6.25, 월남 참전용사와 파독광부·간호사 직계가족- 매월 300만원 지급

» **이행기간**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151석이상 확보이후, 관련법 제정 또는 개정하여 실시

» **재원조달방안 등**

□ 현재 국가예산 512조 중 60% 절약으로 300조 절감한다.

□ 지방세 폐지하고, 36가지 세금을 하나로 통합- 100조 세수 증가

□ 재산비례형벌금 실시- 100조 세수 증가

□ 상류층 탈세 방지- 200조 세수 증가

□ 특수사업자 500만명 신설- 100조 세수 증가

-> 예산절감과 세수증가로 매년 800조 확보

국민새정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새정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여성 정치 참여 전략적 추진 |
| 2 |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를 위한 사회망 구축 |
| 3 | 저출산 연금제도 도입 |
| 4 | 청년 취업 사관학교 전국 확대운영 |
| 5 | 유통법 통합개정 발의 |
| 6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 |
| 7 | 신혼부부(청년주택)반값 공급 실현 |
| 8 | 새터민 정착지원 및 인권보호법 제정 |
| 9 | 소상공인 지원 정책 |
| 10 | 복지 사각지대 노인 지원 정책 |

정책순위

1

여성 정치 참여 전략적 추진

정책분야 재정경제

» 목표

- ① 모든 공직후보 여성 50%이상 공천
- ② 여성 후보 전략 공천 30%이상 의무제 도입
- ③ 여성의 인권증진과 양성평등을 위한 입법 지원
- ④ 남녀 임금격차 해소, 경력단절해소, 확보 방안 마련
- ⑤ 여성 일자리 창출, 행복 만들기, 재정 지원 입법화 추진

» 이행방법

1. 모든 선출직 후보, 여성 비율이 50%이상 공천을 국민새정당은 의무화 하겠습니다.
2. 모든 선출직 여성 전략 공천을 30% 이상 공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 근절대책과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망 시스템 확립을 하겠습니다.
4. 남녀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경력단절(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며,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이 되도록 법제화 하겠습니다.
5. 여성 가정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자리창출 및 4차 산업혁신 신성장동력의 “인재양성”으로 여성능력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용역 의뢰 예정

- 추후 보완

정책순위

2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를 위한 사회망 구축

정책분야 재정경제

» 목 표

- ①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와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제도화
- ② 장애인 의료비 지원 및 보장구 구입비 전액 지원
- ③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고용기회 확대정책 추진
- ④ 자립 생활지원 및 지역사회 재활 시설 확충

» 이행방법

1.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지원 정책 추진을 약속 하겠습니다.
2.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비 지원 및 보호장비 구입비를 전액지원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고용촉진 강화 및 직업재활시설 증설 및 생산설비보강 지원 시스템 확립을 하겠습니다.
4. 자립지원 강화 및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적으로 조기 확대 실시 되도록 법제화 하겠습니다.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용역 의뢰 예정
- 추후 보완

정책순위

3

저출산 연금제도 도입

정책분야 재정경제

» 목 표

- ①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 ② 20세 이상 남/여 의무 가입
- ③ 가입자 연금 국가 예산으로 50% 지원
- ④ 연금도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⑤ 다자녀 가구의 두자녀 이상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이행방법

- 1. 현재 국가예산 약 190조(2006년~2020년) 투입하면서도 감소되어 가는 인구증가율 근본적으로 해결 하겠습니다.
- 2. 국민 연금관리공단 부속별도 기금관리 기구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 3. 자녀를 초등학교 졸업까지 양육의 책임을 사회/국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시스템 확립을 하겠습니다.
- 4. 다양한 육아인프라 구축하여 저출산 원인인, 자녀양육 비용부담 해소하고 출산율 저하를 해결하겠습니다.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용역 의뢰 예정
 - 추후 보완

정책순위

4

청년 취업 사관학교 전국 확대운영

정책분야 산업자원

» 목 표

- ①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도입
- ② 18세 이상 취업을 위한 교육 희망자
- ③ 교육기간은 6개월 이상
- ④ 참여자 전원 수료 시까지 매달 150만원 지급
- ⑤ 조기 취업하면 취업 수당 지원
- ⑥ 교육 업종 다양화(컴퓨터응용, 특소용접, 헤어미용, 제과제빵, 사회복지, 요양보호사 등)

» 이행방법

1.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취업할 동안 생계비용을 국가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 취업 전 모든 청년은 임시직 대우로 생산적 복지를 위한 기금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3. 청년시절 모든 희망자들이 기능자격증을 소지하여 평생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4. 청년들이 직장이 없어 결혼을 미루고, 자녀양육 비용부담으로 저출산 원인인 출산율 저하를 해결하겠습니다.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추후 보완

정책순위

5

유통법 통합개정 발의

정책분야 산업자원

» 목 표

- ① 다단계판매, 방판판매 피해자 보호제도 도입
- ② 수당 35%이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폐지
- ③ 현행 다단계/방판법 통합하여 유통법으로 개정 입법
- ④ 쌍방 피해에서 상생관계로 발전
- ⑤ 직급간 소득 격차 축소

» 이행방법

- 1. 현행 다단계법(수당 35%지급)적용으로 종사자들의 합리적인 배당금 지급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2. 현행 제도에서 불법을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여, 유통종사자들이 즐거운 일터가 되도록 직접 판매 유통구조를 혁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3. 유통종사들 교육을 통하여, 유통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평생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 4. 품질 인증 과정을 통하여 생산 원가를 공개하고, 유통과정 축소로 발생하는 이득을 공동구매 공동판매를 통하여 소비자와 유통자가 공유하여 소득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추후 보완

정책순위

6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

정책분야 보건복지

» 목 표

- ① 장기요양기관 부정행위 처벌규정을 법제화.
- ② 국공립요양기관을 대폭 확충하여 표준운영방안 보급.
- ③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직무/자격증 교부의 내실화).
- ④ 기본급에 직급 수당 월50만원 이상 국가 보조.

» 이행방법

1.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용자에게서 받는 1년치 비용의 60,2%, 방문요양 서비스 기관은 86,4% 이상을 인건비로 써야한다. 그러나 규정을 지킨 기관이 10곳 중 23,7%에 불과함으로 처벌 규정을 법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장기요양기관 76,3% 임금 제대로 안 준다-매일노동뉴스-참조)
2. 정부가 국공립요양기관을 대폭 확충해 공공성이 담보된 표준운영방안을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 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확립을 하겠습니다.
4. 정부 보조금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소득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추후 보완

정책순위

7

신혼부부(청년주택)반값 공급 실현

정책분야 건설교통

» 목 표

- ① 토지 공영 개발방식으로 (원가 공영)
- ② 고도제한 폐지, 용적율 증가
- ③ 주택을 취득 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변경
- ④ 신혼부부 공급가격 80% 저금리 장기 용자 지원

» 이행방법

- 1. 도심지역 그린벨트에 지자체와 공영개발을 통하여, 공시지가로 토지비 원가 공급함으로 현 시세 분양가 반값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2. 특수 지역을 제외한 고도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증가하여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여 원가를 줄여 청년 주택을 반값에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3. 국가 주거문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 개념에서 주거 개념으로 변경하여 주택을 자산 소유권 개념에서 생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확립을 하겠습니다.
- 4. 자기 자금 20%(1억 미만)으로 장기 저리용자를 받아 청년주택구입을 실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추후 보완

정책순위

8

새터민 정착지원 및 인권보호법 제정

정책분야 통일외교

» 목 표

- ① 새터민 취업, 창업 지원 사업
- ② 탈북 청소년 및 취약계층 자녀 지원사업
- ③ 새터민 가정통합과 주거 지원
- ④ 새터민 여성 가장지원 사업

» 이행방법

1. 창업교육과 창업자금(무담보, 무보증)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이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학교 및 그에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하도록 심리치료를 지원하며, 반값주택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한 부모 여성가장의 소자본 창업을 지원하며, 창업교육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을 하겠습니다.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추후 보완

정책순위

9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정책분야 재정경제

» **목 표**

- ① 1인 이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 ② 4대 보험 지원 확대 정책 시행
- ③ 국가재난 또는 천재지변 시 휴업 또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정책
- ④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사 기장료 지원정책

» **이행방법**

- 1. 1인 이상 소상공인 창업을 위하여 창업교육 및 창업자금을 지원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세제혜택 지원을 하겠습니다.
- 2. 고용보험 및 4대 보험 지원 혜택을 1인 이상 소상공인에게 확대하여,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3. 지진, 코로나 발생 등 천재지변으로 휴업 또는 폐업 시, 실업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4.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사 기장료를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추후 보완

정책순위

10

복지 사각지대 노인 지원 정책

정책분야 보건복지

» 목 표

- ① 65세 이상 노인 세대 98만명 지원 제도
- ② 복지 사각지대 빈곤 노인층 지원사업
- ③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전혀 도움 받지 못하는 비현실적 지원 정책 개선
- ④ 국립 또는 시립 요양병원 확대 설립

» 이행방법

1. 65세 이상 빈곤 어르신 행복권 추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평생 교육 차원의 취미생활 및 치매교육등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 부양가족이 있어도 특별한 이유로(연락 두절, 능력 상실 등)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국립 또는 시립 요양병원을 확대 설립하여 저비용 고만족도 요양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을 하겠습니다.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추후 보완

국민참여신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참여신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국민을 주요 국정운영에 직접 참여시키는 정당 |
| 2 | 국회의원숫자를 200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고 임명직이나 선출직 공무원의 특권을 없애기, 지역구국회의원공천시 지역에 2년이상 실거주자 위주로 공천하기. |
| 3 | 국민참여신당은 노인복지와 영아복지를 함께 하며 노인에게는 기쁨을 영아와 아동에게는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
| 4 | 전직대통령의 전수조사를 통한 비리의 고리를 끊어내는 정당 |
| 5 | 일하고 싶어하는 '노인'과 '청년' 모두에게, 일자리를 100%제공하여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책을 펼치는 정당 |
| 6 | 국민참여신당은 어린이집 이상 교육기관에서 준법 정신과 인성교육 방공교육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
| 7 |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는 정당 |
| 8 |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미리미리 대비하는 혁신정책을 펼치는 정당 |
| 9 | 대학의 입학정원제를 졸업정원제로 바꾸는 정당 로스쿨제도를 바꾸겠습니다. |
| 10 | 국민화합을 위하여 살인자만 두고 전과기록이 있는 국민모두 전과기록 말소를 통해국정운영에 직접 참여시키는 정당 |

정책순위

1

국민을 주요 국정운영에 직접 참여시키는 정당

정책분야 정치

- 국민이 선거 때만 주인되는 이상한 나라에서, 선거후에도 민초가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 농민이 가장 잘살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중요한 국정운영의 방향을 결정할 때마다, 국민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국민투표”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 이처럼, 우리 『국민참여신당』은 주요 국정운영에 국민의 뜻을 직접 반영시키는 혁신정당을 지향합니다. 또한 준법과 인성을 중하게 여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책순위

2

국회의원숫자를 200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고 임명직이나 선출직 공무원의 특권을 없애기, 지역구국회의원공천시 지역에 2년이상 실거주자 위주로 공천하기.

정책분야 정치

-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정치인이 특권과 특혜를 가진다는것이 옳은것인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뭉쳐야 하고 먹이사슬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 지역구위원의 낙하산공천을 막고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순위

3

국민참여신당은 노인복지와 영아복지를 함께 하며 노인에게는 기쁨을 영아와 아동에게는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정책분야 복지

- 국민참여신당은 노인복지와 영아복지의 이원화된 잘못된 방법을 고치고 노인과 아동이 일인일부모체제로 노인에게 못다한 사랑을 부모가 없는 영아와 아동에게 더 행복한 복지로 미래를 밝고 희망이 넘치는 사회로 국민참여신당이 함께 할것입니다.
- 영아들의 외국입양제도를 중단시킬것입니다.

정책순위

4

전직대통령의 전수조사를 통한 비리의 고리를 끊어내는 정당

정책분야 정치

□ 전직대통령들의 수많은 비리를 재조명하고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어 국민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순위

5

일하고 싶어하는 ‘노인’과 ‘청년’ 모두에게, 일자리를 100%제공하여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책을 펼치는 정당

정책분야 복지

- 3종류의 일자리(민간일자리, 민간+공공 융합일자리, 공공일자리)가 조화롭게 제공되는 고용율 100%(스웨덴의 사례)의 고용정책을 펼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 ‘민간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의 ICT분야 전담부처를 만들어 대응하고, 또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의한 경쟁력 강화로 민간일자리를 대폭 확대시키겠습니다.
- ‘민간+공공 융합일자리’는 농어촌 스마트 영농에 의한 귀농 일자리 확충과 지역 관광산업 육성(산림치유산업, 해수치유산업 등)에 의한 농어촌 살리기 일자리를 대폭 확충시키겠습니다.
- ‘공공일자리’는 노인에게는 현재의 노인일자리를 대폭확충하고, 청년에게는 대학과 기업이 연계한 ‘대학 재학중 인턴형일자리’를 대폭확충하여 일과 학습이 병행되어, 미래의 불안이 없는 멋진 청년들로 키워내겠습니다.

정책순위

6

국민참여신당은 어린이집 이상 교육기관에서 준법 정신과 인성교육
방공교육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정책분야 교육

□ 세상은 이미 정답이 없는 세상이고 먹이사슬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을 통한
의무감과사명감으로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정책순위

7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는 정당

정책분야 의료

- 보건복지부를 보건분야와 복지분야로 쪼개어, 보건분야는 ‘국민건강증진부’로 확대 개편하여, 어떠한 질병이나 바이러스 공격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미리미리 구축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 이제 우리는 역병(신종바이러스) 사태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정책순위

8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미리미리 대비하는
혁신정책을 펼치는 정당

정책분야 노인복지

-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17년에 14%를 초과하여 '고령사회'로 분류되고 있으나, 인구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25년이나 2026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이미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국가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초고령사회가 국가의 모든 분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특히 노인부양비 부담 증가,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한 공공의료체계 붕괴위기, 국민연금고갈로 인한 세대 간 갈등, 저출산 문제로 인한 현 교육현장의 붕괴, 경제 저성장, 현재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 1위 지속 등이다.
-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눈앞의 인기를 좇지 않고 향후 100년 대계의 미래를 위해 과감한 혁신정책을 소신껏 펼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정책순위

9

대학의 입학정원제를 졸업정원제로 바꾸는 정당 로스쿨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정책분야 교육

- 노력하는 학생과 노력하지 않은 학생은 차별화가 되어야 하며,
- 일반국민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누구나 차별받지 않은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책순위

10

국민화합을 위하여 살인자만 두고 전과기록이 있는 국민모두 전과기록
말소를 통해 국정운영에 직접 참여시키는 정당

정책분야 법무

- 대한민국은 지금 위급한 상태를 맞고있습니다.
- 니편 네편으로 나뉘고 경상도 전라도로 나뉘고있습니다.
- 잘하든 못하든 내가 지지하지 않은 대통령은 적으로 치부하고있습니다.
- 우리는 이제 국가를 위하여 화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기독교자유통일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독교자유통일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자유권박탈법(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
| 2 | 낙태법 개정 및 생명보호법 제정 |
| 3 | 종교사학의 자율성 보장 |
| 4 | 탈북민 인권보호 및 통일인재 육성 |
| 5 | 동성애 법제화 반대 및 균형법 제92조의6(추행) 유지 |
| 6 |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헌법수호청 설립 |
| 7 | 젠더평등이 아닌 양성평등 실현 |
| 8 | 원전 강국 재가동 |
| 9 | 월남 파병 유공자 보상특별법 제정 |
| 10 | 출산·양육지원금 제도 신설 |

정책순위

1

자유권박탈법(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정책분야 정치

» 목표

□ 동성애·이단을 반대할 양심·표현·학문·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통하여 신앙의 자유 수호

» 이행방법

□ 「차별금지법」의 위헌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입법기관을 포함한 전문가 포럼 등을 개최하여 「차별금지법」시행 중인 국가들이 겪는 양심·표현·학문·종교의 자유 침해 실제사례 교육 및 홍보
- 영국의 Trayhorn v. The 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 사건
(2014년 5월 영국 교도소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구절 인용한 목사님에게 동성애 혐오발언이라는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경고 조치한 사건)
- 영국의 Miss Victoria Wastenev v. East London NHS Foundation Trust 사건
(물리치료사인 기독교인이 새로 입사한 무슬림 여성과 우정이 생긴 후 노예제에 대한 DVD와 무슬림 여성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연의 책을 선물하고, 무슬림 여성이 개인적인 문제를 말해오자 동의 후 기도해주었다는 것이 종교적 사유에 의한 괴롭힘으로 회사로부터 서면경고와 함께 정직 징계받은 사건)
- 캐나다의 Saskatchewan Human Rights Commission v Whatcott 사건
(2001년과 2002년에 캐나다의 공립학교 앞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고전6:9)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한 남성이 인권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캐나다 대법원이 동성애 반대하는 성경을 표현한 것은 증어범죄라고 판결한 사건)
-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v. Cathy's Creations, Inc. 사건
(2017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동성커플이 결혼식을 앞두고 제과점에 웨딩케이크를 주문하였으나, 제과점 주인이 신앙을 이유로 주문을 거부하자 동성커플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한 사건)

□ 「차별금지법」 입법저지 활동

- 「차별금지법」정부안, 국회의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입법감시 활동
- 발의시에는 모든 기독교 국회의원 및 한국교회와 연합하여 입법저지

» **이행기간**

□ 2020. 5. 30. ~ 2024. 5. 29.

» **재원조달방안 등**

□ 통상적인 의원활동으로 재원조달 가능

정책순위

2

낙태법 개정 및 생명보호법 제정

정책분야 보건복지

» 목 표

□ 생명을 지키는 낙태법(형법)으로 개정하고, 임신부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특별법 제정하여 생명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확립

» 이행방법

□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개정

-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자, 가장 약한 존재인 태아를 살인으로부터 보호하여 생명을 살리는 개정안 마련

□ 임신부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특별법(약칭:생명보험법) 제정

- 임신부가 임신갈등상황, 태아생명보호, 비밀출산 지원을 상담할 상담기관 설치·운영 규정
- 비밀출산 보호시설의 설치 및 지원 규정
- 낙태가능 의료기관의 지정·관리 규정
- 의사에게 낙태수술 거부권 인정 규정

» 이행기간

□ 2020. 5. 30. ~ 2020. 12. 31.

» 재원조달방안 등

□ 2020년 여성가족부 예산중 양성평등기금 4,486억 1,4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642억 1,400만원, 여성정책국 예산 757억 1,300만원, 권익증진국 1,157억 1,900만원 등 불필요한 사업 예산들을 삭감하여 재원조달

정책순위

3

종교사학의 자율성 보장

정책분야 교육

» 목 표

□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자율성 보장

» 이행방법

□ 「사립학교법」 개정

- 종립학교의 설립과 종교교육의 자유 보호규정 신설
-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2에도 불구하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가능한 예외규정 신설

□ 교육 바우처 실시

- 현재 교육기관에 지급 중인 정부 지원 교육비를 학부모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확보를 통한 자율성 보장

» 이행기간

□ 2020. 5. 30. ~ 2024. 5. 29.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재원으로 조달 가능

정책순위

4

탈북민 인권보호 및 통일인재 육성

정책분야 통일외교통상

» 목 표

□ 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은 탈북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통일인재를 육성하여 통일의 일꾼 양성

» 이행방법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 법률」 전면 개정

- 자활능력이 결여된 사각지대 탈북민인 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에 대한 실효적 복지지원대책인 한성옥 모자법 신설
- 탈북민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 신설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탈북자 위주로 조직 구성

□ 통일인재 육성방안

-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통일법제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통일법 전문가 양성
- 탈북민 기업인을 통하여 통일에 대비한 기업 및 시장경제를 이해한 통일경제 지도자들을 양성
- 통일된 북한의 행정구역 200개 시군에 자유주의를 전파할 탈북인사들 양성

□ 남북하나재단의 개편

- 남북하나재단을 정치적 영향력이 덜 미치는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탈북민 정착 및 자활지원 재단으로 명칭을 개칭
- 탈북민 정착 및 자활지원재단의 이사장, 사무총장을 비롯한 운영진은 물론이고 인력구성을 80%이상 탈북민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추진함.

□ 북한 인권법을 부활시키고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 자유화 및 민주화를 촉진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활동을 적극 지원

» **이행기간**

□ 2020. 5. 30. ~ 2024. 5. 29.

» **재원조달방안 등**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적극지원으로 재원조달 가능

정책순위

5

동성애 법제화 반대 및 균형법 제92조의6(추행) 유지

정책분야 정치/보건복지

» 목표

□ 동성애를 옹호하는 각종 법률, 조례, 정책 폐지를 통한 동성애 법제화 저지 및 균형법 제92조의6(추행) 유지

» 이행방법

□ 동성애 법제화 반대

- 동성애(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 폐지
-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는 각종 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저지하고 이미 제정된 조례들을 폐지하는 법률 제정
- 성(Gender)주류화, 성인지예산(31조, 2020년) 포함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상의 성평등(Gender Equality) 정책 폐기
- 각종 법률 및 조례상에 기재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회복

□ 군복무 중인 자녀를 동성애(항문성교)로부터 보호하는 균형법 제92조의6(추행) 유지

» 이행기간

□ 2020. 5. 30. ~ 2024. 5. 29.

» 재원조달방안 등

□ 통상적인 의원활동으로 재원조달 가능

정책순위

6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헌법수호청 설립

정책분야 안전

» 목 표

-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국가기관으로 '헌법수호청' 설립
- 헌법수호청을 통한 헌법질서 교란세력에 대한 감시 및 정보수집과 분석

» 이행방법

- (가칭)「헌법수호청법」 제정
 - 헌법수호청 조직 및 직무범위 규정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용제시
 - 대내정보활동은 '헌법수호청' 담당
- 헌법수호청의 대표적인 임무
 - 정보수집 및 분석과 평가
 - 국가방첩 및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국가안보 위해 방지
 - 보안감사를 통한 인적·물적 기밀보호 및 사회기간시설 보호(사보타주 방지)

» 이행기간

- 2020. 5. 30. ~ 2024. 5. 29.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인권위원회 폐지 후 2020년 예산 378억원으로 재원조달
- 국가정보원과의 직무조정으로 국가정보원예산 재배정

정책순위

7

젠더평등이 아닌 양성평등 실현

정책분야 교육

» 목표

□ 성해방 사상을 가르치는 젠더평등 또는 성평등교육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남녀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 출산, 생명의 가치 수호

» 이행방법

- 「양성평등기본법」에 ‘성별’에 관한 정의 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의 요건 신설
- 「양성평등기본법」개정으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 정책을 폐기하고, ‘출산주류화’ 또는 ‘출산영향평가’ 실시
- 성경적 가치관을 담은 성교육 교재편찬 및 성교육 교사 양성
 - 유치중등학교 단계별 성교육 교재 전수조사 및 전면 재개편
 - 교육부 주도 성경적 가치관 성교육 교사 양성과정 개설
- 여성가족부 사업 중 일부를 ‘생명존중 성교육 사업’으로 재편성
 - 각종 문화센터, 청소년센터에서 시행되는 성교육 교재 전수조사 및 전면 재개편
 - 성경적 가치관 성교육 교사 양성과정 이수한 교사를 통한 성교육 실시

» 이행기간

□ 2020. 5. 30. ~ 2024. 5. 29.

» 재원조달방안 등

□ 2020년 여성가족부 예산중 양성평등기금 4,486억 1,4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642억 1,400만원, 여성정책국 예산 757억 1,300만원, 권익증진국 1,157억 1,900만원 등 불필요한 사업 예산들을 삭감하여 재원조달

정책순위

8

원전 강국 재가동

정책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

» 목 표

□ 원전산업 정상화를 통하여 원전산업강국의 지위를 회복

» 이행방법

□ 현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이 도태 및 에너지 안보 위협

□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 중이던 신한울 3·4호기 및 추가건설 예정이었던 대진 1·2호기, 영덕 3·4호기 계획을 백지화

-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지로 인한 매몰비용은 약 7000억 원 추산

- 6기의 원전으로 예상됐던 수주 규모는 약 10조 원

□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 적자 가속화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11조 3467억 흑자 | 12조 16억 흑자 | 4조 9532억 흑자 | 2080억 적자 | 1조 3566억 적자 |

□ 원자력산업 고급인력의 공급 중단

- 2017~2018년 주요 원자력 전공 대학 취업률 현황

· 서울대 51.7% (2017) → 32.2% (2018)

· 한양대 52.9% (2017) → 34.5% (2018)

· 경희대 42.6% (2017) → 32.0% (2018)

· 제주대 50.0% (2017) → 36.8% (2018)

▶ 30% 초반대로 급감

- 외국 유학생들은 국내 복귀 포기
-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2019년 하반기 전공선택자 0명

□ (가칭)「원자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 월성 1호기 복구 및 원전 재가동
- 탈원전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기관 및 사업체에 대한 국가지원

□ (가칭)「탈원전정책을 통한 국가문란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법」제정

-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한 부여
- 진상조사위원회의 임명은 국회의장의 권한
- 진상조사위원회는 자료 수집 및 분석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

□ (가칭)「원자력산업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원자력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회의 전문위원회에서 결정

» **이행기간**

□ 2020. 5. 30. ~ 2024. 5. 29.

» **재원조달방안 등**

□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 (가칭)「탈원전정책을 통한 국가문란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법」예산 비용은 44억 정도 예상

정책순위

9

월남 파병 유공자 보상특별법 제정

정책분야 국방

» 목 표

□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

» 이행방법

□ 월남참전의 희생과 위훈을 기리고 후대에 이를 전승하기 위해 월남 참전기념일을 지정

□ 월남전쟁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정부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가칭) 「월남 참전유공자 보상특별법」 제정

- 2020년 2월 현재 월남 참전유공자의 수는 196,372명이며, 당시 정부는 파월 장병들에 대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10분의 1을 지급
-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산정이 필요. 이를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 월남전쟁 참전 군인 및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있던 자를 포함), 자녀, 손자녀, 부모 등 유족에게도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지급

» 이행기간

□ 2020. 5. 30. ~ 2024. 5. 29.

» 재원조달방안 등

□ 2020년도 성인지 예산 31조 7,963억원을 재배정하여 재원조달

□ 6.25 참전유공자에게 지급이 중단되는 재정을 재배정

정책순위

10

출산·양육지원금 제도 신설

정책분야 보건복지

» 목 표

-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 및 유지
- 모성의 출산·양육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근로 및 복지향상
- 대한민국이 현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 2.1명 유지

» 이행방법

□ 교육 및 홍보

- 혼인제도의 숭고함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교육 및 홍보
- 초중고에서 부모준비교육 의무화 실시
-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

□ 출산과 양육지원금 제도 신설

- 성인지 정책 폐지하여 확보한 성인지 예산 31조 7,963억원(2020년 기준)을 출산과 양육지원금으로 재배정
- 출산·양육 기간에 근로자 수준에 준하는 생계비 지원

» 이행기간

□ 2020. 5. 30. ~ 2024. 5. 29.

» 재원조달방안 등

□ 2020년도 성인지 예산 31조 7,963억원을 재배정하여 재원조달

기본소득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본소득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 원 기본소득 지급 |
| 2 | 데이터 배당 실시 |
| 3 | 민주주의 배당 실시 |
| 4 | 5대 공공·사회 서비스 확장 정책① - 무상 대중교통 실시 |
| 5 | 5대 공공·사회 서비스 확장 정책② - 무상 보육/돌봄 서비스 |
| 6 | 5대 공공·사회 서비스 확장 정책③ - 무상 교육 |
| 7 | 5대 공공·사회 서비스 확장 정책④ - 무상 의료 및 공공병원 확대 |
| 8 | 5대 공공·사회 서비스 확장 정책⑤ - 공공임대주택확장 |
| 9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법' 제정 |
| 10 | 공공사회정책 확대를 위한 세제개편 |

정책순위

1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 원 기본소득 지급

정책분야 재정경제

» **목 표**

□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 원 기본소득 지급

- 자동화와 줄어드는 일자리 속에, 일자리 중심의 선별적 복지체계는 사각지대만 늘림, 새로운 대안이 필요
- 기본소득은 공통 부에 대한 시민의 분배에 대한 권리
- 월 60만 원은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약 52만원)에 준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 기준으로 지급

» **이행방법**

□ 기본소득법을 국회에서 입법화

- 기본소득법 입법화 이후,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 '기본소득위원회'가 매년 기본소득 지급액수 조정

» **이행기간**

□ 2020년 매월 60만 원부터

- 매년 물가상승률, 중위소득 등 최소 생계비 기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지급

» **재원조달방안 등**

□ 시민재분배기여금

- 모든 소득에 15% 부과
- EITC(근로장려세제) 등 선별적 복지예산 통합

□ 탄소세, 핵발전 위험세 부과

- 탄소배출량 1환산톤 당 10만 원 씩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부과
- 핵발전 1kwh 당 60원의 핵발전위험세 부과

□ 토지보유세 부과

- 모든 민간 소유토지에 1.5%씩 토지보유세 부과

정책순위

2

데이터 배당 실시

정책분야 재정경제

» 목 표

□ 데이터 배당 실시로, 미래사회의 데이터 주권확보

-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경제로 산업전반이 이동
-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일어나는 시기
- 빅데이터를 통한 이윤에 대한 국민의 공유지분권을 확보

» 이행방법

□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공유기금' 구성

- 주식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가총액의 1% 환수하여 데이터 배당 실시 (최대 10%까지)
- '빅데이터공유기금'은 데이터배당을 위한 기금마련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실행 및 감시 역할 진행 {ex. 유럽연합의 GDPR(개인정보보호법안)}

» 이행기간

□ 2020년 '빅데이터공유기금' 구성 및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세부안 마련

□ 2021년 본격적인 실시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공유기금' 구성

- 주식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가총액의 1% 환수하여 데이터 배당 실시 (최대 10%까지)

□ 다국적 플랫폼 기업에 대한 초국가적 합의 구성 및 이익환수

정책순위

3

민주주의 배당 실시

정책분야 정치

» 목 표

□ 민주주의 배당 실시로 아래로부터 정치개혁 실시

- 일정 소득 이상인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치자금세액공제는 불평등한 제도
- 보수양당 중심의 국고보조금 혁신
- 국민 모두 정치참여 가능한 방안

» 이행방법

□ 현행 정치자금세액공제 폐지

□ 매년 10만 원 쓰지않으면 사라지는 민주주의 배당액 지급

- 정당후원에 제한 두는 금액이고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짐.

» 이행기간

□ 2021년부터 실시

- 정치자금세액공제 제도 폐지이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고보조금과 선거보조금, 선거비용 보존 등의 비용 조정

□ 국가 일반재정으로 지급

정책순위

4

5대 공공·사회 서비스 확장 정책①

- 무상 대중교통 실시

정책분야 건설교통

» 목 표

- 무상대중교통의 전면적 실시로, 모두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
 - 전국 시내·광역버스·지하철 전면 무료화
 - 버스 의무 최소 노선제 실시, 산간·벽지 교통인프라 부족 지역 '100원택시' 실시
 -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최적화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 이행방법

- 전국 시내·광역버스·지하철 전면 무료화
 - 공공운영 대중교통, 민간운영 대중교통의 재정·운영 방식 개입
- 버스 의무 최소 노선제, 산간·벽지 교통인프라 부족 지역 '100원택시' 실시
 - 적자 노선 임의 폐지 등으로 인한 불균형 문제 해소
 - 공공데이터 활용한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전국 교통복지 실현

» 이행기간

- 2020년
 - 공공운영 대중교통, 민간운영 대중교통의 재정·운영 방식 검토
 - 기준미달 시 정부에서 인수
 - 지자체별 교통공공데이터 공유
- 2021년
 - 열악한 교통인프라 중심으로 우선 무상대중교통실시

□ 2022년

- 서울 등 전국적 확대 실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소득공제/세액공제 전면 폐지 후 추가된 재원 사용

□ 기업의 법인세율 최고구간 신설

정책순위

5

5대 공공·사회 서비스 확장 정책②

- 무상 보육/돌봄 서비스

정책분야 보건복지

» 목표

□ 전면적 무상 보육/돌봄 서비스 도입으로, 모두를 위한 돌봄 체계로

- 무상 보육/돌봄 서비스 실시
- 국공립 보육 시설 확장 및 사립 보육시설 공공성 강화
- 국공립 돌봄 서비스 및 시설 확장
- 보육/돌봄 서비스 노동자 노동조건 제고

» 이행방법

□ 무상 보육/돌봄 서비스 실시

- 공공 보육/돌봄 서비스 기관 및 민간 서비스 기관 재정 및 운영 검토 및 개입
- 민간 운영을 공적체계로 편입하여 '시장실패'로 인한 고비용 해소

□ 국공립 보육 시설 확장

- 민간 대비 국공립 보육시설은 1/5 수준, 매년 50%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운영 검토를 통해 기준 미달인 사립보육시설은 인수하여 국공립으로 전환

□ 공공 돌봄 시설 및 서비스 확장

-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금 확충
- 공공 운영서비스기관은 1% 내외, 대폭적인 공공운영서비스기관 확충

» 이행기간

□ 2020년 부터

- 민간운영 시설/서비스 제공기관 재정·운영 방식 검토
- 기준미달 시 정부에서 인수
- 공공 보육/돌봄 서비스 대폭 확장실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소득공제/세액공제 전면 폐지 후 추가된 재원 사용
- 기업의 법인세율 최고구간 신설

정책순위

6

5대 공공·사회 서비스 확장 정책③

- 무상 교육

정책분야

교육

» 목 표

- 전면적 무상 교육 실시로, 모두를 위한 교육체계를
 - 대학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시 및 학자금 부채 탕감
 - 국공립 대학 확충, 공영형 사립대학 및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확대

» 이행방법

- 대학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시 및 학자금 부채 탕감
 -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41.5%에 불과
 - 절반 이상 등록금 지원 받는 비율은 13% 내외
 - 학자금 부채는 약 1.1조원 (2018)
- 국공립 대학 확충, 공영형 사립대학 및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확대
 - 국공립대학 29개소, 사립대학은 154개소
 - 공영형 사립대 확충 및 국공립대학 대폭 비율 확대
 - 대학간 통합네트워크 구축으로 대학 서열화 해소

» 이행기간

- 2020년 부터
 - 국공립 대학, 사립 대학 재정·운영 방식 검토
 - 기준미달 시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
 - 무상교육 실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소득공제/세액공제 전면 폐지 후 추가된 재원 사용
- 기업의 법인세율 최고구간 신설

정책순위

7

5대 공공·사회 서비스 확장 정책④

- 무상 의료 및 공공병원 확대

정책분야 보건복지

» 목 표

□ 전면적 무상 의료 실시 및 공공병원 확대로, 모두를 위한 의료체계를

- 공공병원 확대를 통한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구조 개혁
- 전국민 주치의제도 실시
- 전면적 무상의료 실시

» 이행방법

□ 공공병원 확대를 통한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구조 개혁

- 소수 대학병원과 다수 중소병원으로 이분화된 현행 구조를 거점별 10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 신축 또는 통합 추진
- 신·증축 또는 중소병원의 통합과정을 통해 공공병원 비율을 30%수준으로 확대

□ 전국민 주치의제도 실시

- 지역의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단위 수준에서부터 장애인, 만성질환자, 노인, 영유아, 아동 등 연령별, 집단별 통합적 주치의제도 모델 마련
- 주치의제도 정착을 위한 일차의료시설 금융지원 및 지불보상단위 규격화

□ 전면적 무상의료 실시

- 가계 파탄의 원인으로 의료비 부담이 18% 차지 (3위)
- 공공병원확대와 주치의제도 확립을 바탕으로 질 좋은 무상의료 실시

» 이행기간

□ 2020년 부터

- 공공병원 확대를 통한 민영 중심 의료공급구조 개혁

□ 2021년 부터

- 전국민 주치의제도 실시
- 전면적 무상의료 실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소득공제/세액공제 전면 폐지 후 추가된 재원 사용

□ 기업의 법인세율 최고구간 신설

정책순위

8

5대 공공·사회 서비스 확장 정책⑤

- 공공임대주택확장

정책분야

건설교통

» 목 표

□ 전면적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모두를 위한 주거복지를

- 공공임대주택 확장(6.8%에서 20%까지)
- 공공임대주택 선정기준 개정

» 이행방법

□ 공공임대주택 확장(6.8%에서 20%까지)

- 전체 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은 6.8% (OECD 평균 13%)
- 주택보급률 102.6% 자가 보유율 59.9%
- 신규공급대신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10년 이내 20% 달성

□ 공공임대주택 선정기준 개정

- 남녀결함으로 인한 가족 중심으로 설계되어있는 선정기준 개정
- 다양한 가족형태들이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준 마련

» 이행기간

□ 2020년

- 2020 정부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예산안 16조 편성 (8-10만호 목표)
- 신규공급 방식보다 저렴한 기존주택 매입 방식으로 편성

□ 2021년 부터

- 보다 확대된 예산으로 매년 25만호(전체주택중 1.3%) 공공임대주택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소득공제/세액공제 전면 폐지 후 추가된 재원 사용

□ 기업의 법인세율 최고구간 신설

정책순위

9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법' 제정

정책분야 여성

» 목표

□ '성평등임금법' 제정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 한국 성별임금격차 34.6% (OECD 성별임금격차 통계 이래 16년째 1위)
- 경력·고용 단절 여성에 대한 고용을 이상의 성별임금격차, 직장내 성차별 문제 해소 필요

» 이행방법

□ '성평등임금법' 제정

- '성평등임금위원회' 구성을 통한 성별임금체계 심사 및 당해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최저선구축 (34.6% -> 최소 OECD 평균 14.1%)
-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성별임금격차 현황 공개
- 산업별, 직종별 성별 임금 격차 통계 구축 및 고시
- 동일노동-동일임금 규정 명시

» 이행기간

□ 2020년 국회 '성평등임금법' 제정

□ 2020년 '성평등임금위원회' 구축

- 매년 최저 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 기업별, 산업별 강제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 일반재정으로 충분히 조달 가능

정책순위

10

공공·사회정책 확대를 위한 세제개편

정책분야 재정경제

» 목 표

□ 세제개편을 통한 공공·사회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 GDP 대비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의 공적 지출은 11.1%(OECD 29개국 중 29위, OECD평균 20.1%)
- 한국의 재분배 시스템은 소득감면·세액공제·소득공제 방식으로 대부분 진행, 하지만 이는 저소득층보다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임
- 소득공제·세액공제는 본디 소득재분배를 목표로 하지 않고 특정활동을 유도하는 것이나, 재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 다른 인센티브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함.

» 이행방법

□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없앤 과세표준에 따른 추가 과세

□ 법인세율 최고구간 신설

- 현행 200억 원 초과가 법인세율 최고구간
- 개편안 1000억 원 초과에 대한 법인세율 최고구간 신설

□ 추가 마련된 재원은 공공·사회서비스 무상 및 확대 정책에 사용

» 이행기간

□ 2020년 세제 개편안 국회 통과

□ 2021년 개편한 세제안을 바탕으로 무상 공공/사회서비스 전환을 위한 목적기금으로 사용

» 자원조달방안 등

□ 정확한 세무조사를 위한 용역·연구비용 추가는 국가일반재정에서 사용

남북통일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남북통일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7070 국민 기본행복권 보장 지원정책 |
| 2 | 모든 근로자 정규직화 및 6시간 노동제 |
| 3 | 대학 등록금 전액 국가 지원정책 |
| 4 | 국민건강 의료보험 적용 전 분야 확대 정책 |
| 5 | 북한주민 직접돕기 통일준비정책 |
| 6 | 이북5도 위원회를 '평양정부 9도위원회'로 확장개편 정책 |
| 7 | 부대통령 지명 통일준비법 제정 |
| 8 | 북한인권법 시행 정책 |
| 9 | 남북하나재단, 하나원 구성인원 50% 탈북민 채용정책 |
| 10 | 실향민 이북지역 재산권 인정정책 |

정책순위

1

7070 국민 기본행복권 보장 지원정책

정책분야 행정자치

» 목 표

□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 질 권리가 있다.

- 월 소득 300만원 이하의 모든 국민에 한해 월 기초소득 70만원, 기초주거비 70만원 지급해 국민 기본행복권을 보장한다.

» 이행방법

□ ‘국민기본행복권 보장법’을 입법화

- ‘국민기본행복 보장위원회’ 관리, 감독 기구를 출범.
- 각 시,군, 도청에 ‘기본행복 보장과’를 신설하여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제도화 한다.

» 이행기간

□ 2021년 1월부터 매월 지급

- 2020년 6월 ~ 12월 입법화 및 관리 감독기구 출범.

» 재원조달방안 등

□ 가변소득세 부과

- 3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수입에 따라 10%~30% 가변소득세를 부과하여 재원 마련

정책순위

2

모든 근로자 정규직화 및 6시간 노동제

정책분야 노동

» 목 표

-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하는 시대에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의 차별성과 8~12 근로시간의 근무환경은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
- 직업의 차별이 없이 근로하는 모든 노동인을 정규직화 하여 일용직과 계약직을 전면 금지하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6시간제화 한다.

» 이행방법

- 현 '노동법'을 개정, 6시간 노동제 법문화 하여 세계최초 6시간 노동제 실시
- '일용직, 계약직 금지법' 입법화

» 이행기간

- 2021년부터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현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예산안에서 조달.

정책순위

3

대학 등록금 전액 국가 지원정책

정책분야 교육

» 목 표

□ 대학공부는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대학진학을 포기거나 중퇴하는 학생들 의외로 상당히 많다.

- 이 정책은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에게 초기 입학등록금 100%를 국가가 부담하며, 진학 등록금은 B이상의 학점을 맞은 학생에 한해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 등록금 면제 정책을 실시하면 교육시장의 혼란과 파동을 야기할 수 있고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기에 면제 정책이 아닌 국가지원정책으로 교육시장 도 살리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는 정책이다.

» 이행방법

- ‘등록금 국가지원 보장법’ 입법화
- ‘대학등록금 지원 보험 공사’ 설립하여 대학등록금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시스템 마련
- ‘국민 의무교육 보험법’ 입법화

» 이행기간

- 2021년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모든 가정들에 월 만원의 국민 의무교육보험료납입 10년제 실시.

정책순위

4

국민건강 의료보험 적용 전 분야 확대 정책

정책분야 보건복지

» 목 표

□ 한국의 공공의료 서비스는 전 세계 OECD 국가들의 평균공공의료수준이 75%를 넘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 국내 전체 의료기관중 국공립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 공공 병상 수는 10%수준이다.
- 이 낮은 수치의 공공의료서비스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과의 공공의료서비스 불평등을 만들어 내고 있다.
- 또한 의료보험 보험적용이 안 되는 약과 의료치료들이 많아 치명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들에게 병마의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도 함께 주고 있다.
- 국민건강 의료보험 적용 전 분야 확대 정책은 의료시장도 지키면서 국민 부담도 줄이는 정책으로써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이행방법

□ 국공립 병원 확대

□ 국민건강의료보험 적용분야를 모든 분야로 확대 및 한의원 치료까지 포함

» 이행기간

□ 2020년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예산으로 조달

정책순위

5

북한주민 직접돕기 통일준비정책

정책분야 통일외교, 통상

» 목 표

□ 통일부 대북지원단체는 현재까지 137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다.

- 이렇게 많은 단체가 남북협력기금을 받아 대북지원을 하고 있지만 북한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은 현재까지 이루어지 않고 있다.
- 이들이 지원한 대북지원은 오히려 독재자 김정은의 은혜로 둔갑해 북한정권 강화에 이용되고 있다.
- 북한독재정권을 지원하면서 북한주민을 지원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 해서 북한주민에게 직접 도움이 가는 대북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북한주민들도 한국정부의 지원을 직접 받아 통일의 필요성 느낄 수 있는 통일준비 시스템을 구축한다.
- 이산가족들이 이북지역에 있는 가족, 친척, 친우들에게 재정, 물품 등으로 선지급 지원을 하게 되면 확인 가능한 입증자료 제출 후 정부가 지정한 은행에서 후 지급을 하는 시스템 마련한다.

» 이행방법

- ‘북한주민 직접돕기 법’ 입법화
- ‘북한주민 직접돕기 은행’ 설립
- ‘북한주민 직접돕기 위원회’ 출범

» 이행기간

□ 2020년 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가 마련한 남북협력기금 안에서 마련

정책순위

6

이북5도 위원회를 '평양정부 9도위원회'로 확장개편 정책

정책분야 행정자치

» 목 표

- 북한지역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해당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 행정 조직으로서 이북5도청을 1949년에 만들었다. 비록 행정 구역이나 주민들에게 행정적인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더라도 상징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또 한국의 통일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한 행정 조직으로서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다.
- 제정 연도로부터 70년 지난 지금 이북지역은 과거의 5개의 행정구역에서 9개 행정구역으로 늘어났다. 지금의 '이북5도 위원회'는 과거의 유산이며 현재의 이북지역 행정구역과 맞지 않다.
- 통일시기 불러오게 될 이북지역 행정의 혼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북5도 위원회'를 조속히 개편해야 하며 지금의 이북지역 실정에 맞게 '평양정부 9도민 위원회' 명칭도 변경해야 한다.

» 이행방법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및 변경
- 이북5도 위원회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0 년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한 예산안에서 조달

정책순위

7

부대통령 지명 통일준비법 제정

정책분야 정치

» 목 표

□ 대통령이 이북지역 출신을 부대통령으로 지명하는 통일준비법을 제정하여 통일시 일어나게 될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며 이북지역의 빠른 정치적 안정을 마련하자는데 있다.

» 이행방법

- 부대통령 지명 통일준비법 제정
- 이북지역 및 대북관련 모든 행정 총괄 및 통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장겸임

» 이행기간

- 2020년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통일준비기금' 조성
- 5% 통일준비세 조성

정책순위

8

북한인권법 시행 정책

정책분야 통일외교, 통상

» 목 표

-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은 황우여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대한민국 17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18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 북한 식량 지원에 관해서는 '조건 없는 지원'이 아닌 '투명성과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식량이 군량미 등의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아울러 외교부 산하에 북한인권대사 임명, 통일부 지도를 받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및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6년 3월 2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3월 3일 공포되었다. 북한인권법 시행은 2016년 9월 4일인데 북한인권기록센터는 9월 28일날 출범했는데 아직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되지 않았다.
- 현재 식물법이 되어버린 '북한인권법' 시행을 가속화 한다.

» 이행방법

- 외교부 산하에 북한인권대사 임명
- '북한인권재단' 출범
- 북한인권기록박물관 설립 및 북한인권단체 지원

» **이행기간**

□ 2020년 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북한인권법’이 정한 예산범위 안에서 조달

정책순위

9

남북하나재단, 하나원 구성인원 50% 탈북민 채용정책

정책분야 통일외교, 통상

» 목 표

-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 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의해 2010년 9월 27일 설립되었고, 이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법률상 명칭(등기부상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지만, 2014년부터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대외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 남북하나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
 -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
 -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정착지원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원’은 남한으로 온 북한주민을 정착 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이지만 이사장, 사무총장, 이사 및 당연직 구성 인원은 대부분 이남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 남한에 온지 20~30년 넘는 이북지역 출신들의 인재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에도 이북출신들에게 재단운영을 넘기거나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통제권한을 넘겨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본 정책은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원 운영과 관리는 실제적인 통일훈련, 탈북민들로 실무를 직접체험하게 함으로써 통일 후 이북지역 행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일군 양성 기관으로 대전환함을 목표로 한다.

» 이행방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탈북민 차별 금지법 입법화
- 탈북민 생산품 우선 구매법 입법화

» 이행기간

- 2020년 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법률’이 정한 국가예산 범위 안에서 조달

정책순위

10

실향민 이북지역 재산권 인정정책

정책분야 행정자치

» 목 표

- 한국의 분단과 한국 전쟁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의 실향민은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다.
- 또 전쟁 이전에 북한의 유산계급 청산 인민재판을 피해 집과 유산들을 이북지역에 놓고 피신해온 사람들도 실향민들이다.
- 이제 통일이 되면 실거주자인 북한주민들과 과거의 소주자인 실향민들사이 거주지 및 재산권 분쟁과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본 정책은 통일시 일어나게 될 분쟁과 소송을 최소화 하고 그에 대응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 이행방법

- 이북 재산권 인정 기준법 입법화
- ‘평양정부 9도민 위원회’ 관련 규정 마련
- 이북지역 재산권 검토위원회 출범

» 이행기간

- 2020년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이북 5도위원회 예산범위에서 조달

노동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노동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주택·의료·교육·교통·통신 공공무상정책 |
| 2 | 지분으로 매년 2%씩 납부하는 토지보유세 신설 |
| 3 | 파견업 전면 금지 및 특수고용직과 기간제법 폐지 |
| 4 | 주30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문화사회법 제정 |
| 5 | 즉시 탈핵과 2050 탄소제로를 위한 사업정지특별조치법 제정 |
| 6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 7 |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 |
| 8 | 노동·성평등·차별금지 교육 정규교과목화 |
| 9 | 만 35세 이하 출마자 및 장애인 출마자 선거비용완전공영제 |
| 10 | 군 동성애 처벌조항 삭제 및 동성혼 법제화 |

정책순위

1

주택·의료·교육·교통·통신 공공무상정책

정책분야 보건복지

» 목 표

□ 주택,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등 5대 공공무상정책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을 사회가 보장

- 한국의 전국 가구수는 2018년 기준 약 1,998만 가구, 주택 수는 약 2,082만 채로 주택보급률이 104%임. 그러나 국민 40%는 자기 집 없이 전월세로 고통 받고 있으며,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국민들은 은행 이자에 시달리고 있음. 반면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임대수익과 부동산 양도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으며 불평등의 세습을 강화하고 있음.
- 전체 국내 의료기관 중 국공립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이며 공공병상 수는 10% 수준임.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공공의료 비중인 평균 73%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이며, 그마저도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 이런 가운데 의료 영리화 경향 강화되면서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서비스의 공급 부족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사이의 의료 서비스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
- 주요 국가의 국공립대학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은 70%, 프랑스는 86%, 독일은 95%, 이탈리아는 93%인 반면, 한국은 20% 이하인 상태. 아울러 대학 서열화로 인한 입시경쟁은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에서도 교육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한국 사립대학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등록금을 받아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음.
- 개인교통수단과 비교하여 단위당 수송규모가 큰 대중교통수단의 확장과 서비스 질의 향상은, 국민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도시설계와 교통계획, 환경오염과 생태파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수임. 그러나 실제로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화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은 그 설계와 시행, 운영에 있어 민간 자본에 의존했고, 그 결과 제대로 된 교통정책을 구현하지 못함.
- 한국은 정부가 주도하여 통신 인프라를 구축했으나 근래 20년 동안 이를 민간자본에 이양해 왔음. 2018년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국가의 공유자원을 토대로 이동통신 3사가 매년 거둬들이는 초과수익규모는 4조원에 이룸. 반면 2019년 기준 유무선 통신비 연체액이 575억 원에 달할 정도로 국민의 절반이 통신사 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통신 영역 노동자 다수는 불안정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임.

» 이행방법

□ 주택, 의료, 교육, 교통, 통신 공영화 및 무상화

- 지분으로 납부하는 2% 토지보유세제를 통해 국유지를 확대하고, 이 토지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 2018년 말 사유지 지가총액 9천5백조원 기준 4년간 740조원 상당 토지 국유화) 활용하여 주택 신설과 기존 잉여주택의 매입 등을 통해 국가공공무상주택 1,000만호를 공급,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주택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고통을 없애는 동시에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을 줄여감.
- 2021년부터 지역별로 국공립의료원 증설과 사립병원 국공립화를 실시, 2030년까지 국공립병원 병상수를 50%로 증대하는 동시에 이를 담당할 의료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과 국립의료 교육기관 설립을 시작함. 공공의료시설의 확충과 안정된 신분의 의료공무원 양성을 통해, 공공의료 중심으로 지역별로 균등하게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약제업 국유화와 더불어 무상의료를 실현함.
- 2023년 초등학교 입학생(2016년 출생)부터 초중고등 교육과정 학제개편(5+5+3)과 함께 국공립 대학 입시폐지 및 평준화를 실시함. 2022년부터 국공립대학 등록금 폐지하고 2031년까지 10년 동안 국공립대학 증설 및 사립대학 국공립화 확대 통해 대학의 50% 국공립화와 평준화 및 무상교육 실현(2032년 국공립대학 재학생 50만 기준, 연간 20조원 소요)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콜택시 공영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버스·지하철·철도 등 대중교통의 완전공영화와 함께 무상교통을 실시. 저상시내버스 보급률을 50%로 확대하면서 유류세 인상 및 도심혼잡통행료 징수확대, 교통벌칙금 및 과태료 소득 비례 차등 부과제, 교통유발부담금 10배 인상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무상교통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
- 통신기간산업의 재국유화를 통해 무상통신을 실현, 통신과 관련한 국민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기본권 보장과 통신업계 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함. 아울러 통신 공공성을 회복하여 초연결 사회를 넘어 과잉연결 사회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문제와 환경문제에 대응함.

» 이행기간

□ 주택,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부문별 사업별 2020~2024년까지 완료 또는 착수

- 주택 2020~2024
- 의료 2021~2030
- 교육 2022~2032
- 교통 2020~2024
- 통신 2020~2024

정책순위

2

지분으로 매년 2%씩 납부하는 토지보유세 신설

정책분야

재정경제

» 목 표

□ 토지소유권을 사회가 공동으로 가지게 하여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하고 토지공공성 극대화

- 대한민국은 2017년 기준, 상위 1%가 개인이 소유한 전체 토지의 53.9%를, 상위 10%가 96.7%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고 있음. 2017년 신고액수 기준 부동산 양도차익 소득은 84조8천억원이었으며 이중 상위 10%의 소득이 53조 8천억원(63.4%)으로 부동산을 제외한 2017년 불로소득 전체 총액 50조8천억원보다도 많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땅값은 2018년 말 기준 1경 1,500조원이며, 이중 민간보유 땅값은 9,500조원으로, 1979년말 325조원에서 40년 동안 9,164조원, 문재인 정부 2년 동안에만 2,054조원 상승함. 문재인 정부 상위 1%에 속하는 사람 1명당 부동산 불로소득은 연간 25억원으로 상위 1% 근로소득(2017년 기준 2.6억)의 9배, 근로소득 평균(2017년 3,500만원)의 70배에 달함.

» 이행방법

□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이전시켜도 불로소득과 이로 인한 불평등은 지속됨. 따라서 지분으로 매년 2%씩 납부하는 토지보유세를 신설, 점유권은 인정하되 소유권은 사회가 공동으로 가지고 관리하게 하여, 이를 통해 확보한 토지(2019년 한국 총사유지 7만5천km² 기준 4년 동안 5천8백km²)를 활용, 토지공공성 극대화를 위한 토대를 만들.

» 이행기간

□ 2021년~2024년

정책순위

3

파견업 전면 금지 및 특수고용직과 기간제법 폐지

정책분야 노동

» 목 표

□ 원청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강화하고, 별도의 사업장이나 고정자본 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보장

- 1998년 김대중 정권이 만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파견업은 다단계 하청업을 양산, 간접고용과 임금 중간착취를 통해 노동자의 빈곤과 고용불안정성을 강화시켜 줌. 2006년 노무현 정권이 만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실제로는 단기간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법으로 기능함(계약기간 2년 후 정규직 전환 비율은 5% 미만).
- 2007년 노무현 정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처음 도입한 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역시,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물론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다양한 부문의 프리랜서 노동자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법적인 지위 보장을 가로막고 있음. 그 결과 해당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은물론 여타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된 채, 사용자 몫의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음.

» 이행방법

□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취지에 따라 원청 직접고용 원칙을 강화하여 일체의 파견업 폐지함. 예외적인 간접고용의 경우, 외주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실제 노동자의 임금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중간착취를 최소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동력파견업무 담당하도록 법제화함. 아울러 직접고용과 함께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 원칙을 강화하고 기간제법을 폐지하고, 별도의 사업장이나 고정자본 없이 일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계약을 맺어 노동권을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특수고용직을 폐지함.

» 이행기간

□ 2021년~2024년

정책순위

4

주30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문화사회법 제정

정책분야 문화

» 목 표

□ 주30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과 여가 사이의 균형 있는 삶의 조건을 마련하고,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여가를 위한 구체적 조건을 마련.

- 2017년 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은 1천759시간, 한국 노동시간은 2천24시간임. 노동과 여가의 균형과 일자리 공유를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필요.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으로 늘어나는 여가시간에 국민들이 공공영역의 문화와 예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국공립시설 및 프로그램, 종사자 확충,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재정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필요.
- 2013년 문화기본법을 제정하였으나, 문화권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법과 기구, 강제와 처벌 규정 없이 추상적 수준의 선언만 담고 있음. 문화민주주의의 가치와 실현 방법, 문화권 실현 과정에서 문화예술인의 노동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있어 문화재정의 구체적 할당 등을 포함, 문화사회주의 이념과 방법을 담은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함.

» 이행방법

□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노동시간을 30시간으로 단축, 국민들이 주4일은 노동하고 주3일은 시민으로서의 공민권과 문화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5년간 30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함. 아울러 문화사회법의 제정(또는 문화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국민의 문화권과 문화예술인의 노동권을 함께 보장하고 문화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필요한 문화자치와 문화재정을 법적으로 보장함.

» 이행기간

□ 2021년~2024년

정책순위

5

즉시 탈핵과 2050 탄소제로를 위한 사업정지특별조치법 제정

정책분야 환경

» 목 표

□ 203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의 가동을 완전 중단하고 폐쇄하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제로화 달성할 수 있는 국가 정책 수립과 입법.

- 2011년 후쿠시마 참사 이후 핵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들의 감수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2016년 1월에는 월성1호기 인근 주민 40명의 몸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어 피폭이 확인되었고, 2016년 9월 12일 핵발전소가 있는 경주에서 한반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하고 2017년 3월까지 총 601회의 여진이 일어나, 한국판 후쿠시마 참사 현실화되고 있음.
- 한편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7년 6억2천만 톤에서 2017년 7억914만톤으로 늘어남. 파리기후 협약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20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2030년까지의 자발적 감축목표와 2050년까지의 장기저탄소 발전전략을 제출해야 함. 그러나 한국은 2030년 배출전망치 57%였던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감축 후 60%로 증가하는 등, 사실상 감축정책 없는 상태임.

» 이행방법

- 2023년까지 경주·부산의 핵발전소 13개를 폐쇄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의 가동을 완전 중단하고 폐쇄함.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비롯한 핵 진흥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핵발전소 수출을 당장 중단함. 핵 발전 중단에 따른 조치로 핵발전소 폐쇄에 따른 기술개발, 법과 제도의 정비,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 등에 관한 로드맵을 국가차원에서 수립함.
- 2050 전세계 감축 권고기준 최소치인 40%이상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도를 이용한 배출권 구매와 산업부문 감축 부담에 대한 특혜 없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3억3,800만톤으로 줄여야 함. 2050년까지 탄소배출제로를 목표로 노동시간 단축과 탄소세 도입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이 과정에서 감축에 소극적인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 제정.

» 이행기간

□ 2021년~2024년

정책순위

6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정책분야 사법윤리

» 목 표

□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하고 차별의 정의를 확대하며 구제수단의 실효성 확보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의 조직과 권한을 규율하는 법률의 형식을 채택하고 있어 본격적인 차별금지법으로 기능하지 못함. 또한 괴롭힘과 같은 전형적인 차별 유형이나 차별의 지시나 조장 또는 보복행위에 대한 규정도 없음. 아울러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의 체계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 차별시정기구가 혼재되어 있고, 차별시정절차에서도 각 법률마다 차이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등 인권 선진국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 법이 규율하는 차별의 영역을 확대하고 구체적 차별구제방안을 마련해 왔음. 인권위 역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인권 기구 역시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옴.

» 이행방법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담지 못한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하고, 차별의 정의를 확대해 직접차별뿐 아니라 간접차별과 괴롭힘도 규율하며, 시정명령, 소송지원, 징벌적 손해배상, 증명책임의 전환 등을 통해 구제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함.

» 이행기간

- 2021년~2024년

정책순위

7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

정책분야 여성

» 목 표

□ 안전한 상황, 안전한 관계 속에서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법률로 보장

- 현재의 형법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힘과 권력의 차이로 인해 성적 자기 결정권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성폭력 피해사례의 경우(전체 성폭력 피해사례 대비 71.4%), 현재의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또한 현재의 법 해석 하에서는 신고한다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의 역고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얼마나 심한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함. 결국 성폭력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당하게 됨.

» 이행방법

□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 7가지 권고 중 첫 번째로, 형법297조를 개정해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부족을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특히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을 권고했음. 이는 안전한 상황, 안전한 관계 속에서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법률이 먼저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함.

» 이행기간

□ 2021년~2024년

정책순위

8

노동·성평등·차별금지 교육 정규교과목화

정책분야 교육

» 목 표

□ 학교에서부터 차별과 폭력, 혐오에 대한 성찰하고 토론하고 반성하고 이를 사회로 확장하여 평등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공동체의 토대를 만들.

- 한국에서는 성별, 성적체성, 신체조건, 외모, 나이, 국적, 인종, 가족 형태, 종교, 사상, 전과, 학력, 재산, 계급 등에서 자신과 다른 존재에 대한 차별과 폭력, 혐오가 만연함. 특히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이자 여성이며 다양한 영역에서 소수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노동권과 성평등 그리고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과 처벌의 책임을 방기해 옴.
- 차별과 폭력, 혐오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도 절실하게 필요하며, 이런 점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노동권과 성평등 그리고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은 필수적임. 그러나 입시경쟁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한 공교육 과정이 이를 위한 인문학적 교육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리라 기대하기는 힘들.

» 이행방법

□ 대다수의 학생들이 노동자로, 여성으로, 또는 다양한 소수자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노동권과 성평등 그리고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

» 이행기간

□ 2021년~2024년

정책순위

9

만 35세 이하 출마자 및 장애인 출마자 선거비용완전공영제

정책분야 정치

» 목 표

□ 경제적 약자인 청년과 장애인의 국회진입을 보장, 새로운 정치의 토대를 마련.

- 국회의원의 구성이 연령과 사회적 직업 등에서 상당히 편중되어 있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음. 20대 국회의원 나이는 평균 55.5세이며 이들의 평균 재산은 40억 원임. 30대 국회의원은 단 3명이며,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명도 없음.
- 선거기탁금과 선거운동과정에 들어가는 수천에서 수억에 이르는 비용은 소수정당과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원내 진입을 봉쇄하는 불공정한 장벽임. 특히 경제적 약자인 청년이나 장애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적 참여를 불가능하게 함.

» 이행방법

□ 만35세 이하 출마자와 장애인 출마자에 대해서는 선거기탁금을 포함한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비용완정공영제를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청년과 장애인의 국회진입을 보장.

» 이행기간

□ 2021년~2024년

정책순위

10

군 동성애 처벌조항 삭제 및 동성혼 법제화

정책분야 사법윤리

» 목 표

-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성적 지향이 다른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보장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군형법 제92호의6(추행)(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평등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 의견을 제출해 왔음.
 - 동성혼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맞닿아 있음. 남성과 여성, 생물학적 혈연자녀로 이루어진 '정상가족'의 통념에 맞서,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혼인하고 가족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함.

» 이행방법

- 이성애자들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행동이 동성애자들에게는 죄가 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군형법 동성애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성적 지향이 다른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동성혼 법제화.

» 이행기간

- 2021년~2024년

녹색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녹색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정의로운 대전환 '기후·에너지' |
| 2 | 차별·폭력·혐오에 맞서는 페미니즘 |
| 3 | 분배와 관리 중심의 주거 민주주의 |
| 4 | 전환사회 안전망 '기본소득' |
| 5 | 노동환경 개선과 정의로운 녹색 일자리 |
| 6 | 동물학대 제로사회 '동물권 보장' |
| 7 | 식량주권과 먹거리 정의 실현 |
| 8 | 특권 없고 유능한 국회, '정치개혁' |
| 9 | 전 생애를 책임지는 사회적 돌봄, '복지' |
| 10 | 수도권 집중을 넘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탈토건' |

정책순위

1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정의로운 대전환 ‘기후·에너지’

정책분야 환경

» **목 표 1 2050 탄소배출제로 달성과 기후정의 확립**

<세부정책>

1. 국가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
2. 기후위기대응기본법을 제정하고, 입법권이 있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후 위기 대응 법안 심사 및 처리
3. 전 지구적인 탄소예산과 연동된 한국의 탄소예산을 추정하고,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량을 최우선 기준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탄소예산’ 도입
4. 공공정책 전 분야에 걸쳐 탄소예산에 기반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탄소영향평가 도입
5. 청소년을 포함한 노동자, 농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구성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후비상시민의회 구성
6. 탄소세, 토건 예산 감축, 탄소배출기업 과세, 사치품목 소비세 증세, 미세먼지원 배출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을 통하여 그린뉴딜 기금 조성

» **목 표 2 기후변화 피해로부터 시민보호**

<세부정책>

1. 폭염과 한파에 안전한 인프라와 그린 리모델링
 - 도시재생 사업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접목하고, 기존 건축물과 주택을 ‘에너지 절약형’, ‘에너지 생산형’으로 전환
 - 에너지효율관리분야에서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 공공기관·어린이집·임대주택·노후주택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정책 우선 시행

2. 하수도, 도로, 건물, 통신시설 등 도시의 중요 인프라 점검 및 보강
3. 재난 및 구호 시스템 강화

» **목 표 3** 2030 탈핵

〈세부정책〉

1.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2.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금지법 제정
3. 범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핵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4. 고준위핵폐기물 관리법안 보완: 핵폐기물 처분계획 가역성과 핵폐기물 회수가능성 원칙 반영
5. 중저준위방폐장 제도적 관리기간을 300년 이상으로, 방사성물질의 반감기를 고려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개정
6. 해외 원전 건설 사업 추진 중단
7.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
8. 핵발전소 안전 체계 적극 개선
9. 탈핵 에너지전환 교육 홍보 강화

» **목 표 4** 원자력특권구조 철폐

〈세부정책〉

1.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진흥위원회 철폐
2. 우라늄에 핵연료세 부과
3. 원자력연구원을 의료와 안전기술 분야와 기초 연구 분야로 분리하고 핵발전 및 핵재처리 연구부문 폐지

» 목 표 5 에너지효율 확대와 2030년까지 에너지소비 50% 절감

〈세부정책〉

1.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에너지 요금 정상화 (탄소세 부과 포함)
2.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 에너지 플러스 빌딩화
3.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축소 및 전환

» 목 표 6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세부정책〉

1. 녹색요금제 도입
2. 재생에너지를 2030년 30%, 2040년 60%, 2050년 100%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로드맵 구축
3. 재생에너지 설비의 신속한 계통 연계를 위한 지역그리드 확충, 스마트 그리드 및 가상발전소 도입 및 운영을 통한 재생에너지 간헐성에 대한 대비책 확보
4.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분산형 시스템으로 전환
5. 지자체 및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이익공유제 전면 도입
6. 동북아 재생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 목 표 7 에너지 기본권 및 분권보장과 민주적 에너지전환

〈세부정책〉

1. 기본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무상 제공(무상전기, 무상가스, 무상열)하고, 사회적 연대 및 징벌적 요금으로서 누진제 강화 및 확대(상업용 및 산업용까지)
2. 주거 및 교통 복지 강화 및 에너지전환 연계 강화(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 등)
3. 전력3대 악법 개정, 송전거리 차등 요금제 및 지자체별 에너지자립도 목표 관리 제도 도입
4. 지자체, 지역공동체가 에너지 설비를 소유,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5. 에너지전환이 지역을 살리는 산업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정책순위

2

차별·폭력·혐오에 맞서는 페미니즘

정책분야 여성

» 목 표 1 여성혐오(미소지니)와 성착취 타파

〈세부정책〉

1.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고,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2. 스토킹처벌법 제정하여 경찰의 초동 대응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3. 젠더폭력 방지와 처벌 실효성 높이기 위해 여성폭력방지법 개정
4.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폭력 포괄하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하고 처벌 강화
5. 성매매 알선 등 성범죄 이득은 국고로 전액 환수하고 징벌적 벌금 부과
6. 성매매처벌법 개정하여 성판매 여성 비범죄화하고 성매수자 신상공개 및 처벌강화
7. 아청법 개정하여 ‘대상청소년’ 삭제하고 ‘피해청소년’으로 재규정

» 목 표 2 일상에서 시작되는 성평등

〈세부정책〉

1. 시기와 사유에 상관 없이 낙태죄 완전 폐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재생산권 보장
2. 혼인과 가족 관련 법령 제개정하여 1인 가구와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3.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성차별금지법 제정
4. 성평등교육법 제정하여 교원 포함한 초중고 과정에 성평등 교육 의무화

» 목 표 3 직장 등 공적영역에서 성차별 해소**〈세부정책〉**

1. 남녀고용평등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위반 시 처벌 법제를 강화
2. 공기업과 100대 기업의 임금 및 승진에서의 성평등 공시제 실시
3. 국가 선출직 후보 및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에 여성과반제 실시하여 여성대표성 확대
4. 돌봄노동을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법제로 포섭하여 보호

정책순위

3

분배와 관리 중심의 주거 민주주의

정책분야 건설교통

» **목 표 1** 주택정책의 기초를 신규공급 중심에서 분배와 관리 중심으로 전환

〈세부정책〉

1. 3주택 이상 소유금지

- 3주택 이상 소유 자산에 대한 보유세(실효세율 5% 수준)를 급진적으로 인상하여 주택의 매매를 적극 유도하고, 매매 과정에 정부와 연기금 등 공적 영역에 우선매입권 부여
- 매입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지역사회 공유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2. 보유세 실효세율 1%까지 강화

3.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 전체 주택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장기 중소형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
- 공공택지는 공공분양주택보다는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에 주력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포함해 주거정책 전반에 차별금지 법제화
-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확대

» **목 표 2** 빌려쓰는 사람의 주거 민주주의 확립

〈세부정책〉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법제화
-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2.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 모든 사람이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고, 퇴거, 철거에 대한 강제집행, 행정대집행, 개발사업에 대한 근거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3. 비적정 주거 종식을 위한 로드맵 작성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임대 금지 법제화
- 최저주거기준에 기후위기 위험성 정보 필수 반영
- 쪽방촌 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내실화
- 주거급여 확대를 통한 실질적 주거지원 강화

» **목 표 3** 주택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획기적 감축

〈세부정책〉

1. 주택정비사업 진행 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우선적으로 제시
2.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에 에너지 효율화 의무화
3. 민간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

정책순위

4

전환사회 안전망 '기본소득'

정책분야 보건복지

» **목 표 1** 기후위기 시대, 삶의 전환을 위한 기본소득

〈세부정책〉

1. 전국민 생태배당 도입
 - 탄소배출세, 유류세 부가가치세 증세, 미세먼지원 배출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세원 마련
2. 전환기 기본소득 프로그램 실행
 - 토건, 철강, 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노동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충분한 수준의 전환기 기본소득과 양질의 재학습 프로그램 지원
3. 농민 기본소득 도입

» **목 표 2** 현행 복지제도 선별제도 삭제로 사각지대 최소화

〈세부정책〉

1. 부양의무제, 장애인등급제의 실질적 완전폐지
2.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
 -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실업급여 대상자를 고용보험 미가입 불안정 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생계형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

» **목 표 3**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으로 모두를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

〈세부정책〉

1. 2025년까지 전국민 부분 기본소득 도입
2. 2030년까지 전국민 완전 기본소득(1인가구 중위소득의 40%)
3. 기본소득세 신설
4. 완전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고용보험, 국민보험, 사회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정 방안 마련

정책순위

5

노동환경 개선과 정의로운 녹색 일자리

정책분야 산업자원

» 목 표 1 노동시간 단축

〈세부정책〉

1. 주35시간 노동제 법제화·공공부문 주4일제 도입
2. 연장노동 시간 10시간 이내로 단축
3. 심야노동 금지 및 경영효율성 위한 교대제 금지

» 목 표 2 휴일확대

〈세부정책〉

1. 연차를 30일로 확대하고, 연차수당을 1.5배로 지정하여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개선
2. 육아휴직제도 등 가족휴가의 가족 범주 확대
3. 5년 일하면 1년 안식년 부여
4. 여름 폭염 및 겨울 한파 기간에 각 2주 씩 유급순환휴가 부여, 연간 1주에 해당하는 재난 안전 휴일제 실시

» **목 표 3** 소득분배의 획기적 개선

〈세부정책〉

1. 산업별 단체교섭체제 확대하여 산별 임금체제 형성
2. 경영자 최고임금제와 기업이익분배법 제정
3. 노사이익균점제 도입

» **목 표 4** 녹색 정의로운 일자리

〈세부정책〉

1. 녹색일자리, 사회적기업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확대
2. 정의로운 전환 지원법 제정하여 에너지 자원 절약적이고 노동집약적 산업 전환 우선 지원
3. 사회적경제 확대

» **목 표 5**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

〈세부정책〉

1.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하여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 원칙 규정
2. 무기계약직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
3.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정책순위

6

동물학대 제로사회 '동물권 보장'

정책분야 보건복지

» **목 표 1**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전환

〈세부정책〉

1.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동물보호의무' 명시
2. 민법에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독립적 생명체로 명문화
3. 동물보호와 동물의 권리 증진을 위한 독립된 정부조직법 제정

» **목 표 2** 동물학대 제로 사회

〈세부정책〉

1. 동물복지 기준 강화와 공장식 축산 및 수산업 단계적 폐지
2. 동물보호법에서 법적 주체를 동물로 개정
3. 동물학대 처벌의 실효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 법적 기준 강화
4. 동물원·수족관·동물체험시설의 사육환경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하고 관련 법안 강화
5. 재난 발생 시 동물구조 및 보호 규정 제정
6. 10년 내 동물실험 50% 감축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 수립

» **목 표 3** 채식선택권 넘어서는 비거니즘 확대

〈세부정책〉

1. 공공급식에서 채식 선택권 의무화하고 식료품에서 비건 표시제도 도입
2. 일상생활에서 비거니즘 실천을 위한 환경 조성 방안 마련
3. 동물을 산 채로 조리하는 행위 규제

» **목 표 4**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구축 & 동물경시 문화 근절

〈세부정책〉

1. 야생동물 서식지 보존과 복원 강화
2. 정부와 지자체의 동물인지예산 확대
3. 동물권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중요한 동물정책 수립 시 숙의민주주의 실시
4. 동물과 사람의 공존을 위한 동물권연구소 설립
5. 동물을 학대하거나 비하하는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
6. 동물의 본성을 거스르고 생명을 경시하는 축제 근절
7. 동물의 습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물권 공공 교육 실시

» **목 표 5**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세부정책〉

1. 동물 번식업의 단계적 금지 등 동물 판매·이용 규제법 마련
2. 반려동물 등록제의 현실적 정착을 통한 반려인 책임 강화
3.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군집 TNR 사업 지원하고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4. 유기동물 감소를 위한 공공·사설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지침과 지원 체계화
5. 반려동물의료비 표준 수가제와 진료비 고지 의무화 등 반려동물보험 정책 마련
6.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 지원 체계 구축
7. 반려동물을 위한 공립 장례시설을 설립하고 펫로스 증후군 치료 프로그램 확대

정책순위

7

식량주권과 먹거리 정의 실현

정책분야

농림해양수산

» **목 표 1** 기후위기와 재난을 극복하고 준비하는 농촌, 농민

〈세부정책〉

1. 농생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친환경·유기농 지원 강화
2. 토종종자 보급 및 시장 활성화
3. 동물복지를 보장하는 축산활동 전환
4. 영농부자재 생산자 수거 의무화
5. 다양한 채식활성화 및 보급
6. 농경-축산 순환 경작 지원
7.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농가 분뇨의 자원순환체계 구축
8. 도시농업 확대
9. 기후위기와 건강한 먹거리에 관한 학교 교육 제도화

» **목 표 2**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가격을 스스로 결정하는 먹거리 주권체계와 공공성 확보

〈세부정책〉

1. 식량자급률 목표제 도입, 2030년 70%, 2050년 100%
2. 농민들이 자체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공적 체계 구축
3. 정부의 먹거리기본계획 및 정책에서 공공조달 체계 확보

4. 농민이 농산물 가격 설정에 참여하는 정책 수립
5. GMO 재료 표기 전면화, GMO 경작 실험 및 생산 금지
6. 농민 기본소득 실현
7. 모든 농업 정책은 농지소유자가 아닌 경작자의 권리와 권한에 기반하여 수립
8. 농지가 국가 개발을 위해 수용되거나 다른 산업을 위한 희생 금지
9. 경자유전의 헌법원칙 준수
10. 소농, 고령농, 1인 농민, 임차농의 농사 활동 우선 지원
11. 농촌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12. 농촌 작은 학교 살리기 법률 제정
13. 농촌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

» **목 표 3** 여성농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과 성평등한 농촌 공동체

〈세부정책〉

1. 농업인, 농업인경영체가 아닌 생산활동을 하는 모든 거주 농민이 법적으로 등록되는 ‘경작농민 등록제’ 실시
2. 농촌지역의 모든 위원회에 50% 여성할당제 도입
3. 농업농촌의 모든 교육에 여성농민의 의견 반영하여 실시
4. 농촌지도자 및 농업기관에서 성평등 교육 의무화
5. 농촌정책, 예산의 성인지 평가 의무화 및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6. 청년여성농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
7. 시군단위 여성농민 성폭력·성희롱 상담센터 설치

» 목 표 4 모든 농민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는 농촌 인권 공동체**〈세부정책〉**

1. 계절농촌노동자, 농촌이주노동자 등을 포함, 모든 농민들의 산재보험 확대
2. 다문화이주여성 및 농촌이주 노동자들이 농촌의 생산 활동 및 사회문화 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전 교육 및 중장기 교육 프로그램 실시
3. 선주민 농민들과 귀농·귀촌 농민들, 고령 농민들과 청년 농민들의 소통과 교류 활동을 통해 선 지혜를 배우고 서로 화합하는 농어촌 공동체 지원

정책순위

8

특권 없고 유능한 국회, '정치개혁'

정책분야 정치

» **목 표 1**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이 보장되는 정치구조

〈세부정책〉

1.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성 100%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2. 성별 동수 국회 달성
3. 지방의회도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
4. 중앙정부 내각을 성별 동수로 구성

» **목 표 2** 특권없고 유능한 국회

〈세부정책〉

1. 연간 1억 5천만원이 넘는 국회의원 연봉 대폭 삭감하고, 독립기구에서 국회의원 연봉산정
2.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국회의원 징계기구 설치
3. 국회의 모든 예산사용을 영수증까지 공개, 독립기구가 예산사용 감시
4. 진수채우기식 법안발의 남발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 목 표 3 청년,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세부정책〉

1.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확대
2.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민법상 성인인 만 18세로 확대
3. 청소년의 정당 가입, 정치활동 보장
4. 학교 안팎에서 실제 정당, 후보자를 놓고 모의선거를 실시할 권리 보장

» 목 표 4 선거공영제 개선

〈세부정책〉

1. 전국단위 선거 때마다 지급되는 정당선거보조금 폐지하고, 경상보조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
2.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원내교섭단체에게 50% 우선배분하는 위헌적인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 개선, 득표수에 따라 배분
3. 정당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영수증까지 상시 공개하도록 개선
4.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비례대표에 대해 공통공보물을 만들게 하는 등 선거공영제 강화
5. 주권자와 직접 만나는 정치가 가능하도록 정치관계법 개정

» 목 표 5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헌법개정

〈세부정책〉

1. 2020년 하반기 헌법개정특위 구성하여 21대 국회 1년에 헌법개정 추진
2.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포괄적 전환의 필요성을 헌법 전문에 포함
3. 노동, 복지, 교육, 인권, 환경 등에 걸쳐 기본권 강화
4. 지나친 권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과 직접민주주의 확대, 지방분권 개헌
5.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농업·농촌·농민을 지키며,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내용을 헌법에 포함

정책순위

9

전 생애를 책임지는 사회적 돌봄, '복지'

정책분야 보건복지

» 목 표 1 기본서비스로의 복지

〈세부정책〉

1. 연금제도 개혁
 - 국민연금 개혁하여 성평등, ESG 책임투자 강화
 -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
 - 직장, 지역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

» 목 표 2 개인의 권리에 기반한 복지정책

〈세부정책〉

1.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2. 생활동반자법(가족구성권, 혼인평등) 제정

» 목 표 3 돌봄의 사회화: 전 생애 사회적돌봄 책임제

〈세부정책〉

1. 돌봄의 공공인프라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을 아동 수 기준 30% 이상으로 확충
 - 국공립 요양시설 확충
2. 민간 돌봄시설에 대한 공적 책임성 강화

3. 직접고용일자리 확대 및 관리 강화로 공공서비스 양과 질 제고
4. 재가서비스와 활동보조인 서비스 확대
5. 지역사회 서비스 공공일자리 확대
6. 지역사회 서비스 공급기관 이용자 주체 제도 도입
7.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지역주민 참여제도 구축
8. 지역노사민정위원회 활성화
9. 공급 확충을 넘어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적 운영체계 확립

정책순위

10

수도권 집중을 넘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탈토건'

정책분야 건설교통

» **목 표 1** 안전하고 평등한 탈토건국가

〈세부정책〉

1.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 신규공항 건설 중지
2. 4대강 재자연화
3. 3기 신도시 개발 및 GTX 개발 전면 재검토
4. 도시공원일몰제 대비 적극 대응
5. 토건예산 감축목표제 도입

» **목 표 2** 수도권 집중 해소

〈세부정책〉

1.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금지
2. 수도권정비계획법 강화

» **목 표 3**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

〈세부정책〉

1. 예비타당성조사 강화
2. 무책임한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배상제도(단체장, 관계 공무원, 타당성조사기관) 도입
3.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각종 영향평가 개선 및 실효성 증대

대한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한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정치혁명 |
| 2 | 종교혁명 |
| 3 | 경제정책(과학 기술의 첨단화, 세계화 등) |
| 4 | 사회정책(국민건강, 영토권확장, 국토개발, 복지대책) |
| 5 | 문화, 예술, 교육, 언론 |
| 6 | 통일정책과 군사력 증강 |
| 7 | 당의 윤리정책 |
| 8 | 외교 안보 및 세계화 |
| 9 | 소득평균화와 근로(서민)정책 |
| 10 | 국민단합과 세계주도 |

정책순위

1

정치혁명

정책분야 정치

- 국회의원의 명예직화와 의원 수를 120명 수준으로 만들어 국회의원 개인영달과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목숨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애국자들로 국회를구성하는 노력을 경주한다. 곧 입법기관으로서 청렴결백하게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발전에 상응하는 입안 상정이 모든 국민들이 의롭게 사는 방향 제시로 국민단결과 국력을 키워가는 상향적이며 자발적인 국민동기유발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정과악을 척결하기 위한 강력한 필벌을 기하는 법안으로 악은 아예 머리를 들지 못하게하여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인권유린하는 북공산당 핵심부를 멸하거나 회개시켜 자유평화 통일하여 세계중심적인 통일대한민국을 건설한다.
- 사법부,판점사의 임준에 있어서 그저 암기식의 시험을 탈피하고,초등학교에서부터 사법고시 전, 전 과정에의 철저한 개인 신상을 제시하여 판점사의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판점사의 기소·재판의 책임은 영존하는 책임으로 명시하여 의로운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변호사 선임비용도 저가로 통제되어야 한다. 국선변호사의 자격 강화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제도로 개선하여 가난한 자들의 변호를 위한다.이미 국민간에 소문이 남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례들을 고치기 위하여 돈,금품을 받고 부정하게 사법권을 행사하는 자들은 엄벌하며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중앙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도행정이 직능을 구별하여 유대협의관계 및 중앙통제체제로 재조정하여 강력한 행정부,시도행정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하나가 되는 행정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행정이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정부서인 것이다. 따라서 행정직의 모든 관리들은 급여외의 사취를 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국가를 위하지 않는 부정부패한 백성들에게는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공의가 전국 행정관서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 백성들도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정책순위

2

종교혁명

정책분야 종교

-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나 이단, 기타의 우상숭배 등으로 인한 개인재산침해와 국익에 저해가 되는 경우는 이의 단체들은 즉각 철폐할 법령을 제정한다.
-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등의 종교에 종교청을 두어 각 종단의 성경·법령 등을 기준하여 종교재판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개인의 재산침해, 불법, 영적인 문제의 재판을 할 수 있게 하여 종교계내의 불법이 자행되지 않게 한다.
- 각 종단들 중에 많은 신도들로 많은 헌물, 기부금의 경우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한다.(곧 서민들의 복지와 가난한자들을 위한 구제는 행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재원과 안식처로도 제공되어야 한다.)
- 특히 기독교(천주교, 불교를 포함)내의 성직자라 함은 세상을 초월하여 영생하는 나라 천국과 세상의 법을 초월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로 주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자신들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여야 할 복음의 말씀을 받고도, 이를 부정하게 사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서 부자가 되고 교인들을 영적으로 잡아서 자신들의 종을 만들어 국가와 민족까지를 흔드는 경우가 최근 자칭 크다는 교회들로 만연할 때에 성경말씀의 법 밖에서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목사들을 먼저 종교 재판할 방도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기독교 일부 부자된 교회들과 목사들이 위 세번째 □항과 같이 패역할 때에 천주교 신부들은 북한지지 성향으로 나라를 흔들고, 중들은 도박과 술 취함과 온갖 추대를 벌이는 만큼 의로운 정치는 의로운 성직자들과 더불어 사악한 종교계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강력한 방안을 성경 법과 법령 등으로 기초하여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해가 지지 않던 나라 대영제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던 로마제국, 유럽에서의 악한 교회들에서 도망친 기독교(청교도)인들이 미국대륙을 개척하여 강대국인 미국을 건설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었던 나라들은 세계를 지배하였다(로마제국, 대영제국).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이 초대 제헌국회처럼 신실히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으면 조국통일은 절로 되어 세계를 지배, 주도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정치판도는 표를 얻기 위하여 큰 교회, 단체들을 이용하여 교묘하며 형식적인 야합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진정한 애국자들과 성직자들은 가난한 가운데 있으며 작은 자 가운데서 이순신, 유관순, 안중근, 이승만, 박정희, 주기철, 손양원 같은 순교 애국지사들이 있었던 것을 상기하고 기존의 정치가들과 종교계의 모든 자들은 회개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 대한당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진리를(천국을 위하여)이 위대한 대한민국에 세울 것 이다.

정책순위

3

경제정책(과학 기술의 첨단화, 세계화 등)

정책분야 경제

- 자원과 재원개발의 증대에서 부터 동네, 주변 청소까지 전 국민이 이웃과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야 한다.(가난할 때의 새마을운동은 전 국민이 힘써 일하여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부자라도 일하지 않으면병이 걸리고 악한 생각이 사로잡아와 놀음, 간음,살인,술 중독 등으로 망하게 된다.곧 모든 국민 남녀노소가 일하는 풍토로 조성될 때에 최대의 경제력이 확보되는 것이다.또한 주간 6일 근무제로 전환하여 모든 국민은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하여 일을 하여야 한다.(노인들에게도 일자리를 마련할 정책 수립)
- 중소기업의 육성책을 펴서 대기업화 혹 이윤창출 극대화 하고 대기업들은 항상 국가를 대신하여 국민들의 사회 및 생활복지 등에 그 이윤을 돌려야 할 책임을 준다.(또한 기업가들은 개인영달이 아닌 국익과 국민복지 증대적인 기업화)
- 과학기술 첨단화 및 세계화를 위하여 특수학교 개설운영과 육성책을 구체화하여 영재교육을 겸하여 실시한다.(4차원적인 기업을 육성화한다.)
- 외교정치는 경제 정책도 수반하고 정치와 경제는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해외주재 대사관 내에 국가경제 부서를 두어 수출입 증대화,시장개척들을 겸한다. 또한 해외의 노동시장도 개발하여 한국의 두뇌인력,첨단과학기술을 수출하고 1차 산업생산 요원들의 생산성을 후진국의 인력으로 보충하는 방안도 활성화한다.
- 일자리 창출의 문제는 위 네번째 □항에 1차 산업생산의 노동력이라도 할 생각을 지닌다면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다. 사람들은 일은 하지 않고, 앉아서 먹고 노는 일자리를 찾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의 관리들도 최소 생계비로 생활하는 풍토를 조성할진대 (곧 최대의 행복지수는 돈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과 이웃을 위하여 자원하여 봉사하는 것이며 비록 자신이 배고파 먹지를 못하여도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사회풍토와 근로풍토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신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과 선한 가난을 사모치 않고 물질 만능주의적이며,부하게 되려는 탐심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다. 가난했던 1960-1990대에도 우리들은 오늘과 같은 풍요를 누리는 경제성장보다는 더 행복하였고 이웃간에 사랑들이 있었다. 어떤 일들이고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였다.그러나 이제는 엄청난 먹을 것들을 쓰레기처럼 버리면서도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이로 대한당의 경제정책은 저소득정책으로의 경제정책을 바꿀것을 택하는 바이다.(또한 대부분의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다.그러하므로 부자는 필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경제법안의 제정도 필연하다.이것은 한 국가내의 국민 평등권이기도 하다.)

정책순위

4

사회정책(국민건강, 영토권확장, 국토개발, 복지대책)

정책분야 사회

- 국민간에 불신과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풍토가 있는데 이는 첫째 의로운 교육의 부재요, 정치인들의 기만에서 유래하였으므로 먼저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타인을 유익하게 하여 구원하라 등)과 용서와 화해를 선도하는 사회정책과 바른 정치인들과 단체와 국민의 선행을 지속적으로 증대 홍보한다.
- 각 국민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공공 시설물들과 풀 한 포기라도 아끼는 애국애족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심기는 정책을 펼친다. 또한 마약, 도박, 매춘, 음란, 불법, 중복세력,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강력한 대처법안 등과 물리칠 기독교 신앙생활로 국민생활의 안정과 정서를 아름답게 하며, 대중교통, 건강운동, 스포츠, 문화행사 등을 육성하여 안락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 삼강오륜 윤리 도덕의 강령을 되살려 국가와 국민, 남과여, 아내와 남편, 어른과 청소년, 애국애족, 친구간의 사랑, 노사가 하나됨, 이웃간의 사랑 등으로 전 국민이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개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회정책을 펼쳐간다.
- 삼면이 바다인 동·서·남해의 개발과 섬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내지는 수산자원을 극대화할 정책과 해양과학을 개발한다. 우주를 개발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국민과 세계에 알려서 과학화하고 신비화하여 국민과 세계로 기쁨과 우주시대와 천국의 희망을 준다.
- 통일국가 형성을 위한 대책과 더불어서 통일 후의 중국·러시아를 향한 역사적인 영토권 확장을 물리적 영적인 지배를 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다. 남으로는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경제적이며 영적인 지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가능한 일로 성취한다.(해가 지지 않던 나라 대영제국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던 로마제국의 세계 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하고 진리로 하나가 될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성 삼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 졌었다.)대한당 전체가 충심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들의 몸처럼 사랑하고 주 하나님의 계명인 성경66권의 말씀의 법을 다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계신 대한민국이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할 때가 분명히 오게 할 것이다. 곧 모든 지혜와 생사화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자는 것은 세계평화와 모든 인류가 악과 거짓을 행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으로 살다가 다 천국으로 가기 위한

수단과 최후의 방편이기 때문인 것이다.(대한민국의 많은 선교사들은 지금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과 양식을 주어가며 물리적이며 영적으로 세계를 지배하여 가고 있다.)-제헌국회, 이승만 초대정부, 외국 선교사들이 세운 수많은 기독교, 교회들로 한국에 의로운 기초를 놓았던 것이 오늘의 발전을 기했던 것을 기념하여 대한당은 대한민국을 기독교국가로 만들어 가야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성취할 것이다.

- 현재 대기업, 큰 부자들이 지닌 재화만으로도 전 국민의 평생복지정책을 실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은 이를 계몽하고 모범을 보여서 자진하여 국가와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는 기업과 사람들에게 명예를 주어야 한다. 큰 기업과 부자(재벌)에게는 과징세로 징수하여 사회적 평생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세금의 사용도 간접시설 확장보다는 국민들이 평균하게 잘 살수 있게 한다.
- 농토와 해상을 보존 유지하되 수익성을 위한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한다. 세계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치성을 높이는 개발을 한다. 농지로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을 과감히 개발하여 서민주택정책과 공장시설 등으로 확장하여 간다.
- 자연과 산림의 큰 훼손이 있을 경우 어떤 개발사업도 추진 할수 없다.(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자연훼손에서 시작된 것이다.)특히 통일 후로 비무장지대는 국제자연공원화를 중심으로 개발한다.

정책순위

5

문화, 예술, 교육, 언론

정책분야 문화

- 우리 조상들의 문화·예술, 현실에 맞는 역사전통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의식주 생활을 계승하여 간다.(전시회, 박람회 등을 열어서 국내외에 홍보한다.)
- 세계 문화·예술 중에 가장 인간적이며 아름답고 마음에 기쁨을 더하여 선을 추구하는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창조적인 문화행사 등만을 수입하고 비인간적이며 악을 초래할 문화·예술은 차단한다. 노인과 상관을 공경하는 예절문화와 아이들을 보호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 교육정책은 먼저 초등단계부터 부정과 거짓하지 않고, 정직과 의를 행하는 기초교육을 실시하여 중고등학교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부정과 거짓을 행하면 죽게 된다는 강력한 말씀을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모두가 의를 행하게 한다. 또한 계속하여 악과 부정을 행하는 자들은 별도 처벌 관리한다. 특히 전교조와 같이 학교밖 정치투쟁하는 자들은 전부 사직시켜야 한다.
- 이웃과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선행의 교육과 이의 행함에 등급한 신상명세서가 각 직장, 사회, 사법 행정시험에 50%-90%이상의 반영과 교사 채용에도 엄별하고 대우를 하여야 한다.
- 반공교육, 애국애족교육, 창조교육, 과학교육과 삼강오륜의 정신을 회복하고 교육과 강력한 체력을위한 교육도 실시한다.-삼강오륜 : 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 /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봉우유신
- 공공의 언론은 악한 것들의 보도 보다는 선행과 발전적인 면에서의 언론정책을 추구하고 특히 언론은 보도하고 말했던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특히 부정한 부분을 정하게, 정한 것을 부정하게 왜곡한 보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한다.)
- 반인륜, 반도덕적 동성연애, 짐승과의 교합 등은 엄벌에 처한다.

정책순위

6

통일정책과 군사력 증강

정책분야 통일

- 그 동안 통일정책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는 정책을 대화와 타협이란 각도에서 펼쳐왔다. 그러나 북한의 3대 세습독재 공산주의는 양민학살과 학대 및 인권을 유린하여 왔으며, 우리가 아무리 저 악한 자들을 도와주어도 이를 감사와 회개의 창구로 하지 않고, 오히려 핵무기 개발과 같은 무력도발의 재화 등으로 이용하였다. 따라서 일체의 도움을 대한민국의 민관은 김정인에게 도와서는 안 된다.
-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북한보다 월등한 개인 및 육해공군의 군사훈련과 예비군 훈련과 전국민비상체제 군사훈련도 보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곧 북한의 전쟁 도발 시는 북한을 단번에 쳐부수고 통일할 수 있는 전 국민의 투철한 정신무장을 하여야 한다. (숫자와 군사력 열세에도 아랍전쟁 <제3차 중동 6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선히 준비된 사람들의 편에 선다. 따라서 세속적이며 인본신앙으로 타락되어가는 한국교회들은 회개하여야 한다.)
- 국내외로 북한공산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척결하여야 한다. (차라리 이러한 불순세력들은 북한으로 강제 추방하는 법 제정도 필연하다.)
- 군사 무기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세계 어느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체계를 유지하고 미국등과 우방국동맹을 강화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핵을 보유하여야 한다.)
- 한반도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개발, 크고 작은 도발과 위협적 언사로 전쟁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에 대한 대응과 위기관리 능력은 미흡하여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모든 평화위협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군사력을 완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바탕으로 총체적인 국가안보 태세를 구축하고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고 안심하면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주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에 강력히 반대하고 무력화할 방안을 찾아 철저히 굴복시켜야 한다. 북핵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안보위협이고 통일을 진전시키는 데도 명백한 장애물이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하에 북한을 비롯한 역내의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체계를 철저하게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한미연합

전력을 기반으로 한 능동적인 억제전략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고 한미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킨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이 가시화될 시 남북정상 간의 핫라인을 최우선 구축하여 한반도의 위기를 차단한다.

- 미래 전쟁과 동북아 안보환경변화에 따른 잠재적 위협까지 고려하여 첨단화·과학화된 강군을 육성한다. 현대전의 효과적인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구조와 전력구조, 병력구조를 개선하고 고효율 국반운영 체계를 만들고 이를 위해 미래 지향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적정 국방비를 확보하여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다. 민·관·군 연구개발 융합·복합으로 군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방위산업을 활성화하며,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함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
- 군 복무 장병들이 국민안전을 지키고 국토를 방위하는 활동에 자부심을 갖도록 군대 내 악 폐습을 일소하고 선진 병영문화와 환경을 만든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도록 일반 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군복무 기간이 자기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군복무와 사회적응을 연계하는 선순환구조와 애국애족교육 등을 완비한다.
-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하여 보상과 지원을 하고 그들의 숭고한 명예가 고양 되도록 보훈제도를 개선한다. 독립유공자, 호국 유공자, 민주유공자의 공헌이 국가 공동체의 영예로운 가치로 존중받고 귀감이 되도록 예우한다. 군 복무 중 발생한 군인들의 희생에 대해서도 본인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이들의 치료와 재활은 물론 사회복지와 안정된 생활을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도록 한다.

정책순위

7

당의 윤리정책

정책분야 윤리

- 정책, 성실,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윤리강령을 전 대한당 원들은 지켜야 하면 특히 대의원급에 속한 당원들은 이에 준하지 않을 경우 즉시 사퇴하고 평당원으로만 존재한다.
-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후보자와 대의원들은 당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대한당의 강령에 준수할 것을 서약·서명하여야 한다.
 - 서문에 밝힘처럼 사리사욕 사치하지 말고, 공명정대, 근검절약, 최소치의 기본생활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동방예의지국의 예절과 윤리 도덕을 지켜 준수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도록 경주한다.)
 - 욕설, 비방, 모욕 등을 주는 행위를 금하고 타자의 부정을 책하고자 할 때에는 근거에 의거하여 사랑 안에서 권면한다.
 - 당원들 간의 고소고발을 금하며 당내의 문제를 외부로 유출시켜서 당의 명예를 훼손시켜서는 안되며 심할 경우는 강제탈당 혹 처벌한다.
 - 당직자 공직자 국회의원 지방회의원 등은 항상 자기의 유익이 아닌 국가와 당과 국민의 유익 편에서 일하며, 중앙당은 이의 신상필벌을 철저히 적용한다.
 - 경로우대 효친사상을 극대화한다. 특히 노인,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 어린이 등을 각별히 보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와 정성을 다하여 도와 국민의 본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인도의 M.간디, 백결선생과 같은 본이 되자.)
 - 지위와 신분을 남용하여 사취 및 가족, 지연, 학연 등을 돕는 행위는 처벌하나, 정당한 수고로 얻어지는 대가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가능한 사취하지 말고, 공위를 위할 줄 아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
 - 당직자 및 소속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공사를 구별하여 자금사용을 하여야 한다. 회계책임, 총무부에서는 이를 감시하는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 당의 기밀을 유지보안 하여야 하며 사적 유용등의 책임과 특히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할 경우는 법적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 일반적으로 재화로의 가치가 없는 선물, 서민적인 숙식의 접대 등은 허용하나 사치스런 향응, 금품등의 수수행위는 금지 및 처벌한다.
 - 당내의 공직자 경선을 위한 세부규정(규약)을 마련하여 공적에 의한 선출제도를 확립한다.
 - 모든 정치자금은 투명하게 수입 출금이 되어야 하며 로비활동 역시 사적이 아닌 공적이며 당과 국가적인 이익의 범주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경조사의 경우 사적 로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소액(5만원 정도 수준)의 기부금, 화환, 물품은 허용하고, 범인이 인정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서의 도움을 위한 기부금은 그에 상응한 범위내의 기부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중한 병상치료, 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등으로 기부하는 행위)
- 대한당의 당직자들은 암행어사처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과 영생하는 천국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악들과 싸워야 할 도덕 윤리적인 책무가 있다.

정책순위

8

외교 안보 및 세계화

정책분야 외교 안보

- 세계는 정보화, 일일시대로 변화되었다. 기존 미국에 의존하던 외교정책을 초월하여서 다국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각 나라에 설치된 대사관을 통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방적인 외교 전략을 펼쳐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앞당기고, 세계를 지배할 경제, 문화, 정치의 외교정책을 수립, 강화한다.
- 이로 대사관 및 외교관의 파송나라들에 경제, 문화, 정치, 군사의 교류증대와 모국의 발전을 위한 제반 전문가들을 선임하여 대사관에 공존시키고 파송하여야 하며 특히 러시아 대륙으로 이어지는 유럽과 서남아시아의 주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고용인력 증대 및 자국의 이익을 증대하여 간다.
- 5대양 6대주를 주도하고 다스릴 교육, 군사훈련, 경제정책훈련, 생산능력의 증대, 언어훈련, 각 나라들의 적응능력을 배양한다. (곧 이의 모든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십자가의 도를 온전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 안보의 최고점은 첫째 북한공산당 수뇌부를 속히 박멸하고 흡수통일 할 제반 정책들을 세워 실천함이며 둘째는 타국의 부정한 윤리, 도덕, 문화, 침범 등의 국내간섭을 막는 것으로 국방력강화, 정신력강화, 개 국민의 애국 애족하는 정신배양이다. 이에 상응한 국가시책이 시급함에도 나라는 악한 정치인, 경제인들로 흔들리니 강력한 정부를 구축하여 부정부패를 먼저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정책순위

9

소득평균화와 근로(서민)정책

정책분야 서민정책

- 어느 직종을 막론하고 정직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로 상위급여 책정을 당연하다. 따라서 일하지 않고 노동쟁의 투쟁만을 일삼는 자들에게론 그에 상응한 급여를 지급치 않거나 퇴사하게 하는 법안을 강력히 입법한다(불법노조). 곧 일하는 단체의 각 사람들과 사업주, 노사가 함께 상벌을 갈음하는 기록을 유지하되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분쟁이 없게 하는 체제를 갖춘다.
- 행정부와 근로자들은 회사의 책임자(공직자의 장)가 근로기준법에 불법하는 행위, 회사의 이익을부당히 사취하는 행위 등을 고발하여 노사(공무원 상하)가 서로 한 가족으로 소득의 분배와 대우를 형편에 알맞게 하고, 노사는 또한 직장이 없거나 소외된 서민들을 도와 기회를 제공하여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경주할 법체계를 확립한다.
-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소단위 행정관으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노인, 장애인, 어린이, 거지, 노숙자 등에게로 사랑의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기업의 부와 정부의 예산투입을 우선하여야 한다.(이의 보강책으로 각 종교단체가 이것을 선행할 경우는 후로의 세금을 면제할 수도 있으며, 단 이의 시행은 그 지역의 행정관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전 국민의 소득 평준화와 서민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이 일들이 허위, 사취하는 식으로 된 것에는 엄벌에 처한다.
- 대한당은 분배 및 재분배 구조를 개혁하여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비정규직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민주적 시장경제를 확립하여 경제주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 순환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제 체제를 만든다. 이 역사적 과업의 성취를 위해 기업을 포함하여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경제주체들 간의 협력과 대화를 촉진한다.
- 일터에서의 격차와 차별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와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격차,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장애인 차별, 연령차별 등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각종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와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노사정 생산발전 관계를 구축한다.

-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성장전략을 폐기하고, 동일 가치노동 동일 임금제를 실시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특정 업무를 제외하고는 정규직 채용을 기본으로 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단 개인사업자와 회사의 실정에 따라 일정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고용 등을 할 수가 있다.

- 일자리를 갖는 것은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일자리 나눔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공유함으로써 전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강화한다. 실업, 육아, 퇴직, 산업재해 등 근로자가 직면한 사회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해소하며, 적정한 최저임금과 실업 급여보장, 직업훈련 확대,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등을 골간으로 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고용과 복지, 직업훈련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정책순위

10

국민단합과 세계주도

정책분야

국민단합

- 대한당은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함처럼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중왕으로 모시고 대한민국을 진리와 정의로 세계주도 및 최강국화하기 위하여 2016년 02월15일 진리대한당으로 창당하게 되었으나 5천만 대한민국과 8백만의 해외동포를 종교적 이념을 초월하여 하나로 단합하게 위하여 “대한당” 명으로 2019년 10월 당명을 개정하게 되었으니 대한당 당원과 이에 합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유익과 탐심을 버리고 스스로 성결 거룩하게 하고, 5천년의 유구한 백의민족 정신을 되살려 불법한 행위들(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국민의 비윤리, 비도덕, 불신, 공산주의 사상, 동성애 등의 악한 행위)을 척결 회개하게 하고, 대한당은 입법 사법 행정부의 관리들을 학벌, 재벌, 지연에 무관히 의로운 사람들로 발굴하여 이순신장군, 유관순 열사 들 목숨 바쳐 애국 애족한 선진들처럼 세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안보, 외교 등의 전반적인 국가부흥의 지표로 삼는다. 따라서 대한당의 증진들을 무소유적인 정신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국민을 사랑하고 애국하여 세계를 주도할 정신을 갖추어야 한다.
- (1항) 대한당의 정치력을 1950년 6월 25일 남침하여 70년이 찬 이제까지 무수한 남침과 살인 등으로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3김 북한공산독재체제를 멸하거나 해산시켜 북음평화 통일 하는데 둔다.(2항) 대한당은 사랑과 용서로 대국민 화합 단결할 수 있는 국가로 세워 나가며 신상필벌의 대국민 애국정신을 고취한다.(3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더욱 굳건히 세워 각자가 노력하여 기업 및 서민경제개발 등으로 각 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간 일한 만큼의 보상책을 강구한다. 따라서 불법기업 불법노조는 척결하여야 한다.(4항) 시장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에 장애가 되는 김영란법, 재산상속제, 이중과세적인 종교세, 금융실명제, 수출입관세 등의 세금과 법을 수정 폐지 혹 보완한다.(5항) 사회, 문화, 교육 등을 국민간의 사랑과 이해와 신뢰와 희생정신 등 주님의 가르침대로 의(義)롭게 만든다.(6항) 작은 섬나라가 해가지지 않던 대영제국이 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던 로마제국의 탄생은 당시 영국과 로마의 전 국민 정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군인들과 함께 최강의 대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애국정신이 세계를 지배했으나, 다시 이 사람들의 탐심과 사치로 망했듯이-, 5천년 한반도 역사도 그러했다. 이로 대한당은 이의 본을 삼아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순교자적인 자세로 국민정신과 국방력 등을 강화 단결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일하고 세계를 주도한다.(7항) 세계주도란 의를 행하는 전체 대한민국의 단합된 지혜로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을 대한민국이 주도-, 세계 백성이 진리와 정의 안에서 천국적인 삶을 누리게 하는 최종목적이 대한당의 결론인 것이다.

대한민국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한민국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대한민국당은 150세 건강장수 인생의 새시대를 열고 돈걱정 하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수있는 복지대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 2 | 대한민국당은 세계인류 지구촌 대축제를 문화, 예술, 체육, 음식 올림픽으로 주최하여 우리나라를 세계중심국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 3 | 대한민국당은 신인류창조의 최첨단 교육시스템으로 행복한 학교(happy school)를 만들고 부모조상 유통역사교육부터 행복한 사후 교육까지 평생교육 첨단대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 4 | 대한민국당은 악덕금융을 흥익금융화하여 세계경제를 살려나가는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 5 | 대한민국당은 부모님 존영모심 운동을 통하여 경천 승조 애인의 효문화를 이룩하고 종교문화가 아름답게 상생되는 나라로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 6 | 대한민국당은 심정교류를 통한 평화화합통일과 함께 DMZ를 세계평화교육장화하고 유엔본부 및 각국 박물관유치로 전쟁종식 세계평화의 지구촌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 7 | 대한민국당은 만주, 간도, 연해주 고토 회복과 유라시아 횡단철도망 및 AI인공지능 로봇자동화시스템으로 노동없는 행복한 4차산업의 첨단국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 8 | 대한민국당은 신문고 암행감찰제도를 도입하여 엄격하게 실행하고 세계네트워크 총본부 설립으로 다단계 피해자를 구제하며 무한에너지 실용화로 깨끗한 지구환경을 만들고 자연치유 신물질로 전염병없는 나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 9 | 대한민국당은 입법, 사법, 행정부의 적폐청산을 시작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 영역에 혁신적인 정책으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 10 | 대한민국당은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국가유공자님들과 유족님들께 충분한 위로금을 드릴 것이며 국민보호 제도를 도입하여 마음놓고 국·내외활동을 하는 국민보호시스템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정책순위

1

대한민국당은 150세 건강장수장생의 새시대를 열고 돈걱정 하지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수있는 복지대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책분야 복지, 건강, 의료

「대한민국사람은 대한민국당입니다!!!」

» **현황과 문제점**

- GDP는 OECD국가중 12위인데 복지수준은 OECD 28개국 중 꼴찌로 경제수준과 복지수준 사이에 괴리가 매우 큼
- 낮은 복지 수준은 사회불평등을 고착화 시키고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고 성장동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의 존립마저 위협함
- 생활고로 자살하는 가족들이 늘어나 자살공화국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 **목 표**

-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보람과 희열을 느끼고 자존감을 갖게 한다.
- 요람에서 무덤까지 150세 국가에서 건강장수를 보장 한다.
- 세계인류의 시원국으로서 천손민족 장손나라의 자손으로 자존심과 명예회복
- 전국에 2,000개의 자연치유센터를 개설하여 건강과 의료복지를 담당한다
- 노인빈곤 해소, 소득지원 확대, 다양한 가족 지원
-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찾아가는 재가복지 서비스를 운영하여 온국민이 조국으로 자랑하는 대한민국을 실현

» 이행방법

□ 복지 부문 정책

1. 결혼 축하금 지급
 - 초혼: 1억원 경비 지급 과 주택마련비용 6억원 지원
 - 재혼: 출산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결혼축하금 소급지급
2. 출산 축하금지급
 - 1자녀: 1억원, 2자녀:1억5천만원, 3자녀:2억원, 4자녀:2억5천만원, 5자녀부터 자녀당 5,000만원 씩 추가 지급
3. 연령별 기본소득 지원금
 - 0세 ~17세 까지 월 50만원 지급
 - 18세~24세 까지 월 150만원 지급
 - 25세~74세 까지 월 240만원 ~480만원 기본생활 유지비 지원(5년주기 월 24만원 씩 상향)
 - 75세~150세 까지 5년주기 월 24만원씩 감액하여 최종 월 240만원 기본생활 장려금 지원
4. 효자효부 지원금 :부모,조부모,증조부모,고조 부모님까지 1가정에서 함께 모시면 각 1대 자손에게 부모님 계좌를 통해
 - 1분모심 : 월333만원(2분모심: 월666만원 지급 3분모심 : 월999만원...)
 - 4대 부모 모심과 5대 제사봉사를 통해 웃대, 아랫대 자손까지 10대가 화목한 가정을 이룸
5. 생일 케익과 생일 축하금 지급
 - 유아(10), 청소년(20), 성인(50)만원 씩 지급
 - 중소기업 관련 상품권으로 지급(제조기업 활성화)
 - 문화예술 관람권, 여행상품권 등을 지급
6. 장애인 정책 첨단화
 - 260만 장애인의 실질 생활비 월 100만원 지원과 취업 보장
 - 장애인 고용 기업 획기적인 우대 정책 마련
7. 국가 유공자 최고의 예우
 - 소년, 소녀 학도병, 독립 유공자, 6.25참전 용사, 월남 참전용사, 일제징용, 위안부,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친 모든 분들에 대한 예우

- 최초 6억 원과 월 333만원지급 하고, 신청시 이미 사망한 경우 직계 가족에 최초 6억 원 지급 하고 5대손까지 월 333만원 지급

8. 미혼모 보호 및 자녀 양육 지원시설 확충

- 정부 직접 관리, 보호시설 확보

9. 소년 소녀 가장 생활비 지원

- 무상교육은 물론 생활비 매월 100만원과 부양가족 수 대비 50만원씩 추가지급

10. 국민들을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

□ 150세 장수 건강·의료 부문 정책

1. 의료계의 혁신 및 의료 적폐 해소(제3의학 정착 실현)

- 4무주의:무혈. 무통. 무약. 무수술
- 4친주의:인간. 자연. 환경. 생태친화주의

2. 인간존중/생명존중/인도주의/평화주의 구현

- 생명 최우선의 정책으로 빈민한 자 구제와 건강사회 구현

3. 의료관광 대국화(세계적 의료 관광 체계 구축) (양,한방 협진과 자연치유 조화 시스템 구축)

4. 150세 건강장수 시대 개막 : 장기재생 등 건강장수에 꼭 필요한 신약과 신물질 확보

» **이행기간**

□ 대한민국정부 및 국회와 관련 법조항 제정 및 정비 후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대한민국당 10대공약 재원조달방안(※별첨) 참조

「대한민국사람은 대한민국당입니다!!!」

정책순위

2

대한민국당은 세계인류 지구촌 대축제를 문화, 예술, 체육, 음식 올림픽으로 주최하여 우리나라를 세계중심국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책분야 문화, 예술, 체육

「대한민국사람은 대한민국당입니다!!!」

» 현황과 문제점

- 싸이,BTS등 의 예술인들과 체육인들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이 일고 있으나 조상님의 얼을 숭상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풍습이 사라진 지 오래이다.
- 이제 문화,예술,체육 분야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조상님께 예를 올리는 유통식으로 신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 목 표

- 세계인류 지구촌 대축제 개최
- 세계적인 문화 행사를 년1회 이상 개최한다.
- 관혼상제시 정부지원금으로 활성화 시킨다.
- 유통식으로 신문화 정착
- 한글 전세계 공용어화

» 이행방법

- 세계 인류 지구촌 대축제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고 한글만을 써 자연스럽게 세계공용어가 되게 한다.
 1. 세계인류 지구촌 문화 올림픽 : 한글경연대회, 전통문화경연대회, (제기차기, 윷놀이,씨름, 택견, 연날리기, 자치기, 땅따먹기, 구슬치기, 공기놀이, 그네뛰기, 널뛰기, 고리던지기, 줄넘기, 투호,

- 비석치기, 술래잡기, 닭싸움, 굴렁쇠 등) 세계전통문화 경연대회(전 세계인의 문화축제 한마당, 지역별 전통문화 경연)
2. 세계인류 지구촌 예술 올림픽 : 전 세계인 대상 새노래경연대회, 각설이 경연, 비보이 경연대회, 그림, 건축, 조각 등 한글과 대한조선에 영감을 받은 작품 경연대회, 탈춤, 농악놀이, 강강술래, 장고, 사물놀이 경연대회
 3. 세계인류 지구촌 체육 올림픽 : 명랑운동회, 에어로빅, 배드민턴, 댄스, 요가, 팔씨름, 차전놀이, 씨름 대회 등
 4. 세계인류 지구촌 음식 올림픽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전세계 요리 경연대회
 5. 세계인류 지구촌 한류 올림픽 : 한문화, 한복식, 한류스타 따라하기, 한지공예, 칠보, 자개 공예, 한옥설계 경연대회, 송편만들기, 떡메치기 경연대회
 6. 세계인류 지구촌 영화 올림픽 : 지구의 어머니 마고님을 주제로 한 영화제작으로 세계인류에게 역사 교육 자료로 활용함. 시청률 세계1위영화 제작 세계영화 경연대회

□ 관혼상제의 전통문화 복원 및 전세계 보급

1. 장례장묘산소문화역사 정착(매장 시 3,000만원)
2. 장례비용(1,000만원) 정부 지원
3. 조상부모님 사진(존영)모시기: 각 가정당 매년 100만원 정부 지원
4. 제사(3대까지 50만원, 4대 70만원, 5대 100만원) 정부지원
 - 5대이상 제사(시제,차례비용) 비용 지원
5. 성인식 개인별 500만원 정부지원
 - 20세 도달 성인 남녀대상(성인식 교육 수료자 대상)

□ 첨단 4가정 유통식의 신문화 정착

1. 유통식 비용 전액 국가 부담
2. 천성경 음원 보급 지원 과 음향 기기 지원
3. 제례 용품 및 유통식 의상 지원
4. 유통식 행사 전담반 구성 지원
5. 유통식 실태의 방송 증계 지원

□ 노래방 문화 혁신

- 부정적이고 염세적이며 비관적인 기존 대중가요의 노랫말을 긍정적이며,희망적이고 꿈을 이루는 가사로 개사한 개사곡 음원을 보급하여 노래방 문화를 혁신한다.

□ 문화, 예술, 체육 활동비 지원 : 실비 제공

- 전국민 악기 제공 등 문화, 예술, 체육 교습비 지원으로 취미생활을 즐기며, 여가 선용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대한조선 전통문화 체험단 모집 운영 : 연중 전세계인 대상, 경비, 숙박비, 선물 제공

- 궁궐순례체험, 화전놀이, 강강술래, 막걸리체험, 김치담기, 음식체험프로그램
- 한복체험, 한지공예, 도자기공예 체험 등

» **이행기간**

□ 대한민국정부 및 국회와 관련 법조항 제정 및 정비후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대한민국당10대공약 재원조달방안(※별첨) 참조

「대한민국사람은 대한민국당입니다!!!」

정책순위

3

대한민국당은 신인류창조의 최첨단 교육시스템으로 행복한 학교(happy school)를 만들고 부모조상 유통역사교육부터 행복한 사후 교육까지 평생교육 첨단대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책분야 교육

「대한민국사람은 대한민국당입니다!!!」

» 현황과 문제점

-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국가의 존립과 안위는 물론 민족의 자존감과 민족성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자아실현을 위해 자기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식의 교육보다는 일률적이고 흥미없는 지식을 강제로 주입시킴으로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무시한 채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교육의 문제점이 있다. 기회제공이 적으며, 성적으로만 평가하는 평가방법, 윤리나 도덕 보다는 평가위주로 교육을 받게 되는 총체적인 불합리함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재능을 발휘하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전생애 교육을 정부가 맡아서 하면서 부모는 부모되는 교육을 받고 자녀는 성장하면서 진정한 참부모가 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모든 일체의 비용은 정부에서 맡아야 한다.

» 목 표

- 전국의 45개 국립대학을 서울대학교로 통폐합하여 세계제일의 첨단대학으로 만든다(하버드 대학 능가)
- 수능시험을 3과목(건강체육, 인성과영성, 특기적성)으로 축소평가
- 사교육비 제로, 영유아부터 대학까지 그리고 2번째 3번째 대학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며 석,박사과정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 정부주도 전생애 교육(성인식, 혼전, 부모 잉태전, 태아, 영아, 유아 교육 부터)실시

□ 동십훈 교육법 보급 프로그램 개발

- 단동십훈 「불아불아(弗亞弗亞), 시상시상(侍上侍上), 도리도리(道理道理), 주앙주앙(主仰主仰), 건지곤지(乾知坤知), 섬마섬마(西摩西摩), 업비업비(業非業非), 아합아합(亞合亞合), 짹짹궁짹짹궁(作作宮作作宮), 질라아비 훨훨(地羅亞備活議)」 우리의 전통육아법의 보급으로 철학과 정신을 계승하게 한다

» 이행방법

□ 과목수의 획기적인 감축과 평가방법을 혁신

- 고등학교 시험은 3과목만 실시
- 중3때 평생전공 결정, 고교부터 특기적성 1과목(인성,체육포함)만 시험을 치고 수능 시험을 폐지한다
- 몸과 마음과 실기로 전인적 성장 평가

□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백과사전식 시험 폐지

□ 사교육비 제로, 영유아부터 대학 그리고 2번째 3번째 대학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며 석, 박사 과정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 특별장학금지급 : 효도장학금, 영재장학금, 노벨장학금 등 신인류창조의 최첨단 교육시스템으로 행복한 학교(happy school)를 만들고 부모조상 유통역사교육부터 행복한 사후 교육까지 평생교육 첨단대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잉태 전 부모교육, 태아교육, 영아교육, 유아교육, 초.중.고 보통교육, 대학, 대학원, 전문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 노년교육, 웰빙, 웰다잉교육, 영계교육의 수직적 첨단교육 시스템 구축

□ 전생애 교육용 교과서의 혁신적 개발

□ 세계인류 역사교육관 설립 개발

-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혼돈을 중심잡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제절벽을 넘은 새로운 이념의 융합주의 융복합이즘ism의 구현
- 강화도를 전세계 인류역사 교육 성지로 조성한다
- 강화도 마니산 길상산 전체를 교육의 성지로 조성 한다
- 하나님,조상님,부모님 경천송조애인 사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영성교사/지도자 양성
- 전국 교육청 교육 과정 보급
- 지구의 어머니 마고님을 주제로한 영화제작으로 세계인류에게 역사 교육 자료로 활용함. 시청을 세계1위영화 제작

□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실현

- 학생의 천부적 인권을 보호하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의 시스템을 구축
-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하여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사회를 만든다
-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으로 어린이·청소년이 진정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대우를 받는 사회를 구축

□ 청소년 교육환경 조성

- 학교중심의 교육에서 사람중심의 교육 정책으로 전환하고 교외활동을 보장
-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성평등교육, 통일교육, 다문화교육을 의무화 한다.
- 전학년 전면 무상교육 및 급식의 질 향상과 농어촌 및 작은학교 보호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동 단위별로 지원한다.
- 건강을 해치는 0 교시 및 심야야간 자율학습 강제의무를 철폐한다.
- 저탄소 배출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
- 차별과 징계위주의 학교 폭력 대응 방안에서 회복적 실천교육으로 변화시킨다
- 초,중,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교복, 두발 등의 학생자율을 보장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의무적으로 참석시킨다.
- 학생회 법제화 교육과정 내 청소년 모의 투표 실현 및 청소년 피선거권 연령 하향(현 25세)
- 청소년 노동자의 최저임금제 법제화로 법적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 및 노동권을 보장한다.
- 청소년 기본소득 정책은 별첨 재원조달 방안 참조

□ 교육의 어원적 의미를 교육과정에 반영

- 孝 + 攵(효도 효 + 회초리 북, 칠 북) = 교(教)
- E + Duco (out + throwing) = Education(교육) 일방적 주입식이 아니고 천부적 재능을 끌어내어 계발시킨다.

» 이행기간

□ 대한민국정부 및 국회와 관련 법조항 제정 및 정비후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대한민국당10대공약 재원조달방안(※별첨) 참조

「대한민국사람은 대한민국당입니다!!!」

정책순위

4

대한민국당은 악덕금융을 흥익금융화하여 세계경제를 살려나가는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책분야 흥익금융, 조세

「대한민국사람은 대한민국당입니다!!!」

» 현황과 문제점

- 시장금리는 하락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취약계층에는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음
- 공급자 위주의 서민금융지원으로 서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원하는 종합적 금융서비스 지원 체계 미비
- 국내경기부진으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의 대출이자 상환부담 가중으로 신용불량자 속출
- 세금 누수 현상 및 탈세자 해외도피 자금 유출 등 심각한 상황

» 목 표

- 서민을 확실하게 살려드리고 파격적인 신용회복 방안 마련
- 신용불량자 전원 신용 회복 및 부채완전 탕감
- 누수없고 탈세없는 공정 사회 구현
- 암호화폐를 국가기간화폐로 발행 유통

» 이행방법

- 흥익금융 부문 정책
 1. 화폐개혁, 카드사용(탈세 막음)

- 통합 카드(신용+체크+적립+신분증 등 기타)한 개로 하고 정부 복지 지원금도 카드에 지급, 전국민과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기업의 카드의무화, 세금누수 원천봉쇄 및 집행누수 제로 시스템가동
 - 화폐 어음 유가증권 등의 디자인 개혁으로 사장되어 묻혀있는 돈의 양성화와 함께 세수를 확보한다
2. 1,000만 신용불량자 구제 시스템 개발로 산업 전사의 명예회복과 재기할 수 있는 여건 마련
 3. 1,500조 원의 가계부채와 780조 국가부채를 집권기념으로 전액 탕감 조치
 4. 악덕 금융을 밝고 맑은 홍익금융으로 대 전환, 무이자 홍익금융 대출 또는 지원
 5. 암호화폐를 한국은행에서 국가기간 화폐로 발행 유통(화폐개혁)
 6. 돈을 벌어야 했던 earning money시대에서 돈을 만들어 쓰는 making money 시대를 거쳐 돈을 상속받아서 쓰기만 하는 using money 시대를 향유하는 홍익금융 시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조세 부문 정책

1. 조세정책 혁신으로 탈세 없는 공정사회 조성
 - 약 40종류의 세금을 국세1개로 통합하여 중앙통합관리하고 15종의 자동차 관련세금은 통합징수 시키며 세금포인트제도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세수를 확보한다
2. 전산 납세 포인트제도 도입(매매, 상속, 증여 가능)
 - 납세 포인트 제도를 실시하여 개인과 기업에게 납세 실적에 따라 국가 유공자 대우와 금융지원을 하며, 납세 포인트를 매매.증여.상속까지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즐거운 납세와 성실납세자를 존경하며 전산화 카드로 부정과 탈세 없는 밝은 사회로 환원
3. 지방세 폐지
 - 국세로 통일하여 중앙통합관리로 예산낭비를 막는다
4. 과태료, 벌금, 범칙금, 각종 조세와 준조세 등을 재산비례로 부과시켜 세수의 획기적 증대 100조 이상 창출
5. 악덕 체납자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체납자 공개 수배: 현상금 체납액의 1/10 포상
 - 체납자 신원만 확인되면 : 사용수익권 현장에서 강제 박탈
(ex. 자동차압수, 주택압수, 골프채압수 등)
6. 공유 경제를 위한 복지 지원금의 10%는 세금으로 납부 의무화
 - 모든 지원금의 1/10은 의무적 세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그 이상은 자율에 맡긴다. 돈을 벌고 저축하며 상속하는 문화가 서서히 바뀌게 되면 9/10 나아가서는 전체금액과 개인 돈까지 대한민국당에 후원기증하는 문화가 되면서 돈에서 완전해방되는 신문화가 형성될것입니다.

정책순위

5

대한민국당은 부모님 존영모심 운동을 통하여 경천 송조 애인의 효문화를 이룩하고 종교문화가 아름답게 상생되는 나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책분야 종교, 국교

「대한민국사람은 대한민국당입니다!!!」

»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다종교 사회이다. 전체인구의 대부분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전통 민족 종교는 거의 쇠퇴하고 불교, 개신교, 천주교 3대종교가 독과점 구조로 되어 있다. 민주화 이후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정치가 종교에 협조를 구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고 쉽사리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권력으로 성장되어졌다. 모든 종교는 사리사욕과 자기중심, 개인주의, 양적팽창, 외형지상주의 등으로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종교를 갖지 않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실정이다. 태초에 우리의 조상님들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자연의이치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 왔던 얼을 되살려 첨단 신앙으로 모든 종교를 부활 복귀 시키고 통합하여 부모님, 조상님, 하나님을 잘 모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목 표

□ 경천송조애인 사상 고취

- 하늘을 공경하고 조상을 기리며 사람을 사랑하는 법
-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인간된 도리를 다하는 정신함양

□ 첨단 신문화 정착

- 밝게하고 새롭게하라 실천운동을 새마음운동화 시킨다.
- 최첨단 신문화 유통식 정착

□ 효도와 신앙(종교)의 조화로운 생활문화 추진

» **이행방법**

□ 부모님 존영모심 운동을 통하여 경천 승조 애인의 효문화를 이룩하고 종교문화가 아름답게 상생되는 나라로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종교의 부활 복귀 및 국교 통합 지원

- 면죄부를 돈으로 팔아버린 종교의 부활 복귀
- 먹고 살기 위한 도구로 직업이 되어버린 종교의 부활 복귀
- 원죄를 교묘히 상술로 포장한 종교의 부활
- 수많은 교주를 양산하여 선량한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 먹는 타락한 종교의 부활 복귀
- 수많은 이름의 종교와 그 안에서 쪼개지고 쪼개지는 허상의 종교의 부활 복귀
- 모든 종교의 대표자들과 총 연대하여 새로운 종교문화 창출과 국교 통합의 새 시대를 여는 시금석 마련
- 진정한 종교의 부활 복귀 와 국교 통합을 위한 과감한 지원
- 지구촌 세계인을 사랑과 평화정신으로 교육시킴

□ 첨단 4가정 첨단유통식(천도제, 회원식) 신문화 정착

- 유통식 비용 전액지원

□ 효도와 신앙의 조화로운 생활문화

□ 악덕교주의 사회문제 해결

□ 천손민족 장손나라 역사교육으로 종교의 실체검증

» **이행기간**

□ 대한민국정부 및 국회와 관련 법조항 제정 및 정비후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한민국당10대공약 재원조달방안(※별첨) 참조

「대한민국사람은 대한민국당입니다!!!」

정책순위

6

대한민국당은 심정교류를 통한 평화화합통일과 함께 DMZ를 세계평화교육장화하고 유엔본부 및 각국 박물관유치로 전쟁종식 세계평화의 지구촌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책분야 통일, 외교, 국방

「대한민국사람은 대한민국당입니다!!!」

» 현황과 문제점

□ 현정부에서 추구하는 힘을 통한 평화 추구 전략에 의하면 향후 5년간 270.7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확보하려면 연평균 국방비를 7.5% 증가시켜야 한다.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대비 13.7% 늘어난 15조 3733억원 규모로 편성된 것을 보면 평화통일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4.27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한 것을 토대로 현재 남쪽 63만명의 군인과 북쪽 119만명의 군인에 들어가는 막대한 국방비를 통일한국에서는 57만명정도만 있으면 자주국방이 가능하고 이들 또한 모병제를 통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한다면 엄청난 예산절감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

» 목 표

- 평화화합 통일한국을 완결한다.
- 자주국방에 필요한 병력 57만명으로 감축한다.
- 모병제로 직업군인을 선발하고 준 공무원 대우
- DMZ에 세계평화 교육장 개장
- DMZ에 UN기구 유치
- 평화화합 통일 후 국호를 대한조선으로 변경한다.
- 전쟁을 원초적으로 종식시킨다.

» **이행방법**

□ 통일 부문 정책

1. 심정 교류를 통한 평화 화합 통일 분위기 조성
2. 남·북·미 평화 협상의 주도적 경영
3. 전국에 평양 형 백화점 5개 , 남한 형 백화점 5개와 문화예술 센터 조성(인적 물적 문화교류 확대)
4. 영종도에서 중국 청도(칭다오)까지 한중 해상 대교 건설(아시아 통일 기반 조성 및 외국과의 활발한 교류)
5. DMZ비무장 지대를 세계인의 평화교육 장소화(6.25 참전 16개국을 필두로 세계 민속 박물관 설치)
6. DMZ에 유엔본부와 각종 국제기구, 각국 박물관 등을 유치
7. FDA 승인국, 노벨상 시상국을 만들어 첨단 대국 건설
8. 세계인이 찾아오는 중심국이 되게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행 육로· 해로· 항공로의 시스템 재정비
9. 평화화합 통일 이후 국호를 대한조선으로 변경
10.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 살상무기와 물자를 폐기하여 지구상에서 전쟁을 종식시킨다.
11. 군수물자 생산공장을 폐기하고 융복합 산업기지로 바꾼다.

□ 국방·병역 부문 정책

1. 의무병제 폐지, 모병제로 전환
2. 공무원에 준하는 안정적 보수와 복지 지급
 - 월 300만원 이상 급료와 생명수당 지급
3. 철저한 직업의식 속에 국방의 실익 증진
4. 국방 관련 부조리와 병역 비리 근절 시스템 구축
5. 전쟁 종식, 세계평화의 완결을 통하여 절감된 국방비를 세계인류 구원 복지기금으로 충당

» **이행기간**

□ 대한민국정부 및 국회와 관련 법조항 제정 및 정비후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대한민국당10대공약 재원조달방안(※별첨) 참조

「대한민국사람은 대한민국당입니다!!!」

정책순위

7

대한민국당은 만주, 간도, 연해주 고토 회복과 유라시아 횡단철도망 및 AI인공지능 로봇자동화시스템으로 노동없는 행복한 4차산업의 첨단국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책분야 국토교통, 산업,경제,

「대한민국사람은 대한민국당입니다!!!」

» 현황과 문제점

□ 대표적인 산업경제를 부흥시키는 클러스터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샌디에고의 바이오클러스터, 일본 도쿄의 시부야 비트 밸리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대덕밸리, 테헤란밸리, 울산의 자동차 클러스터, 이천의 도자기 클러스터 등 30여 개가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산업특성을 적절히 융합하여 정체성과 경쟁력을 갖추게하여 긴밀히 상호작용이 되도록 만들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면 산업,경제의 부흥을 가져올 것으로 확신 한다.

» 목 표

- 만주-간도 연해주 고토 회복 및 정착
- 농업 뉴딜정책과 AI인공지능 로봇자동화 시스템 보급
- 무한동력에너지,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화석 및 원자력 발전 완전대체
- 청년취업국가 책임제 실시
- DMZ에 세계자연유산유네스코 지정으로 세계적인 관광명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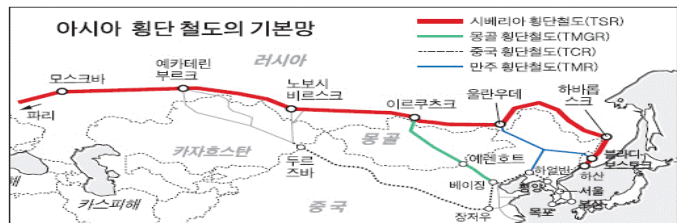
» 이행방법

- 농업 뉴딜정책과 친환경 인공지능 로봇자동화시스템 경영
 - 800여개 단지 특용작물,일반 작물 재배
 - 600만 실업자(20~70세) 급여와 숙식제공 실업자 해결 및 농업을 살린다.
 - 농촌은 체험,관광,테마공원이 되어 노동은 사라지고 부와 여유와 무한 식량 자동 생산의 행복한 전원이 된다.

□ 무한동력에너지,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화석 및 원자력 발전 완전 대체

□ 만주, 간도, 연해주 고토 회복 및 유라시아횡단철도망 구축

- 시베리아 횡단철도 9.288km / 중국횡단철도 8.613km
- 만주횡단철도 7.721km / 몽골 횡단철도 7.753km
- 경제벨트를 연결 접점에 있으면서 대륙경제권, 해양경제권
- 도시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 AI인공지능 로봇자동화 4차 산업혁명 미래시대를 앞 당겨 생활속에 실현

- 인공지능로봇 산업에 적극 활용 : 3D업종, 노동력 필요 현장 등에 투입
- 유전학, 생물공학, 3차원 프린팅 등을 생활속에 적극 활용
- 사람은 본연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아실현과 취미,특기적성 기본 소양 함양에 주력할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노동없는 행복한 4차산업의 첨단국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곡류창고, 세계중고 자동차 시장 개척

□ 국민가계부채 1,500조와 국가부채 780조를 완전 탕감

□ 청년취업국가책임제를 실시

-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봉급 외 월100만원 씩 5년간 지급
- 5년이상 근무자가 창업시 무이자 5억 대출
- 대기업 위주의 취업경쟁을 바꾸며 청년 창업을 키워 나간다

□ DMZ를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 지정받아 세계인들의 관광코스 1호가 되게 한다.

「대한민국사람은 대한민국당입니다!!!」

정책순위

8

대한민국당은 신문고 암행감찰제도를 도입하여 엄격하게 실행하고 세계네트워크 총본부 설립으로 다단계 피해자를 구제하며 무한에너지 실용화로 깨끗한 지구환경을 만들고 자연치유 신물질로 전염병없는 나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책분야 언론,사회,환경

「대한민국사람은 대한민국당입니다!!!」

» 현황과 문제점

- 언론적폐는 관료제와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변화와 혁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언론사간 과도한 경쟁등에서 출발한다. 각 언론사가 수익성 악화와 신규인력 충원의 감소등으로 불가피하게 무리한 취재경쟁과 저널리즘의 윤리를 경시하는 보도가 늘어나게 되고 노조 또는 자회사 중심주의를 심화시키고 종사자 개인의 이익을 챙기려는 모순에서 적폐가 발생되게 된다. 따라서 언론사간 경쟁 심화는 기자 및 보도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시민과 시청자의 불신을 초래하게 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가장 큰 적폐는 언론이라 할 수 있다.
- 불공정한 사회 생활속 반칙과 특권을 생활 적폐라 하며 이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학사비리, 갑질행위, 지역토착비리, 보조금 등 공적자금 부정수급, 탈세행위, 재개발.재건축 비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안전분야 부패 등이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 출발점에서부터 불평등과 우월적 지위남용,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등 과제를 안고 있으며 진정한 적폐청산의 의지를 가지고 발본색원 근원부터 청산하여야 한다.

» 목 표

- 신문고 암행감찰제도 부활
- 행정구역 통 폐합
 - 16개 시.도를 5개도로 통합
- 석유 등 화석 및 원자력을 무한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로 완전 대체

» 이행방법

□ 언론 부문 정책

1. 정도 정법의 신문명 방송 재단 설립
 - 공정·공평한 언론 문화 정착
 - 빅데이터를 활용한 초고속 동영상 시대 개막
 - 현장 흡쇼핑 직거래 방송으로 경제 활성화
 - 서민의 애환을 해소하는 신문고 역할 담당
2. 언론 통폐합으로 믿음직한 언론 문화 형성
3.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 정립
4. 사이버 기자 악덕 기자 근절 시스템 정립
5. 선거개표 조작, 세월호 사건 은폐 등 악순환 청산

□ 사회·환경 부문 정책

1. 네트워크 사업 첨단 활성화
 - 세계네트워크 총 본부 설립
 - 국가 첨단 시스템으로 다단계의 폐해 예방
 - 눈물의 테헤란로를 성공과 기쁨의 테헤란로로 바꾼다.
2. 신문고 암행감찰제도 부활로 부정부패와 적폐 청산
 - 신문고 암행감찰제도 시행으로 선심성예산의 색출과 자회사를 암암리에 밀어주는 관행 및 교묘한 상속비리와 각종 부조리한 거래관행을 일망타진시켜 악덕금융을 일소시킴
3. 행정 구역의 혁신적 통폐합
 - 망국적 지역감정 해소
 - 행정 비용의 획기적 감축, 복지자금으로 전환
 - 남한 16개 시도를 4~5개, 북한을 2~3개로 통합
 - 경기도와 인천지역 인근을 서울로 통합하여 『서울』을 세계에서 가장 큰 수도로 홍보 하여 아시아 연방통일국을 준비 , 또한, 인천공항을 서울공항으로 이름을 바꾸어, 우리나라 문화홍보를 통해 『세계의 첨단공항』으로 혁신.
 - 전국 16개 시.도(道)를 5개 시.도(道)로 합병하여 지역감정을 완전히 해결(서울,경기,인천을 서울로 합병, 제주도, 전라남도과 경상남도 전경남도로 합병 경상북도 와 전라북도 합병 전경북도, 충청남북도과 강원도는 충강도)

4. 팔당의 취수 원을 소양강 댐으로 이전(특급수 화)
5. 농약 공장을 모두 없애 오염의 근원 해소, 전 세계 친환경 한국산 공산품이 값비싸게 팔리도록 하여 농업대국을 실현 첨단 지형적 개발 지구 대지 보존 기능을 열게 하겠습니다.
6. 석유 전기 원자력을 무한 에너지로 대체하여 지구 환경의 원천적 보호
 - 무한동력 무한에너지 실용화
7. 국토 이용계획 법률의 재정비로 난 개발 예방 및 자연 보호(4대강의 폐해 예방)
8. 중국과 협조하여 대단위 삼림조성으로 황사의 근원을 차단
 - 미세먼지방지용 공기청정기 와 황사마스크 공급
9. 코로나 19,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전염병에 대비 면역력 증강을 위한 신약 및 신물질 개발하고, 자연치유력 향상을 위한 미라클 연구시스템 가동

» 이행기간

□ 대한민국정부 및 국회와 관련 법조항 제정 및 정비후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한민국당10대공약 재원조달방안(※별첨) 참조

「대한민국사람은 대한민국당입니다!!!」

정책순위

9

대한민국당은 입법, 사법, 행정부의 적폐청산을 시작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 영역에 혁신적인 정책으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책분야 사법, 정치, 외교

「대한민국사람은 대한민국당입니다!!!」

» 현황과 문제점

- 법은 약자를 묶고 지배하기위한 강자들의 발명품이고 도덕은 강자를 제한하고 저지하려는 약자들의 발명품이란 철학적 논거에 의해 지금까지 강자로 군림 해온 정부와 검찰에 대해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적 처신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과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관행적으로 행해온 모든 사법부 적폐들을 청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과거사를 부정 하고 우리정부를 굴복시키려는 아베정부의 노골적인 정치 꼼수에 놀아나지 않도록 하고 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개인배상을 받아야하고 그 바탕위에 진정한 사과와 용서도 선행되어야 한다.
- 아울러 중국의 동북공정과 미국 등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탈도 근절 시켜야 한다.

» 목 표

- 사법부 적폐청산
- 입법부 체질개선
 - 학생인권법제정/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 제정
 -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
- 정당제도 시스템 개선/ 행정부 관료제 병리현상 타파
- 지자체장 임명제 시행

» 이행방법

□ 사법부의 적폐 청산

1.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관행 타파/ 전관예우 악습 척결을 위한 임용 방법 개선
2. 판사 검사 변호사 간의 부정 연결고리 차단
3. 국민 배심원 제도 도입으로 재판 투명성 확보
4. 판결문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
5. 재산 비례 벌금형으로 교도소 범죄 확산 차단
 - 매년 100조원 이상 세수 증가 예상
 - 벌금 : 생업을 위한 불법주차0 원

□ 입법부의 체질 개선

1. 명예직 봉사직으로의 전환
2. 임기 중 국민 소환제 시행
3. 국민민복을 위한 선거구제 및 직능 대표제 도입

□ 정당 제도의 시스템 혁신

1. 선거비용 100% 국가지원
2. 투·개표 투명성 확보
3. 정경유착의 고리 원천 차단, 언론 재벌 야합 근절

□ 행정부 관료제의 병리현상 타파

1. 결재 단계의 대폭 축소로 신속한 정책 집행
2. 기관장, 단체장, 부처장 등의 출선수범 정착
3. 위인설관, 부서 신설 규제로 공무원 수 축소
4. 행정 실명제 도입으로 명확한 책임 행정 구현
5. 화백제도 부활로 투명 공정 행정 구현

□ 범죄 훈련소와 같은 교도소 범죄의 전염을 막고, 예산 절약을 위해 강력범 또는 흉악범을 제외한 범법자는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바꾼다.

□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어 예산낭비(2조 3천억) 및 국민혈세를 절약한다.

» **이행기간**

□ 대한민국정부 및 국회와 관련 법조항 제정 및 정비후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한민국당10대공약 재원조달방안(※별첨) 참조

「대한민국사람은 대한민국당입니다!!!」

정책순위

10

대한민국당은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국가유공자님들과 유족님들께 충분한 위로금을 드릴 것이며 국민보호 제도를 도입하여 마음놓고 국·내외활동을 하는 국민보호시스템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책분야

4차산업경제
재외동포

「대한민국사람은 대한민국당입니다!!!」

» 현황과 문제점

□ 국민보호제도는 국민의 생존권과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시행중인 제도로서 자국내는 물론 재외동포에도 적용되는 제도이다. 자국민이 해외범죄에 휘말리면 선진국은 조사,재판,지원등을 하는데 비해 우리정부의 보호는 미흡하다. 경비지원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범죄피해를 보거나, 형사절차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령 체계가 없는 상황. 각국 법률이 서로 충돌 할 수 있는 부분은 느슨하게 규정하되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를 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우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자국민으로서 국가의 재정적, 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하는 민.형사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소 생계를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국민보호제도를 마련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을 철저히 보호해 드려야 한다.

» 목 표

- 국가유공자 명예회복 및 경제적 권위 확립
- 가정생활용품 압류금지
- 전,월세보증금 6억원까지 재산 압류금지
- 국민위원회 설립 신속한 민원 해결
- 국민보호제도 완벽보완(내국인, 재외동포)

» **이행방법**

-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국가유공자님들과 유족님들께 충분한 위로금을 드릴 것이며 국민보호 제도를 도입하여 마음놓고 국·내 외활동을 하는 국민보호시스템 가동
 - 소년, 소녀 학도병, 독립 유공자, 6.25참전 용사, 월남 참전용사, 일제징용, 위안부,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친 모든 분들에 대한 예우
 - 최초 6억 원과 월 333만원지급 하고, 신청시 이미 사망한 경우 직계 가족에 최초 6억 원 지급 하고 5대손까지 월 333만원 지급
- 가정생활용품 압류 금지와 악법 철폐
- 전.월세 보증금 6억원 까지 재산 압류금지
- 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은 즉시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시스템 가동
-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
- 국민위원회를 두어 민원 신속히 해결한다
 - 암행감찰제도의 결과를 통해 비리와 불법을 미리 차단하고 선행을 알리어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에 의한 『정의와 공평』의 나라를 만든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 준행
- 재외동포 국민보호제도 보완
 - 신속대응팀 구축, 고위급 파견
 - 영사콜센터 홍보
 - 긴급구난활동비 사용한도액 파격 증액
 - 긴급대피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용기 투입
 - 신속 해외 송금시스템 가동
 - 인터폴과 연계한 신속한 수사팀 구축
 - 국제테러, 마피아 등으로부터 재외동포 생명을 보호하는 시스템 완비
 - 해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영사관, 공무원 들의 직무태만 일소로 봉사행정 구현

» **이행기간**

- 대한민국정부 및 국회와 관련 법조항 제정 및 정비후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한민국당10대공약 재원조달방안(※별첨) 참조

「대한민국사람은 대한민국당입니다!!!」

별첨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

「대한민국사람은 대한민국당입니다!!!」

가정, 나라 살리기 정책안 1년 예산

2017~19년 통계청 자료 참조

| 항목 | 연령 | 인원 | 년간 지급액(단위:원) | 비고 |
|-------------------|-----------|------------|--|---|
| 결혼축하금 | | 250,000 | 175,000,000,000,000 | 결혼비용1억원+주택자금6억원(부부공유) ※재혼:출산시 결혼비용 소급지원 |
| 출산축하금 | | 330,000 | 115,500,000,000,000 | 1자녀:1억,2째:1억5천,3째:2억,4째:2억5천 5째부터5천만원지급※시행년도기준 |
| 연령별 기본소득 지원금 | 0~17 | 7,900,000 | 47,400,000,000,000 | 요람에서무덤까지기본생활보장 ※ 별첨 조건표 참조 |
| | 18~24 | 4,500,000 | 81,000,000,000,000 | |
| | 25~74 | 36,000,000 | 1,555,200,000,000,000 | |
| | 75~150 | 3,600,000 | 134,784,000,000,000 | |
| 효자효부 지원금 | | 2,000,000 | 159,840,000,000,000 | 1분모심:333만원,2분모심:666만원 |
| 생일 축하금 | | 52,000,000 | 249,600,000,000,000 | 유아(10만원),청소년(20만원)성인(50만원) ※축하금지급생일케익과상품권 |
| 국가유공자지원금 | | 850,000 | 510,000,000,000,000 | 사망시:직계가족에 최초 6억원 + 5대손까지 월 333만원 지급 |
| | | | 33,966,000,000,000 | |
| 장애인 기본생활 지원금 | | 2,600,000 | 31,200,000,000,000 | 월100만원 지급 |
| 소년,소녀가장 기본생활 지원금 | | 1,600 | 19,200,000,000 | 본인월 100만원 지급,부양가족 1인추가 50만씩 지급 |
| 장례비지원금 | 장례비 지원금 | 300,000 | 3,000,000,000,000 | 장례비용 : 1,000만원 |
| | 매장시 지원금 | 150,000 | 4,500,000,000,000 | 매장시 추가지원 : 3,000만원 |
| 부모님(조상님) 존영모심 지원금 | | 20,000,000 | 20,000,000,000,000 | 매년 100만원 지급 |
| 제사모심 지원금 | | 20,000,000 | 22,000,000,000,000 | 3대까지50만원,4대70만원. 5대 100만원 정부지원 |
| 성인식 축하금 | | 630,000 | 3,150,000,000,000 | 500만원 지급 |
| 모병제 군인 급료 | | 570,000 | 20,520,000,000,000 | 월300만원지급 ※생명수당 별도 책정 |
| 청년취업국가 지원금 | | 4,000,000 | 48,000,000,000,000 | 5년간월 100만원 지급, 5년이상 근무자가 창업시 무이자 5억 대출 |
| 가계부채탕감 | | | 500,000,000,000,000 | 3년기한, 신청자에 한함 |
| 국가부채탕감 | | | 156,000,000,000,000 | 5년만기분부터 |
| 전생애평생교육 지원금 | 0~24세까지 | 12,000,000 | 100,000,000,000,000 | 임태전태아,영아,유아,초,중,고 대학교: 1인 2억지원 |
| | 25~150세까지 | 40,000,000 | 16,000,000,000,000 | 평생교육으로진행,75세까지1회가정 ※1인:5,000만원 |
| 총액 | | | 4,385,347,120,000,000 (4천385조3471억2천만원) | ※예비비10%포함 |

「대한민국사람은 대한민국당입니다!!!」

재원조달방안 및 홍익금융 지원

1. **카드의무화**로 세금누수 원천봉쇄 및 집행누수 제로 시스템가동
2. 지자체선거 **폐지**로 단체장 **임명제** 전환 및 **정당지원금제도 폐지**
3. **시·도 행정구역을 5개로 축소** 통·폐합 행정비용을 대폭 축소
4. 과태료, 벌금, 범칙금, 각종 조세 와 준조세 등을 **재산비례로 부과** 세수 100조 이상 창출
5. **체납자 신원** 확인되면 모든 부동산 현물 사용수익권을 현장에서 몰수, **고액체납자 근절법** 가동
6. 약 40종류의 세금을 **국세1개로 중앙통합관리**하고 15종의 자동차 관련세금은 통합징수, **세금포인트제도**로 인센티브 지급
7. **암행감찰제도** 시행, 관행 및 교묘한 상속비리와 각종 부조리한 거래관행, 일망타진시켜 악덕금융을 일소시킴
8. **화폐 어음 유가증권 등의 디자인 개혁**으로 ,돈의 양성화, 세수 확보
9. 하늘의 사명에 따라 천손민족, 장손국가 한민족 대한민국을 세계의 지도자 국가로 다시 세우는 대한민국당에 근본본체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 조상님, 부모님이 주신 하늘의 돈을 **홍익금융**이라 명명하고 정부에 직접 지원하여 국민복지 활용
10. **모든 지원금의 1/10은 의무적 세금 납부** 하고 그 이상은 자율에 맡긴다. 돈을 벌고 저축하며 상속하는 문화가 서서히 바뀌게 되면 9/10 나아가서는 전체금액과 개인 돈까지 대한민국당에 후원 기증하는 문화가 되면서 **돈에서 완전해방되는 신문화** 형성
11. 돈을 벌어야 했던 earning money시대에서 돈을 만들어 쓰는 making money시대를 거쳐 돈을 상속받아서 쓰기만 하는 using money 시대를 향유하는 **홍익금융 시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사람은 대한민국당입니다!!!」

별첨

연령별 기본소득 조건표

「대한민국사람은 대한민국당입니다!!!」

기본생활장려금 지급 기준

| 연령별 | 월지급액(원) | 평균지급액(원) | 연령별 | 월지급액(원) | 평균지급액(원) |
|-------|-----------|-----------|-----------|-----------|-----------|
| 0~17 | 500,000 | 500,000 | 80 | 4,560,000 | 3,120,000 |
| 18~24 | 1,500,000 | 1,500,000 | 85 | 4,320,000 | |
| 25 | 2,400,000 | 3,600,000 | 90 | 4,080,000 | |
| 30 | 2,640,000 | | 95 | 3,840,000 | |
| 35 | 2,880,000 | | 100 | 3,600,000 | |
| 40 | 3,120,000 | | 105 | 3,360,000 | |
| 45 | 3,360,000 | | 110 | 3,120,000 | |
| 50 | 3,600,000 | | 115 | 2,880,000 | |
| 55 | 3,840,000 | | 120 | 2,640,000 | |
| 60 | 4,080,000 | | 125 | 2,400,000 | |
| 65 | 4,320,000 | | 130 | 2,400,000 | |
| 70 | 4,560,000 | | 135 | 2,400,000 | |
| 75 | 4,800,000 | 140 | 2,400,000 | | |
| | | | 145 | 2,400,000 | |
| | | | 150 | 2,400,000 | |

「대한민국사람은 대한민국당입니다!!!」

미래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미래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국회의원 최저임금제 |
| 2 | 청년 마음껏 3년법 (청년 기본소득 3년) |
| 3 | 정치 세대교체 369법 (비례대표 공천할당제) |
| 4 |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 |
| 5 | 16세 교육감 직선제 |
| 6 |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폐지 - 최저주거기준 준수 |
| 7 | 모병제 촉진법 |
| 8 | 기후행동 참여소득 |
| 9 | 데이터 유니온 (데이터 주권을 위한 기본법 제정) |
| 10 | 주민센터 국선 공인중개사 |

정책순위

1

국회의원 최저임금제

정책분야 정치

» 현황

□ 2020년 국회의원 1인당 세비 1억 5180만 원

-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1억 5190만 원임. 기본급이 1억 476만 원, 입법활동비 3768만 원, 특별활동비가 936만 원.
- 국회의원이 한 달에 받는 급여는 대략 1265만 원으로 최저임금 급여 179만 원의 7배가 넘는 금액임.
-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높음. OECD 가입국 중 10위권이며, 1인당 GDP 대비 의원 연봉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은 1인당 GDP 대비 4.1배로 1인당 GDP 대비 4.1배 이상으로 받는 나라는 이탈리아, 칠레, 터키, 일본 등 4개국뿐임.

» 목 표

‘ 국회의원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

□ 국회 특권 폐지와 국민의 봉사직임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조치로 국회의원 세비 중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함.

- 국회의원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규정함.(2020년 기준 최저임금 월급 179만 5310원)
-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 인구는 최대 415만 명임. 국회의원이 415만 명의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같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최저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의정활동이 일상적인 국민의 삶과 괴리되지 않게 함.
- 영국의 사례와 같이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국회의장 산하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기구를 신설하여 결정 및 관리 감독함.
-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수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보수는 장관급 공무원보다는 적고 차관급 공무원보다는 많은 상황임. 공무원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임금개혁이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회의원 최저임금법이 필요함.
-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제2조 수당의 지급기준을 최저임금으로 규정하며, 그 밖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은 존치함.

정책순위

2

청년 마음껏 3년법 (청년 기본소득 3년)

정책분야 보건복지

» 현황

□ 세습사회 속 청년의 꿈

-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자신의 꿈을 실현하거나 사회적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너무나 다른 방법이 존재함.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청년은 더 다양하게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은 꿈꾸는 것조차 제한적인 것이 현실임.
- 부모에서 자녀로 이어지는 세습으로 세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학벌, 문화 경험, 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습이 발생함. 부유한 부모 밑에서 자란 청년은 해외유학을 가거나 창업을 하는 등 다양하고 폭넓은 기회를 누림. 심리적으로도 더 넓은 수준의 자유를 누림. 반면 부유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란 청년은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에 매진하게 되므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도 자원이 부족함.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는 권리를 제한받게 됨.

» 목표

‘ 청년 마음껏 3년법 ’

□ 청년 기본소득 3년

- 청년의 꿈 꿀 권리를 보장하는 ‘청년 마음껏 3년법’은 경제활동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꿈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통하여 사회가 디딤돌을 놓아주는 정책임.
- 만 19세~만 34세 청년(청년기본법 기준)이 해당 시기 중 3년을 선택하여 매월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수령.

(2020년 기준 최저생계비 월 105만 원 × 36개월 = 약 3800만 원)

» 재원

- 2020년 19~34세 인구 : 980만명
- 2035년 19~34세 인구 : 740만명
- 전원 수령 가정, 첫 15년 예산 : 연평균 25조, 총 372조 (최저생계비 상승 미고려)

□ 예산 편성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연 30조 이상 확보 가능)

- 매년 국가예산 증가분 일정 배정
- 지방정부 잉여금 (2018년 약 69조)
- 각종 기금 정비 (재난구호기금 5조 등)
- 부처별 예산 칸막이 혁신 등

□ 자산 관련 세금 활용

-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의 일부

정책순위

3

정치 세대교체 369법 (비례대표 공천할당제)

정책분야 정치

» 현황

□ 20대 국회에서 만45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은 6.33%

-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평균 나이를 보면 55.5세이며, 20, 30대 국회의원 숫자는 3명에 불과함. 국제의원연맹의 청년 기준은 만 45세이며 이를 20대 국회에 적용할 경우 약 6.33%의 의원이 존재함(약 20여 명).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특정 연령대의 과잉 독과점 상태이며 연령대별 대표성과 형평성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음.
- 과도한 수준의 연령별 국회 독과점을 완화하기 위해 임시적인 비례대표 공천할당제 필요성 제안. 연령별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향상을 위한 여성공천할당제는 유의미한 사례가 될 수 있음. 여성공천할당제는 각 정당이 비례대표를 추천하는 경우 반드시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 순위의 매 홀수에는 반드시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이를 통해 남녀 동등한 참여에 의한 정치참여 발전과 성평등 실현에 기여함.

» 목표

‘ 정치세대교체 369법 ’

□ 비례대표 공천할당제

- 정치세대교체 369법은 연령대별 대표성과 비례성 확보를 위해 정당별 비례대표 의원의 30%를 만 45세 이하 연령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제도로, 3의 배수 할당은 홀수와 짝수가 반복됨으로 여성공천할당제와 병행이 가능함.
- 할당 연령 내에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피선거권 기준 25~35세 구간과 36~45세 구간의 연령을 교차 할당함.
-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의무할당을 준수하였을 경우를 가정할 경우 전체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중 15명은 만 45세 이하의 의원이 배출됨. 실제 당선자가 국민의당 김수민 비례대표 의원, 새누리당 신보라 비례대표 의원 2명이었던 것에 비하여 확실한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음.

정책순위

4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

정책분야 보건복지

» 현황

□ 소득격차가 연금격차로 이어지는 국민연금

- 현행 국민연금 체계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님.
첫째, 소득격차가 연금격차로 이어지고 있음. 예를 들어 40년 납입 기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월 9만 원을 내고 월 695,470 원을 수령함.(차액 약 60만 원) 반면 486만원(기준소득액 상한액) 이상을 버는 사람은 월 437,400원을 내고 월 1,476,150원을 수령함.(차액 약 104만원)
- 또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는 조기연금수령(5년 조기 수령 시 30% 감액된 연금 수령)을, 고소득자는 연기연금수령(5년 연기 시 36% 가산된 연금 수령)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그 격차는 급격하게 벌어짐. 또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짧은 납입기간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으며 이 경우 순 혜택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됨.

□ 미래세대 짐 지우는 국민연금

- 둘째, 세대 간 형평성이 부족함.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음. 간단하게 설명하면 미래세대는 기성세대보다 많이 내고 조금 받을 수밖에 없게 됨. 특히 국민연금이 고갈된 이후의 상황은 더욱 암담함. 미래세대는 퇴직 세대의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 매년 소득의 25%를 세금으로 내게 될 우려(*부과식 전환 시 시뮬레이션).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부양인구는 많아지는 상황에서 미래세대가 연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됨.
-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이 절실하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어떤 정치세력도 제대로 된 개혁을 말하지 못하고 있음.

» **목 표**

‘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국민연금개혁안 ’

□ 소득별·연령별 보험료 누진율 강화

-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도록 설계

□ 대규모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연기금 운용

- 청년주거문제 해결 및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기금 활용

□ 조기연금 및 연기연금 수령 시 감·가산 비율 조정

- 저소득층이 주로 신청하는 조기연금의 경우, 감액비율을 낮추고 고소득층이 주로 신청하는 연기연금의 경우 증액비율을 낮추어 계층별 연금격차 완화

□ 노인 기초연금 약 50만원으로 실질적인 노후안전망 구축

- 2020년 1인 가구 생계급여 52만7158원 기준

정책순위

5

16세 교육감 직선제

정책분야 교육/정치

» 현황

□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정권 박탈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서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규정되었음에도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국민의 일원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참정권을 주지 않음.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참정권이 배제됨. 그러나 청소년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다고 일반화 할 수 없으며, 정치적 미성숙함은 정치참여 배제의 이유가 될 수 없음.
-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
- 특히 교육감 제도에서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하여 청소년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인 조치임.

□ 교육에서부터 구현되지 못하는 정치

- 정치라는 것은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참여는 일정 나이가 된다고 저절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경험이 쌓여야 하는 것. 오히려 정치적 성숙을 위해서 정치참여와 교육이 독려되어야 함.
- 현재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정치 프로그램은 부재한 상황임. 청소년에 대한 정치적 차별을 정당화하고, 정치참여를 규제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하며, 민주주의 체험이 체화될 수 있도록 정치 교육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청소년 참정권 부재는 교육 내 비민주적인 기형구조를 만들어냄. 대표적으로 2019년 스쿨미투의 경우 피해 학생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부분을 비공개로 처리함으로써 비민주적 행태를 보임.

» **목 표**

‘ 16세 교육감 직선제 ’

- 중고등 교육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학생의 목소리를 싣고 앞으로의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교육감 투표권을 16세부터 보장하는 제도임.
- 교육감은 교육의 조례안을 작성하거나 예산안을 편성, 또는 교육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주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역할임. 이러한 교육감을 유권자인 학생들이 참여하여 선출할 때, 학생들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학생 중심의 학교 자치가 보장될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선거권 연령 하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역사적으로 어떤 집단이 선거권을 갖게 되면 이들의 이해와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이 수립돼온 사실을 고려할 때 교육정책 등의 영향을 받는 청소년 당사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선거 과정에서부터 교육 현장의 수요와 의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16세 교육감 직선제가 적용 된다면 청소년 시기부터 정치 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정책순위

6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폐지
- 최저주거기준 준수

정책분야 건설교통

» 현황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공간으로 내몰리는 청년들

- 2018년 11월 9일, 서울 종로의 어느 고시원에서 화재. 당시 창문이 있던 방에 살던 사람은 살고, 창문에 없던 방에 머물던 사람은 사고를 당함.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최저 주거기준을 지키지 못했기에 발생한 '인재(人災)'임. 사고 이후 시민사회는 예외 없는 스프링클러법 제정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6층 이상의 건물에만 검토사항을 두는 정도로 머무름.

□ 최저주거기준 1인 4.2평(방+부엌)*

- 반지하, 무허가 옥탑방, 고시원(이하 '지옥고'라고 함)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건축법 적용) 최소 주거기준 미달 실태조사 누락되고, 임대업자 '불법 방 쪼개기'로 화재 및 소음 취약하여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 위험이 상존함.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국내 가구는 약 114만 가구 정도로 추산

* 1인당 주거면적 기준이 14㎡이하이면 개인 및 가족적인 거주 의 용통성을 보장할 수 없음(한계기준), 8㎡(약 2.4평) 이하이면 거주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병리 기준)

» 목표

‘ 지옥고 폐지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 ’

□ 반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으로 불리는 공간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여 법적으로 주거공간에 부적합함. 청년들이 높은 월세를 줄이고자 더위, 추위에 열악하고 위험한 공간에 살게 되는 현실임. 따라서 말 뿐인 최저 주거기준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함.

□ 그중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안은 일명 '지옥고 폐지'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음.

1. 최저 주거기준 정밀 검토
2. 최저 주거기준 거주 시민 임시 이주, 주거지원 프로그램 적용
 - 무이자 장기 보증금 지원
 - 임대주택으로 이전 유도

3. 최저 주거기준 미달 공간에 대한 개량 유도

- 불법 증·개축 금지
- 주택 개량 자금 지원

4. 최저 주거기준을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지정, 관리 감시감독 강화 및 의무화

정책순위

7

모병제 촉진법

정책분야 국방

» 현황

□ 새로운 군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한반도는 평화시대로 가는 이행기에 있음. 분단시대에 맞는 징병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군대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적 징병시스템(현역&예비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권·행복권 위배됨.
- 군 복무 형평성 해소와 인권사각지대(연간 100여 명 사망, 사망사고의 65% 자살)인 군대 개혁 필요함.
- 최저임금 1/3에도 못 미치는 사병 월급(애국페이), 채워지지 않는 사회적차 해소 필요함.
- 모병제는 2025년 인구절벽 시대, '병역자원감소-군 복무 단축-전문성 저하' 악순환 딜레마 해소법이 될 수 있음.

» 목표

‘ 2030년 완전한 모병제로 가기위한 모병제 촉진법 ’

□ 현재의 ‘국민개병제(징병제)’에 기초한 병역제도와 병역법을 완전히 개혁하여 ‘모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안보, 평화, 국방, 병역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임

□ 기본 목표

1. 2020년을 모병제 추진 원년으로 하여 10년 간 2030년까지 완전한 모병제로의 전환을 완성
2. 국방 병력을 30만 명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조정
3. 군 현대화(현대전, 인간안보, 인권과 복지)의 개혁 작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목표로 함.
 -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모병제 전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21대 국회에도 여야 합의에 의거하여 ‘모병제 전환 특별상임위원회’를 결성함. 향후 3년간 국민 공론화 과정, 해외 모병사례 연구, 국제심포지엄, 민관군 특별협의체 등을 통해서 모병제 전환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에 실익이 되면서도,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촉진제가 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재원

- 한국 혁신학회에 발표한 "한국군 병역 제도의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2017, 이동환)"를 바탕으로 2015년 20대 평균 연봉(2,568만 원)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물가상승률 평균치(1.75%)를 곱하여 2030년에 30만 장병의 모병제 유지비용을 계산하면 10조 9천8백만 원으로 계산함.
- 연구에서 징병제를 유지할 경우 2030년 30만 장병의 유지비용을 1조 9천4백억 원으로 계산하는데, 모병제 유지비용과 징병제 차액분은 9조 4백억 원으로 계산함.
- 국방예산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국방 예산 평균 증가율은 5.4%이다. 평균 증가율과 2020년 국방예산 50조 2천억 원을 토대로 2030년 국방예산을 예측하면 85조 7백억 원이 됨.
 -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비,' '군수지원 및 협력', '함정사업', '항공기', '화력 탄력' 예산 등의 증가분을 줄이거나 동결하며, '급여정책비' 예산 증가를 통한 단계적인 모병제 절차를 밟아 2030년에 모병제 도입을 위한 증액분 9조 400억 원으로 마련함.

정책순위

8

기후행동 참여소득

정책분야 환경

» 현황

□ 전 인류적인 기후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

- 화석연료 중심으로 발전해온 현 인류 문명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온난화로 기후위기에 들어섰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1도 상승한 현재의 기온이 0.5도 더 상승할 경우 모든 생명체에게 심각한 위험이 닥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0)'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정도 목표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됨.
- 국내에서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의 에너지 소비 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2018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8.88%, 한국에너지공단). 일부에서는 핵발전이나 핵융합 등을 대안으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신재생에너지의 효율과 대체율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과 가정 및 개인의 에너지 사용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촉진하는 정책 도입이 필요함.

» 목표

‘ 탄소세를 재원으로 — 기후행동 참여소득 ’

1. 전 국민적인 ‘기후위기 대응행동(이하 기후행동)’을 촉진하는 정책 도입.
2.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기후행동’ 항목과 배점을 결정.
항목의 예) 전기·가스·수도 등 에너지 저사용, 자가용 승용차 미사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생태농업 및 농장식 축산업 종사 등
3. ‘기후행동’을 이행한 개인에게 이행한 항목과 배점에 따라 정기적인 ‘참여소득’ 지급.
4. ‘기후행동 참여소득’의 재원은 이에 대한 목적세로 ‘탄소세’를 신설해 충당.
 - 2019년 IMF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1톤당 75달러(약 9만원)의 ‘탄소세’ 제안
 - 2018년 기준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9760만톤(세계에너지 통계리뷰)
5. 지급되는 ‘참여소득’의 액수는 참여자 수, 획득 배점, 환경세 세수에 따라 유동적임.

정책순위

9

데이터 유니온 (데이터 주권을 위한 기본법 제정)

정책분야 과학기술 정보통신

» 현황

□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

- 빅데이터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글로벌 시장 규모는 연평균 성장률(CAGR) 28%을 기록하며, 약 420억 달러(46.2조 원) 규모임.
- 페이스북 사용자 수(MAU)는 2018년 약 22억 7,000천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1/4 차지하고 있으며 순이익은 2019년 3분기에만 61억 달러임
- 특히, AI 기술이 유력한 미래 먹거리가 됨에 따라 빅데이터 및 AI로 이어지는 산업의 성장이 더욱 가팔라 질 것으로 예상됨.

□ 유저와 정부가 소외 된 데이터 산업

- 전 세계에서 수집되는 막대한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
- 페이스북 사용자 수(MAU)는 2018년 약 22억 7,000천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1/4 차지하고 있으며 순이익은 2019년 3분기에만 61억 달러임.
- 페이스북, 구글 등은 국경을 초월하여 수익을 얻는 글로벌 데이터 기업들인데 온라인에서 명확한 매출이 잡히지 않는 현실을 이용하여 각국에서 세금 없는 매출을 걷어 들이고 있음.

□ 개인정보 및 데이터 활용에 따른 문제점

- AI와 데이터 경제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는 취지의 '데이터 3법'이 통과됨.
- 미래의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기업의 측면에서만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음.
- 유저들이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모을 수 있을 때 양질의 데이터를 잘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재조명되어야 함.

» 목 표

□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을 규정하는 법률 제정

- 데이터 제공의 주체인 개인을 데이터 시대의 이해관계자로 편입하여 정보 제공, 공유, 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
- 개인에게 부여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이 생성하는 글, 사진, 영상 등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인정(현재는 저작권 등록이라는 제도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와 같이 포괄적 소유를 인정하여야 함).
- 개인 데이터의 생성, 수집 및 활용을 개인 통제하기 위해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은 법이 필요함.

□ 데이터 주권을 위한 기본법의 내용

1.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이 생성하는 글, 사진, 영상의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명확하게 개인에게 있음을 규정
2.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가명 정보 활용 등에 대한 동의는 높이고, 이에 대한 유통과 활용을 엄격하게 통제
3. 국내외 포털, SNS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개인 데이터를 올리는 경우 수집, 공유 거부, 삭제, 유통 등의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제공
4. 새로운 데이터 활용과 이익 환원 방식에 대한 정책적 대안 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의 필요성 명시(개인 데이터로 인해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경우 일정 정도의 수익금을 이용자(생산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 구축)
5. 데이터를 자원으로 수집·생성, 저장, 가공·유통, 분석·활용까지는 포괄하는 데이터 경제의 개념 속에 개인이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이익 환원 방법을 포함
6. 잊혀질 권리와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를 보장
7. 개인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보호

» 이행방법

□ 데이터 주권을 위한 기본법 제정

- 개인정보보호법(개인에게 부여된 정보), 저작권법(개인이 생성한 창작물을 제도적으로 등록)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법률안 마련함.
-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이 포괄적인 법률 제정함.

□ 기업과 유저가 상생할 수 있는 데이터 법 마련

- 기업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유저는 기업의 성장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경제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지원함.
- 기업, 전문가, 데이터 주권 단체(유니온) 등이 포함된 사회적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법안과 정책을 수립함.

□ 데이터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연대

- 데이터 주권을 보장받으며 개인 데이터에 대한 자기 통제권 확보, 기업의 이익 환원 감시, 데이터의 유통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 구성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
- 국제적 연대를 통해 초국가 단위의 기술 기업들과 협력 또는 대응 방안을 모색함.

정책순위

10

주민센터 국선 공인중개사

정책분야

건설교통

» 현황

□ 청년 주거비 부담 과다

- 청년들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서 한 달 수입의 1/3 정도를 월세로 지출하며 2년마다 새집을 구해야 하는 것은 대다수의 경험임. 많은 청년들은 주거 불평등 혹은 주거 빈곤의 최전선에 놓여 있음. 주거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헌법상 권리'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이 필요한 이유는 그들이 취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시민이기 때문임.
- 특히 대학생, 청년들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충분한 주거권을 누림으로써 그들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가 지켜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고 이를 우리 사회가 보장해야 함.
- 기존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보다 수익의 창출을 위해 임대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부동산 중개업 중심의 일부 네트워크는 투기를 조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바, 주거취약계층 등 한정된 범위에서 중개 기능을 공공화 하는 것이 필요.

» 목표

‘ 청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주민센터 국선 공인중개사 ’

□ 주민센터에 국선 공인중개사가 상주하여 부동산 중개 기능을 일정 부분 담당함으로써 주택시장 전반의 공공성을 높이고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보장함.

1.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 (구비서류를 제출 및 심사)
2. 관리비 폭리를 막기 위한 정보 공개 및 관리감독 강화
3. 국선 공인중개사 및 청년 주거상담사 양성
4. 종합 주거 상담
5. 동별·권역별 주택관리 체계 구축

미래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미래민주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검찰권과 경찰권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공정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 2 | “지방분권적 정치체제 개헌을 통하여 시민의 자기 결정권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
| 3 |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번영을 이루겠습니다.” |
| 4 | “산업 경쟁력과 사람 경쟁력을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
| 5 | “국민과 함께하는 살맛나는 농산어촌을 창조하겠습니다.”,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
| 6 | “기후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겠습니다.” |
| 7 | “여성의 욕구가 제대로 실현되는 평등과 상생의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 8 |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복지로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
| 9 | “균등한 교육기회와 창조적 교육을 통해 세계최고의 교육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창조적인 이공계 인재양성, 과학기술 육성정책과 응용 능력의 배양으로 창조한국을 견인하겠습니다.” |
| 10 | “창조적 지식 강국,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한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

정책순위

1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검찰권과 경찰권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공정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책분야 정치, 사법윤리, 행정자치

» 목 표

- 친일잔재 청산
- 검찰권과 경찰권의 지방분권
- 공정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 이행방법

- 친일잔재청산
 - 광복회에 친일행적 평가에 대한 권한 부여 법 제정
 - 친일 인정자 및 후손에 대한 민족적 사면 근거 마련
 - 친일자 전용묘역 조성 및 국립묘지에서 이장
 - 친일관계자는 재산 헌납 후 공직 출마
- 권력기관의 민주적인 운영과 권한의 분산 추진
 - 사법, 검찰, 경찰은 그 권한을 분산하고 더 세밀한 시민감시체계를 구축한다.
 - 모든 권력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법과 제도를 통해 분산한다.
 - 광역지방정부별 독립된 지방검찰제 및 중앙검찰제 도입
 - 광역지방정부별 독립된 지방경찰제 및 중앙경찰제 도입
- 시민참여 배심원의 평결 우선제 도입
 - 법과 현실의 상이함에 대한 불신 및 괴리감을 시민 참여 배심원재판으로 해소
 - 시민참여 배심원 판결 수용

» **이행기간**

□ 2020년 6월 ~ 2024년 5월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정책순위

2

“지방분권적 정치체제 개헌을 통하여 시민의 자기 결정권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정책분야 정치, 행정자치

» 목 표

- “시민의 역량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방분권 중심의 7공화국 헌법을 만들겠습니다.”
- “지방분권적 정치체제로 이행하여 시민의 자기 결정권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대한민국 7공화국체제를 위한 헌법개정

- 30년 지난 1987년 시대와 작별
- 변화된 가치와 의식에 맞는 헌법 수립 제안
- 친일잔재청산
- 권력기관의 민주적인 운영과 분산
- 지방분권적 정치체제 도입
-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완전 이전
-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 시행
- 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인수위원회 제도화
- 국회의원의 입법부로서 역할 강화
 - 정부입법에서 의원입법으로 전환 추진
 - 연동별 비례대표제 개선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 감사원의 국회로의 이관
 - 광역시도 감사관실의 광역시도 의회로의 이관
 - 기초자치정부 감사관실의 기초자치단체 의회로의 이관
- 시민참여 배심원의 평결 우선제 도입

□ 세종시로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

-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 세종시로 중앙부처 완전 이전
- 세종시로 국회 이전
- 세종시로 대법원 이전
- 세종시로 헌법재판소 이전

정책순위

2

“지방분권적 정치체제 개헌을 통하여 시민의 자기 결정권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정책분야 정치, 행정자치

□ 광역단위 지방정부에게 중앙정부 권한 대폭 이양

- 광역단위 지방정부에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보장
- 광역시도장 부총리급 예우로 격상
- 광역단위 지방정부에게 지역입법권 부여
- 광역단위 지방정부에게 지역개발권 부여
- 광역단위 지방정부에게 지역산업정책권 부여
- 광역단위 지방정부에게 항만관리권 부여
- 광역단위 지방정부에게 공항관리권 부여
- 광역단위 지방정부에게 지역노동정책권 부여
- 광역단위 지방정부에게 지역교육권 부여
- 광역단위 지방정부에게 지역경찰권 부여
- 광역단위 지방정부에게 지역검찰권 부여
- 광역단위 지방정부에게 지역사법권 부여

□ 경기남·북도 분리 등 수도권 광역단위 지방정부 재설계

- 경기도를 적정 규모로 분할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광역단위 정부의 적절한 균형 유지
- 경기도를 경기북도, 화성광역시, 경기남도 등으로 분리로 17개 광역시도에서 19개 광역시도로 광역단위 지방정부체제 구축

□ 세제개편과 지방분권 강화로 지역 평등실현

-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50:50으로 조정 및 지방정부 재정균형 지원
 -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지방세 신세원 발굴
 - 기업관련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기능 강화(주민자치법 국회계류 중)

□ 공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

-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 지속가능성보고서 의무화
-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 지속가능성보고서 의무화

» **이행기간**

□ 2020년 6월 ~ 2024년 5월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광역지방정부비, 기초지방정부비

정책순위

3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번영을 이루겠습니다.”

정책분야 통일외교, 국방

» 목 표

□ 한반도 통일

□ 동아시아 번영

» 이행방법

□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

- 한반도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비핵화 추구
- 남북 상호 협력과 평화공존 나아가 완전한 평화통일 지향
- 북한은 통일, 번영해야 할 같은 민족이며 통일까지는 사이좋은 이웃으로 설정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과 남북기본협정 체결
- 한중 수교, 한러 수교에 대응한 북미 수교, 북일 수교 체결 지원

□ 남북 경제협력 재개 및 확대

-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통일기반 구축
- 한반도신경제지도 실행
 -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 DMZ환경·관광벨트
- 개성공단의 즉각 조업 재개 및 확대, 그리고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 없는 운영을 선언
- 북한 공단 개발 및 기업 진출에 해외자본과 공동으로 추진
- 남북 해운교류 재개 및 확대
- 남북 항공교류 재개 및 확대

- 남북 육상교류 재개 및 확대
- 남북 관광교류 재개 및 확대

□ 동아시아 경제·안보 협력 강화

-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추진
-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추진
- 한·중 민간인 비자 면제 등 동아시아 역내 민간인 비자 면제 추진
- 신남방정책 추진 및 아세안, 인도 협력 강화
- 신북방정책 추진 및 유라시아 협력 강화

□ 자주적인 외교와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선진국가

- 외교는 자주적으로 우리 국가의 이익 견지
-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 한·미 간 한미동맹을 호혜적 책임동맹관계로 지속 심화·발전
 - 한·중 간 실질적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내실화
 - 한·일 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 한·러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전략적 투자와 효율 개선으로 정예국방력 확보

- 강한 군대 없이 강한 안보 없다.
- 북해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 병 복무기간 단축
 - 국방문민화
 - 군사법개혁
 - 예비전력 정예화
 - 군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 사업 지원 : 기부대양여 활성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 국방획득체계 개선
 - 첨단무기 국개 개발
 - 국방 R&D 제도 개선
 -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 성과기반 군수 확대
- 직업군인과 의무복무자에 대한 복무여건 개선 및 인권보장 강화

» 이행기간

□ 2020년 6월 ~ 2024년 5월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정책순위

4

“산업 경쟁력과 사람 경쟁력을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정책분야 재정경제, 산업자원, 노동

» 목 표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산업 경쟁력과 사람 경쟁력을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 일자리 창출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재난소득 시행으로 소비 창출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주요 산업경쟁력 강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주요 산업별 산업정책위원회 설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적극적인 농업, 축산업, 수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 해외 유턴기업 전용산업단지 구축 및 지원방안
-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기업 애로점 해소
-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인센티브 부여 및 임금격차 축소
- 청년고용의무제 확대와 청년고용장려금 확대
- 비정규직 감축
- 인생 3모작 지원

□ 경제성장 및 2025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 주요 산업별 산업정책위원회 설치 및 경제성장 유도
- 2025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 노무현정부 목표

□ 주요 전략산업(섬유산업, 석유화학산업, 화장품산업, 철강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부품소재산업, 일반기계산업, 반도체산업, 디스플레이산업, 건설플랜트산업, 해운물류산업,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주요 전략산업별 산업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권역별 주요 전략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 광역시도별 주요 전략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 주요 신산업(제약바이오산업, 항공우주산업, 드론산업, 로봇산업, 관광산업, 정보통신산업, 금융산업, 교육산업, 보건의료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영화산업, 문화예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주요 신산업별 산업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권역별 주요 신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 광역시도별 주요 신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 4차산업혁명(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chain),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제조혁신 등) 추진 및 일자리 창출

- 4차산업혁명 분야별 산업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 4차산업혁명 추진에 따른 실업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

□ 창업 지원 정책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강국 및 일자리 창출

□ 중견기업이 강한 경제강국 및 일자리 창출

□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 조세제도 개혁

□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 및 상장법인 지속가능성보고서 의무화
- 동아시아(26억명) 경제공동체 추진
- 광역경제권별 협의회 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
- 광역지방정부로 산업정책 수립권 및 집행권 이관
- 광역지방정부로 산업단지관리권 이관
- 광역지방정부로 공항관리권 이관
- 광역지방정부로 항만관리권 이관
- 광역지방정부로 노동정책 집행권 이관

» **이행기간**

- 2020년 6월 ~ 2024년 5월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광역지방정부비, 기초지방정부비

정책순위

5

“국민과 함께하는 살맛나는 농산어촌을 창조하겠습니다.”,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정책분야 농림해양수산, 건설교통

» 목 표

□ “국민과 함께하는 살맛나는 농산어촌을 창조하겠습니다.”

□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미래농촌, 생명농업

- 지역 특성과 환경에 맞는 소득형 농업 지원
- 생태가치를 높이는 농업으로 전환
- 친환경 농사 확대 지원
- 토종씨 보존
- 고가 농기계 구입자금 무상지원
- 농기계 무상대여 및 무상 출장(기계작동 기능직 직원배치)

□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 우리 바다 되살리기
- 양식업의 첨단화·규모화
- 안전한 수산물 공급
- 해양공간 통합관리

□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생물가격 안정제도 실시
- 공익형 직불제 개편
- 재해 대응 강화
- 농업 및 농지의 공익적 가치에 맞는 농민 수당 법제화
- 농지연금 지급체계 개선

□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 영농창업 활성화
-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 스마트 농업
-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
- Local Food 지역내 관공서 등 우선 소비
- 식품위생법 강화(먹거리 장난질 영구폐업)

□ 농정/어정추진체계 개혁

- 조합원 직선으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 농수산동조합 중앙회장, 산림조합 중앙회장 선출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여 부동산 불로소득과 보유에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 코로나19 등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격자형 철도 체제 지속 추진

- 동해안선(부산-울산-포항-삼척-강릉-제진) 지속 추진
- 서해선(목포-무안-새만금-군산-홍성-화성 송산-안산 원시-부천소사-고양 대곡) 지속 추진
- 인천국제공항-강릉 동서철도망 지속 추진
-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서산-예산-천안-청주-증평-문경-영주-분천-울진) 지속 추진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격자형 도로 체제 지속 추진

- 동해안고속도로(부산-울산-포항-영덕-삼척-동해-속초) 지속 추진
- 새만금포항고속도로(새만금-군산-익산-전주-장수-무주-대구-포항) 지속 추진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광역교통체계 개선 추진

- 광역급행철도(GTX)-A, B, C, D 등 추진
- 기존 철도망 전철화, 복선화, 급행화를 통한 광역급행철도화
- 광역버스체계 개선
-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

□ 광역지방정부로 친환경적 지역개발권 이관

» **이행기간**

□ 2020년 6월 ~ 2024년 5월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광역지방정부비, 기초지방정부비

정책순위

6

“기후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겠습니다.”

정책분야 환경, 에너지

» 목 표

□ “기후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지구별을 지키는 생태가치 추구

- 범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 및 동참
- 생태적 가치를 물질 풍요보다 상위 가치로 인식
-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구축
- 온실가스 감축 강화
- 기후적응 역량 제고
- 민간기업, 공기업, 정부의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의무화
- 과잉 상품포장 제한
- 자원 재활용 적극 확대

□ 신재생 에너지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지향
-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 석탄발전 축소
-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

- 경유차 단계적 감축
- 전기차 보급 확대 지원 및 충전소 확대
- 수소차 보급 확대 지원 및 충전소 확대

□ 동북아지역 에너지 협력 및 원전위원회 구축

- 에너지 분야 남북 협력 강화
- 에너지 분야 한중 협력 강화 및 원전위원회 구축
- 에너지 분야 한러 협력 강화
- 에너지 분야 동북아 및 유라시아 협력 강화

□ 정부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중앙정부 지속가능성보고서 의무화
- 광역지방정부 지속가능성보고서 의무화
- 기초지방정부 지속가능성보고서 의무화

□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 지속가능성보고서 의무화
-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 지속가능성보고서 의무화
- 인권경영 도입
- 윤리경영 도입
- 환경경영 도입
- 산업안전보건경영 도입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

- 상장법인 지속가능성보고서 의무화
- ※ 유령 500인 이상 기업 지속가능성보고서 의무화
- 금융기관 사회책임투자(SRI, Social Responsible Investing) 강화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에너지 복지 확충

-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 보급을 확대
- 지방 중소도시 등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

-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에너지 가격구조 정비
- 정부, 에너지공급자 및 민간이 참여하는 복지 네트워크 구축
-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및 환경개선
- 고효율기기 보급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 촉진

» 이행기간

□ 2020년 6월 ~ 2024년 5월

» 자원조달방안 등

□ 국비, 광역지방정부비, 기초지방정부비

정책순위

7

“여성의 욕구가 제대로 실현되는 평등과 상생의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책분야 여성

» 목 표

□ “여성의 욕구가 제대로 실현되는 평등과 상생의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 모성보호 강화 및 특별법 제정

- 여성의 결혼, 출산, 육아와 직장 일과 가정이 병립 지원 강화
- 여성, 기혼녀, 경력단절을 이유로 불이익 금지

□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여성의 취업률 제고와 취업연속성 강화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생활수준 임금 보장
- 경력단절 여성 자격증 취득 격려금 지원

□ 여성 할당제 강화(30% 이상)

-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여성할당제 확대 실시 : 행정직, 국회의원, 공기업, 교육분야

□ 돌봄의 가치 인정과 돌봄의 사회화

- 돌봄 확대 운영(영유아에서 노인까지)
- 아동, 청소년, 노인과 연계한 통합 돌봄체계 개선
- 돌봄 교육사 증원 및 홈돌봄서비스 확대
- 영유아 돌봄과 재가복지센터 연계구축

□ 여성의 안전권과 건강권 보장

-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 안전 강화
- 안전귀가 서비스 확대 지원

- 여성노동자 건강권 강화
- 연6회 심리 및 건강상담 지원과 여성 갱년기 의료 지원

» **이행기간**

□ 2020년 6월 ~ 2024년 5월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광역지방정부비, 기초지방정부비

정책순위

8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복지로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정책분야 보건복지

» 목 표

□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복지로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 이행방법

□ 국가책임의 출산과 보육 정책 강화

- 출산장려 정책으로 대전환
- 신혼부부 주거 우선 지원
- 출산신고와 동시 부부 공동통장에 1억원 입금 및 각급 학교 입학 등 출금 가능
- 첫 출산부터 복지혜택 부여
- 출산 의료비 전액 국가 보조
-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주거공급 및 복지혜택 부여
- 현장조사원 필수 배치(자녀와의 단절로 인한 불이익 방지 및 편법자 색출)

□ 기본소득보장을 통한 인간다운 최저생활 유지

- 전 국민 누구나 월 최소 기본소득을 국가가 보장
- 공평한 기본소득 보장위한 재산조사

□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주거 공간 제공

- 의식주의 기본 축인 주거 공간은 인간 최소한의 기본 권리
- 누구나 최소한의 자기 주거 공간 제공

□ 국가책임의 아동 정책 강화, 아동이 안전한 나라, 아동이 원하는 환경

- 안전한 아동을 위해 걱정 없는 모성지원
- 빈곤, 학대, 학습, 체벌 등 모든 위협과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특별법 제정

- 영유아교육 국가책임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청소년의 독립지위

- 성년이 되는 해에 성년 역할 수당 지급 : 누구나 성년이 되면 우리 사회 성년 구성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자립기반을 위한 씨앗 돈으로 1인당 1천만원 지급
- 성년 기본법 제정
- 청소년이 가정을 벗어나면 당당한 구성원 지위 부여
- 청소년 시기부터 원하는 직업 교육 받을 기회 확대
- 청소년과 성년사이 분리수용하는 보호시설 확충

□ 편안한 노후 걱정 없는 미래

- 은퇴 세대의 불안 해소를 위한 노후설계 지원 및 소일거리 증대
- 장기요양의 전액 국가 지원 및 의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 매월 건강관리 격려금 지급 : 1일 만보, 1주 오만보, 월 20만보 성공시 지급 성인병과 치매 예방 및 의료비 감축

□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을 보장하는 사회 건설

- 장애인 입주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 가족건강 보호 및 비장애인 일거리 창출
- 의무고용제도의 기준고용율 준수
-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의 실효성 담보
- 여성장애인에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통합 교육 강화

□ 치료비 걱정 없는 의료

- 출산 후 산모와 아기에 대한 의료비 1년간 무상
- 5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지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 채식 장려를 통한 의료비 지출 감소, 축산 축소,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가축용 사료 수입 감소, 유전자 조작(GMO) 곡물 수입 감소

□ 국립전염성응급의료체계 확대 구축

- 권역별 전염성 공공의료, 응급의료 센터 증설 구축
- 비상 방역 물품 보급 확대

□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 생산(잔류물질 관리 강화 등), 수입(무검사역류제 도입 등), 제조·유통(HACCP 의무적용 확산), 소비(식품표시 강화) 등 전 주기적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 급식관리 공공성 제고 및 먹거리 복지 구현

» 이행기간

□ 2020년 6월 ~ 2024년 5월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광역지방정부비, 기초지방정부비

정책순위

9

“균등한 교육기회와 창조적 교육을 통해 세계최고의 교육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창조적인 이공계 인재양성, 과학기술 육성정책과 응용 능력의 배양으로 창조한국을 건인하겠습니다.”

정책분야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 목 표

- “균등한 교육기회와 창조적 교육을 통해 세계최고의 교육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창조적인 이공계 인재양성, 과학기술육성정책과 응용능력 배양으로 창조한국을 건인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교육경쟁력 세계 1위 달성

-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보편적인 공교육 감소, 학습자 개성·재능 고려한 학습체계 구축
- 대안학교 시스템 적용 학습자 중심 자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식 도입
- 천재 영재 국가적 지원(분야 불문)
- 4차 산업관련 인재육성 지원

□ 영유아교육 공립비율 90% 수준

-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취학률 90% 수준 달성
- 기존 초등학교 시설 활용 유치부 운영 증대

□ 초중고교육 완전 의무교육화

□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및 대학의 국공립비율 확대
-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육성·확대 추진

- 사립대학의 지배구조 개선
 - 대학의 과감한 구조조정 지원
- 교원사회의 경쟁력과 신뢰 제고
-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
 - 교원양성 체계 개혁
- 글로벌 환경에 부합한 교육 강화
- 산학연계교육 강화
- 자립형 직업교육 강화
- 평생 교육기반 확충과 기회 제공
- 과학기술은 국가의 미래양식
- 과학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해 국제경쟁력 확보
 -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학기술입국 실현
 - 정부부문 및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 광역지방정부별로 과학클러스터 조성
 - 해외인재 귀국시 혜택 부여
- 정보통신(IT), 바이오(BT), 나노(NT),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chain),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제조, 문화(CT) 등 첨단융합과학기술강국 및 인재육성 추진
- 4차산업혁명 관련 학부과정의 학과와 석박사과정 전문대학원 신설과 육성 지원
- 사람중심, 환경친화적 기술패러다임 전환
- 사람중심, 환경친화적 기술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사회 통합과 환경친화형 사회를 함께 구현
 - 정부 연구개발투자에서 신재생에너지, 환경기술, 생명의료, 인간공학, 재난관리기술 등 사람중심, 환경친화적 연구개발의 비중 대폭 증가
 - 개발된 사람중심, 환경친화적 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기술-사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 창조적 과학기술인력 육성체계 구축
- 과학기술인 중심의 기초과학 투자 확대

□ 과학기술인력 활용체계 구축

□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지역과 세계의 기술개발 협력 강화

□ 광역지방정부로 특허청 산하의 지식재산센터를 이관 및 지식재산진흥원 설립

- 1인당 지식재산 출원 세계 1위

- 초·중·고 1개교 1변리사 담당제로 지식재산진흥 지원

» 이행기간

□ 2020년 6월 ~ 2024년 5월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광역지방정부비, 기초지방정부비

정책순위

10

“창조적 지식 강국,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한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책분야 문화관광체육

» 목 표

□ “창조적 지식 강국,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한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 이행방법

□ 가장 한국적인 문화가 가장 세계적인 문화

- 국민 기초문화생활 보장 및 저소득층에게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지급
- 국민 문화예술 역량 강화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전통악기 강습비 지원 확대
- 문화예술인에 대한 창작자유 헌법 보장
- 최소한의 예술 활동이 가능한 공제제도와 작품 수당 도입
- 문화예술인 복지 강화
-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 미디어복지 강화, 지역방송 활성화, 미디어상생환경 조성

□ 한글과 한국어의 세계화 사업 전면 추진

□ 다문화 한국사회의 구축

- 중앙정부에 이민·다문화전담부서 신설
- 광역지방정부별로 다문화정책조정관와 다문화지원센터 설치
- 기초자치정부별로 다문화전담인력 배치
- 글로벌사회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문화이해 증진
-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의 멘토 멘티 접목 지원서비스 실시

□ 아시아 여성문화센터와 아시아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 신 한류(韓流) 루트로서 아시안 하이웨이, 범아시아철도망(TAR)과 남아시아해양루트 등이 연결된 아시안 벨트 주요 지점에 아시아 여성문화센터와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네트워크 구축

□ 남북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통일문화 환경조성

- 남북문화교류를 위한 책임 당국자 간 채널 구축과 상설거점 마련, 공동사업 기획, 이를 위한 예산 및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
- 남북의 문화재 공동 발굴 및 보존사업 추진
- 남북 문화콘텐츠 국제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 남북 문화예술 및 문화재 정보화 사업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범국가적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의 체계적 추진

- 범국가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으로 자료정보를 체계화하고 안정화함으로써 IT강국의 위상을 강화
- 민족문화의 원형과 문화적 자산을 보존하는 문화저장고를 통해 정보화시대에 맞는 디지털콘텐츠 축적
- 문서, 영화, 공연 등 각 분야별로 독특한 아카이브를 구축해 수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공급

□ 광역지방정부별 ‘문화예술 창조밸리’ 조성 및 지역문화 진흥

- 광역지방정부별 ‘문화예술 창조밸리’ 조성을 통한 문화 클러스터 구축
- 기존 문화공간이나 폐쇄된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창작 공간으로, 일반인들에게는 관람과 체험공간을 제공
- 광역지방정부별 미술관 강화
- 광역지방정부별 박물관 강화
- 광역지방정부별 문화재단 강화

□ 관광이 미래다

- K-POP, K-FOOD, K-BEAUTY, K-DRAMA를 4대 관광 테마로 육성
- 남북 관광협력사업 추진
- 북한 개별관광 확대 추진
-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강화
- 광역경제권별 국제공항과 지역 특화관광 연계 강화
- 한국관광공사의 지방조직을 광역지방정부로 이관

□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 생활체육 환경 조성 :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등 생활체육 지원 확대
- 남북 체육협력사업 추진

» **이행기간**

□ 2020년 6월 ~ 2024년 5월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광역지방정부비, 기초지방정부비

여성의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여성의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여성이 완전하게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 2 | 개별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는 성평등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
| 3 | 돌봄의 평등을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 4 |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파트너 폭력을 방지하겠습니다 |
| 5 | OECD 1위 불명예, 성별임금격차를 없애겠습니다. |
| 6 | 여성 신체의 건강과 여성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 7 |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기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 8 | 여성에게 경제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
| 9 | 여성차별, 여성혐오적 미디어 문화를 근절하고, 산업 내 여성청소년 착취적 노동 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
| 10 | 성평등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한 헌법으로 바꾸겠습니다. |

정책순위

1

여성이 완전하게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책분야 안전

» 현황 및 문제점

- 복제, 가공, 유포가 용이하다는 디지털 매체의 특성에 따라, 동의받지 않은 촬영물 등의 유포뿐 아니라 합성 등으로 조작된 디지털 파일의 유통으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여성들은 일상공간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 (2019년 상반기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폭력 지원센터 전체 피해건수: 4만 9,156건)
- 피해사실을 신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디지털 성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여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 2019년 12월 서울시 거주 여성 3,678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명 중 1명(43%)이 직·간접적 피해를 경험했으나, 피해 후 대처한 경우는 7.4%에 그침.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를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 (43.1%)가 가장 컸음.
-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딥페이크, AI를 이용한 섹스로봇 등 새로운 문제들을 지속해서 발생 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목 표

- 디지털 성범죄 근절
- 피해 당사자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고, 이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
- 디지털 사회에서 인격권 및 성적침해에 대한 여성 시민의 불안감 해소
- 급변하는 디지털 매체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미래사회 문제에 대응

» 이행방법

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성폭력 처벌 특례법의 처벌 범위를 확대해, 유포협박, 합성 및 가공, 신상유포, 2차가해를 처벌대상에 포함. 피해자가 초상 외의 단서로 특정되는 경우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안 정비.
-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포, 방조, 소지행위를 포함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양형기준강화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 유통경로가 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관리책임을 부과하여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경로가 된 사업체들은 적발 즉시 삭제토록 하며 불이행시 처벌. 관련영상 및 키워드 필터링 의무화

②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 체계 구축

- 용의자가 특정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필수요건으로 하여 증거인멸과 2차 유포 방지
-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을 포함, 24시간 광역적 대응이 가능한 디지털 성범죄 전담팀을 구축하고, 여성수사관을 다수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
-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 시행
-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합정수사 허용
- 디지털 성범죄 신고접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메신저 형태의 핫라인 구축
-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AI기술 활용하여 수사효율 극대화

③ 피해여성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성인지적 대응체계 마련

- 디지털성폭력/성범죄 전담팀에 인력 다수 배치 의무화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비적용해 불법촬영물을 발견한 제 3자의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 예방
- 정신적 피해와 명예회복, 범죄대응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서비스 확대
- 범죄 및 피해 관련 선정적 보도 방지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④ 신종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

- 신종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입법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기구를 설립하고, 현장 활동가들을 이에 포함시켜 구체적 해결방안 도출
- 디지털기반 성범죄수사, 피해자보호·지원 및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정책개발에 관한 연구에 예산지원

- 키워드 기반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신기술 도입과 관련한 윤리, 법, 사회적 영향을 검토함에 있어, 성인지적관점을 주요한 분석틀로 포함시키고 관련위원회에 여성 전문가 참여 의무화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임기인 2024년까지

» 재원조달방법 등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추가 재원 소요 없음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증액
- 국가 R&D지원사업에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 포함

정책순위

2

개별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는 성평등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정책분야 건설

» 현황 및 문제점

- 2019년 여성 1인 가구 수는 291만 4천 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4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여성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는 전 연령층에서 관찰되는 추세임. 현재 70대 이상 여성 1인 가구가 29.9%로 나타나는 등 고령여성 1인 가구의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는 한편, 비혼화 경향과 이혼율 증가로 청장년층 여성 1인 가구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성별 임금격차와 여성빈곤의 문제 등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하는 사회적 조건들이 결합하여, 여성 1인 취약가구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 이에 이들을 위한 주거안정 및 복지정책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점임
- 핵가족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현행정책은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 형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 1인 가구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밝히는 헌법의 이념과도 배치됨

» 목 표

-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하고 안정된 주거 보장
- 취약여성 1인 가구(노인여성, 장애여성 가구 등) 지원을 통한 여성시민의 존엄한 삶 보장
-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1인가구를 복지 및 주거정책의 중심에 둬으로써 변화하는 가족의 형태에 적극적으로 대응

» 이행방법

①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안전 및 안정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

-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전용공동주택 신설, 공급
- 여성 1인 가구주를 위한 금융관련 지원 및 임대주택 입주우선권 부여
- 도시개발 및 건축설계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의무화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 여성 1인 가구 주거공동체를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여성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사회적 연대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

② 취약여성 1인 가구 및 고령여성 1인 가구 지원

- 탈가정 여성 청소년, 젠더폭력 피해여성, 장애여성, 저소득 고령여성 등 취약여성 1인 가구 자립 지원.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회적 위협에 또다시 노출되기 쉬운 취약여성 1인 가구의 가구 독립을 위한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
- 고령여성 1인 가구를 위한 특화된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 현행 독거노인 대상 사회서비스에 성별관점을 도입하고, 특히 빈곤률이 높고 신체적 건강인식 비율이 낮은 노년여성의 특성을 고려해 반찬 및 물품지원, 가사서비스, 맞춤형 운동처방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년여성의 존엄한 삶을 보장
- 취약여성 1인 가구 및 고령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

③ 핵가족 중심에서 1인 가구/개별시민 중심으로 주거 및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1인 가구에 대한 불이익 시정

- 주택청약제도의 부양가족 가산점, 무주택기간 산정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자격요건에서 결혼여부 항목 등을 삭제함으로써 여성 1인 가구에 불리한 주택정책 개선
- 전세 및 담보대출의 신혼부부 혜택을 폐지, 청년전세자금 대출연령을 성별 관계없이 만 39세로 통일하여 비혼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불이익을 시정하고,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대응
- 혈연, 혼인, 입양 등 기존의 가족관계에 기반을 둔 '보호자' 개념을 확장하고, 그 밖에 법적 보호자(동반자)를 등록하거나 스스로 지정한 법인 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여, 가족주의를 해체하고 개인 여성의 권리를 보장
- 여성 비혼 공동체 주거권을 위한 모델 및 관련 정책 개발
-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를 1인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 인적공제와 같은 세금공제, 건강보험 등 복지 혜택에서의 불평등을 시정함은 물론, 가족의 부양 및 돌봄 의무를 가정하는 기존의 복지정책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입법 활동 추진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임기인 2024년까지

» 재원조달방법 등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등이므로 추가 재원 소요 없음

□ 여성1인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및 고령여성 1인 가구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시행사업에 성별 관점을 도입하여 예산배분방식 변경 및 서비스 개선 등의 형태로 추진 가능

□ 취약여성 1인 가구 지원사업 역시 기존 주거안정정책과 연계해 진행 가능. 취약계층여성 관련 지원기관들이 주거 및 경제적 자립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시행 가능

정책순위

3

돌봄의 평등을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정책분야 복지

» 현황 및 문제점

- 여성에게 편중된 가사, 돌봄 노동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진출, 경력단절, 출생률 저하 심화. 가정 내 자녀 양육, 장애인·환자 가족구성원 돌봄, 노부모 돌봄의 몫이 여성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요구됨.
- 기업 내 여성, 남성의 육아휴직에 따른 고용차별, 인사차별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 1인 양육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와 지원이 요청되며, 이혼 후 여성이 자녀양육을 전담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제대로 된 자녀 돌봄이 어려운 실정
- 어린이집, 요양원 등 돌봄 서비스 노동자가 대부분 여성이며 가혹한 근로조건과 격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음.. 돌봄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과 합리적 노동/임금 기준 필요

» 목 표

- 돌봄의 평등 실현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의 해결
- 돌봄 노동의 몫을 여성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 사회가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 프로세스 마련
- 1인 양육자, 장애여성, 장애가정 양육자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 지원
-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의 임금, 처우 개선

» 이행방법

1. 남성 육아휴직 강제 의무화 및 불이행 기업 패널티 부여
2. 1인 양육자를 위한 지원금 및 정부차원 서비스 확대
 - 1인 양육자의 양육비 청구 소송 시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적극적 구상권 행사
 - 1인 양육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금 실질적 확대(월 7~15만원의 지원금에서 보다 실질적인 지원금 제시)
3. 지자체 차원의 돌봄 케어 센터(아이, 노인, 환자 돌봄 분야 특화) 확대 운영·모니터링 및 돌봄 서비스 이용료의 국가 부담
4. 돌봄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 노동·임금 기준 제정 (정규직 전환 확대 등)
5. 장애여성의 일·가정 양립 등의 지원: 장애여성의 특수한 양육환경에 대한 이해와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자녀 양육의 생애 단계별 돌봄 서비스 제공, 가사노동 서비스 제공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임기인 2024년까지

» 재원조달방법 등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추가 재원 소요 없음
- 돌봄의 평등 실현은 여성, 1인 양육자들의 경력단절을 막아 기업의 생산성 증가 및 조세부문의 증가를 이루어낼 수 있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 충당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음

정책순위

4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파트너 폭력을 방지하겠습니다

정책분야 안전

» 현황 및 문제점

- 심각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가정폭력 사건의 국내 기소율은 평균 7.1%에 불과함. 2016년도 기준 폭력범죄 기소율 24.7%, 성폭력범죄 기소율이 33.0%인데 비해 가정폭력 사건은 10% 미만에 머물고 있음. 2017년 기준 1366에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은 18만 326건이지만 사건화되어 사법기관에서 처리된 것은 255건에 불과함.
- 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은 인권보호보다 가정 유지·보호가 중점으로 가정폭력을 “심각한 폭력 범죄”가 아니라 여전히 “가정 내의 경미한 범죄”로 여기는 법 관점으로 작동하고 있음.
- 법의 적용 대상이 혼인관계에 한정되어 있어 친밀한 관계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은폐되기 쉬운 폭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법 개정 방향 마련 필요
- 스토킹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각종 성범죄와 살인 등 각종 강력범죄의 예비 행위로 엄중한 범죄로 다루어져야 함에도, 범칙금 8만원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스토킹범죄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발생하는 성별화된 범죄로 피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폭력의 양상이 심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정부가 2018년 5월에 입법예고한 스토킹범죄처벌법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정의가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 목표

- 가족 및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개개인의 인권보호를 최우선 하는 제도 마련
- 스토킹을 사회적 중범죄로 인식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

» 이행방법

□ 가정폭력처벌법을 파트너 폭력 방지법으로 전환

-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파트너 폭력 방지법으로 전환하여 '사실혼' 요건에 미치지 않더라도 관계의 지속성과 상호의존성이 인정되고 관계 속성에 의해 폭력이 습관적으로 반복, 은폐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 전면 제정.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 마련

- '가정폭력 피해자 위법성조각 인정여부'를 포함한 특례법을 제정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범위 확대.
-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체포우선제도를 실시.
-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폐지하고, 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을 금지.
- 수사·사법기관의 여성폭력에 대한 인지·출동·수사·재판 전반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 분리조치'를 의무화
- 장애여성, 이주여성, 청소년 등 여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유형에 맞는 폭력 피해자 전문 상담소 확대 및 피해자 자립을 위한 상담 및 지원 확대

□ 가정폭력/파트너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지표 개선

- 가정폭력 사건의 통계 분류체계 개선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규모 파악.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 스토킹을 중범죄로 분류해 양형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스토킹 처벌과 접근금지에 대한 조항 추가 및 스토킹범죄 및 피해자 정의 규정 확대
- 국가 책무성 및 예산상 조치 명문화
- 반의사불벌 형사특례조항 적용금지
- 스토킹 신고 시 피해자 입증 책임 면제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절차 강화

□ 스토킹 범죄 경찰의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조치 마련

- 수사기관 스토킹 범죄 인식 교육 및 초동대응 강화 훈련 실시
- 영국의 "스토킹 보호명령(Stalking Protection Order)"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 스토킹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 권한으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후속 범죄 예방. 증거수집을 위해 피해기간이 연장되고 범인이 심리적으로 더 큰 집착을 가지게 되는 것을 방지.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임기인 2024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특별히 재원을 소요치 않음.

정책순위

5

OECD 1위 불명예, 성별임금격차를 없애겠습니다.

정책분야 노동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OECD 2018년 발표에 따르면 37.1%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며 37개 OECD 회원국가 중 유일하게 30% 대의 큰 격차가 나타남.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이 성별임금격차를 10% 내외로 좁히면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과는 매우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절된 이중구조의 노동시장에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과 같이 임금이 낮은 부문에 여성노동자들이 높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음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하여 여성노동자의 근속년수가 남성노동자에 비하여 짧게 나타남.
- 2020년 유리천장 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관리직 여성 비율은 14.5%, 이사회 임원 비율은 3.3%로 29개 비교 국가 중 최하위임
- 최근 공공기관과 금융권 등에서 밝혀진 채용비리 사건을 통해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었음.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통계에 의하면 2001-2018년 전체 진정 건수 28,748건 중 고용에서의 차별행위 진정 건수는 8,334건(37%)으로 그 중 모집(1,367건)과 채용(1,740) 차별 진정 건수가 가장 높음.

» 목표

- 성별임금격차 철폐를 위한 법률 제정
- 고용평등위원회 신설
- 임금뿐만 아니라 임금체계, 임금결정기준에 대한 성차별 철폐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업종으로 확대하여 여성 다수 직종의 저임금 문제 해결
- 채용과정, 교육기회, 승진에서의 성차별 금지 방안 마련

» 이행방법

① 성별임금공개법 제정

- 독일의 임금공개법과 유사한 개별법을 제정하여 노동자가 요구할 경우 성별이 다른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동료의 임금 및 임금체계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함.

② 여성노동에 대한 통계조사 의무화

- 여남별 고용성비와 임금격차, 여성임원비율 등에 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③ 성별 임금공시제

- 2014년부터 매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형태 공시제에 성별 임금정보를 추가함

④ 여성임원할당제

- 고임금군인 임원에서 여성비율이 낮은 것이 성별임금격차의 주요원인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공공기관 임원/기업 임원의 여성비율을 50%로 의무화함

⑤ 사용자의 처벌강화

- 임금 공시제도와 정부의 노동 통계 조사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책임사업주(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이사)를 직접 처벌하거나 임금총액의 1%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함.

⑥ 임금격차해소 계획서 제출 의무화

- 성별임금격차가 존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임금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그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⑦ 면접 및 채용과정에서 여남 성비 공개

-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접자와 채용합격자의 여남성비 공개

⑧ 채용 심사위원의 여남동수

- 면접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을 여남동수로 함

⑨ 고용평등 업무 전달 체계 강화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 전담과 부활
- 겸임 아닌 성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1인 47개 지방노동청(6개 지방노동청 및 41개 지역별 노동지청) 배치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임기인 2024년까지

» 자원조달방법 등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추가 자원 소요 없음

정책순위

6

여성 신체의 건강과 여성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책분야 보건복지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여성의 기대수명은 2019년 현재 85.7세로 추산되지만, 유병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64.4세로 그 격차가 매우 심한 편임. 여성의 자가평가 건강수준 역시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활동 제한율 역시 동일연령의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여성에게 고유한 건강문제들 외에도,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에 의한 발병원인 및 예후, 유병률, 치료방식 등이 다른 질병들이 많음. 특히 우울증, 골다공증의 높은 유병률, 폐경기 이후 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 질환, 만성통증 질환 등의 증가는 여성의 자율적 활동을 제한하는 등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예방 및 관리가 요구됨. 여성과 남성의 생리적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개발, 승인된) 약물 부작용 등의 문제 역시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 공공의료사업 등으로 의료격차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의료접근성의 격차 문제는 남아 있음. 직장인 건강검진 등의 혜택이 주로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등,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이 건강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음

» 목 표

- 임신과 출산을 중심으로만 논의되어 왔던 여성건강의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여성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녕을 보장하며 여성의 권리와 자율성,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 만들기
-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의학적 근거 마련
- 성별에 따른 의료격차 및 건강 불평등 해소
- 여성과 남성의 생리적 차이를 반영한 치료제 및 의료기술 연구개발

- 모자보건법 폐지, 인권과 건강의 보편적인 권리에 기반한 “재생산권 보장법” 제정
- 임신중단 여성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 조항 완전 폐지
- 여성의 생애 주기별 건강권 보장, 장애 여성 재생산권 보장

» 이행방법

① 여성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의학적 근거 마련

- 여성건강 관련 정책 수립 근거 확보를 위해 건강문제의 생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포함하는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
- 월경, 임신, 출산이 여성의 몸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DB 구축
- 여성에게서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는 우울증, 골다공증, 만성통증 등 신체, 정신질환에 대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지원
- 돌봄 및 가사 노동자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감정노동자 등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건강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지원으로 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한 의료적, 정책적 방안 마련
-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건강권 확립 정책: 장애여성의 자율적이고 안전한 재생산을 위한 전문적 상담창구와 건강 맞춤형 의료지원 시스템 마련

② 성별에 따른 의료격차 및 건강 불평등 해소

- 학교와 직장에서의 월경 공결권 보장
- 건강보험공단 제공 건강검진항목 확대
- 여성질환 관련 건강보험 항목 확대
- 완경기 이후 질환 예방을 위한 중노년 여성 특화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골다공증, 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 여아 및 청소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 강화
- 여성의 정신 건강 촉진을 위한 상담 서비스 지원
- 의약품에 여성 기준 투약량과 복용량 기입 의무화
- hpv 무료예방접종을 감염경로가 되는 남성에게까지 확대
- 의학적 사유 외의 경제, 사회적 사유로도 임신 중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청소년 및 취약계층 여성 (장애여성 등)이 임신중단을 원할 경우 병원정보 등 지원을 제공. 임신중단을 위한 의약품 판매허용

③ 여성과 남성의 생리적 차이를 반영한 치료제 및 의료기술 연구개발

- 신규의약품 및 치료기술 심사승인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부작용 데이터 포함 의무화
- 보조 생식술이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관련 법제 및 가이드라인에 반영
- 월경용품 및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각종 화학약품의 안전성 및 성별에 따른 영향 조사 의무화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임기인 2024년까지

» **재원조달방법 등**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추가 재원 소요 없음

□ 건강보험 범위확대는 건강보험공단과 합의할 사항. 공공의료의 패러다임이 예방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확대 등은 질병 발생 이후 치료에 소요될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장기적으로는 재정 절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정책순위

7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기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정책분야 여성

» 현황 및 문제점

-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역고소가 남용되어 피해자를 위축시킴.
-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소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피해자들이 형사 및 사법절차 진행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있음.
- 2019년 7월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무고 고소 중에서 82.6%는 불기소처분으로 종료되었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가 선고되어 보복성 역고소가 남용되고 있음.
- 법적 보호를 받는 의제강간 연령이 만 13세 미만으로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실제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과 성착취 피해가 심각함.
-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성착취 피해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피해 청소년과 대상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대상 청소년은 사실상 소년법에 준하는 보호관찰처분으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임.
- 성착취 문제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화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알선구조 역시 범망을 피해 변화하고 있음. 웹하드 카르텔, 버닝썬 카르텔, 별장 성접대 사건에서부터 리얼돌, n번방 성착취에 이르기까지 온갖 형태로 확산되어 알선업자들은 수익을 창출하는데 여성의 몸을 착취하고 있으며, 그 수위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성매수 행위가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음.
- 성매매·성산업 내 이주여성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취약한 지위에 놓여있음. 현재 태국, 캄보디아, 러시아 등지의 여성들이 한국 전역의 성산업으로 유입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임. 피해여성의 안전한 보호와 지원, 통역, 수사과정에 대한 지원, 출입국의 문제 등의 지원체계 구축 필요.

□ 프랑스가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 이어 포주와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성매매법(노르딕 모델)을 도입한 바 있음. 현존하는 제도 중 성매매 근절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알려져 있음. 2010년 스웨덴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성매매 종사자가 50%이상 감소했고 길거리 성매매도 절반 가량 감소했으며 성구매 남성 수 또한 감소함. 한국 정부에서도 강력한 노르딕 모델 기반 상업화된 성착취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

» 목 표

- 의제강간 연령 상향 조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대상청소년 조항 삭제를 통한 아동청소년 실질적 보호
-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및 역고소 남용 제한 등 수사 및 처벌 실질화
- 상업화된 성착취 근절을 도모하는 노르딕 모델 도입
- 이주여성, 청소년, 장애여성 등 여성폭력에 있어 보다 더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 이행방법

- 형법상 의제강간 연령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 추진
 - 현행 형법 305조의 의제강간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 연령을 만 16세로 상향 조정
- 성착취 피해청소년 보호 법안 마련 추진
 -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상 대상청소년 조항 삭제 및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 확대
-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혹은 연장 법안 신설 및 역고소 남용 금지 대책 마련
 - 성폭력 피해 당시 미성년자일 경우는 성년이 된 이후부터로,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추행죄'의 경우 업무·고용관계의 중단 시부터 시효를 계산하거나 또는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
 - 고소에 대한 수사 시 성폭력 고소·고발에 따른 가해자의 보복적 의도가 의심될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지침 도입
 -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 증거 채택 금지조항 마련

□ 비동의 간음죄 신설

-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
- 위계에 의한 성폭력, 그루밍 성범죄 처벌의 근거 마련

□ 상업화된 성착취 근절을 위한 수요차단 전략 도입

-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으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전면적인 비범죄화,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처벌 규정 강화 및 알선 고리 차단
- 성매매 관련 수사 전담체계 구성 및 제재 강화

□ 성착취 피해 외국인 여성 지원 대책 마련

- E-6 비자 및 외국인 전용유희음식점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는 연예회사에 대한 심사 절차 강화, E-6 비자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위한 제도 강구
- 인신매매피해자의 체류자격보장 및 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 임금체불 업주 및 알선 브로커들에 대한 형사적 처벌 강화 및 입증책임 전환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임기인 2024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특별히 재원을 소요치 않음.

정책순위

8

여성에게 경제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정책분야 경제

» 현황 및 문제점

- 여성에 대한 성차별, 임금차별, 고용차별로 인해 여성 개인이 독립적 경제권을 행사하기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 여성을 경제적 주체가 아닌, 가정 내 경제적 보조자 정도로 인식하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빈곤과 저임금에 내몰려 있는 실정
- 1인 여성가구, 장애여성의 빈곤률이 가장 극심하나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 지원 장치가 전무한 상태

» 목 표

-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계층 상승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사회
- 남성 가장에 의존하지 않는 여성 개인의 독립을 보장하는 사회시스템 정비
- 여성 경제공동체의 창립지원과 연대 도모
- 1인 여성가구, 장애여성들에 대한 맞춤형 경제적 지원금, 자기개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임금상승 기회 부여, 경제적 독립권 실현

» 이행방법

1. 1인 여성가구 또는 여성가장 가구(여성가장이 미성년 자녀, 노인, 장애인, 환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대한 경제적 복지제도 : 주택보조금, 생활 보조금, 독립보조금 등의 실질적 지원
2. 비혼 여성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국가 지원 저금리 대출제도: 여성 경제 공동체 창립 가능성 도모

3. 여성 경제 공동체 창립 인센티브 제공: 창업 지원금 및 창업 프로그램 제공
4. 여성 개개인에게 맞춤형 직업개발 교육지원금 및 프로그램 제공: 여성들의 계층 상승과 임금 상승의 기회 제공
5. 다각적 여성 인재 풀(학력만이 아닌 기술, 경력, 경험도 우대) 시스템을 형성하여 여성인력 채용 강화 루트 마련
6. 장애여성 소득보장 정책 수립: 장애여성에 대한 맞춤형 직업개발 프로그램 제공 및 장애여성 경제독립 지원금을 제공하여 경제권 확립
7. 여성소비자 가중세(핑크 택스) 신고제도를 통한 기업 패널티, 여성 경제권 평등 수립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임기인 2024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추가 재원 소요 없음

□ 여성의 경제권 실현은 여성들의 수입을 상승시킴으로써 국가 조세부문의 증가를 이루어낼 수 있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 충당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음

정책순위

9

여성차별, 여성혐오적 미디어 문화를 근절하고, 산업 내 여성청소년 착취적 노동 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정책분야 문화

» 현황 및 문제점

□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묘사는 현실의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더욱 강화시키고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빠르고 강하게 퍼트리는 데 일조한다.

□ 예능에서는,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적은 빈도로 미디어에 노출되며, 그마저 남성의 보조적 역할, 어리고 외모가 부각되는 역할로서 캐스팅되어 여성은 남성의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 출연자는 남성 출연자 대비 30% 수준, 2017년 PD저널, 드라마 남성 제작PD는 여성 제작PD 대비 5배,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미디어 성차별 모니터링)

이러한 성차별적 고용은 미디어 내 여성혐오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규제해야 할 관계부처 등도 성차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관련 규제기구의 경우 2019년 5월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명 모두 남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9명 중 6명, 명이 남성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분의 10명 중 6명 을 넘을 수 없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공영방송사의 역할은 미디어 정책이나 프로그램 안에서 성별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하는 주체들로 그 구성에 있어서도 젠더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최근 들어, K팝의 글로벌화 등과 더불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의 여성에 대한 잘못된 외모 스테레오 타입을 강조하여, 이로 인해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들의 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기존의 미디어 매체를 벗어난 새로운 형식의 영상 매체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비하하는 콘텐츠들이 무분별하게 양산되어, 이를 쉽게 접하는 아동 청소년기 여성과 남성의 가치관 형성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성차별적 개인방송 169편 중 적대적 방송이 절반에 가까운 46.7%(79건)에 달했고, 관련 키워드도 '김치녀', '여성혐오', '페미니즘', '위마드' 등이었다. 이러한 무차별적 여성혐오 표현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

» 목 표

- 정부부처, 관련 공기업 및 제작진, 출연자에 대한 동수 고용 통한 성평등한 미디어/컨텐츠 제작 환경 마련
- 매체 내 여성혐오적, 성별 불평등한 표기에 대한 금지 강화
-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여성, 아동 청소년 착취 학대에 대한 근절 방안 마련
- 성폭력, 성매매 사범에 대한 출연금지 법제화 및 기존 정책 내에서 논의되지 못한 신규 매체에 양산된 여성혐오 근절 대책 마련

» 이행방법

- 성차별적 환경 개선 및 미디어 다양성 확보를 위해 부처 관계자, 출연자 및 제작진 동수 고용을 추진
 - 미디어 관계부처, 미디어 제작자 (방송국, 제작사 등) 에 여성 고용 및 여성 의사 결정자(PD, 임원)출연진에 대한 고용 및 제작 쿼터제 도입 등 성별 불평등 해소를 위한할당제 요구
 - 성별 분업에 따른 여성 직군(여성 아나운서, 작가 등) 의 비정규직 채용 관행 개선
- 여성 혐오적 편견을 강화시키는 방송 뉴스 및 신문 뉴스 등 매체 내 성별 불평등적 표기에 대한 금지 강화
 - 특정 성별에 대해서만 성별표기로 하거나, 남성이 가해자일 경우 사건을 연성화약화시키고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나 피해자 2차 가해를 야기하는 등의 보도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위한 법안 마련
 - 여성대상 폭력 범죄에 대한 낭만화, 연성화 등 성별 불평등 요인들을 모니터링 하고 각 언론사의 실태 조사하여 권고 조치 후 권고 3회 이상 누적 시 벌금형 및 적극적 시청자, 구독자 사과 게시 등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
-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여성 아동 청소년 착취, 학대에 대한 근원적 근절 방안 마련
 - 만 16세 이하 아동 청소년에 대한 미디어 산업 전반의 노동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고 사업자에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 조치
 - 만 16세 이하 아동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자에 대해 필수적으로 연습생 및 소속 연예인에 대해 정신 상담 정례화 및 건강 검진 의무화하고, 이를 이걸 시 사업자 취소 등 처벌 조항 마

- 표준 체중 이하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방송 출연 금지를 조례화하여, 아동 청소년 건강을 해치는 미디어 환경을 개선

□ 성폭력/성매매 관련 사범에 대한 출연금지 강화 및 수익 환수

- 성범죄자에 대한 방송 복귀 금지 및 방송 및 영화 등 출연 금지를 강화하고, 방송 복귀 시 이에 대한 사업자 벌금 조항 신설
 - 성범죄자의 음원 유통에 대한 음원유통사 (멜론, 카카오 뮤직 등) 에 대한 징벌적 벌금 조항을 마련
- 성범죄자의 유튜브 및 아프리카 방송 채널에 대해 수익불가 협조 요청 (광고 불가능) 을 제도화

□ 기존 법 내에서 논의되지 못 한 신규 매체들에서 양산되는 여성혐오에 대한 대책 마련

- 주요 미디어 매체 (유튜브, 트위치 등) 에 대해 여성혐오적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전면적 광고 제한, 영구 계정 삭제 등 요청을 제도
- 게임 내 커뮤니티 등 기존 미디어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SNS 성격을 띠는 신규 아동 청소년 대상 온라인 매체에 대해 성폭력적 상황이 있을 경우 이를 전담하여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집행할 수 있는 신규 법령을 마련

□ 기타

-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 저작물(방송, 유튜브 콘텐츠, 광고, 사진 제작물 등) 에 대한 제작자 강력 처벌 및 유통채널에 대한 징벌적 벌금 부과하고, 교복 및 아동복 등 아동을 연상하는 대상물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엄격히 규제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임기인 2024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미디어 노동권 경우 추가 고용보다 고용의 성평등을 추진함으로 추가적 재원 마련 없음

□ 특히, 신규 미디어에 대한 여성혐오 근절 방안은 징벌적 벌금 부과를 추진하기에 이에 따른 부가적 세수 확충이 발생하며, 증가된 세수익을 통해 성평등 미디어 교육 등 정책을 추가적으로 집행함

정책순위

10

성평등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한 헌법으로 바꾸겠습니다.

정책분야 정치

» 현황 및 문제점

- 여성은 독립운동, 정부수립, 경제발전, 민주화 운동 등 대한민국 역사의 모든 현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왔고, 현재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모든 성과는 남성들이 독점했으며, 여성들의 역할과 헌신, 기여는 남성들에 의해 지워졌고, 여전히 이등시민으로 머물 것을 요구받고 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이 조항만으로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주체성, 특히 정치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대표될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우며, 남성 중심의 지배구조를 해체하는 데 역부족이다.
- 20대 국회는 80% 이상의 남성, 50대 이상의 고연령층,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 고소득자이며, 대다수 경력이 정치인 또는 법조인으로 한국사회의 기득권 남성집단이 국회를 과대대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에서 배제되고 있다.

» 목 표

□ 성평등 개헌

- 국가의 모든 법률과 정책이 여성주의/페미니즘 관점에 기초해 재구성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헌법을 성평등한 방향과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중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 확보’와 ‘국가의 성평등 실현 의무’를 헌법에 명시한다.
-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 보장과 함께 여성과 남성 각각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와 이주 등 소수집단 또한 의사결정과 정책입안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헌법에 명시한다.

» **이행방법**

□ 10차 헌법 개정 추진

- 여성시민이 이끄는 헌법개정 운동을 주도한다.
- 성평등 헌법 개정을 위해 여성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통로와 공간을 마련한다.
- 개헌 논의 시 만들어질 모든 공적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 비율을 40% 이상을 확보한다.

□ 10차 헌법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 보장’과 ‘국가의 성평등 실현 의무’ 명시

- 국가는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성평등은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한다.
- 법률은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와 책임을 동등하게 보장한다.

» **이행기간**

□ 21대 국회 (2020. ~ 2024.)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민 투표 예산

우리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우리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결혼이나 재혼 시 2억 전세자금 무상지원 |
| 2 | 한 자녀 출산 시 중형급 승용차 무상지급 |
| 3 | 두 자녀 출산 시 33평형 아파트 무상지원 |
| 4 | 세 자녀 출산 시 부모희망 1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글로벌 인재 육성 |
| 5 | 5급 이상 공무원 1인 취약계층 후원제도 조성 |
| 6 | 5G이상 통신요금 단일화 |
| 7 | 공무원 정년 자율화, 30년 이상 근무이후 연금 |
| 8 | 독도 한.중.일.러.미 공동 개발 및 공유와 울릉도 세계적 관광특구 선정 |
| 9 | 100대 대기업 전 국민 주주화. 글로벌 국영화 |
| 10 | 세계적 기축 전자화폐 구축 및 금융권 선점. |

정책순위

1

결혼이나 재혼 시 2억 전세자금 무상지원

정책분야 복지

» 목 표

□ 삶의 시작은 집이 아닌 흙에서 시작한다.

-누구나 보금자리는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되며 안정된 가정의 싹을 피우기 위해서나 또는 임신부터 집 걱정하면 태아에 좋지 않은 영향이 간다.

- 행복하게 임신하고 잉태준비를 위한 기본 보금자리 구축은 국가의 의무요 책임이다.

» 이행방법

□ 기존 정부의 주거관련 유관부서 및 유관부서와 협력 공조

» 이행기간

□ 4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정부 예산의 투명한 재편성

정책순위

2

한 자녀 출산 시 중형급 승용차 무상지급

정책분야 복지

» 목 표

□ 삶에서 외출과 여행은 보금자리와 떼놓을 수 없는 행복의 연장선이며 대중교통은 시간을 다투는 직업적 이동수단이 되어야 되며 가정을 밖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은 차량이다. 즉 우리는 자가용을 차가아닌 이동식 가정으로 여기고 행복한 삶의 연장선인 차량에 대한 국민 스트레스를 덜어주어야 한다.

» 이행방법

□ 기존 정부의 교통관련 부서 및 유관부서와 협력공조

» 이행기간

□ 4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정부 예산의 투명한 재편성

정책순위

3

두 자녀 출산 시 33평형 아파트 무상지원

정책분야 복지

» 목 표

- 달팽이도 몸집이 커지면 껍질을 옮겨가듯 국민도 다 자녀 대가족이 되면 국가는 국민을 큰 나무로 분갈이 하듯 해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한다.
- 행복한 국민은 행복한 공무에서 나오고 경쟁력 있는 공무의 노하우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배품에서 나온다.

» 이행방법

- 기존 정부의 주거관련 및 유관부서와 협력 공조

» 이행기간

- 4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정부 예산의 투명한 재편성

정책순위

4

세 자녀 출산 시 부모희망 1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글로벌 인재 육성

정책분야 교육

» 목표

□ 사교육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연결고리를 없애고 진정 인간본연의 다양하고확신성 있는 가치창출에 정부가 동참하여 인재를 개발하고 육성하여 글로벌인재 수출로 세계 글로벌 기업 같은 CEO들은 물론 학계의 유능한 인재 보유로 세계 강대국 진입

» 이행방법

□ 기존 정부의 교육부서 및 유관부서와 협력 공조

» 이행기간

□ 4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정부 예산의 투명한 재편성

정책순위

5

5급 이상 공무원 1인 취약계층 후원제도 조성

정책분야 **민생**» **목 표**

- 인생의 행복은 가지는 것보다 나누는 것을 공무원 들이 솔선수범해야 교과서적 나눔과 행복 그리고 범죄의 근원이 사라지거나 선도된다. 공무원과 국민의 친화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때 위기대처의 경쟁력이 생긴다.
- 국민의 삶과 소리를 현장에서 지속적이고 실리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공무와 경쟁력 확보.

» **이행방법**

- 기존 정부의 행정자치부 및 유관부서와 협력 공조

» **이행기간**

- 4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정부 예산의 투명한 재편성

정책순위

6

5G이상 통신요금 단일화

정책분야 경제

» 목 표

□ 현 이통3사의 담합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외국인력 수입을 기술유출과 특허권 등 소송으로 자국기업들 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글로벌 재판을 받는 꼴불견의 연속으로 통신 또한 시스템 운영은 전문적 기술공무원과 봉사하는 행정공무원 그리고 수익은 공무원포함 전 국민에게 주식 수익으로 환원 및 통신이 원가소비로 통신료 낮추고 수익까지 배당하는 실질생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 이행방법

□ 기존 정부의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및 유관부서와 협력 공조

» 이행기간

□ 4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정부 예산의 투명한 재편성

정책순위

7

공무원 정년 자율화, 30년 이상 근무이후 연금

정책분야 행정자치

» 목 표

- 인간의 행복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효율과 시스템이 가장 자연스럽게 구축되며 유연해진다. 국민을 위해 평생을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공무를 보아야 하며 30년 이상 봉사 후 충분한 연금으로 수고에 대한 보상과 삶을 보장해야 한다.

» 이행방법

- 기존 정부의 행정자치부 및 유관부서와 협력 공조

» 이행기간

- 4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정부 예산의 투명한 재편성

정책순위

8

독도 한.중.일.러.미 공동 개발 및 공유와 울릉도 세계적 관광특구 선정

정책분야 통일외교통상

» 목 표

□ 독도개발을 Consortium하여 한.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독도기준 공해수역의 공동 소유를 오픈함으로 해양시대를 열어 해양시대와 해저개발을 통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대비하고 세계적 해양리조트와 관광특구를 조성하여 현 강대국들의 관광자금들을 한국으로 엄청나게 즉 외화유입의 통로로 만들어 가야한다. 지금 울릉도는 뱃사람들이 떠난 노인들과 갈매기들 뿐이다.

» 이행방법

□ 기존 정부의 외교부 및 유관부서와 협력 공조

» 이행기간

□ 4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정부 예산의 투명한 재편성

정책순위

9

100대 대기업 전 국민 주주화. 글로벌 국영화

정책분야 경제

» 목 표

□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세금에 준하는 국민 수납금을 현 정부는 대기업투자로 불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투명화 시켜 국가 100대 기업들에 대한 정부투자나 지원금으로 성장한 대기업의 주식을 국민의 가치재산 증식의 기반으로 관, 민이 제계를 상호 서포트하여 국민의 실물화폐 노동시대를 가치화폐의 글로벌 비즈니스 시대를 열어나간다.

» 이행방법

□ 기존 정부의 중소기업 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청 및 유관부서와 협력 공조

» 이행기간

□ 4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정부 예산의 투명한 재편성

정책순위

10

세계적 기축 전자화폐 구축 및 금융권 선점.

정책분야 경제

» 목 표

□ 2004년 블록체인에 의한 전자화폐 보급의 특허출원에 근간을 두고, 필리핀 노스트웨스트 사마르주립대학의 논문과 석. 박사 과정에 준하여, 세계최초 최상의 사이버 기축화폐 구축을 함으로 5G 기반의 통신, 금융의 시대를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전자화폐 기반의 세계 금융 최 선두국가로 부상한다.

» 이행방법

□ 기존 정부의 외교부와 한국은행,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및 유관부서와 협력공조

» 이행기간

□ 4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정부 예산의 투명한 재편성

자유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자유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강력한 국토안보법 입법 |
| 2 |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을 위한 헌법수호 |
| 3 | 종교의 자유와 생명존중사상 정립 |
| 4 |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
| 5 | 경제를 살리는 일자리 창출 |
| 6 | 현실적 복지정책 확립 |
| 7 | 조세개혁으로 국민 생활 안정화 |
| 8 | 통일부, 여성가족부 해체 |
| 9 | 효과적인 국가재난 대책 입법 |
| 10 | 군인·경찰·소방관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 확대 |

정책순위

1

강력한 국토안보법 입법

정책분야 국방, 안보

» 목 표

- 국정원 대북 첩보 업무 부활
-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반국가 사범·종북·친중·좌익 사상범은 공무원 및 정치를 금하는 입법
- 친중·종북 정책 전면 폐지
- 한미일 군사동맹 복원과 우호 증진
-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 중단
- 국정원을 세계최고정보기관으로 개혁
-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금강산 우리국민 피살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과 북한의 분명한 사과 요구와 재발 방지 관철
- 이슬람난민 유입금지

» 이행방법

- 관련법 제정 및 개정

» 이행기간

- 제21대 국회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추가 재원 필요없음

정책순위

2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을 위한 헌법수호

정책분야 사법윤리

» **목 표**

- 박근혜 대통령 부당한 탄핵의 진실규명
-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반하는 정부조직 해산
- 공수처 악법 폐지
- 공정선거 확립을 위한 사전선거제 폐지, 개표 전 과정 수 개표화

» **이행방법**

-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 **이행기간**

- 제21대 국회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추가 재원 필요 없음

정책순위

3

종교의 자유와 생명존중사상 정립

정책분야 종교, 윤리

» 목 표

- 동성애, 동성혼 반대
- 동성애자 퀴어행사 지원금지
- 공휴일 실시되는 국가자격시험 폐지
- 종교자유 침해하는 차별금지법 폐지

» 이행방법

-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 이행기간

- 제21대 국회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추가 재원 필요 없음

정책순위

4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정책분야 교육, 역사

» 목 표

-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의 역사 바로 세우기
-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근현대 역사교과서 바로잡기
- 광주 5. 18사태(유공자명단, 공적조서 공개 등), 제주 4.3 사건 등 국제첩보기관 자료수집 역량 강화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
- 왜곡된 역사 교육, 정치적 중립 위반하는 전교조 해산
- 사법고시 부활, 기회의 평등 구현(고졸이상 응시)
- 조민 방지법 입법(정시 위주의 입시제도 마련)

» 이행방법

-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 이행기간

- 제21대 국회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추가 재원 필요 없음

정책순위

5

경제를 살리는 일자리 창출

정책분야 경제, 노동

» 목 표

- 노사정 위원회 폐지
- 범위에 굴림하는 구시대적 거대 노총 해산
- 기업의 경영자유 보장, 일자리 창출
-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산업 활성화
- 경제성과 실효성이 불투명한 태양광 정책 전면 재검토

» 이행방법

-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 이행기간

- 제21대 국회내

» 재원조달방안 등

- 현재 정부예산으로 가능

정책순위

6

현실적 복지정책 확립

정책분야 보건복지

» 목 표

- 경제적 어려움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개인, 가정에 대한 임대주택, 생활비,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긴급지원 입법
-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지원
- 취약계층 방문 진료 서비스 강화
- 65세이상 전철역까지 접근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버스까지 무료로하는 교통복지 확대

» 이행방법

-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 이행기간

- 제21대 국회내

» 재원조달방안 등

- 현재 정부예산으로 가능

정책순위

7

조세개혁으로 국민 생활 안정화

정책분야 재정경제

» 목 표

- 상속세 폐지
- 종교세 폐지
-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폐지
- 세금 부담을 줄여 경제활성화 달성
- 공정선거 확립을 위한 사전선거제 폐지, 개표 전 과정 수 개표화

» 이행방법

-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 이행기간

- 제21대 국회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추가 재원 필요 없음

정책순위

8

통일부, 여성가족부 해체

정책분야 행정자치

» 목 표

- 북한의 남한 통전부 역할을 하는 통일부 해체
- 젠더갈등을 부추기고 기회의 평등을 훼손하는 여성가족부 해체

» 이행방법

-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 이행기간

- 제21대 국회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추가 재원 필요 없음
- 통일부, 여성가족부 해체로 인한 예산 확보

정책순위

9

효과적인 국가재난 대책 입법

정책분야 보건복지

» 목 표

- 전염병 발생 국가에 대한 즉각적인 입국금지 시행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소모품, 비품 등 국민 대상 무상지원
- 보건의료의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자가격리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감염자 의료비 전액 국고지원

» 이행방법

-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 이행기간

- 제21대 국회내

» 재원조달방안 등

- 현재 정부예산으로 가능

정책순위

10

군인·경찰·소방관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 확대

정책분야 보훈

» 목 표

- 근무, 복지 환경 개선
- 군복무, 현장 근무시 부상자에 대한 국가 보상, 지원 확대
- 6.25, 월남 참전용사에 대한 보상 확대
- 1,2차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희생자 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 확대
- 1,2차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사상자, 참전자에 대한 지원

» 이행방법

-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 이행기간

- 제21대 국회내

» 재원조달방안 등

- 현재 정부예산으로 가능

자유이새벽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자유한국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한미동맹의 재정립 및 강화 |
| 2 | 사드(THAAD) 배치 증강 |
| 3 | 지소미아 복구 |
| 4 | 대한민국 건국 이념 재건 |
| 5 | 자국민 우선주의(Korea First) |
| 6 | 청년 일자리 창출 |
| 7 | 귀족노조 특권 회수 |
| 8 | 법인세 감세 및 증세 철회 |
| 9 | 상속세 감세 혹은 폐지 |
| 10 | 인터넷댓글 국기 달기 운동 |

정책순위

1

한미동맹의 재정립 및 강화

정책분야 외교

» **목 표**

- 미국 중심 국제질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한미일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 현재 대한민국은 친중국 성향의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겼고, 이는 선조의 피땀으로 일군 자유민주주의에 누를 끼치는 일이므로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행방법**

- 작년까지 국익우선 집회를 하였으나, 현재 대중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는 ‘우한폐렴’으로 인해 잠정중단 되었음. 우한폐렴 전파의 위험성에서 한 발 물러선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중국의 안보, 경제, 역사침략 등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음.
- 미국 공화당 의원 및 외국 언론과 정당차원에서 접촉, 동반자로서의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

» **이행기간**

- 2020.4. ~
 - 단, 우한폐렴이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될 경우 집회개최를 연기함.

» **재원조달방안 등**

- 법률안 작성 등 별도의 재원은 필요하지 않음

정책순위

2

사드(THAAD) 배치 증강

정책분야 국방

» 목표

□ 사드 추가 도입으로 중국과 북한의 도발과 군사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

-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의 주적인 중국과 북한의 군사 도발을 저지할 수 있는 사드 부대를 추가 배치하여 한미 동맹 관계를 회복하고 항구적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함

» 이행방법

□ 현재 성주에 설치되어 있는 1개 사드 대대 이외에 경기, 강원, 전남, 제주 등에 4개의 대대를 추가 설치,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도발과 잠재적 군사 위협을 대비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억제함

-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미군이 원하는 장소를 조율하고 국내 정서상 받아들일 수 있고, 북한과 중국 등과 상대적으로 근접한 장소에 부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함

» 이행기간

□ 2020. 12. ~ 항구

- 연간 운용 대대 등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간 협의로 매년 운용 대수를 협의하고 추가로 운용이 필요할 경우에 한해 년도별 별도 협정을 체결한다.

» 재원조달방안 등

□ 한미 방위 주둔군 협의와 관련, 해당 금액을 연 1조원 수준으로 동결하고 조건으로 GDP 대비 2.59% 규모인 국방비 내에서 충분히 운용 가능한 수준의 금액으로 설정하되, 낭비되고 있는 국방비 내 재원 조달비 등을 사용하여 금액을 확충한다.

- 실 소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산출 필요

정책순위

3

지소미아 복구

정책분야 외교

» 목 표

□ 한미일 공조체계 강화로 북한과 중국 견제

- 현재 문재인 정권의 지소미아 폐기 언급 등으로 인해 경색된 한일 관계를 회복하고 공통의 적국인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군사 행동 자체를 원천 봉쇄

» 이행방법

□ JCU(Japanese Conservative Union) 및 ACU(American Conservative Union)와의 동맹을 통한 한미일 민간보수벨트를 형성하고 일본과 외교 채널을 복원하고 미국이 참여한 지소미아 조약 별도 체결. 국정원 및 국가안보회의 내 북한 및 중국 관련 내용 정보를 공유하고 군사도발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함군사도발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함.

- 실무진급(국장급 이상)의 매월 교류 및 회의를 통해 안보 분야(대북, 대중국) 현안 교류. 미국의 참여 등으로 군사 도발 위험성 최소화. 또한 국가 원로 및 안보 전문가 등이 미국 Heritage 재단과 유사한 형태의 재단을 설립, 자유우파 전문 인재 양성 학교 건설

» 이행기간

□ 2020.6. ~ 계속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채널 복구 등으로 별도 추가 재원 불필요

정책순위

4

대한민국 건국 이념 재건

정책분야 교육

» 목 표

□ 대한민국은 1948.8.15. 건국된 국가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수호하는 것을 청소년에게 전달하기 위함

-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1919.3.1.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라고 기념하고 있으나, 임시정부는 독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많은 역할을 하였으나, 정부 또는 국가로 인정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고, 당시 독립을 위해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일부 세력을 포용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단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해당 내용을 교과서에 명백히 하도록 함.

» 이행방법

□ 국정 교과서 집필진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설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또한 과거에 비해 과도하게 비중이 축소된 '고대사' 내용을 확대하고, 역사적 사실 관계 등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현대사' 부분을 일정부분 삭제하여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함

» 이행기간

□ 2021년 신규 교과서 집필부터

- 현재 2020년 한국사 교과서는 이미 집필이 완료된 상태로 내년 교과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재원조달방안 등

□ 추가 재원 필요 없음

정책순위

5

자국민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분야 보건복지

» 목 표

- 현재 외국인(주로 중국인)에게 잘못 지급되는 세금 혜택을 축소하고 자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
 - 외국인의 귀화 등으로 인해 보호 받아야 할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 해당 금액을 전액 삭제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차상위계층 노인 계층에 더 많은 복지 도움을 주기 위함.

» 이행방법

- 귀화 외국인에 대한 복지비(기초 수급비 + 노령 연금) 지출 내역 일괄 조사 뒤 해당 복지비 전액 노인 또는 차상위계층 아동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내역 변경
 - 국외에 존재하는 귀화 외국인 등에 대한 부당 복지비 수령으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일선 주민센터 및 구청 및 시청 등에서 부당수급자를 일괄적으로 검토하여 실태를 파악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이행기간

- 2020.6. ~ 계속
 - 부정 사용되는 복지비 실태 지속적 파악 및 재조정

» 재원조달방안 등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민 복지 관련 예산으로 사용 조정 가능
 - 별도 예산 증액 불필요

정책순위

6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분야 노동

» 목 표

□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 벤처기업 등 창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보
- 문재인 정권 이후 과도하게 늘어난 공무원 채용 인원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을 다시 정상화 수치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함

» 이행방법

□ 일자리 예산은 25조 8천억원으로 노인 일자리 및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에 사용되는 액수임. 추가 금액을 일회성 일자리가 아닌 R&D 지원 및 청년 창업 지원 비용으로 확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확보

- 실제 이행 비율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저출산 관련 대책 비용을 전용하여 일자리 확보 금액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고교무상 교육 관련 비용을 전용하여 사용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 이외의 별도 공무원에 대해 인력 감축 및 명예퇴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인원을 감축하고 해당 예산을 기업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절함

» 이행기간

□ 2021.1. ~ 계속

-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까지 기업과 청년에게 지원을 지속하도록 함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 예산안 가운데 방만한 사용이 우려되는 '저출산 대책' 및 '미세먼지 대책' 관련 금액을 일자리 대책 관련 금액으로 전용 사용

- 별도 세수 확보 필요 불가

정책순위

7

귀족노조 특권 회수

정책분야 노동

» 목 표

□ 귀족 노조로 세력화 된 특정 노조 세력의 권력 이양

- 현대자동차 노조 등 일반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노동조합이 일부 권력 기관에 기생하여 정치 세력화하고 노동자의 권리 보다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는 현 세태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함.

» 이행방법

□ 노동법 상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무시간 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일해야 하게 되어 있음. 만약 노동조합 대표자가 해당 사업체 이외의 별도 정치세력과 단합을 하거나 노동조합 권리 이외의 별도 정치행동을 하는 경우 대표자 자격을 박탈하는 법률을 만들어 귀족화 된 노동조합을 없애도록 함.

- 민주노총 등 특정 정당과 만남이 잦은 귀족노조 노동조합에 대해서 일괄적 세무조사 및 카드 사용처 점검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정치행위에 대한 엄격한 금지

» 이행기간

□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 관계 법안 발의 등 실질적 시간이 필요하므로 법제처 검토 후 해당 사안을 적용하도록 할 예정임

» 재원조달방안 등

□ 법률안 작성 등 별도의 재원은 필요하지 않음

정책순위

8

법인세 감세 및 증세 철회

정책분야 재정경제

» 목 표

□ 과도하게 증액된 법인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복구하여 기업의 투자 심리 및 신규 일자리 확대 또한 개인의 과도한 조세 부담을 조정하여 소비 심리 회복

- 현재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은 25%, 선진국의 경우(미국 21%, 일본 23.4%, 홍콩 16.5% 등) 22% 내외로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편임. 3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연말정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의 조세부담을 줄여 소비 심리를 회복하도록 함.

» 이행방법

□ 최고 법인세율 일괄 조정 및 공제 제도 확대(저축 및 부양가족,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혜택 확대)

- 최고 법인세율 21% 구간 조정 및 기업 공제 혜택 확대

» 이행기간

□ 2021.2. ~ 지속

» 재원조달방안 등

□ 법인세 감소 및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R&D 사업 및 미래 먹거리 사업 이외의 별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 집행 축소

정책순위

9

상속세 감세 혹은 폐지

정책분야 재정경제

» 목 표

- 상속세는 이중과세이며 중산층의 붕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감세 혹은 폐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저출산, 고령화와 개인부채의 증가로 인해 부모가 사망할 경우, 부의 세습이 아닌 부채의 세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을 지속할 경우, 상속세 부담으로 주택을 잃고 세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 장기적인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높은 상속세는 내수시장의 활성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큼

» 이행방법

- 제안1 : 상속세의 완전폐지
- 제안2 : 상속세를 감세할 경우, 상속세 비율을 세수결손을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하도록 한다.

» 이행기간

- 2021.2. ~ 지속

» 재원조달방안 등

- 별도 세수 확보 필요 불가

정책순위

10

인터넷댓글 국기 달기 운동

정책분야 과학기술 정보통신

» 목 표

□ 여론 조작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인터넷 댓글 IP 표기

- 차이나 게이트 등 여론 조작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인터넷 게시글 또는 기사의 댓글을 다는 과정에서 IP에 따라 게시하는 장소를 '국기'로 표기하는 방법

» 이행방법

□ 현재 인터넷 댓글의 경우 '매크로' 등의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특정 외국인이 인터넷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바, 특히 '중국', '러시아', '동유럽' 등의 장소에서 댓글이 달릴 경우, 해당 IP를 확인하여 댓글 옆에 '국기'를 표기하여 자국민 또는 일반 시민이 해당 여론을 호도하지 않도록 함.

- 현재 인터넷 댓글이 주로 생산되는 공간인 '네이버', '다음', '언론 기사', '디씨인사이드', '일베' 등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생산되는 댓글에 대해 반드시 IP에 따른 '국기'를 표기하도록 함. 특히 선거 등 여론 조작이 빈번해지는 시기에는 VPN 등의 방법으로 IP 우회가 감지되는 경우, 해당 아이디를 차단하고 선거 등 일정 행사의 종료 이후 댓글 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함.

» 이행기간

□ 2020.4.15. 이후 상설화

- 특히 선거 등 여론 조작이 빈번해지는 시기에는 중점적으로 확인

» 재원조달방안 등

□ R&D 사업 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일부 사용

- IP 등록 사업 등을 통해 국내 사업자에게는 우선권을 주고 외국 IP의 경우 국기를 제작하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일부 비용 보전

중소자영업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소자영업당 1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자영업자 살리기 |

정책순위

1

자영업자 살리기

정책분야 경제

» 목표

- 매출 3억 이하의 중소기업자에게 부가세 환급을 해주어 수익 증대로 의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이행방법

- 관련법을 제·개정하여 매출 3억 이하 자영업자에게 부가세 환급

» 이행기간

- 제21대 국회에서 관련법 제·개정

» 재원조달방안 등

-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통한 개정 확보
 - 예상 제원은 1.8조원정도로 예상됨

총청의미래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총청의미래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대통령중임제 및 부통령제 도입 |
| 2 | 기초노령연금 60만원으로 인상 |
| 3 | 생계형 부채탕감과 생활밀착형경제실현 |
| 4 | 농가소득 1억 원 시대 선도 |
| 5 | 대한민국 5만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
| 6 | 범국민 도덕성 회복운동 |
| 7 | 올바른 역사관 정립 교육 |
| 8 |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
| 9 | 대전 시립의료원 설립 |
| 10 | 총청중심의 대통합 정치 실현 |

정책순위

1

대통령중임제 및 부통령제 도입

정책분야 정치

- 제왕적 대통령제와 단임제의 폐해를 불식시키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임기 불일치로 인한 제반 문제점들을 대통령 중임제와 부통령제를 반드시 도입하여 제반 정치적 난맥과 일정한 문제점들을 해소시키고,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다소 분산·완화 시켜 분열과 다툼의 정치를 대통합의 정치로 해소하는 토대로 삼아야 한다.

» 목표

- 대통령의 임기를 국회의원과 같은 4년으로 하되, 중임제를 채택하고 부통령제를 파트너십으로 도입하면 거대 양당의 분열의 정치, 그로 인해 파생되는 국민과 국가의 분열 해소.

» 이행방법

- 대통령 선거 시에 부통령을 파트너십으로 동시 선거

» 이행기간

- 국회에서 대통령 임기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 도입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차기 대선에 적용

» 재원조달방안 등

- 정치적 협의 사항 이므로 재원조달 불필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여 예산 절감)

정책순위

2

기초노령연금 60만원으로 인상

정책분야 보건복지

» 목 표

□ 기초노령연금 60만원으로 인상 지원.

- 경제적 어려움으로 빈곤 노인 분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최소한의 인간적 품위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이행방법

□ 일정 소득 이하의 빈곤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

- 지원 대상 노인 분들 가운데 더 어렵게 사시는 다른 노인 분들에게 지원금을 양보함으로써 함께 행복한 노노문화 조성.

» 이행기간

□ 2022년부터 사회적 대협약을 통해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세부 재원조달 방안 추후 발표

정책순위

3

생계형 부채탕감과 생활밀착형경제실현

정책분야 보건복지

-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형 부채 보유자가 550만 명에 달하는 상황을 맞아 가족이 파탄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생계형부채를 탕감시켜 경제활동인구로 편입시킴으로써 다시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국가 경제도 부흥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새 출발을 돕기 위한 “생계형 부채 탕감”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 아울러, 금융권의 일방적인 신용불량등급제도로 인해 금융권이용을 하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인 활동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금융권의 신용불량 등급제 폐지가 필요하다.
- 금융 소외자, 사업실패자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패자 부활전 제도 정착시켜 생활 밀착형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 목표

-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계형 부채 탕감 및 신용불량등급제 폐지

» 이행방법

- 국회에서 세부적 생계형 부채 전면 조사 후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 국가 정책으로 신용 대사면 실시

» 이행기간

- 2020년에 부채 분야 별 전면 조사 실시 후, 2021년 상반기부터 실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 조달의 세부 방안은 추후 발표

정책순위

4

농가소득 1억 원 시대 선도

정책분야 농림해양수산

□ 지역 특색에 맞는 스마트팜 국가단지 조성 및 생산과 유통, 마케팅을 접목하고 나아가 농촌 테마 관광 등 지역 단위 별 소득의 포트폴리오 제공을 통한 농가 소득 1억 원 시대를 선도하여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도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한다.

» 목 표

□ 농가 소득 1억 원 시대 선도

» 이행방법

□ 스마트 팜 국가 단지를 조성하여 국민 건강 먹거리와 청년일자리 창출

» 이행기간

□ 2021년부터 국가단지 조성

» 재원조달방안 등

□ 세부 재원 조달방안은 추후 발표

정책순위

5

대한민국 5만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책분야 재정경제

□ 대한민국의 5만 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세계경제가 침체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3만 불 언저리에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미래 학자들이 주장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AI, 로봇, 무인 자동차 등 첨단기술개발과 함께 국가 경제 활성화는 결국 각 지역의 특화된 경제 활성화를 기반으로 동반 성장하는 국가경제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충청의 미래당은 충청지역에 맞는 특화산업을 발굴 육성하여 먼저 충청지역 경제부터 살리고 동반하여 국가경제활성화에 함께 노력함으로써 대한민국 5만불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 목 표

□ 먼저, 충청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여 성장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이다.

» 이행방법

□ 충청지역의 동네가게, 소규모 자영업자, 소상공인, 재래시장이 장사가 잘 되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이기에 충청의 미래당은 모든 물품구매나 용역 등 제반 활동에서 지역업체 상품을 구매하고 지역 업체를 활용할 것이다.

- 나아가 충청지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첨단 산업 업종을 선택하여 집중 육성할 것이다.

» 이행기간

□ 2020년부터 지속적인 충청지역 업체 활용으로 먼저 충청지역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제활성화로 연결되어 5만불 시대가 열릴 때 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추후 발표

정책순위

6

범국민 도덕성 회복운동

정책분야 교육

□ 정치가 국민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시대이다. 국민의 안전이나 민생은 내팽개치고 허구헌날 짬박질만 하고 있어 정치는 없고 고소고발만 난무하는 정치실종의 거대양당 패권정치를 종식시키고 협상과 협치의 정치력을 회복하여 배려, 신뢰, 용서 등 사회적 자분을 통한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펼쳐가야 한다.

» 목표

- 국민 도덕성 회복운동으로 국민 대통합 실현
 - 신뢰, 배려, 용서 등 일체의 사회적 자분을 국민적 자산으로 확산

» 이행방법

- 충청이 중심이 되는 대통합 정치(고소고발정치에서 협의의 정치 실현)
 - 매월 7일 10시를 참회와 용서, 화해의 날과 시간으로 선정하여 국민대통합 실현.

» 이행기간

- 2020년부터 사회 문화운동으로 확산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조달 정책사업 아님

정책순위

7

올바른 역사관 정립 교육

정책분야 교육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확고한 인식아래, 대한민국역사의 분수령인 6.25와 월남전 참전, 4.19혁명과 5.18광주의거 등 대한민국의 주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정립

» 목 표

□ 올바른 역사관 교육과 범국민 도덕성 회복운동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 선진화

» 이행방법

□ 충청을 세계적인 역사, 인성, 정신문화 교육의 메카로 조성

» 이행기간

□ 2021년부터 실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추후 세부 재원 조달방안 발표

정책순위

8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정책분야 정치

- 중앙 정치도 거대 양당의 패권정치로 인해 싸움판 정치가 계속되고 있으며, 지방정치도 공천을 빌미로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자치와 의정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유도

» **목 표**

- 광역자치 단체장을 제외한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 **이행방법**

- 국회 합의로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

» **이행기간**

- 2020년에 입법하여 2022년 지방선거부터 적용

» **재원조달방안 등**

- 입법으로 가능한 일이므로 재원조달 불필요.

정책순위

9

대전 시립의료원 설립

정책분야 보건복지

□ 대전 시립 의료원 설립: 지역 사회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위해 대전광역시 책임지고 펼칠 수 있는 의료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민간병원에서 긴급한 사태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서 대전광역시가 주도적으로 환자들을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대전 의료원의 설립을 적극 유치·운영해야한다.

» 목표

□ 대전 시립 의료원설립

- 감염병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와 지속 가능한 대전시민의 건강과안전지킴이 역할
- 평상시에 시민들 진료를 하고,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엔 거점병원으로 기능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유지

» 이행방법

□ 국회에서 지역 의료원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여 대전 의료원 유치

» 이행기간

□ 2020년~2023년

- 2020년부터 매년 국비1,200억 +시비 800억씩 3년 6,000억원 투입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의 재원 조달을 위한 세부방안은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추후 발표

- 시비는 대전 의료원 설립을 준비 중인 대전광역시와 협의

정책순위

10

충청중심의 대통합 정치 실현

정책분야 정치

□ 정치가 국민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국민의 안전이나 민생은 내팽개치고 허구헌날 썸박질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의 패권정치가 결국 정치 불신의 만들고 있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대통합을 시킬 정치 세력이 꼭 필요한 지금, 충청의 미래당이 대통합 정치를 펼쳐갈 것이다.

» 목 표

□ 충청이 중심이 되는 대통합 정치 실현

» 이행방법

□ 역사의 교훈으로 살펴보더라도, 결국 썸박질과 대결정치의 온상인 거대 양당의 패권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는 결국 영·호남 세력이자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어 펼쳐는 끝 모를 싸움은 결국 중도인 충청의 정치세력이 일어서 협의와 협치를 이끌어 내야만 하기 때문에 충청의 미래당이 국회에 진입하여 대한민국의 상생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양당을 아우르는 대통합 정치를 펼쳐갈 것이다.

» 이행기간

□ 2020 21대 국회 개원부터~대통합정치가 실현될 때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정치적 협의의 사안이므로 재원조달불필요.

통일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통일민주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전 국민 의료 보험료 “zero” |
| 2 | 아파트, 주택 등 불로 소득 “zero” |
| 3 | 중소기업 육성책, 신용자금 확대 |
| 4 | 보훈정책만이 살 길이다. |
| 5 | 종교부 신설 |
| 6 | 번역청 신설 |
| 7 | 1,000만 애완견, 묘 의료보험 적용 |
| 8 | 유통의 글로벌로 인하여 세계화 |
| 9 | 신용불량자 구제(약 130만명) |
| 10 | 경제통일로 민족간 동질성 회복, 평화정착 |

정책순위

1

전 국민 의료 보험료 “zero”

정책분야 보건

» 목 표

□ 전 국민의 의료 생활화.

» 이행방법

□ 전 국민들에게 거두어들이는 금액은 2018년 연말 기준 약 62조 원인데 반하여, 지출은 약 65조 원으로, 지금까지 쪽 작계는 수 천억원에서 수 조 대의 흑자를 본 것으로 나온다.

□ 이를 참작하면 전 국민들의 의료 보험료는 얼마든지 제로로 해도 재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온다고 보여 진다.

» 이행기간

□ 2021년부터 즉시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 재원조달방안 등

□ 2018년 연말 기준 약 3조2 천 억 원이 적자를 보았으나, 지금까지의 흑자 부분을 전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순위

2

아파트, 주택 등 불로 소득 “zero”

정책분야

주거 부분

» 목 표

□ 전 국민의 주거부분은 1가족 1주택 보장.

» 이행방법

□ 현재 3주택이상의 사람은 약 45만 여 명인데, 주택 보급률은 약 120% 수준으로 전 국민이 1주택이상은 보유를 해야 하나, 지금의 현실은 서울 직접 주거는 약 48%에 불과하다.

□ 이에 보유세를 높여 1거주 1주택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 방법 중에 세금을 증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세금 증과는 불로 소득 금액의 약80%를 매년마다 징수하는 방안이다.

□ 이는 세 채 이상 보유자가 많이 발생하고, 이는 세금 문제에 있다고 보여 진다.

» 이행기간

□ 기존의 3주택 이상자들에게 집을 팔 수 있도록 1년의 시간을 주고, 시행을 하면 될 것으로 본다.

» 재원조달방안 등

□ 해당 사항 없음.

정책순위

3

중소기업 육성책, 신용자금 확대

정책분야 금융

» 목 표

□ 중,소 기업들의 신용 대출 확대를 통해 육성책 개발.

» 이행방법

- 중, 소기업들이 현재의 신용보증기관, 기술보증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신용을 전담하고 있는데. 현재 3개 기관을 통해 약 20조 원, 업체 수는 약 34만 여 군데정도로 매년 신규 자금이 공급되고는 있으나, 이로서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체 수가 너무나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 이는 3개 기관의 보증을 쓰는 업체는 그런데로 괜찮으나, 사용을 못하는업체의 수가 너무 많다는데 있다.
- 이는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다는데 기인한다. 부도율을 약4%에 맞추어 실행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도래한다고 본다.
- 모든 기업체는 우리 국민이 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의 세금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 그럼으로 신용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아니 부도율이 20%까지 되도록 한 번은 신용대출의 대상이 되어 기업을 일으키는데 국가가 도움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 기업들이 활성화가 되면, 결국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기업이 확대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 이행기간

□ 즉시

» 재원조달방안 등

- 현재 3개 기관에서 년 2조 원 정도를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약6조 원으로 확대를 하면 된다고 본다.
- 차액 4조 원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정책순위

4

보훈정책만이 살 길이다.

정책분야 국방

» 목 표

□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는 전쟁 참전 영웅들에 대한 예우 확대.

» 이행방법

□ 현재 6.25참전 용사들과 월남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 상 약 30만원을 참전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 이는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본다.

□ 필리핀 같은 나라도 참전수당으로 한국 돈으로 60만원을 지급하고 호주만 해도 월 250만원을 참전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 이에 비하면 30만원은 너무 작다고 생각한다.

□ 이제 충분히 참전수당으로 100만원은 국가가 부담을 할 수가 있다고 본다.

□ 앞으로 참전수당을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 이행기간

□ 2021년부터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세금으로 한다.

정책순위

| | |
|------|--------|
| 5 | 종교부 신설 |
| 정책분야 | 종교 |

» **목 표**

□ 국민의 50%가 종교인으로 이제는 종교부를 신설해야 한다.

» **이행방법**

□ 2018년 기준, 불교 22%, 기독교 20%, 천주교 7.8%, 기타 로 나타난다.

□ 국민의 50%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늦은 감이 있다.

□ 종교 특성상 타 부처와는 다르게, 제일 인원이 많은 쪽이 1차관을 맡고, 그 다음이 2차관, 그 다음은 전부 합하여 3차관이 담당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 이렇게 되면 종교인들에게도 세금을 징수할 근거가 생기게 된다.

» **이행기간**

□ 2021년부터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근거가 생기므로 인해, 그 세금으로 종교인들에게 지원을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책순위

6

번역청 신설

정책분야 교육

» 목 표

□ 올바른 번역으로 세계로 뻗어 나가자.

» 이행방법

□ 똑바른 번역을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해외 선진 문물을 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 이를 바로 잡고자, 일본은 근 100년이나 지났고, 중국도 80년대에 들어서서 번역청을 만들어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 한국도 한시 바삐 번역청을 신설하여, 학문을 부흥하고, 외국 문헌들을 올바르게 번역하여, 번역문의 통일화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 많은 신규 인원이 충원되고, 젊은이들을 해외로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이행기간

□ 2021년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해당 없음.

정책순위

7

1,000만 애완견, 묘 의료보험 적용

정책분야 의료 정책

» 목 표

□ 유기견, 묘를 줄이는 길은 의료보험 적용이다.

» 이 행 방 법

□ 1,000만명의 국민이 애완견, 묘를 키우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유기견, 묘 들이다. 이런 유기견, 유기묘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물 의료 보험이 필수적이다.

□ 유기견, 유기묘들로 인해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들개들이나, 도둑고양이가 되어 버리는 현실은 바로 견, 묘들이 다치거나, 아플 때 처리 비용이 너무 비싸서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 이렇기 때문에 동물 의료보험을 주장하는 것이다.

□ 애완견이다 애완묘 주인들에게 처음 구입 시부터 적용을 하면,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이 행 기 간

□ 2021년부터

» 재 원 조 달 방 안 등

□ 수익자 방식이라 재원은 필요 없다.

정책순위

8

유통의 글로벌로 인하여 세계화

정책분야 중소기업육성

» 목 표

□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유통의 세계화

» 이행방법

□ 한국의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다단계 업을 정형화 시켜, 세계적으로 이름난 업체로 양산해
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

□ 현재 약350 만 명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은 방문 금지법에 의해 제대로
힘 한번 못쓰고 실직자에 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 이를 보면, 국가가 우수한 인력을 사장하고 있다고 본다.

» 이행기간

□ 2021년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필요 없음.

정책순위

9

신용불량자 구제(약 130만명)

정책분야 금융

» 목 표

□ 130만명 원래 채무 3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약 90% 구제하여, 재생의 기회 부여.

» 이행방법

□ 금융권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 재벌 그룹 중 하나인 모 업체를 희생시키기 위해 12조 원이라는 금액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선으로 보아 약 130만명 중 하위 90%인 약 117만명 위해 1조를 못 쓴단 말인가?

□ 같은 국민으로서, 패자 부활전이라면 부활절인 경제 부활을 위해 1조 정도는 사용가능하다고 본다.

» 이행기간

□ 즉시

» 재원조달방안 등

□ 1조를 세금으로 처리 한다.

정책순위

10

경제통일로 민족간 동질성 회복, 평화정착

정책분야 통일부

» 목표

□ 경제통일 이룩하여 평화통일 정착하자.

» 이행방법

□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남한과 북한이다.

□ 흡수 통일이니, 무력 통일이니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말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 북한의 주민들이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존자원이 부족한 남한과 부존자원이 풍부한 북한과 경험을 통해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 좋은결과가 나오리라 본다.

□ 경제통일을 먼저 이루어 놓고 난 뒤,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필요성을 느끼면 정치인들이 어떠한 매듭을 짓지 않을까 본다.

» 이행기간

□ 즉시

» 재원조달방안 등

□ 해당 없음.

한국복지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한국복지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계승 |
| 2 | 노인들의 노후가 행복한 세상 |
| 3 | 장애인들이 행복한 세상. |
| 4 | 중소기업을 경제의 근간으로 튼튼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 5 | 저출산 해소 및 행복한 주택,유아,교육정책 |
| 6 | 청년이 마음껏 꿈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나라 건설 |
| 7 | 재외동포 정책 |
| 8 | 정치선진화 정책 |
| 9 | 침구사제도,신용불량자 사면복권 정책 |
| 10 | 기초 생필품 물가관리청 정책 |

정책순위

1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계승

정책분야 정치분야

» 목 표

□ 대한민국 건국이념 계승, 호국수호자 최대한 예우.

- ◆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고,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을 단호히 척결하겠습니다.
 - 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무법폭력세력은 엄단한다.
 - ② 전교조교사 중에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 왜곡하는 교육을 일삼는 교사는 파면 조치한다.
 - ③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체제를 동경하는 자는 의사를 타진하여 복송 조치한다.
 - ④ 6·25와 월남전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엽제한자로 편입시킨다.
- ◆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국방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① 남북통일 시 까지 한-미동맹강화 기본 틀 유지로 국방력을 강화한다.
 - ② 남북통일 시 까지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공동대표체제로 전환한다.
 - ③ 한반도 주변 4대강국(미.일.중.소)과의 선린친선외교 강화한다.
 - ④ 대통령은 연중 절반을 수출증대를 위한 경제외교에 주력하기 위해 해외 각국을 순방한다.
 - ⑤ 고구려 유민이 다수가 살고 있는 터키, 중앙아시아국가 및 몽골반점국가 경제연방체 결성을 주도한다.
- ◆ 인도적이고 우호적인 입장에서 북한을 동반자로 대우하겠습니다.
 - ① 북한당국이 핵개발 포기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기구(PSI)'를 결성한 유엔의 결의를 존중한다.
 - ② 북한의 굶주린 인민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되 실수요자에게 전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합의한다.
 - ③ 북한 전역에 개성공단사업과 같은 시장경제 훈련공단을 설치하여 북한동포의 소득보장과 시장경제체제의 수련을 도모하도록 한다.

» **이행방법**

- ① 입법조치
- ② 행정조치

» **이행기간**

- ① 21대 국회 회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① 국가 SOC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SOC사업 예산을 전용
- ② 부유세 3%로 도입으로 66조원 확보 -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부유세 3%를 도입하여 66조원을 추가 확보한다.

정책순위

2

노인들의 노후가 행복한 세상

정책분야 보건복지분야

» 목 표

□ 노인복지 정책

- ◆ 노인들의 노후가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개발도상국가(OECD)중에서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라는 심각한 복지공황상태에 놓여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한달 최소 30만원(하루 1만원)의 용돈이 필요하다고 파악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700명의 사람을 75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행복의 조건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좋은 인간관계'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한다. 건강수명 백세를 누리며 좋은 인간관계를 누리며 노후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인복지 정책을 제시한다.

- ◆ 전체노인 정책

1. 토·일 노인사원제도 실시

주민센터·관공서민원창구 및 일반회사에 일당제 '토·일 노인사원' 근무제를 도입한다. ※월평균 50만원 용돈을 보장해준다.(일당 6만원)

▶ 월 4주인 경우 : 토·일근무 6만원X2=12만원, 12만원X4주=48만원

▶ 월 5주인 경우 : 토·일근무 6만원X2=12만원, 12만원X5주=60만원

2. 노인복지수당 월 30만원 지급(토·일 노인사원 비 해당자)

'토·일 노인사원'으로 근무하지 못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한다.

※ 학생들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무료급식을 제공하듯이 보편적 복지를 적용하여 65세 노인이면 월 30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3. 점심식사 무료 제공 식당을 확대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의 식당에 봉사단체(로타리·라이온스클럽 등)의 봉사금으로 식량과 반찬을 구입하고 부녀봉사회(새마을부녀회·적십자봉사회 등)가 밥 짓고 설거지하는 형태의 동네 곳곳에 민간 주도 무료 점심 제공식당을 확대하여 노인들이 점심 한 끼를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한다.

4. 지하철처럼 시내버스 무임승차카드 제공

현재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은 지하철 무료승차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지하철이 없는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교통비 혜택이 없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서도 지하철노선이 없는 장소로 갈 때를 대비해 지하철 및 시내버스 무임승차권을 지급한다.

5. 경로당 회장에게 이·통장 수준의 수당 지급(회장:월 30만원, 총무:월10만원)

6. 경로당에서 콩나물·두부 등을 생산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부녀회 결의로 우선구매를 권장하여 경로당의 수익을 증대시킨다.

7. 경로당에서 오후3시부터 7시까지 어린이집에서 보육 후 유아들을 돌보면서 돌보미 수당을 지급하여 할머니노인의 용돈수입을 보장한다.

8. 대한노인회 시·군·구지회에‘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 기회를 확대한다.

9. 전국 시·군·구에 노인전용운동장을 건설하도록 하여 운동 붐을 조성하여 노인의 건강수명을 증대시킨다. - 노인이 건강해짐으로 인해 국가의료비 지원액이 절감된다.

10. 전국체전·전국소년체전처럼 전국노년체전을 실시하여 노인건강의 생활화를 도모한다.

11. 노인주거시설을 소득능력에 따라 3가지형태로 운영하여 노후생활이 즐겁도록 한다. (①유료 실버타운, ②저소득층을 위한 노인전용 임대주택, ③치매, 중풍 노인을 위한 무료노인요양시설)

12. 전국 광역시·도에 대한노인회 직영 추모공원을 건립하여 장례비용을 대폭 절약시킨다.

13. 미국 주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원로의회제도”를 도입하여 노인들의 요구가 국정에 반영되게 하고 노인들의 경륜을 국정에 접목시키도록 한다.

14. 노인들에게 시·군·구 조례를 제정하여 월2회‘무료입욕권’을 제공.

15. 노인(老人)이란 용어를 혜인(慧人:지혜로운 어른)으로 바꾸어 노인을 존경의 대상이 되어 경로효친 사상을 되살리겠다.

16.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아기가 타고 있어요”처럼“노인이 타고 있어요”표시를 하고, 주차장에 장애인·여성 전용주차표시처럼“노인전용주차표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7.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에‘야광 보도블록’을 깔아 특별히 야간교통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노인회 정책

1. 대한노인회를 '대한노인회법'을 제정하여 법정단체로 승격
 - ※ 대한노인회법의 회원자격에 65세 이상의 국민을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국민을 준회원으로 정하여 1,000만 회원을 확보한 국내 최대 최강의 단체로 승격시킨다.
 - ※ '새시대 한국노인회'를 불법단체로 해체시키고, 시니어클럽 등 제반 노인관련단체를 대한노인회로 흡수하여 노인관련단체를 대한노인회로 일원화 한다.
 - ※ 직원들의 급여를 국고로 지급하며, 전국적 통일된 급여조건표를 적용하고, 호봉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
2.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연합회와 지회에 2년 만에 건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 통과시킨다.
 - ※ 1차로 2020년에 추경예산 2조원을 배정하여 100군데 건립하고, 2차로 2020년 예결위에서 2021년 본예산에 3조원을 배정하여 150군데 건립 한다
 - ※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장은 연합회장 및 지회장이 겸직하고, 월 400여만원의 판공비를 지급.
3. 보조금법 및 노인복지법 중 경로당 냉난방비 지급 조항을 개정하여 냉난방비 절약으로 남는 금액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충주시에 대한노인회 중앙연수원을 건립한다.
5. 시·군·구지회에 리무진대형버스 1대(기사 월급 매월 지급옵선), 봉고차 1대, 소형승용차 1대(배정받지 못한 각 지회에 선배정)를 배정한다.
6. 지금의 보건복지부를 노인복지부와 보건사회부로 개편한다

» **이행방법**

- ① 입법조치
- ② 행정조치

» **이행기간**

- ① 21대 국회 회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① 국가 SOC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SOC사업 예산을 전용
- ② 부유세 3%로 도입으로 66조원 확보 -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부유세 3%를 도입하여 66조원을 추가 확보한다.

정책순위

3

장애인들이 행복한 세상.

정책분야 보건복지, 장애인분야

» 목 표

□ 장애인 정책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 '장애등급제' 폐지
3. 장애인 일자리 창출
4. 장애인종합재활병원 건립
5. 저상버스비율 확대 및장애인콜택시 확충-장애인 이동권 보장
6. 국고지원자금 대폭확대
7. 희망드림센터 등 장애인지원(자생력배양 및 자립)
8. '장애인 창업 및 기업지원센터' 설립 및 확대
9.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10. 수화언어법안 제정
11. “발달장애인법”에 “소득보장, 주거, 주간활동 및 돌봄 등 주요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예산확보 함
12.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
13. 중증장애인 상시 돌봄지원체계 구축
14.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정착 지원
15. 지역사회 참여형 일자리 확대
16. 장애인 평생교육관 설립
17.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립
18.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 이행방법

- ① 입법조치
- ② 행정조치

» 이행기간

- ① 21대 국회 회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① 국가 SOC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SOC사업 예산을 전용
- ② 부유세 3%로 도입으로 66조원 확보 -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부유세 3%를 도입하여 66조원을 추가 확보한다.

정책순위

4

중소기업을 경제의 근간으로 튼튼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책분야

산업자원분야

» 목 표

□ 중소기업을 경제의 근간으로 하는 튼튼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골목상인·소상인·소상공인 및 50인 이하 중소기업 정책

1. 최저임금 10,000원 시행 5년간 유예- 최저임금 10,000원의 조기 시행에 부담을 갖는 골목상인 및 소상공인·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저임금 10,000원 시행시기를 5년간 유예하여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2. 50인 이하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무시간 제를 5년간 유예-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타격이 큰 50인 이하 중소기업을 위해 주52시간 근무제를 5년간 유예한다.
3. 50인 이하 중소기업에 '경영자문관' 파견 - 50인 이하 중소기업에 고급공무원(2급~1급 공무원출신) 또는 대기업 중역출신을 '경영자문관'으로 주2회 파견근무를 시켜 경영가이드 역할을 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한다.

◆ 중소기업 정책

1. 중소기업 소요자금 완전신용대출로 지원- 우수제품을 개발한 유망 중소기업체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평가기관의 엄격한 사업평가를 토대로 소요자금을 완전신용대출로 지원 육성한다.
2. 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 전담 국책은행으로 운영- 기업은행을 중소기업자금 전담 국책은행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저금리금융지원을 전담하도록 한다.
3. 대기업의 중소기업업종 침해 철저히 차단- 대기업의 중소기업업종 침해를 철저히 차단시키기 위한 법적장치를 강구한다.
4. 대기업의 가격 후리치기 엄단- 대기업의 가격 후리치기를 엄격히 차단한다.

» 이행방법

- ① 입법조치
- ② 행정조치

» 이행기간

- ① 21대 국회 회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① 국가 SOC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SOC사업 예산을 전용
- ② 부유세 3%로 도입으로 66조원 확보 -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부유세 3%를 도입하여 66조원을 추가 확보한다.

정책순위

5

저출산 해소 및 행복한 주택, 유아, 교육정책

정책분야

보건복지, 교육, 건설교통분야

» 목 표

□ 획기적인 저 출산 해소방안- 정책

- 인구가 곧 소비자다. 인구가 줄게 되면 소비자가 줄게 되는 것이고, 소비자가 줄게 되면 경기가 위축되고, 경기가 위축되면 경제가 침체되어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저 출산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그 어느 정책보다 우선이 되어야할 것이다.
- 정부는 저 출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47조 2천억원을 쏟아 부었으나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 우리당은 다음과 같은 저 출산 해소방안을 이번 4.15총선에 정책으로 제시하며 저 출산해소를 반드시 해결하려한다.

◆ 자녀만 출산하며 무상으로 내 집 마련되는 주택정책

결혼 적령기 청년들이 주택문제가 해결되어 결혼을 서두르도록 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유지 중 토지가격이 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교육부지 중 폐교지역을 택지로 조성하여 저 출산 해소용 목적의 아파트를 대량 건설 확보하도록 하여 취업을 하게 된 청년에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용으로 14평형 영구임대주택을 배정해주고, 결혼한 부부에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후 1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18평형 아파트를, 3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평형 아파트를 무상으로 기증하도록 하여 내 집 마련과 다자녀 갖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한다.

- ① 영구임대주택(14평형 아파트)- 취업한 청년에게 배정
- ② 1자녀 출산가정(18평형 아파트)- 무상 기증
- ③ 3자녀 출산가정(25평형 아파트)- 무상 기증

◆ 일체의 경제부담 없는 임신부 및 유아정책

여성이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때까지 모든 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출산에 따른 가계 부담을 제로로 해주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에 대한 염려를 해결해주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수업을 마친 오후 3시 이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는 거주지 경로당에서 아동 돌보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육아휴직기간을 재택근무제로 인정하여 급여의 50%를 지급해주도록하고, 정부가 50%를 기업에 보상해주도록 하여 기업은 아르바이트사원을 근무하게 한다.

- ① 임신에서 출산까지 의료비용 국가가 전액부담
- ② 맞벌이 부부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마친 아동 경로당에서 돌봄
- ③ 육아휴직기간을 재택근무제로 인정하여 급여의 50%를 지급
- ④ 육아휴직 재택근무기간동안 급여의 50%를 정부가 기업에 보전해주어 기업은 아르바이트사원을 고용
- ⑤ 기업이나 사회가 육아유직에 대해 가장 소중한 인간존중의 행위로 인식을 전환하도록 의식구조 변화운동을 전개

◆ 교육비 제로화 교육정책

사교육비 부담요인을 완전히 근절하고, 유치원·초·중학교까지는 물론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는 대학졸업까지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교육비부담을 제로화 한다.

- ① 현재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을 중단하고 이 재원으로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
- ② 대학을 전문 인력 배출 4년제 대학과 취업전문 2년제 대학으로 2원화 하고,
- ③ 전문 인력 배출 4년제 대학 입학정원 5배로 확대하고 전국에 6개의 분교를 둔다. - 우수대학 학문의 확대에 의해 사교육 필요성을 제로 화한다.
- ④ 전문 인력 배출 4년제 대학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

예시) 등록금 500만원 X 10,000명 입학정원 = 500억원(등록금 총액)

등록금 250만원 X 50,000명 정원확대 = 1,250억원(등록금 총액)

- ⑤ 정원 확대에 확보된 재원으로 정원확대 이전에 합격할 수 있었던 우수학생(20%)에게 4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여 공부 잘하는 우수학생은 대학 졸업까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제로 화한다.
- ⑥ 취업전문 2년제 대학 운영- 4년제 대학에서 탈락한 학생이 전학
 - 1학년 - 교양과목 이수
 - 2학년 - 전공과목별 관련 직장에서 현장실습으로 수업을 대체하여 취업에 적합한 사원으로 양육한다.

» 이행방법

- ① 입법조치
- ② 행정조치

» **이행기간**

- ① 21대 국회 회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① 국가 SOC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SOC사업 예산을 전용
- ② 부유세 3%로 도입으로 66조원 확보 -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부유세 3%를 도입하여 66조원을 추가 확보한다.

정책순위

6

청년이 마음껏 꿈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나라 건설

정책분야 교육, 국방, 건설교통분야

» 목 표

□ 청년- 정책

◆ 청년이 마음껏 꿈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1. 적성과 소질에 맞는 중·고등학교 진학

- ① 중고등학교를 인문중고등학교, 체육중고등학교, 예능중고등학교로 다변화 한다.
- ② 초등학교 6학년 동안 담임선생이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분석 파악하여 인문·체육·예능 중고등학교로 진학을 배치한다.

2.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 ① 현재 정부가 대학교에 지원하는 약 20조원의 예산을 대학지원을 중단하고 고등학교 의무교육 재원으로 전환하여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여 국민의 교육비부담을 줄인다.
- ② 고등학교도 인문·체육·예능고등학교로 다변화한다.

3. 대학입시제도 개편

- ① 고등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하되 수능시험성적을 대학 입시에 적용하지 않고 대학진학여부를 평가하는 대학진학자격시험으로 전환한다.
- ② 대학입시는 대학마다 입학시험을 실시한다.
- ③ 대학입시는 전 과목평가제를 지양하고, 전공학과 연관과목만 시험을 실시한다.

예시) 물리학과 진학의 경우 :

물리학과 전공과목인 물리와 연관과목인 화학·수학만 시험을 본다.

- ④ 고등학교 3학년을 현재의 문과 · 이과반의 구분에서 세분화하여 '물리·화학반'등으로 나눈다.
- 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물리·화학반'일 때에는 오전 1교시에 물리, 2교시에 화학, 3교시에 수학을 공부하고 오후 4교시에 물리실험, 5교시에 화학실험, 6교시 자율학습으로 수업을 종료하고 귀가한다. 학교에서 실험을 실시하여 사설학원에 다닐 필요성을 없애줌으로 사교육비 지출을 예방한다.
- ⑥ 직장인인 부모도 러시아워를 피하기 위해 '오전6시 출근 오후3시 퇴근' '오전7시 출근 오후4시 퇴근' '오전8시 출근 오후5시 퇴근'제를 실시하여 일찍 귀가하도록 하여 저녁식탁에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밥상머리교육’이 회복되도록 하며, 고3자녀와 부모가 베트민턴을 친다든지 걷기운동을 한다든지 하며 여가시간을 즐기도록 한다.

4. 대학을 4년제 대학과 2년제 취업대학으로 양분화

- ① 대학을 고급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4년제 대학과 취업을 전문으로 하는 2년제 취업대학으로 양분화 한다.
- ② 4년제 대학의 경우 졸업정원제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입학정원을 5배로 늘려 입시전쟁을 없앴으로 사교육비지출의 근원을 해소한다.
- ③ 대학입학정원을 5배로 늘림으로 인해 입학생지원이 없어 문을 닫아야할 대학 캠퍼스는 입학지원생이 넘칠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 등의 지역별 6개 분교로 개편하고, 그 외의 대학은 취업대학으로 전환한다.
- ④ 취업대학은 1학년은 교양과목을 공부하고, 2학년은 전공과목별로 해당업체에서 실습을 하며 취업훈련을 쌓는다.
- ⑤ 4년제 대학에서 매 학기마다 탈락되는 학생은 취업대학으로 전학하도록 한다.

5. 사교육비 제로화, 반값 등록금 해결

① 사교육비 제로화 해결

지원 선호도가 높은 우수대학의 입학정원을 5배로 확대하여 쉽게 우수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입시 난을 해소하여 사교육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도록 하여 사교육비 제로화를 달성한다.

② 대학입학정원 5배로 확대, 반값등록금 문제 해결

졸업정원제를 준수하면서 대학입학정원을 5배로 확대하여 반값등록금을 실시한다.

※ 반값등록금 소요재원 확보 및 방안 :

입학정원 10,000명인 대학을 5배수 50,000명으로 늘릴 경우 :

입학정원 10,000명인 경우 : 등록금 500만원 X 10,000명 = 500억원(재정수입)

정원 5배로 늘릴 경우 : 등록금 250만원 X 50,000명 = 1,250억원(재정수입)으로 대학의 재정은 2.5배나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입학정원 20%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대학마다 장학제도를 확충하고 과학기자재 및 도서관을 확충하여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시킨다.

③ 우수학생(입학정원의 20%)에게 4년간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입학정원 5배로 늘릴 경우 확충되는 대학의 재정수입으로 입학정원 20%의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6. 병역의무제를 폐지하고, 모병제 전환으로 청년일자리 50만개 확보

① 모병제(직업군인제)도입

※ 의무병제의 문제점

- ① 입대한 날부터 제대날까만 세고 있는 강제 의무병으로는 전투력의 약화와 병영 사고만 빈발시킨다.

- ② 현역병 복무로 인해 청년층(대학생, 직장인, 운동선수, 예술인)의 전성기 단절로 청년기의 성장에너지를 감퇴시켜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한다.

※ 모병제 효과

- ① 북한의 노동집약적 군대에 발맞추기보다 기술집약적 군대로 전환하여 정예군대로 전환.
- ② 첨단장비를 갖추고 유사시 중무장 기동타격대가 출동.
- ③ 청년일자리 50만개 창출(주택 및 중소기업 수준의 급여지급)- 소요재원 12조원
(국방비절감액+국방세 신설)
- ④ 청년층(대학생, 직장인, 운동선수, 예술인) 전성기단절 해소효과로 성장에너지 제고
- ⑤ 세계용병으로 투입 수익창출효과
- ⑥ 국내총생산(GDP)의 1.5%만 국방비에 투입해도 북한 전체 GDP의 50%에 해당한다.

- ② 병역의무제 폐지, 4개월 군사기본훈련 대체로 청년 성장에너지 극대화

현역병 복무로 인해 청년층(대학생, 직장인, 운동선수, 예술인)의 전성기 단절로 청년기의 성장에너지를 감퇴시켜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는 현재의 병역의무기간(18개월~22개월)을 폐지하고, 모병제(직업군인제)를 도입하여 군대를 재편하고, 4개월 기본군사훈련만 받고 예비군에 편입되어 전쟁 또는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한다.

7. 돈 안 드는 자녀출산 및 무상으로 내 집 마련

결혼 적령기 청년들이 주택문제가 해결되어 결혼을 서두르도록 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유지 중 토지가격이 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교육부지 중 폐교지역을 택지로 조성하여 저 출산 해소용 목적의 아파트를 대량 건설 확보하도록 하여 취업을 하게 된 청년에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용으로 14평형 영구임대주택을 배정해주고, 결혼한 부부에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후 1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18평형 아파트를, 3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평형 아파트를 무상으로 기증하도록 하여 내 집 마련과 다자녀 갖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한다.

※ 영구임대주택(14평형 아파트)- 취업한 청년에게 배정

※ 1자녀 출산가정(18평형 아파트)- 무상 기증

※ 3자녀 출산가정(25평형 아파트)- 무상 기증

◆ 일체의 경제부담 없는 임신부 및 유아정책

여성이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때까지 모든 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출산에 따른 가계 부담을 제로로 해주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에 대한 염려를 해결해주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수업을 마친 오후 3시 이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는 거주지 경로당에서 아동 돌보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육아휴직기간을 재택근무제로 인정하여 급여의 50%를 지급해주도록하고, 정부가 50%를 기업에 보상해주도록 하여 기업은 아르바이트사원을 근무하게 한다.

※ 임신에서 출산까지 의료비용 국가가 전액부담

- ※ 맞벌이 부부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마친 아동 경로당에서 돌봄
- ※ 육아휴직기간을 재택근무제로 인정하여 급여의 50%를 지급
- ※ 육아휴직 재택근무기간동안 급여의 50%를 정부가 기업에 보전해주어 기업은 아르바이트사원을 고용
- ※ 기업이나 사회가 육아유직에 대해 가장 소중한 인간존중의 행위로 인식을 전환하도록 의식구조 변화운동을 전개

» 이행방법

- ① 입법조치
- ② 행정조치

» 이행기간

- ① 21대 국회 회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① 국가 SOC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SOC사업 예산을 전용
- ② 부유세 3%로 도입으로 66조원 확보 -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부유세 3%를 도입하여 66조원을 추가 확보한다.

정책순위

7

재외동포 정책

정책분야 외교분야

» 목 표

□ 재외동포 정책

1. 재외동포 국회 진출- 재외동포에게도 국내와 동일하게 30만 인구기준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한다.
2. 2중국적 허용- 2중국적을 허용하여 국내에 재산보유를 허용하고 재외국의 시민권 취득을 권장하여 거주지 국가의 정계진출을 돕는다.
3. 교민청 설립 - 재외동포를 위해 “교민청”을 설립한다.
4. 교포 우선 채용(2세~3세)- 한국 기업이 해외공장이나 지사를 설립할 때 교포 2세~3세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한다.
5. 재외동포 인명부작성- 재외동포 인명록을 데이터베이스(db)작성하여 거주지 국가에서 분야별 유력자를 정부나 기업이 해외진출 할 때 효과적인 인맥관리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 이행방법

- ① 입법조치
- ② 행정조치

» 이행기간

- ① 21대 국회 회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① 국가 SOC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SOC사업 예산을 전용
- ② 부유세 3%로 도입으로 66조원 확보 -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부유세 3%를 도입하여 66조원을 추가 확보한다.

정책순위

8

정치선진화 정책

정책분야

정치분야

» 목 표

□ 정치선진화 정책

1. 법률안 제정 및 개정 등 입법권 국회 고유권한 화- 미국과 같이 입법권을 국회만이 갖도록 하여 지금까지의 국회가 통법부에 불과하다는 오명을 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민의 전당으로 회복한다.
2. 국회산하에 감사원을 두어 행정부의 행정 및 예산집행결과를 엄정 감시감독 함.- 대통령의 월권을 예방하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혈세의 낭비가 없도록 하며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원리를 최대한 구현되도록 한다.
3.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 - 국회 2대과제인 예산 결산권을 강화하여 정부의 예산안을 편성과정에서부터 심의권을 국회가 갖도록 하여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고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도모한다.
4. 의원자유투표제(크로스보팅 투표제) 도입 - 남북통일·헌법 개정·정당의 존립과 관련되는 법률개정 등 중차대한 안건을 제외하고는 사사건건 당론을 정하지 말고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겨 표결에 임하는 의원자유투표제(크로스보팅 투표제)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보장하여 거수기라는 오명의 작폐를 근절하도록 한다.
5. 국민의 정당가입 장려 - 국민 대다수가 자기 성향에 맞는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장하여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지역구 당원대회에 결정하도록 하여, 특정 지도부에 예측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주어 국회의원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도록 한다.
6. 국회의원선거 합동연설회 부활 - 의원선거 시에 합동연설회를 부활시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넓히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준다.
7. 자치단체의 장 임명제로 전환 - 자치단체장의 직선제로 인해 지방행정차원에서 대통령의 통치권이 잠식당하여 국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체의 자치단체의 장은 임명제로 전환하고, 지방자치의원만 직선제로 한다.

» 이행방법

- ① 입법조치
- ② 행정조치

» **이행기간**

- ① 21대 국회 회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① 국가 SOC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SOC사업 예산을 전용
- ② 부유세 3%로 도입으로 66조원 확보 -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부유세 3%를 도입하여 66조원을 추가 확보한다.

정책순위

9

침구사제도, 신용불량자 사면복권 정책

정책분야 보건복지, 교통, 산업분야

» 목 표

□ 침구사제도 양성화, 슈퍼·자판기 약품판매, 지입전세버스 개인면허허용, 신용불량자 사면복권 실시

◆ 처방약을 제외한 일체의 약품을 슈퍼 및 자동판매기에서 판매

지금의 약국이 병원근무와 같이 영업을 하므로 인하여 병원근무시간 외에 약을 구입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 국민 92%가 처방약을 제외한 일체의 약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부응하여 처방약을 제외한 일체의 약품을 슈퍼 및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도록 입법조치 하여병원근무시간 외에도 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침구사제도 양성화

일침·이구·삼약(一鍼 二灸 三藥)이라는 의료명구가 있듯이 침구(침과 뜸)의술의 탁월한 효험을 질병치료의 의료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인정하는 의료행위로 입법조치 하겠습니다.

◆ 지입 전세버스 개인면허 허가

1. 평생을 운전을 하다가 대형버스를 한 대 구입하여 전세버스회사에 지입으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많은데 이런 경우 지입버스가 본사명의로 되어있는 관계로 인해 본사가 부도가 날 경우 지입차주의 재산이 압류가 되는 등으로 발생하는 영세지입차주의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택시 경우처럼 지입전세버스의 개인면허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2. 개인 전세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영세한 개인 전세업자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기금을 활용하여 사고처리 하고, 사용한 공제기금을 분할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불량자 사면복권조치 단행

신용카드 및 다단계영업 피해로 인해 금융 적색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 5,000만 원이하 사람의 경제회생을 위해 특별자금을 조성하여 금융거래 정상화를 도모한다.

» **이행방법**

- ① 입법조치
- ② 행정조치

» **이행기간**

- ① 21대 국회 회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① 국가 SOC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SOC사업 예산을 전용
- ② 부유세 3%로 도입으로 66조원 확보 -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부유세 3%를 도입하여 66조원을 추가 확보한다

정책순위

10

기초 생필품 물가관리청 정책

정책분야 재정경제, 건설

» 목 표

□ '기초 생필품 물가관리청' 및 '지하매설물관리청' 신설 생필품 물가안정 도모.

1. '기초생필품물가관리청'을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하여 생필품 물가안정 도모
 - 1) '기초생필품물가관리청'을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하여 품목마다 담당자가 배치되어 생산에서 소비까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생필품(식량·부식·일용잡품 등)의 물량이동추이를 면밀히 추적하여 기초생필품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서민생계를 보호한다.
 - 2) 현재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기초생필품관련 부서를 '기초생필품물가관리청'으로 집중화하여 효율적인 물가관리체계를 수립한다.
 - 3) 가뭄이나 홍수 등 기상이변으로 생산부족이 예측될 때에는 수입을 서둘러 공급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파 등이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비축자금으로 적정량을 구매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도록 한다.
 - 4) '기초생필품물가관리청' 공무원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하여 물가관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 5)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 및 판매를 실시하여 수급을 조절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해준다.

2. '지하매설물관리청' 신설

- 1) 문제점 : 지하 매설이 불가피한 상·하수도, 가스, 전화선, 전기선, 광케이블 등이 행정부처마다 매설 시기나 기간 등이 다르거나 사전 정보가 전혀 교류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이 때문에 상·하수도 공사가 진행된 이후, 같은 지점에 전화선이나 전기선을 매설하기 위해 공사가 다시 진행되어 엄청난 국고가 낭비되고 극심한 교통 체증의 요인이 되어, 나라를 아끼는 많은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
- 2) 개선책 :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모든 관로(상·하수도, 가스, 전화선, 전기선, 광케이블)의 관련 공사 및 유지·보수를 종합 관리 하는 단일 관서로서 '지하매설물관리청' 설립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지하매설물관리청'을 설립하여 정부 부처 및 민간 부문의 지하 매설 업무를 일괄 통제 관리하며 시공·유지·보수까지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관리청에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공사 관련 부처의 공사 계획에 대해 신고·접수한 뒤 관리청은 이들 공사 건수를 일괄 조정 하여 한꺼번에 여러 건의 공사를 조정 집행하도록 하며, 관리청은 향후 장기 5개년 계획과 단기 2개년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예측 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조율하여 공사 기간의 단축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매설물 지도를 작성하여 각 부처에 배포하도록 함.

- 3) 효과 : 지하매설물에 대해 반복 공사를 지양하게 되고 일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반복 공사로 인한 국고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지하매설물에 대해 일관성 있는 시공, 유지, 보수체계가 수립됨으로 인해 대규모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게 되고, 상·하수도 공사 후 다시 전기나 가스 배관 공사를 하는 낭비적 반복공사를 예방하게 되어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됨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공사 건수를 종합하여 일괄공사를 하게함으로써 공사장 주변의 교통체증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어 국민 편익이 크게 증대 될 수 있을 것임.

» 이행방법

- ① 입법조치
- ② 행정조치

» 이행기간

- ① 21대 국회 회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① 국가 SOC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SOC사업 예산을 전용
- ② 부유세 3%로 도입으로 66조원 확보 -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부유세 3%를 도입하여 66조원을 추가 확보한다

한나라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민주 정치 실현 |
| 2 | 경제 민주화, 일자리창출 |
| 3 | 대한민국의 대발전, 지상낙원 건설 |
| 4 | 교육 과학 기술 발전 영성 교육 |
| 5 | 과학 기술 발전 행복,낙원 |
| 6 | 한을 풀고, 소원성취 하는 한나라당 |
| 7 | 정상화, 전문가, 당연성, 근본성 |
| 8 | 제 5차원의 세계로 인도 |
| 9 |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
| 10 | 정치, 경제, 사회분야 변혁 |

정책순위

1

민주 정치 실현

정책분야 정치

» 목 표

□ “ 한나라당이여!! 정치로 세상을 건져라!!! ”

» 이행방법

□ 한나라당이 집권 국회입법을 통하여 이행

» 이행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재원조달방안 등

□ 탈세방지 적법납세로 제원확보, 대북송금차단 불필요하고 부당한 예산지출 방지

□ 한나라당의 정치분야 정책을 펼쳐보이겠습니다.

{1}-1. 정치가 잘 되어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외교 국방 행정 등 모든 분야가 업그레이드 되어 상승작용을 일으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1}-2. 국회와 정당의 혁신 방안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1) 헌법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 행정부 국회 법원 국권부(참전계경부,한풀이부)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국민의 뜻에 따라 재구성하겠습니다.
- (2) 각종 언론기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들을 국민 뜻에 따라 재구성하겠습니다. 한 많은 사람들은 저희 한나라당에 오셔서 한 푸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빕니다.
- (3) 국회의원 정수를 150명으로 절반을 감축하겠습니다.
- (4) 시의원선거 구의원 선거 도의원 선거 군의원 선거와 시도교육감 선거를 모두 없애거나, 존속시킬 경우 당초 지방자치 뜻대로 무보수로 하겠습니다.

- (5) 각종 농협장 선거 등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선거를 없애고 국민 전체의 뜻에 따라 정하겠습니다.(6) 교육감 선거시 국민 직접선거 제도를 없애겠습니다.
- (7) 국회의 회기 중 정기회를 연 2회 (3월 21일~5월 31일, 9월 20일~12월 31일) 로 하고, 국회를 365일 연중무휴 개최하여, 법안상정 심의 의결에 있어서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 (8) 국회의원의 신분 보장 및 자질향상과 양식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므로, 1인의 국회의원이 법률안 제출과 법률안 심의 회부, 법률안 상정권 및 예산결산심사권 상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9) 국회교섭단체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선거를, 개원하는 국회에서 전체 국회의원이 직선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제1당에서 내세우는 대표가 국회의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방식을 무작위로 직선제로 변경하여, 자질이 되는 자를 국회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한다.
- (10) 국회의원의 표결 시 무기명투표 및 교차투표 및 투표에 있어서 정당의 개입을 차단하고 양심과 법률에 의하여 자유로이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11) 국회와 정당의 혁신은 국민 심판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심판은 투표 때 이루어지므로 투표 시 국회의원후보를 심판하고 정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 (12)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정치를 잘못하는 경우에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겠습니다.(13) 중앙당의 비대화를 막고 돈이 적게 드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 (14)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 국민참여 경선정당, 정당의 혁신이 이루어 지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 (15) 재보궐 선거 시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게는 공천권을 배제하며,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
- (16) 대통령 되어도 재밌는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언제나 소통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 (17) 신문고 제도는 대통령이 직접 해결 해 준다.
- (18) 믿는 사람들은 믿어라. 소통의 중요성 점검하고 증대시킨다.
- (19) 대통령 공약 100%이상 신뢰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 (20) 지방자치제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과 폐지와 금융실명제 제도를 폐지한다.
- (21) 세계통일 2030년...대한민국 대통령 되려는 이유는 세계 통일을 위함이다.
- (22) 세계 통일 할 자는 한나라당과 이태희 밖에 없다.
- (23) 호주제 폐지를 없애고 호주제 부활한다.
- (24)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하여 국회의 권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 (25)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한다.
- (26) 살인자를 제외한 감방에 있는 모든 기결수를 모두 석방한다.
- (27) 행정부의 각부 장관과 차관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법원 검찰 경찰 헌법재판소
- (28)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외에 제 4부인 국권부(이태희 창조 작품 : 참전계경부)를 설치하여 국민의 권익을 근본에서부터 보장, 보호, 도모, 신장, 증진, 증대하고, 해원상생,소원성취 시켜 드립니다.

- {1}-1. 정치 심판의 각론을 제시하겠습니다. 1.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1) 국권부의 장인 국령을 선거로 선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국가권익위원회위원장을 선거로 선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한풀이청장과 한푸세청장과 해원상생청장과 소원성취청장을 선거로 선출한다. 국가권익위원회의국민권익 위원장과 국가권익위원장을 선거로 선출한다.
 - (2) 완전한 지방자치(현재 지방자치는 행정에 국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구의원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 선거만 하고 있는데, 법원 검찰과 경찰과 국회 국정원 공수처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장과 위원들을 모두 선거제로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실시하여 채용에서부터 공직자의 품행과 인격과 공명정대성이 결들여져 선진 행정부, 선진 입법부, 선진 사법부, 선진 국권부를 실현하겠습니다.
 - (3) 경찰 검찰 의 지위와 국가기관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 1) 검찰청장과 지방검찰청장 및 지청장 선거를 점차적으로 즉각 실시하여 채용에서부터 공직자의 품행과 인격과 공명정대성이 결들여져 선진 행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 2)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파출소장 선거를 점차적으로 즉각 실시하여 채용에서부터 공직자의 품행과 인격과 공명정대성이 결들여져 진 행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 (4) 법원을 개혁하겠습니다.:대법원장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지방법원 지원장 선거를 점차적으로 즉각 실시하여 채용에서부터 공직자의 품행과 인격과 공명정대성이 결들여져 선진 사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 (5) 국회를 개혁하겠습니다.:국회의장 국회의원(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국민토론과 국민여러분들이 결정)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의원 보좌관수를 5명 이내로 줄이고) 국회의원보좌관선거를 점차적으로 즉각 실시하여 채용에서부터 공직자의 품행과 인격과 공명정대성이 결들여져 선진 입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 (6) 교육감 선거는 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감 선거 폐지 . 교육위원회 의 권한 강화와 교육위원회 위원 선거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채용에서부터 공직자의 품행과 인격과 공명정대성이 결들여져 선진 교육부를 실현하겠습니다.
 - (7)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을 선거로 선출하고 실시하여 채용에서부터 공직자의 품행과 인격과 공명정대성이 결들여져선진 감사원을 실현하겠습니다.
 - (8) 중앙. 광역시 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선거로 선출하고 실시하여 채용에서부터 공직자의 품행과 인격과 공명정대성이 결들여져 선진 선거관리위원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9) 제도 보다는 운용의 묘미가 중요합니다. 제도 보다는 운용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훌륭한 정치지도자가 탄생하기를 갈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나라당에서 훌륭한 정치지도자가 탄생하기를 기대하고 기원하고 학수고대 하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정책순위

2

경제 민주화, 일자리창출

정책분야 재정경제

1. 경제 심판론입니다.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무능하고 사회주의노선으로 가고 있기에 ‘다 같이 못 살자’라는 것으로 다 같이 나눠먹자는 것은 포퓰리즘이고, 그 내면에는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다같이 적게 분배하다보니, 파이를 키우는데도 정신을 쓰지 않고, 작은 파이 나눠먹는 방법과 논의와 만드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결과가 사회주의노선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는 지구상에서 종말을 고했으나, 북한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무능하고 사회주의노선으로 가고 있기에, 국가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서, 정치지도자와 국회의원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다 보니, 나라경제는 추락하고 서민경제는 붕괴되고 코로나19로 서민들만 고생하고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 (2)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신바람 나는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을 실천해 보이겠습니다.
 - (3) 주5일제 근무를 하되, 가동은 주7일을 풀가동하여 역동성이 넘치는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 (4) 대기업의 임원의 월급을 현실화하여 대학교 졸업생들의 취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 (5) 경제 정의를 이룩하겠습니다.
 - (6) 경제 발전과 경제 성장, 경제 균형과 균형배분을 실현하겠습니다.
 - (7) 실업자를 구제하여 실업률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8) 빈익빈 부익부를 고쳐 부의 균형적인 배분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9) 노동 3법인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 노동쟁의 조정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 (10) 기업이 정신을 고취시키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도록 하며, 기업의 사회 봉사정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11) 기업의 독과점을 폐지하며,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경쟁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유도할 것입니다.
 - (12) 한국경제의 가장 문제점은 ‘협상차 가격’입니다.
 - (13) 그리고, 한국경제의 가장 문제점은 샌드위치 경제입니다. 밑으로는 후발 주자인 중국경제, 위로는 선진미국, 일본경제 구조 하에서 존재하는 것이 한국 경제입니다. 중간에 위치한 샌드위치 경제에서 살아나갈 방향과 전략을 잘 세워 나가야 합니다.
 - (14) 기업의 임직원의 월급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합니다.

- (15) 쌀값 폭락문제 해결과 채소값 폭락문제 등 농산물 가격폭락 문제 해결을 한나라당 대표에게 맡겨 봐 주십시오
- (16) 부동산 경제 활성화와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경감을 위하여 금융비용의 필요 경비 산입과, 의제 취득일을 2005년12월 31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를 201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시에 2010년 12월 31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여 국민들의 양도 소득세를 경감하여 주어야 합니다.

2. 경제 민주화 방안 :

- (1) 1 %의 부자와 99%의 일반 시민 서민간의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99%의 서민을 위한 정책을 입법하여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서민과 농민, 어민, 노년층, 병자 등 사회적 약자의 설움과 고통과 애환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2) 비정규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노동3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채용 과 퇴사의 용이함과 유연성을 회복하고, 근로자와 사주 모두가 그 회사의 사원이요, 주인이라는 자주의식으로, 공동모색을 통하여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경제 주체들이 조화로운 상생의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개인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열화와 병진화 및 병렬화를 통하여, 공생발전 상생발전을 이룩하여야 할 것입니다.
- (4) 대기업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근본시각과 의무를 부여하여, 대기업의 각성을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5) 국가가 경제 정책 수립 집행 시 개인이나 시민 서민 및 중소기업이 희생되지 않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개인의 공생 발전 및 병진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6) 소비적 복지보다 생산적 복지 경제정책을 시행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복지를 실시하겠습니다.
- (7)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제7광구에서 일본과 중국은 가스와 석유를 채굴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제7광구에서 가스와 석유탐사를 하여 경제를 살리고 서민 경제를 부흥시키겠습니다.
- (8) 국민 부채를 탕감해 줍니다. (국민 빚만 1600조원)
- (9) 예산 절약하여 2조원대의 대학생 등록금을 다 줄 수 있어요.
- (10) 대학등록금을 절반 이하로 인하실현
- (11) 죄수 방면, 경제인에게는 벌금을 과중하게 부과. (벌금 처리 경제인에게 벌금으로 무겁게 처리.)
- (12) 살인죄와 강력범만 구속하고 경제범은 경제에 맞게 벌금 부과
- (13) 신용불량자 모두 기록 폐지
- (14) 살인죄와 강력범을 제외한 모든 범죄기록 삭제
- (15) 관치경제와 김영삼의 금융실명제를 없애기로 한다. 국부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한 금융실명제를 없앤다.
- (16) 처녀 총각이 결혼하면 남자 5000만원 여자 5000만원 결혼자금 1억원 지급

- (17) 처녀 총각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 출생자금 3000만원을 지급.
- (18) 자녀 고등학교 입학시 500만원 지급, 대학 입학시 1000만원 지급
- (19) 경로우대자(65세 이상 남녀): 1인당 연금 월70만원 지급

정책순위

3

대한민국의 대발전, 지상낙원 건설

정책분야 통일외교통상

{3}-1. 한나라당은 5연방 1체제 1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당입니다.: 5연방 1체제 1국가란 한.몽 연방공화국 + 한.연해주 연방공화국 + 한.북한 연방공화국 + 한.동북3성 연방공화국을 형성하여 대한민국 (GRAND KHAN)을 건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세계 3대강국(대한민국, 미국, 중국)을 형성할 것이며, 세계 선진 일류 장손 민족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2대 덕목과 9자 정신과 10대 교육을 통하여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건설할 것이며, 세계제일류국민으로 등극할 것입니다.

(1) 5연방 1체제 1국가 건설을 통하여 국호는 대한민국 (GRAND KHAN)을 건설하여 세계 제1 강대국을 형성할 것입니다.

(2)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5연방 1체제 1공화국 체제로서 한.몽 연방공화국, 한.연해주 연방 공화국, 한.북한 연방공화국, 한.만주 연방공화국을 남한이 주도하는 세계 제1대 강국인 그랜드 칸[GRAND KHAN, 대환국(大桓國)]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현정부의 통일정책 심판론입니다.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과제 20대 국회의원들의 통일론 자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습니다. 통일문제는 장기간에 걸쳐서 남북한 자체가 논의하고 방법을 찾고 남북한이 대좌하여 논의하고 제시하고 타협을 하여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남북한 간에 구체적인 논의나 협상 지체가 없는 상태이고, 단지 주한미군철수나 한미공동방위조약의 약화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통일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5연방1 체제 1 국가 통일론이며, 5국통일론입니다. 한나라당과 당원일동이 5연방 1체제 1국가 건설을 하여 5국통일을 완성하고, 세계 선진 일류 민족 국가 시민으로 등극시키겠습니다. 5연방 1체제라 함은 첫째, 대한민국과 몽골리안 공화국 (내몽고 포함)이 형제국으로서 연방국을 완성하는 일을 말합니다. 둘째, 대한민국과 연해주와 북간도지방 전체를 합쳐서 대한민국.과 북간도,연해주 지방전체와 연방을 이룩하는 일입니다. 셋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외교와 결혼동맹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연방 공화국을 형성하는 일입니다. 넷째, 대한민국과 동북3성 연방국을 통하여 만리장성 이북 땅을 연방을 형성하는 일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5연방 1체제 1국가의 이름은 '대 한 (大 桓. 大韓) GRAND KHAAN: 국기는 우주총도 를 그리고 여타 문제들을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구상하고 논의하고 결정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한나라당과 당원일동이 5연방 1체제 1국가 건설을 하여 5국통일을 완성하고, 세계 선진 일류 민족 국가 시민으로 등극시키고 세계 제일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세계 선진 일류 민족 국가 국민 시민으로 등극하는데, 한나라당과 국민여러분들이 동참하시어 함께하여 주십시오!!! 한나라당과 당원일동이 5연방 1체제 1국가 건설을 하여 5국통일을 완성하고, 세계 선진 일류 민족 국가 시민으로 등극시키고 세계 제일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세계 선진 일류 민족 국가 국민 시민으로 등극하는데, 국민여러분들께서 한나라당과 동참하여 주십시오!!!일곱번째,탈원전 정책론 심판론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탈원전 정책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확대와 유류 화력발전소로 인하여 유독가스 등 미세먼지의 양이 늘어나고, 질이 떨어져서 국민 건강의 위해요소가 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탈원전 정책으로 클린 에너지인 원자력 발전 정책을 걷어치우고, 석탄화력과 유류 화력 발전으로 회귀하는 이유가, 중국 시진핑의 음모와 관련있는 것인지를 현정부와 집권여당에 묻고 싶은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만가지가 손해보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만가지가 손해 보는 일인데, 이를 한나라당 과 한나라당 당원들이 국민 건강과 국민 경제와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일부 잘못된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탈원전정책을 포기하도록 국민여러분들과 힘을 합쳐 탈원전정책을 포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탈원전 정책으로 코로나 19의 기성과 국민건강의 해악요소를 막아서 한나라당 과 한나라당 당원들이 국민 건강과 국민 경제와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일부 잘못된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탈원전정책을 포기하도록 국민여러분들과 힘을 합쳐 탈원전정책을 포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음모론과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국민경제가 추락하고, 과학기술의 퇴보를 가져오고, 외국에서의 원자력 발전소 수주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면, 코로나19 등 국민 건강 악화에 기여하는 이런 기이한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시진핑의 음모론과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국민경제가 추락하고, 과학기술의 퇴보를 가져오고, 외국에서의 원자력 발전소 수주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면, 코로나19 등 국민 건강 악화에 기여하는 이런 기이한 일이 세상에 현실인 대한민국정부에서 이런 정부를 믿고서 사는 우리 국민이 불쌍한 것입니다.

정책순위

4

교육 과학 기술 발전 영성 교육

정책분야 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

- {4}-1. 한나라당의 10대 교육과 9자 정신을 통하여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당연성을 회복하는 사회,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모두 되돌려 놓는 사회, 근본성에 충실한 사회를 창조할 것입니다.
- (1) 한나라당은 그랜드 칸[GRAND KHAN, 대한국(大桓國)]을 통하여 세계 제1강국을 건설하고, 9자 정신 (자조, 자립, 자결, 자위, 자주, 자유, 자율, 자각, 자성, 정신)과 10대 교육(영성, 지성, 덕성, 체력, 가정, 학교, 사회, 국민, 국가, 세계, 교육) 을 통하여 선진 민족성을 양양하며, 살기 좋고 잘 사는 부강한 국민을 만들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가는 정당입니다.
- (2) 한나라당은 대표자가 주장하는 10대 교육과 9자 정신을 계승하여 선진민족성을 고취하고, 국민성을 함양하고 교양과 양식이 넘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4}-2. 한나라당의 22개 덕목인 (자유 평등 통일 평화 사랑 건강 행복 정심 희망 기여 봉사 정의 진리 헌신 나눔 수증 창조 생명 복본 대통합 깨달음 대광명)이라는 가치를 통하여 사람의 삶의 목표인 소원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 {4}-3. 한나라당은 22대 덕목인 (자유, 평등, 통일, 평화, 사랑, 건강, 행복, 정심, 희망 ~)과 9자 정신인 (자조, 자립, 자결, 자위, 자주, 자유, 자율, 자각, 자성, 정신)과 10대 교육(영성, 지성, 덕성, 체력, 가정, 학교, 사회, 국민, 국가, 세계, 교육) 통하여 국민성을 계발하고 더 높여서(업그레이드시켜) 세계선진일류국민으로 재탄생 할 것입니다.
- {4}-4. 한나라당 정강정책 제 2조와 한나라당 당헌 제2조의 사항을 실천하여 세계 일류 선진 민족으로 등극시켜 드릴 것입니다. 세계선진 일류 국가를 건설할 것입니다. 풍요로운 세상, 지상의 낙원을 창조할 것입니다. 살기 좋고 살맛나는 세상을 건설할 것입니다. 깨달음의 세상, 대광명의 세상을 건설할 것입니다. 4. 교육혁명을 이루어야 합니다.한나라당 제6대 정책: : 대변화 대전환 대도약 대발전 대통합 대깨달음 대광명
- {4}-5. 현재의 대한민국의 삶의 질과 가치관과 생활양식과 국민성 함양과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를 대변혁 시켜서 대전환을 이루고 대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 {4}-6. 한나라당은 마고성 시대와 마고성시대의 중엽 말엽의 황궁씨 청궁씨 백소씨 흑소씨 시대와 안파전 환인 천제 시대의 정치와 천성을 회복시킬 것이며, 본성을 회복할 것이며, 복락원으로 복본 할 것입니다.
- {4}-7.전문가가 숭상되는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 {4}-8. 한국의 국민성을 함양해야 합니다.이는 한나라당이 강조하는 10대 교육과 9자 정신과 22대

덕목으로 국민성을 치유하고 깨우치고 실천하고 창조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제 1 등 국민이 됩니다. {4}-8. 일제 만행의 36년간의 산물인 사촌이 눈을 샀을 때 배가 아픈 사회는 망조가 든 사회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 (1) 호주제 부활하여야 합니다.
- (2) 당연성과 근본성 추구 : 모든 부조리와 폐단은 과감히 척결하고, 비정상적인 것의 정상화, 당연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근본성에서 모든 것을 조망했을 때에, 근본으로의 회귀 하에 근본적으로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3) 모든 문제를 근본에서 시작하십시오.
- (4) 사촌이 눈을 샀을 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회. 국민성. 민족성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 (5) 농촌 총각 장가가는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 (6) 다문화 정책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4}-9. 교육부를 독립시키고 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 (1) 지성교육과 (2) 덕성교육과
- (3) 체력단련과 연마와 그 상위 목표인
- (4) 영성교육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 깨달음의 세계를 이룩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대를 신설하고, 65세에서 70세까지 6년차
- (5) 국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대를 신설하고, 범죄자는
- (6) 국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대를 신설하고, 71세 이상은
- (7)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대 교육을 활성화하여 세계 선진 일류 국민 민족 국가 시민으로 양성하고 등극시키겠습니다.

{4}-10. 과학 기술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최첨단 과학 기술을 계발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기술부를 독립된 부로 신설하겠습니다.

- (1) 생물학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생명공학 분야에 세계선진 일류를 구가하겠습니다. 생리학 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2) 물리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 (3) 화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특히 수소와 헬륨 이용한 생활이기와 제5차원 세상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4) 지구 과학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4}-11. 제5의 산업혁명과 제5의 에너지 혁명, 제5의 자본주의(재원주의), 제5의 새시대. 새 지구. 새 우주. 새 나라 건설, 수소 헬륨을 이용한 제5의 에너지 혁명, 수소 헬륨을 이용한 제5의 첨단무기 개발과 세계 제5차원의 국방력과 제5차원의 기술, 제5차원의 세계를 정립하고, 창조론과 진화론을 재정립하고, 재창조하고 재정립하고 재실천하고 재도약하고 재 발전시키겠습니다.

정책순위

5

과학 기술 발전 행복,낙원

정책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관광

- {5}-1. 제5의 산업혁명과 제5의 에너지 혁명, 제5의 자본주의(재원주의), 제5의 새시대. 새 지구. 새 우주. 새나라 건설, 수소 헬륨을 이용한 제5의 에너지 혁명, 수소 헬륨을 이용한 제5의 첨단무기 개발과 세계 제5차원의 국방력과 제5차원의 기술, 제5차원의 세계를 정립하고, 창조론과 진화론을 재정립하고, 재창조하고 재정립하고 재실천하고 재도약하고 재 발전 시키겠습니다.
- {8}-4.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새로 쓰겠습니다. 역사청을 신설하여 역사를 재 편찬, 재 감수, 재 기록, 재정립하겠습니다. 올해(2016년)가 환국 9214년의 역사, 배달국기 5913년의 역사, 단기 4349년의 역사, 불기 2560년의 역사, 예수님 탄생 2020년의 역사, 서기 2016년의 역사를 찾아서 재기록, 재감수, 재편찬, 재정립하여 올바르게 정립하겠습니다.
- (1) BC. 7198년 ~BC. 3897년: 안파견 환인의 환국(한나라, 환나라) 건국 (파밀고원과 몽고의 발기리 호수에 이르는 지역: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 제1대 안파견 환인 천제부터 제2대 혁서 환인 천제, 제3대 고시리 환인 천제, 제4대 주우양 환인천제, 제5대 석제임 환인 천제, 제6대 구을리 환인 천제, 제7대 지위리 환인 천제까지 3301년간 통치함.
- (2) BC.3897년 ~ BC.2333년거발한 환웅의 배달국 건국 (태백산 신단수 에 신시) : 제1대 거발환 환웅 천황부터 제2대, 제3대... 제5대 태우의 환웅 천황~~~, 제14대 자오지 환웅 천황~~~~~, 제18대 거불단 환웅 천황까지 통치하였고, 배달국은 1565년간 통치하셨습니다.
- (3) BC. 2333년 ~ BC. 108 년 준왕 : 단군 왕검의 원조선 건국 (아사달: 하얼빈 근처) 기자 조선, 위만 조선: 조선은 단군 왕검 황제께서 2226년간 통치하셨습니다.
- (4) 진한 번한 마한의 역사를 새로 정립하겠습니다.
- (5) 부여 북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백제 신라 가야의 역사를 재정립 하겠습니다.
- (6) 통일 신라 시대와 대진국(발해)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재정립 하겠습니다.
- (7) 고려의 역사와 거란족 말갈족 동이족 저족 흉노족 스키타이문화를 재조명하고 역사를 재정립 하겠습니다.
- (8) 조선의 역사를 재정립하고 명 청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역사적 재조명을 실시하고 그 교훈을 되새기겠습니다.
- (9) 일제 36년 동안 온갖 민족성과 국민성이 말살되고 식민사관과 황국사관에 갈기갈기 찢어진 한민족의 역사성과 민족성과 국민성을 되찾아 와야 합니다.
- (10) 1945년 8월 15일 조국 광복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1947년 9월 9일 북한 괴뢰정권의 탄생과 신 남북한 시대 탄생.

{5}-2. 1945년 8월 15일: 조국 광복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제1 공화국 수립 오늘에 이르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의 국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8}-5. 가락(가락) 천황의 가림토정음 38자에서 한글의 완전성 이룩하겠습니다. 가림토 정음 38자에서 훈민정음 28자를 창제하고 발췌하고 반포하였는 바, 훈민정음 28자와 나머지 가림토 문자 10자를 또다시 연구하여 가림토 정음 38자를 완전 복원하여 한글의 완전성을 이룩하고, 한글의 세계화를 이룩하겠습니다. 정음청을 설치하여 가림토 정음 38자를 완전히 해독하고 완전히 발음기관과 발성기관과 발음기호와 문자를 일치시켜 가림토 정음 38자를 완전히 해독하고 완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림토 정음38자의 완전 실용화로 한글의 완전성을 이룩하고 한글의 세계화를 이룩하겠습니다.

{5}-3. 전문가가 숭상되는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5}-4. 한국의 국민성을 함양해야 합니다. : 이는 한나라당이 강조하는 10대 교육과 9자 정신과 22대 덕목으로 국민성을 치유하고 깨우치고 실천하고 창조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제 1등 국민이 됩니다.

{5}-5. 일제 만행의 36년간의 산물인 사촌이 논을 샀을 때 배가 아픈 사회는 망조가 든 사회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1) 호주제 부활하여야 합니다.

(2) 당연성과 근본성 추구 : 모든 부조리와 폐단은 과감히 척결하고, 비정상적인 것의 정상화, 당연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근본성에서 모든 것을 조망했을 때에, 근본으로의 회귀 하에 근본적으로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모든 문제를 근본에서 시작하십시오. 근본성 추구

(4) 사촌이 논을 샀을 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회. 국민성. 민족성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5) 농촌 총각 장가는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6) 다문화 정책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5}-6. 교육부를 독립시키고 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1) 지성교육과

(2) 덕성교육과

(3) 체력단련과 연마와 그 상위 목표인

(4) 영성교육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 깨달음의 세계를 이룩할 것입니다. 교육대를 신설하고, 65세에서 70세까지 6년차

(5) 국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대를 신설하고, 범죄자는

(6) 국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대를 신설하고, 71세 이상은

(7)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대 교육을 활성화하여 세계 선진 일류 국민 민족 국가 시민으로 양성하고 등극시키겠습니다.

- {5}-7. 과학 기술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최첨단 과학 기술을 계발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기술부를 독립된 부로 신설하겠습니다.
- (1) 생물학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생명공학 분야에 세계선진 일류를 구가하겠습니다. 생리학 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2) 물리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 (3) 화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특히 수소와 헬륨 이용한 생활이기와 제5차원 세상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4) 지구 과학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 {5}-8. 가락(가락) 천황의 가림토정음 38자에서 한글의 완전성 이룩하겠습니다. 가림토 정음 38자에서 훈민정음 28자를 창제하고 발취하고 반포하였는 바, 훈민정음 28자와 나머지 가림토 문자 10자를 또다시 연구하여 가림토 정음 38자를 완전 복원하여 한글의 완전성을 이룩하고, 한글의 세계화를 이룩하겠습니다. 정음청을 설치하여 가림토 정음 38자를 완전히 해독하고 완전히 발음기관과 발성기관과 발음기호와 문자를 일치시켜 가림토 정음 38자를 완전히 해독하고 완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림토 정음38자의 완전 실용화로 한글의 완전성을 이룩하고 한글의 세계화를 이룩하겠습니다. : 대변화 대전환 대도약 대발전 대통합 대깨달음 대광명 :
- {5}-9. 현재의 대한민국의 삶의 질과 가치관과 생활양식과 국민성 함양과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를 대변혁 시켜서 대전환을 이루고 대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 {5}-10. 한나라당은 마고성 시대와 마고성시대의 중엽 말엽의 황궁씨 청궁씨 백소씨 흑소씨 시대와 안파견 환인 천제 시대의 정치와 천성을 회복시킬 것이며, 본성을 회복할 것이며, 복락원으로 복본 할 것입니다.

정책순위

6

한을 풀고, 소원성취 하는 한나라당

정책분야 기 타

- {6}-1.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당원 일동과 한나라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대책총괄본부와 한나라당 지지 국민들께서 모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일동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살맛 나십니까?건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 {6}-2.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당원 일동과 한나라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대책총괄본부와 한나라당 지지 국민들께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 정치로 세상을 건져라!!! ”라는 하느님의 말씀과 천명이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원 일동에게 내려졌습니다.
- {6}-3.한나라당은 지금부터 9219년전 제1대 안파견 환인 천제 시대 이후 2대 혁서 환인3대 고시리 환인4대 주우양 환인5대 석계임 환인6대 구을리 환인제7대 지위리 환인 천제 시대까지 3301년간 존속하고 이어져 내려온, 대대손손 이어져 지금까지 국통이 이어진 대한민국까지 이어져온 나라인 9219년의 역사를 가진 환국 한국 한나라한나라당이라는 뜻입니다.
- {6}-4.한나라당은 22대 덕목과 9자 정신과 10대 교육과 국권부 창설(참전계경부, 한풀이부, 해원상생부 : 국민 권익 위원회, 국가 권익 위원회 : 제4권부 : 제4권 분립의 창시자 이태희 : 제4권부라 함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참전계경부(국권부)를 의미합니다.)으로 한민족을 대한국민을 세계에서 가장 으뜸인 선진 일류 국민성으로 등극시킬 정당이며, ‘세계 선진 일류 민족 국가 시민’으로 등극시킬 정당이며, 국민들께 희망과 행복과 풍요로움과 해원상생 소원성취시켜 드릴 정당이며, 세계 선진 일류 민족 국가 국민 시민을 등극시킬 정당 한나라당입니다. {6}-5. 한나라당이“ 정치로 세상을 건져라!!! ”“정치로 세상을 건져서’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고국민 여러분들께 자유와 사랑 평등 인간의 존엄성 가치실현욕구와 자아실현욕구 5단계를 성취시켜드리고, 국민여러분들께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드리고 소원성취시켜드리겠습니다.!!!특히 감방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각하를 석방시켜드리겠습니다.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엇을 잘못 했습니까?!!! (한나라당 선거사무실에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당원 울음 바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을 잘못 했습니까?!!!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당원 울음 바다)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당원과 박근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모두 박정희 대통령 영웅과 육영수 여사님과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민 모두 울음!!! 바다 울음!!! 바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뭘 잘못 했습니까?!!!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당원 울음!!! 바다)(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당원과 박근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모두 박정희 대통령 영웅과 육영수 여사님과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민 모두 울음!!! 바다 울음!!! 바다)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서 무엇을 잘못 했길래 , 백주 대낮에 탄핵 국회의원 224명에 의해탄핵이 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7명에 의해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들 탄핵 국회의원 224명 모두에게 국민여러분들께서 다가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들 224명 모두와 배신자 국회의원들 모두를 심판하시여 한사람도 당선시키지 말고 모두 낙선시키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각하를 무죄석방하게 하는데 국민여러분들께서 한나라당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 {6}-5. {6}-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되도록 선거 혁명을 이룩하는데 국민여러분들께서 한나라당과 동참하여 주십시오!!! 세계 선진 일류 민족 국가 국민 시민으로 등극하는데 국민여러분들께서 한나라당과 동참하여 주십시오!!! 한나라당과 국민여러분들이 동참하시어 함께하여 주십시오!!! 다가오는 4.15 국회의원 총선에서 탄핵 배신자당과 탄핵배신자들 모두를 척결하여 주시고 한나라당에 힘을 모아주시고 표를 몰아주시고 절대다수의 제1당으로 등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근혜 대통령 각하를 무죄석방하게 하는데 국민여러분들께서 한나라당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전광훈 목사님이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께서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의 무죄석방을 국민여러분들께서 한나라당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 {6}-6. 경제 신용불량자라는 미명하에 경제적 자유를 구속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신용 불량자를 원천 말소하는 일에 국민여러분들께서 한나라당과 동참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용불량자들을 이번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여러분들께서 한나라당을 밀어주시고 동참하시고 표로 투표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한나라당과 당원일동이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신용불량자 제도를 없애고, 국민 여러분!!! 분들께 신용을 회복시켜드리고, 정상적인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시켜드리는데 국민여러분들께서 한나라당과 동참하여 주십시오!!!
- {6}-7. 시민과 서민 사회적 약자들과 노약자 병든 자 어려움에 처한 자 모두에게 경제적 풍요로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국민소득 5만\$ 이상 시대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지와 풍요로움과 살맛나는 세상을 선사할 것입니다. 국민소득 5만\$ 이상 시대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지와 풍요로움과 살맛나는 세상을 선사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들께 한나라당이 국민 여러분들과 동참하여 달성하고, 그 혜택을 국민 여러분들께 선사하는 쾌거를 이룩하겠습니다.
- {6}-8. 한나라당과 당원일동이 5연방 1체제 1국가 건설을 하여 5국통일을 완성하고, 세계 선진 일류 민족 국가 다가오는 4.15 국회의원 총선에서 탄핵배신자당과 탄핵배신자들 모두를 척결하여 주시고 한나라당에 힘을 모아주시고 표를 몰아주시고 절대다수의 제1당으로 등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일류 시민으로 등극시키고 세계 제일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세계 선진 일류 민족 국가 국민 시민으로 등극하는데, 한나라당과 국민여러분들이 동참하시어 함께하여 주십시오!!!
- {6}-9. 존경하고 사랑스럽고 은혜롭고 평화스러운 국민 여러분!! 이 은혜롭고 평화스러운 대한민국! , 대한민국이 잘 되어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가 있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으며 세계가 잘 될 수 있으며, 대한 국민들이 잘 되어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살맛나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가를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상호 협력하고 구상하여 세계에서 일등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나라당이 나서서 그 청사진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고 무엇을 추가하고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으신 가를 자문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민국 발전을 근본에서 생각하고 구상하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대한민국 외 다른 나라에서 잘된 부분을 전부 접목하고, 여타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세계 국가들의 잘 된 부분을 수용하여 대한민국의 독창적이고 실현 가능한 청사진을 구성하여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 복락원(지상 천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정책순위

7

정상화, 전문가, 당연성, 근본성

정책분야

행정자치, 안전

{7}-1.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 이 은혜스럽고 평화스러운 땅, 이 자유스럽고 평화스러운 땅, 한나라당이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하여 애국심으로 펼쳐 일어섰습니다. 한나라당은 인류의 원초적인 목표인 자유와 평등 통일 평화 사랑 건강 행복 깨달음 대광명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입니다. 한나라당은 자유, 평등, 통일, 평화, 사랑, 건강, 행복, 수증, 복본, 기여 헌신 봉사 성공 대통합 깨달음, 대광명 이라는 22대 목표를 향하여 전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세계인류 보편타당성에 근거한 정치를 하는. 근본을 중시하는 매우 좋은 정당입니다. 한나라당의 정강정책과 당헌 당규 등 당의 목표와 이상이 활기차고 용솨음치는 역동성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모든 조직과 활동과 운영 등 모든 부분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과 협조와 조언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희 한나라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살 맛 나는 잘살고 부강한 나라, 세계에서 제일가는 세계3대 강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발전의 새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살기 좋고 살맛나고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한나라당과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합심 협력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조언하고 상호 협력하여 건강과 사랑과 행복과 자유와 평화가 넘쳐흐르는 은혜롭고 평화스러운 땅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7}-2.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과 성공 시대를 넘어 선진 시대를 이룩하겠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땅, 약속의 땅, 삼천리 금수강산의 대한민국~ -자연과 사람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역사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다시 신바람 부는 신명 풍류와 해학 다정 행복한 대한민국, 세계로 미래로 뻗어가며 발전하는 세계선진일류국가 세계 제일 장손 민족국가 대한민국을 재창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 청사진의 종합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공청회와 정책수립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대한민국을 창조하고 건설하겠습니다.

농가 부채를 완전 해결하여 부강한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업인 권익보호와 소득증대 사업, 환경개선 사업, 농가 주택 개량사업을 통하여 표준형 2층 양옥을 농민들에게 선사하겠습니다. 올해 풍년이 들어 쌀값 등 농산물 임산물 광산물 수산물의 가격 폭락을 막아 제값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와 연계하여 세계적인 분업체제와 협업체제와 공동 생산 소비 저축으로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경제 기술 인프라 구축으로 첨단전략산업, 무공해 산업, 그린 테크놀로지 산업, 첨단 BT산업, 첨단 IT 산업, 첨단 CT 산업, 첨단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하고 유치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살맛나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에게 대한민국의 정치를 맡겨봐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희망차고, 행복한 국가,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살기 좋은 살맛나는 세상, 지상 낙원을 건설하겠습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어린이, 가난한 가정, 뒤쳐진 마을, 소외된 사람 등 사회적 약자의 설움과 애환과 고통을 해결하고 소외됨이 없는 사회복지 정책을 완벽하게 갖추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성공시대를 넘어 선진화 시대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문화 세계 1등 지역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7}-3. 한나라당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략 (1) 저희 한나라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야 할 당위성 : 저희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새 인물들을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뽑아 대한민국 발전을 꾀하고,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2) 한나라당이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뽑아 주신다면 정치개혁, 경제발전, 사회발전 문화발전, 교육 예술 스포츠 (생활체육) 동호인회와 생활 정치 삶의 질 향상, 국민성 개혁, 국민교육 등 10대 교육과 9자정신과 22대 덕목을 함양하여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풍요로운 세상 즐거움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랜드 칸[GRAND KHAN, 대환국(大桓國)]을 통하여 세계 제1강국을 건설하고, 10대 교육과 9자 정신과 22대 덕목을 통하여 선진민족성을 앙양하며, 살기 좋고 잘 사는 부강한국민을 만들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나갈 것입니다. (3) 5연방 1체제 1국가 건설-그랜드 칸[GRAND KHAN, 대환국(大桓國)] 안파견 환인 천제와 거발환 환웅 천황 자오지 천황 단군왕검 김유신 장군의 얼을 계승하여 한나라당이 한몽(韓蒙), 한연해주, 한북한, 한만주 연방공화국을 통하여 남한이 주도하는 5연방 1체제 1국가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름 하여 “그랜드 칸(GRAND KHAN, 대환[大桓])” 국가를 건설하여 세계 제3대 강국(미국, 대환, 중국) 중 가장 으뜸인 미국을 지도하고 방향제시를 하여 실질상의 세계 제1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7}-4.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 국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정치 부문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치가 잘 되어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외교 국방 행정 등 모든 분야가 업그레이드 되어 상승 작용을 일으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상승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는 전 국민의 참여 하에 참여정치가 구현되어야 할 것이고, 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전 국민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전 국민의 복지와 행복 건강과 사랑을 위한 전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만이 진정한 민주정치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이 서로 돕고 국민이 바로 서고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국민이 스스로를 위하고, 국민이 스스로 자유를 누리며, 국민이 스스로 규율하며, 국민이 스스로 자각하며, 국민이 스스로 이루어나갈 때에 비로소 올바른 국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국민 모두가 선진국민이 될 때에 그 국가도 선진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란 바르게 다스린다는 의미로 정치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물 흐르듯이 순리에 맞게 우주자연의 섭리를 따라서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 한나라당이 경제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제민의 약어로서 자본주의 경제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공존하며 공공재와 사적재, 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바람 나는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을 실천해 보이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를 하되 가동은 주7일을 풀 가동하여 역동성이 넘치는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의 월급을 현실화하여

대학교 졸업생들의 취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7}-5.한나라당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 필승 전승 선거 모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새 인물을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뽑아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고 애국 애족하는 국회의원들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살기 좋은 국가, 살맛나는 국가, 풍요로운 세상을 창조할 것이며, 깨달음의 세계와 대광명의 세계로 인도할것입니다.

정책순위

8

제 5차원의 세계로 인도

정책분야 산업자원 건설정책분야

{8}-1. 한나라당 (The Grand National Party)의 이념 한나라당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당입니다.

1. 한나라당은 인류의 원초적인 목표와 이상인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 속에 성장한 정당입니다.
2. 한나라당은 국민의 자유와 평등, 통일과 평화, 사랑과 행복, 건강을 추구하는 정당입니다.
3. 한나라당은 세계에서 가장 이름이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정당입니다. 한나라당은 정강 정책과 당 강령, 당헌 당규 등이 기존 정당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매우 좋은 정당이며, 기존의 해악을 일소하는 혁신적이고 이상을 추구하는 굉장히 좋은 정당입니다.
4. 한나라당은 인류의 원초적인 목표와 이상인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용적이고 이상적인 근본을 중시하는 매우 좋은 정당입니다.
5. 한나라당은 세계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하는 정당입니다. 예컨대, 세계 시민을 중산층화 하는 정당입니다. 아프리카의 기아와 질병을 퇴치하고 무지를 타파하며 새로운 문화의 창출에 이바지하는 정당입니다.
6.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5연방 1체제 1공화국 체제로서 한.몽 연방공화국, 한.연해주 연방 공화국, 한.북한 연방공화국, 한.만주 연방공화국을 남한이 주도하는 세계 제1대 강국인 그랜드칸[GRAND KHAN, 대한국(大桓國)]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 한나라당은 당헌과 강령에서 주장하는 6대 교육과 9자 정신과 22대 덕목을 계승하여 선진민족성을 고취하고, 교양과 양식이 넘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촌이 눈을 샅을 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국민성으로 바꾸어가야 합니다.
8. 한나라당은 그랜드 칸[GRAND KHAN, 대한국(大桓國)]을 통하여 세계 제1강국을 건설하고, 6대 교육과 9자 정신과 22대 덕목을 통하여 선진 민족성을 양양하며, 살기 좋고 잘 사는 부강한 국민을 만들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가는 정당입니다.
9. 한나라당은 한 많은 한민족에게 한을 풀어주고 한을 승화시켜서 해원 상생하고, 공생발전하고, 소원성취 시켜 드리고 , 흥익인간화 하고 국가발전 시켜드리겠습니다.
10. 한나라당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과 애환과 숙원사업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HOPE! 희망!한나라당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 필승 전승시켜 주십시오. 농민 서민의 애환, 고통, 숙원사업을 한나라당이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한나라당과 함께 이룩합니다.

재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한나라당의 공약을 제시하겠습니다.

1. 전문가가 숭상되는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장인 제도 마스터 제도 도입, 최고 전문가에게 시상식과 포상금을 지급하여 기술 장려와 과학의 발달, 예술의 발달, 국방기술의 발달, 생명과학 기술의 발달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분야도 세계 제1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 위정자들의 잘 못으로 미국 영국 일본에 뒤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2. 사춘이 눈을 샀을 때 배가 아픈 사회는 망조가 든 사회입니다. 사춘이 눈을 샀을 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3. 한국의 국민성을 계발하고 함양하고 개조해야 합니다. 형제 간에 우애가 있어야 합니다. 경쟁관계가 아닙니다.
4. 교육혁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5. 경제 혁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6. 농산품과 광산품과 임산물과 수산물의 가격 폭락과 쌀값 폭락문제 해결!! 한나라당에게 맡겨 봐 주십시오.
7. 호주제 부활하여야 합니다.
8. 모든 문제를 근본에서 시작하십시오.
9. 지방 총각 지방처녀 농촌 총각 장가가는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10. 다문화 정책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다문화 정책은 다민족 문화 정책으로서, 본래의 다문화 정책과 근본적으로 괴리되어 있습니다.

(8)-2.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은 5연방 1체제 1국가 건설과 세계 선진 일류 장손민족으로 발돋움하여 세계 제1 강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의 정치 선진화와 국가발전 및 세계일류 선진국가 건설과 살기 좋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선구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과 한나라당원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모여 한나라당을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제1당으로 전승 압승 필승 시켜 당선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과 한나라당원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한나라당을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과 한나라당원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되도록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뭉칩시다. 그리하여 국민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과 협조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이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드리고, 한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성취시켜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과 희망 사랑 평등 자유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두 손 모아 빌고 비는 바입니다.

(8)-3. 한나라당 만세!!!대한민국 만세!!!대한국민 만세!!!대단히 감사합니다. 1.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나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 한나라는 우리 한민족의 시원국가인 환국으로부터 유래된 큰 나라, 하나의 유일한 나라, 밝은 나라, 하느님 나라, 한민족의 나라, 한민족은 한나라로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환인천제와 환웅천황 단군왕검의 사상과 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한나라 한민족의 정당한 나라당 입니다. 한나라당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찬란함과 복본과 모범과 근본성과 당연성과 정상적인 것 모두의 전형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한나라당을 사랑하기에 한나라당을 다시 살려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나라당을 살려야 하고 살릴 수 밖에 없는 한나라당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한나라당을 재창당한 것입니다. 한나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살아서도 한나라당! 죽어서도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영원할 것입니다. 한나라당!! 이여 영원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과 시민과 한나라당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들의 열렬한 성원과 화합에 보답하고자 한나라당을 살려 냈습니다. 한나라당을 다시 살려냈으니 이제 당원 동지 및 국민 여러분께서 한나라당을 맘껏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뜻에서 더욱 채찍질해 주시고 기대와 믿음으로 밀어 주십시오!! 우리의 대한민국 금수강산에 찬란한 꽃을 피우는 밝은 정치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시오!! 한 많은 사람들은 저희 한나라당에 오셔서 한을 푸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빕니다.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 드리고, 한을 승화시켜 소원성취시켜드리겠습니다. 국민, 시민, 농민, 서민의 애환, 고통, 숙원사업을 이태희가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8}-4.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나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 저희 한나라당은 국민 여러분들의 애환과 고통과 숙원사업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주권과 대통령 주권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주권재민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뜻에 따라 순응하고 하늘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하늘의 뜻이 바로 국민 여러분들의 뜻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근본에 충실한 민본주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근본이 올바르고 좋아야 그 결과가 좋고 시행착오가 적은 것입니다.

정책순위

9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정책분야 국방, 농림해양수산

(9)-1. 국민이 근본이 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정치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정치가 잘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국방 외교 행정 등 등 모든 분야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선진화 되고 살기 좋고 살맛나는 세상, 풍요로운 세상, 축복 받은 대광명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잘 못된 정치를 모두 박살내어 집어치우고, 국민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정치, 국민 여러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여 훌륭하고 살기 좋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저희 한나라당 과 함께 동참해 봅시다. 한나라당은 5연방 1체제 1국가 건설과 세계 선진일류 장손민족으로 발돋움하여 세계 제1강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의 정치 선진화와 국가 발전 및 세계일류 선진국가 건설과 살기 좋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선구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과 한나라당원들과,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 공천에서 역울하게 탈락한 후보들과,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선전하고 있는 후보들은 한나라당에 모두 모여 한나라당을 2016. 4.13. 실시되는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 필승 건승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이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하고,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 대표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다 함께 뭉쳐 일어서서 총진군 합시다. 그리하여 국민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과 협조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이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드리고, 한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성취시켜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과 희망 사랑 평등 자유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두 손 모아 빌고 비는 바입니다

(9)-2.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The Grand National Party)의 이념과 정강 정책과 당 강령, 당헌, 당규 등이 기존 정당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매우 좋은 정당이며,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 드리고, 한을 승화시켜, 소원성취 시켜드리는 정당입니다. 한나라당은 기존의 해악과 폐단을 일소하는 혁신적이고 이상을 추구하는 굉장히 좋은 정당입니다.

(9)-3. (1) 한나라당은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 드리고, 한을 승화시켜, 제5차원의 세계로 인도하며, 소원성취 시켜드리겠습니다.

(2) 대한민국 국민 시민 서민의 아픔과 고통 애환과 숙원 사업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3) 한나라당은 인류의 원초적인 목표와 이상인 자유와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 속에 2012년 3월 5일에 창당하고, 2013년 4월 15일 새한나라당을 창당하고, 2014년 2월 6일 한나라당으로 재창당한 정당입니다.

(4) 한나라당은 자유 평등 통일 평화 사랑 건강 행복 등 22대 덕목을 통하여 풍요로운 세상, 대통합의 세상, 깨달음의 세상, 대광명의 세상을 추구하는 정당입니다.

- (5) 한나라당은 10대 교육으로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풍요로운 새 세상을 창조할 것입니다.
- (6) 한나라당은 9자 정신을 통하여 깨달음의 세상, 대통합의 세상을 추구 할 것입니다.
- (7) 한나라당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안파견 환인 천제의 나라인 환국 (한나라)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그 이름이 좋고 가장 아름답고 그 내용이 가장 알차고 좋은 정당입니다. (8) 한나라당은 인류의 원초적인 목표와 이상인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용적이면서도 이상적이고 근본을 중시하는 매우 좋은 정당입니다.
- (9) 한나라당은 10대 교육으로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풍요로운 새 세상을 창조할 것입니다.
- (10) 한나라당은 9자 정신을 통하여 깨달음의 세상, 대통합의 세상을 추구 할 것입니다.
- (11) 한나라당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안파견 환인 천제의 나라인 환국 (한나라)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그 이름이 좋고 가장 아름답고 그 내용이 가장 알차고 좋은 정당입니다. (12) 한나라당은 인류의 원초적인 목표와 이상인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용적이면서도 이상적이고 근본을 중시하는 매우 좋은 정당입니다.
- (13) 한나라당은 세계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하는 정당입니다. 예컨대, 세계 시민을 중산층화 하는 정당입니다. 아프리카의 기아와 질병을 퇴치하고 무지를 타파하며 세계 시민으로서 중산층까지 견인하는 정당이며, 새로운 문화의 창출에 이바지 하는 정당입니다.
- (14) 우리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다 같이 뭉쳐서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풍요로운 세상, 깨달음의 세계, 대통합의 세계, 대광명의 세계, 새롭고 희망차고 좋은 세상을 창조합시다!!!
- (15) 한나라당은 5연방 1체제 1국가 건설과 세계 선진 일류 장손 민족으로 발돋움하여 세계 제1강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의 정치 선진화와 국가 발전 및 세계일류 선진국가 건설과 살기 좋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선구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과 한나라당원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모여 한나라당을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과 한나라당원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한나라당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 당원들과 함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뭉칩시다. 그리하여 국민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과 협조와 협력을 부탁 드립니다. 한나라당이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드리고, 한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성취시켜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과 희망 사랑 평등 자유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두 손 모아 빌고 비는 바입니다. 한나라당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국민 만세!!!
- (9)-4.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국민 시민 서민의 아픔과 고통, 애환과 숙원사업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경제의 정의를 이룩하겠습니다.
- (1) 경제제민의 약어로서 자본주의 경제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공존하며 공공재와 사적재, 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 (2)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신바람 나는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을 실천해 보이겠습니다.
- (3) 주5일제 근무를 하되, 가동은 주7일을 풀가동하여 역동성이 넘치는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 (4) 대기업의 임원의 월급을 현실화하여 대학교 졸업생들의 취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 (5) 경제 정의를 이룩하겠습니다. (6) 경제 발전과 경제 성장, 경제 균형과 균형배분을 실현하겠습니다.
- (7) 실업자를 구제하여 실업률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 (8) 빈익빈 부익부를 고쳐 부의 균형적인 배분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9) 노동 3법인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 노동쟁의 조정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 (10)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되 “노블리스 오블리쥬”를 실천하도록 하며, 기업의 사회 봉사정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11) 기업의 독과점을 폐지하며,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경쟁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유도할 것입니다.
- (12) 한국경제의 가장 문제점은 ‘협상차 가격’입니다.
- (13) 그리고, 한국경제의 가장 문제점은 샌드위치 경제입니다. 밑으로는 후발 주자인 중국경제, 위로는 선진미국, 일본경제 구조 하에서 존재하는 것이 한국 경제입니다. 중간에 위치한 샌드위치 경제에서 살아나갈 방향과 전략을 잘 세워 나가야 합니다.
- (14) 기업의 임직원의 월급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합니다.
- (15) 쌀값 폭락문제 해결과 채소값 폭락문제 등 농산물 가격폭락 문제 해결을 한나라당 대표에게 맡겨 봐 주십시오.
- (16) 부동산 경제 활성화와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경감을 위하여 금융비용의 필요 경비 산입과, 의제 취득일을 2005년12월 31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를 201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시에 2010년 12월 31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여 국민들의 양도 소득세를 경감하여 주어야 합니다.

정책순위

10

정치, 경제, 사회분야 변혁

정책분야 정치, 경제, 사회

{10}-1. 먼저 정치부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치가 잘 되어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외교 국방 행정 등 모든 분야가 업그레이드 되어 상승작용을 일으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는 전 국민의 참여 하에 참여정치가 구현되어야 할 것이고, 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전 국민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전 국민의 복지와 행복 건강과 사랑을 위한 전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만이 진정한 민주정치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이 서로 돕고 국민이 바로 서고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국민이 스스로를 위하고 국민이 스스로 자유를 누리며 국민이 스스로 규율하며 국민이 스스로 자각 하며 국민이 스스로 이루어나갈 때에 비로소 올바른 국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국민 모두가 선진국민이 될 때에 그 국가도 선진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10}-4. 국회와 정당의 혁신 방안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1. 국회와 정부와 사법부와 국권부의 혁신 방안

- (1) 헌법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 행정부 국회 법원 국권부(참전계경부,한풍이부) 감사원 선거관리 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국민의 뜻에 따라 재구성하겠습니다.
- (2) 각종 언론기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들을 국민 뜻에 따라 재구성하겠습니다. 한 많은 사람들은 저희 한나라당에 오셔서 한 푸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빕니다.
- (3) 국회의원 정수를 150명으로 절반을 감축하겠습니다.
- (4) 시의원선거 구의원 선거 도의원 선거 군의원 선거와 시도교육감 선거를 모두 없애거나, 존속시킬 경우 당초 지방자치 뜻대로 무보수로 하겠습니다.
- (5) 각종 농협장 선거 등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선거를 없애고 국민 전체의 뜻에 따라 정하겠습니다.
- (6) 교육감 선거시 국민 직접선거 제도를 없애겠습니다.
- (7) 국회의 회기 중 정기회를 연 2회 (3월 21일~5월 31일, 9월 20일~12월 31일) 로 하고, 국회를 365일 연중무휴 개최하여, 법안상정 심의 의결에 있어서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 (8) 국회의원의 신분 보장 및 자질향상과 양식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 이므로, 1인의 국회의원이 법률안 제출과 법률안 심의 회부, 법률안 상정권 및 예산결산심사권 상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9) 국회교섭단체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선거를, 개원하는 국회에서 전체 국회의원이 직선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제1당에서 내세우는 대표가 국회의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방식을 무작위로 직선제로 변경하여, 자질이 되는 자를 국회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한다.

- (10) 국회의원의 표결 시 무기명투표 및 교차투표 및 투표에 있어서 정당의 개입을 차단하고 양심과 법률에 의하여 자유로이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11) 국회와 정당의 혁신은 국민 심판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심판은 투표때 이루어지므로 투표 시 국회의원후보를 심판하고 정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 (12)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정치를 잘못하는 경우에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13) 중앙당의 비대화를 막고 돈이 적게 드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 (14)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 국민참여 경선정당, 정당의 혁신이 이루어 지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 (15) 재보궐 선거 시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게는 공천권을 배제하며,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
- (16) 대통령 되어도 재밌는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언제나 소통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 (17) 신문고 제도는 대통령이 직접 해결 해 준다.
- (18) 믿는 사람들은 믿어라. 소통의 중요성 점검하고 증대시킨다.
- (19) 대통령 공약 100%이상 신뢰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 (20) 지방자치제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과 폐지와 금융실명제 제도를 폐지한다.
- (21) 세계통일 2030년...대한민국 대통령 되려는 이유는 세계 통일을 위함이다.
- (22) 세계 통일 할 자는 한나라당과 이태희 밖에 없다.
- (23) 호주제 폐지를 없애고 호주제 부활한다.
- (24)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하여 국회의 권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 (25)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한다.
- (26) 살인자를 제외한 감방에 있는 모든 기결수를 모두 석방한다.
- (27) 행정부의 각부 장관과 차관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법원 검찰 경찰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공수처의 수뇌부를 직선제로 선출하여 국민이 주인인 정치를 한다.
- (28)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외에 제 4부인 국권부(이태희 창조 작품 : 참전계경부)를 설치하여 국민의 권익을 근본에서부터 보장, 보호, 도모, 신장, 증진, 증대하고, 해원상생, 소원성취 시켜 드립니다.

{10}-2. 정당의 혁신 방안

- (1) 군소정당의 애환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없는 군소정당에도 정당보조금을 지급한다.
- (2) 정당대표자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와 권한을 부여 한다.
- (3) 중앙당의 비대화를 막고 돈이 적게 드는 구조로 전환한다.

- (4) 중앙당과 지구당의 역할분담을 통해 정당의 최적의 효과를 유지한다.
 - (5) 헌법상 보장한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책임 의무를 다한다.
 - (6) 정당과 국회의 구조 개혁이 잘 안되고 정치가 3류인 것은 거대 집권여당과 거대야당 국회의원들의 공동 책임이며, 제 19대 국회의원들 전체가 정치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모두 바꾸어야 합니다.
 - (7) 국회의원들이나 서울특별시장 등 광역시장과 경기도지사 등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어느 특정 정당에서 과반다수를 점하고 있으니,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고 당선만 되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국회의원들과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국민 여러분께서 선거 때에 국민의 심판인 선거를 통해서 어느 일에 몰표를 주지 말고, 국민 스스로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양식 있는 국회의원과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를 뽑아야 하고, 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심판하여, 따끔한 맛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 (8)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 국민 참여 경선 정당, 정당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 (9) 국회의원이 정치를 잘못하는 경우에 국민 소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10) 재.보궐 선거시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게는 공천권과 후보자 피선거권 을 배제한다.
 - (11)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군의원 후보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 추천이 아닌 국민으로서 출마하여야 하며, 선거에 의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며, 당선자는 당직을 가질 수 없다.
- {10}-3. 대변화 대전환 대도약 대발전 대통합 대깨달음 대광명현재의 대한민국의 삶의 질과 가치관과 생활양식과 국민성 함양과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를 대변혁 시켜서 대전환을 이루고 대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 {10}-4. 한나라당은 마고성 시대와 마고성시대의 증엽 말엽의 황궁씨 청궁씨 백소씨 흑소씨 시대와 안파견 환인 천제 시대의 정치와 천성을 회복시킬 것이며, 본성을 회복할 것이며, 복락원으로 복본 할 것입니다.
- (1) 죄수 방면, 경제인에게는 벌금을 과중하게 부과. (벌금 처리 경제인에게 벌금으로 무겁게 처리.)
 - (2) 살인죄와 강력범만 구속하고 경제범은 경제에 맞게 벌금 부과
 - (3) 신용불량자 모두 기록 폐지
 - (4) 살인죄와 강력범을 제외한 모든 범죄기록 삭제
 - (5) 관치경제와 김영삼의 금융실명제를 없애기로 한다. 국부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한 금융실명제를 없앤다.
 - (6) 처녀 총각이 결혼하면 남자 5000만원 여자 5000만원 결혼자금 1억원 지급
 - (7) 처녀 총각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 출생자금 3000만원을 지급.
 - (8) 자녀 고등학교 입학시 500만원 지급, 대학 입학시 1000만원 지급.

- (9) 경로우대자(65세 이상 남녀): 1인당 연금 월70만원 지급.
- (10) 생일날 10만원씩 생일선물 지급(생일케이크 생일쌀떡).
- (11) 국민 배당금을 1년에 1인당 1000만원 지급.
- (12) 직장 근무자 월급 350만원 지급, 복지비 월150만원 지급
- (13) 차량 속도 위반 과태료 폐지 등 각종 병폐 민폐 과태료 제도폐지 및 국민에게 혈세를 뿜아내는 과태료 제도 폐지.
- (14)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폐를 끼치는 모든 제도와 법률과 레짐을 개선한다.
- (15) 세금 많이 낸 사람을 존경해야 합니다.

홍익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홍익당 10대 정책

| No. | 정 책 |
|-----|-----------------------------|
| 1 | 온라인 댓글 및 여론 조작 강력 처벌! |
| 2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 3 | 소년법 폐지! |
| 4 | 수시 축소, 학생부 종합전형 폐지! |
| 5 | 대학 서열화 없애는 국공립대 연합 네트워크 추진! |
| 6 | 여성가족부 폐지! |
| 7 | 양심콜센터 설치! |
| 8 | 공소시효 폐지! |
| 9 |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 10 | 임대주택 확충으로 주거안정 실현! |

정책순위

1

온라인 댓글 및 여론 조작 강력 처벌!

정책분야 정보통신

» 목 표

- 일부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의 극단적 동조자들(속칭 '빠')이 온라인상에서 국민의 자율적인 여론을 단체로 탄압하고 댓글을 조작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민의를 왜곡하고 침해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댓글 조작 및 여론 조작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국민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 온라인 댓글 및 여론 조작 강력 처벌
 - 온라인 댓글 조작 및 여론 조작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
- 가짜 뉴스 강력 처벌
 - 가짜 뉴스의 생성·배포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
- 온라인 매체를 통한 선제적 대응 구현
 - 온라인 매체(포털 사이트 등)가 자발적으로 댓글 조작 및 여론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며, 온라인 매체가 댓글·여론 조작, 가짜 뉴스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을 제도화

정책순위

2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정책분야 정치

» 목 표

-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의 비리와 무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국회의원이 양심적으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강제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현

정책순위

3

소년법 폐지!

정책분야

사법윤리

» 목 표

□ 소년법을 폐지하여, 형사미성년자 특례를 고의로 악용하는 강력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 소년법 즉각 폐지

□ 즉각 폐지가 곤란할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대폭 하향 조정하거나, 형사미성년자 관련 특례를 고의로 악용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

정책순위

4

수시 축소, 학생부 종합전형 폐지!

정책분야 교육

» 목 표

- 학생부 종합전형은 평가자들의 양심수준과 공정성·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바, 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수시모집은 권력자와 부유층·정치인들에 의해 학력의 세습수단으로 전락하고 불공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 공정성에 신뢰를 잃은 현행 대학입시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능력과 공정함이 최우선시되는 대학입시제도를 수립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 수시 축소
 - 대학입시제도에서 수시모집을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으로만 유지하되 대폭 축소
- 학종 폐지
 - 전문성과 공정함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입학사정관제도와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면 폐지
- 대학입시제도의 합리화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변별력을 실효성이 있도록 강화
 - 수능에서 국·영·수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다양한 과목의 비중을 늘림

정책순위

5

대학 서열화 없애는 국공립대 연합 네트워크 추진!

정책분야 교육

» 목 표

- 대학 서열화를 통한 끊임없는 소모적 경쟁으로 가계 교육비의 과다지출, 대학입시를 둘러싼 부정부패, 인재육성의 낭비 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국공립대의 연합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연합 네트워크 대학 간 공동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기능별 통합, 국비 지원의 효율화, 등록금 절감, 대학 서열화 필요성 감소, 중고등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인성교육의 달성 및 교육의 효율화 등을 추구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 국공립대의 공동선발·공동학위 취득 시스템 구축
- 국공립대 간 기능별 통합 및 공동운영 체제 구축
- 국공립대 공동운영체제를 수용하는 대학에 대해 국비 지원 강화 및 이를 통한 등록금 인하, 연구보조금 증액 등을 지원
- 사립대도 원할 경우 공동운영체제에 편입하여, 자연스럽게 대학 통폐합 추진
- 대학 간 기능 통합으로 인한 대학 연구 분야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연구분야의 전문화를 기함

정책순위

6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분야 여성

» 목 표

- 여성가족부는 사실상 정부 내 다른 부처에 비해 업무의 보편성이나 업무량이 떨어지고, 가족과 관련된 업무는 복지부와 통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부처의 존속을 위해 해당 업무를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한일 위안부 문제나 미투 운동에의 부적절한 대처, 예산 낭비 사건 사고 등을 볼 때 국민의 혈세만을 낭비하고 업무 실적은 거의 이루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 분열만 조장하고 혈세만 낭비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여 부적절한 부처 조직과 예산 낭비, 업무의 비효율을 줄이겠습니다.

»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가족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보건복지부에 통합하고(필요 시 복지부를 보건부와 분리하는 방안도 논의하겠습니다.), 그 밖에 문화·인권 등과 관련된 업무는 해당 기관 업무로 이관함으로써 정부 조직을 정비하고 예산 낭비와 업무의 비효율을 줄임
- 일부 운동계층과 특정 사상을 존속하게 하기 위한 전유물로서 여성 문제를 편협하게 다루지 않고, 공허한 이념을 떠나 실질적으로 생존과 생활이 어려운 여성·가구·세대에 대해 인권과 복지의 관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정책순위

7

양심콜센터 설치!

정책분야 행정

» 목 표

□ 양심콜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이 행정적 절차 때문에 고통 받거나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수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민원기능을 통합하여, 양심콜센터 설치
- 민원인은 양심콜센터에서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
- 민원인이 민원 제기 시 민원담당관을 배정
- 해당 민원담당관이 민원인을 대신해 해당 민원에 필요한 서류를 책임지고 처리
 - 공공 행정망에 이미 있는 서류 등에 대해서는 민원담당관이 직접 처리
 - 민원인이 행정 서류를 위해 수고하지 않도록 함
- 여러 부서에 걸친 복합 민원, 억울한 일에 대한 호소, 저소득자 및 사회적 약자(최저생계자 및 복지 대상자, 노약자, 미성년 세대주 등)의 민원 등에 대해서는, 해당 민원담당관이 민원인을 대신해 원스톱으로 양심이 납득할 때까지 해결하도록 함

» 이행방법

- 기존 민원조직 최대한 활용
- 민원담당관 육성

정책순위

8

공소시효 폐지!

정책분야 사법윤리

» 목 표

□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처벌받는다든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사법 체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정의감이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 공소시효 폐지 추진

-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미해결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재수사가 가능하도록 함
-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강력범죄, 비윤리적 범죄, 여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힌 범죄, 약자에 대해 가한 범죄 등에 대해서 만이라도 부분적으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

정책순위

9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정책분야 보건복지

» 목 표

- 가족구성 및 노동인구구성의 변화에 따라 영유아 보육의 사회적 책임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육 역량 지원이 지지부진하여 국민의 고통과 소모적 자원 낭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영유아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영유아 보육기관 확대 및 보육기관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국가적 재난상태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걱정을 감소시키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겠습니다.

» 주요내용

- 국공립 보육시설 증대
 - 국공립 24시간 어린이집·유치원 지속 확대로 보육여건을 증진하고 보육료를 절감하도록 함
- 보육료 절감 및 보육시설 휴무 시 보육료 납입 중지
 - 감염병(전염병)·천재지변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휴무 시 휴무에 상응하는 교육비 납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보육교사를 양심계발 교육전문가로 육성
 -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양심계발 교육전문가로 육성하며 양심계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 시기부터 양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정책순위

10

임대주택 확충으로 주거안정 실현!

정책분야 건설교통

» 목 표

□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의 확충과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 공급, 다양한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임대주택 관리기법의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결혼·출산률 저하 및 고령화 사회의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 주택정책에 대한 정략적·이념적 접근 전면 폐지

- 주택 정책 수립 시 정략적·이념적 정책목표를 전면 폐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철저하게 전문가와 상의하며 그 결과를 따름

□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적극 공급

- 저렴한 임대주택부터 고급 임대주택, 학생·청년에게 필요한 공공 기숙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

□ 민간 임대주택 공급 지원(공공 임대주택과의 경쟁 유지)

- 공공 임대주택의 품질하락 방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뉴스테이)의 대규모 공급도 장려하며, 다양한 계층(신혼부부, 사회적 약자, 저소득계층 및 중산층, 고소득층 등)에 맞는 임대주택의 대규모 공급을 추진하여 주택의 매입 없이도 삶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 관리기법 개선

- 임대주택 관리기법을 개선하여 공공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택관리기술을 고도화함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 모음집

발 행 일 : 2020년 5월

발 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경기도 과천시 홍춘말로 44
Tel. 02-523-6482
www.nec.go.kr

제 작 : 케이엠커뮤니케이션(주)
Tel. 031-478-5700

〈비매품〉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